

# 北韓體制的變化：現況과 展望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1. 10. 28~29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1990년대에 들어 蘇聯 및 東歐諸國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和解와 協力を 지향하는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동북아에서도 북한이 더이상 改革과 開放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北韓體制가 근본적으로 變化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北韓의 變化可能性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통일문제 연구에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개인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탓으로 다소 總論的이고 斷片的인 수준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는 學際的(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政治·經濟·社會·文化·對外關係 등 북한사회의 分野別 實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북한 변화의 促進要因과 抑制要因을 판별함으로써 북한연구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하고자 「北韓社會의 實相과 變化展望」이라는 주제로 1991년 10월 28-29일 이틀간에 걸쳐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報告書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論文들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일부 논문은 그후 저자가 討論 내용을 감안하여 다시 손질하였으며 토론의 내용도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再編輯되었다. 본 보고서의 目次는 지난번 국제학술회의에서의 分科에 의거해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가 北韓體制의 變化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통일문제 연구와 統一政策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1. 12.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目 次

## 序 文

開 會 辭 .....	李秉龍.....	1
基調演說 .....	李庭植.....	4
I. 第1會議:北韓社會 變化的 理論的 考察 .....		17
1. 北韓社會 變化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버마스 危機理論의 適用 .....	에이든 포스터-카터.....	19
2. 世界體制理論에서 본 中國革命과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	앨빈 소우.....	49
3. 討 論 .....	安秉俊, 梁性喆, 李洙勳, 林玄鎭.....	94
II. 第2會議:北韓經濟의 變化 .....		113
1. 北韓經濟의 實相과 展望 .....	고또오 후지오.....	115
2. 實物指標에 의한 北韓의 國內總生産 推定 ...	鄭甲泳.....	143
3. 北韓經濟의 選擇과 發展展望: 北韓의 軍事費와 經濟成長 .....	李達熙.....	164
4. 討 論 .....	金字澤, 朴熊緒, 李 浩, 黃義珏.....	235
III. 第3會議:北韓의 對外經濟關係 變化 .....		257
1.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	延河清.....	259

2. 北韓의 情勢와 經濟發展 推移 .....	秦鴻祥.....279
3. 北·日 接近과 北韓經濟 開放의 展望 .....	金泳鎬.....297
4. 討論 .....	安承哲, 徐鎮英, 金基德, 李榮善.....316
<b>IV. 第4會議:北韓 政治體制的 變化 .....</b>	<b>329</b>
1. 北韓의 政權移讓:問題와 展望 .....	高秉喆.....331
2. 轉換期 北韓의 政治文化와 市民社會 .....	제임스 카튼.....353
3. 北韓體制的 變化展望과 軍의 役割 .....	李錫浩.....382
4. 討論 .....	金一平, 趙淳昇, 金英鎮, 鄭鎔碩.....429
<b>V. 第5會議:北韓 對外關係의 變化 .....</b>	<b>443</b>
1. 北韓의 政策變化와 北·日 國交交渉 .....	오꼬노기 마사오.....445
2. 北韓 對外關係의 政治經濟: 本質的 變化인가 戰術的 順應인가? .....	朴英鎬.....465
3. 北韓의 政治體制 變化와 對外政策 .....	오레그 다비도프.....496
4. 討論 .....	柳世熙, 具本泰, 宋道均, 全寅永.....515
<b>VI. 第6會議:北韓社會의 變化 .....</b>	<b>531</b>
1. 變化하는 哲學的 概念으로서의 主體와 主體性에 對하여 .....	헬가 피히트.....533
2. 北韓의 社會統制, 社會問題 그리고 社會變動 .....	都興烈.....548

3. 北韓社會 階級構造의 再編과 社會變動 … 徐載鎭……	575
4. 討論 …………… 李相禹, 金昌順, 朴涌培, 李溫竹……	618
附 錄：會議概要 ……………	635

##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北韓社會의 實相과 變化展望」이라는 주제로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國內外에서 발표자·사회자·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感謝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感謝드립니다.

최근 몇년 동안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엄청난 變化가 일어났습니다.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에서 공산당체제가 붕괴되었고 東西獨은 統一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脫冷戰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東北亞 지역에서도 새로운 질서모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北韓도 UN에 가입하고, 對美·日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등 대외정책 면에서는 變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정책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對南戰略次元에서는 ‘하나의 朝鮮’ 論理를 고집하면서 주변 정세의 변화에 편승한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對南顛覆戰略을 포기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몇가지의 진전

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 민족이 同質性을 回復하고 궁극적으로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北韓體制가 근본적으로 變化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北韓社會의 變化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北韓은 다른 共產主義國家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Scalapino교수가 지적하듯이, 아시아 共產主義國家들이 지니고 있는 歷史的·政治文化的 차이에 오는 독특한 性格과 特徵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北韓은 金日成 主體思想을 유일한 指導理念으로 삼고 수령과 당과 대중이 三位一體가 된 국가체제와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北韓社會 전체를 하나의 兵營社會로 만들고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고수하고 있으며, 韓半島 分斷이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하여 冷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政治·軍事對決 體制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유지를 위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世界史的 흐름 속에서 北韓은 體制固守와 變化要求間의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經濟的 危機, 國際的 孤立, 權力承繼問題 등으로 중대한 변화의 岐路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北韓社會의 분야별 실상, 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圈의 혁명적 변화가 北韓社會 내부에 미치는 影響,

북한의 對外開放 政策이 北韓 內部社會에 미칠 波及 등 北韓社會의 變化를 종합적이고 深度있게 분석해 보는 것은 통일문제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統一政策開發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北韓에 대한 연구는 다소 總論的이고 斷片的인 수준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研究院이 國際學術會議를 開催하게 된 根本趣旨도 지금까지의 북한연구를 바탕으로 專門家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政治·經濟·社會·文化·對外關係 등 북한사회 분야별 實상을 總체적으로 點檢하고, 北韓變化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判別함으로써 北韓研究 및 統一政策開發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學術會議가 北韓變化의 폭과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學術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1. 10. 28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 基調演說: 漂流하는 北韓

李庭植 (美國 펜실베니아大學 政治學教授)

## 1. 머리말

1991년 5월 5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은 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 가운데 지난 30년간 지켜온 당정책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정강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주지시키고 그들에게 확신감을 심어주었다. 소련에서는 과거의 유산인 공산당을 거부하였을지 모르나, 북한에서는 똑같은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담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당조직과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 생활을 하여야 수령과의 혈연적 뉴대속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갈 수 있습니다<sup>1)</sup>

라고 말했다.

소련으로서는 부르쵸아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북한은 그것이 단지,

---

1)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당중앙위원회 담화, 1991.5.5. (평양:외국어출판사, 1991), p. 20.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sup>2)</sup>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련은 사회주의적 소유권을 포기하고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으나, 북한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개인소유 재산체제의 반동적 요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다.

사적소유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굶어 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 것으로, 불피코 착취와 억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킨다.<sup>3)</sup>

시장경제는 단지 “외국 독점자본가들만을 살찌우게 할 뿐으로” 그것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따를 수 없다”<sup>4)</sup>고 단정지었다.

김정일에 따르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집단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인데, 그 까닭은 이것만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은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

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

2) 앞의 글, p. 17.

3) 윗글, p. 22.

4) 윗글, p. 27.

5) 윗글, p. 23.

사회주의 교육은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해져야 하며, 북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어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 버려야만 한다”<sup>6)</sup>고 지시했다.

김정일이 행한 연설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91년 1월1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평화적 이행’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 세워 정치적으로 저들의 지배권 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의 진보적인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반제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김정일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도 헤치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 간부들은 다른 노선으로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1988년에 김주석은 한반도에 두개의 정권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명백히 반복

---

6) 앞의 글, p. 31.

7) 「로동신문」(1991. 1. 1), 제2면.

하였고, 고려연방제의 기본구도에도 그러한 변화가 반영되었다.<sup>8)</sup> 1990년에 북한의 총리는 남한의 총리와 3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은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주석은 통일에 관한 연설에서 미국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남한괴뢰정부’를 비난하는 문구를 수없이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으나, 1991년 8월 1일자 연설에서는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가지 예외적인 것이라면 한국군을 ‘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들’이라고 간접적으로 몇번 지칭한 것 뿐이다.<sup>9)</sup> 변화의 조짐은 틀림없는 것이었다.

왜 이러한 명백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가? 왜 북한은 소련과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적 변화’의 의지를 거부하고 있는가? 북한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현 체제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 것인가?

## 2. 主體思想과 對外 宥和政策

김일성이 대내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8) 이 문제는 나의 연구논문 “Political Change, Revolution, and the Dialogue in the Two Koreas,” *Asian Survey*, Nov. 1989, pp. 1033-42 참고.

9)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조선지부의 간부에게 보내는 연설문, (1991. 8. 1), 「로동신문」, (1991. 8. 5), 제1면.

유화적인 이미지를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전혀 아니다. 세계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탄생하여 일익을 담당해 온 북한으로서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몰락으로 엄청난 정도의 위기감을 맛보아야 했다. 특히, 서독에 흡수통합된 동독의 경우나,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가 축출되는 방식은 북한의 많은 정치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었다. 비록 1989년 이래 중국공산당이 점차적으로 이전의 정통 공산주의로 복귀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택동 사후에 일어난 중국에서의 사태발전에 대해서도 조선노동당 지도자들은 결코 편안히 지낼 수가 없었다. 사회주의의 종말이 온 것으로 보여졌던 1989년 말, 몇몇 지도급 간부들은 크게 당황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렇지 않다면, 김일성 주석의 1958년도 연설인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1989년 12월 「로동신문」과 「Pyongyang Times」에 굳이 게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주석은 1988년에는 남북 공존을 옹호했으나, 1958년 연설은 북한에 사회주의 혁명을 완결한 후에, 남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10)</sup>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당으로서는

10) 김일성은 1958년 연설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한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우리의 과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조국 통일의 임무가 남아있으며 통일된 다음에는 또 남조선에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민주개혁을 실시할 임무가 있습니다. 남반부에서 민주 혁명과업을 실행한 다음에는 계속 사회주의 건설에로 넘어가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한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 11. 20), 「로동신문」 (1989. 12. 6) 재수록, 영어 번역문은 「Pyongyang Times」, (1989. 12. 16)

국내적으로 통제정책을 시행하여 내부전복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길 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전의 적대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호전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실상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동구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자원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국방을 위해 할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북한으로서는 외국자본과 서구기술 도입이 절박한 실정이다. 일본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으로 추구되는 양국 국교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일본 정치가들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역시 북한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통제정책과 대외유화정책은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본과 미국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북협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의 일본자금 유입은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서방에 대한 개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개방정책이 정치체제를 전복

시키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게되면, 전면적인 문호 개방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 효과면에서는 정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남한에 대한 태도를 다시 경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연장시켰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에 조심스럽게 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역시 남북한 대화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기 전에 남북협상이 먼저 진전되기를 기꺼이 관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變化 展望 및 問題點

북한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때까지 국내정치는 현재의 진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에 대한 급작스런 통제완화는 정치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파괴적 성향을 일으킬 뿐이다. 조선노동당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어떤 조직적인 반대운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은 여하한 타협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당의 조직과 통제가 완전하지 못했던 한국동란 기간 동안에 얻은 쓰라린 교훈을 잘 이용해 왔기 때문에 당의 통제는 현재 완벽하다.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이 주지했듯이, 당은 '사회주의 교양'을 더욱 더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

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쵸아 자유화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쵸아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sup>11)</sup>

김정일이 북한 주민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확인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에게 올바른 태도를 교육함에 있어서 점점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 1963년 2월에 이미 김일성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적들이 우세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계급의 적에 대한 투쟁을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가 우려를 표명한 젊은 세대들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들까지도 똑같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용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도 했고,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도 받아본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도 모르고 고생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가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날 압박 받고 빈궁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우리 생활은 끝없이 행복하고 보람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무들은 자기들을 오늘의 행복한 처지로 이끌어 준 우리 당을 언제나 목숨으로 지키며 우리 혁명의 진

---

11) 김정일, “인민대중을 중심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31.

취물을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견결한 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자라난 우리의 젊은 이들은 지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국 주의자들이 어떻게 악독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대장들이 정치상황을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질문들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좋아지면서 일부 청년들속에서 투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도 전쟁영화 같은 것은 곳곳해서 싫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저 좋다 좋구나 하면서 즐기만 좋아하고 곤난을 이겨내기를 싫어합니다. 곤난을 이겨내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해야 용감성과 참을성이 배양될 것인데 이런 투쟁이 없고 점차 라태하고 안일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 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sup>12)</sup> 또한 노동자, 농민 출신이라고 하여, 지난날 고생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여 다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토대로 좋고 고생도 겪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양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점차 안일하여지며 계급의식이 마비됩니다.<sup>13)</sup>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당은 강도 높은 캠페인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일련의 교육 캠페인으로서 상황이 치유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른 사회주

12)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노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63.2.8), 『김일성저작선집』, 3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1), pp. 468-72.

13) 윗책, pp. 471-72.

외국가에서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예외적 사례로서 입증될 수는 있겠으나, 저항이나 난관은 줄어들기보다는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성공적인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북한 각 계층의 간부들과 보다 많은 일반 민중들이, 해외에서 오는 방문자들, 특히 일본과 북미에서 오는 동포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문자들과의 접견은 종종 열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상급자로부터의 통제지시에도 불구하고 방문자들은 당으로부터 전해지는 것과는 다른 여러 갈래의 인상과 정보를 남기고 떠나기 일쑤이다.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가 정권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으나, 간부들의 사기와 신념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전개가 북한의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오로지 시간만이 답할 수 있겠으나, 현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궁극적으로 당으로서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해야만 한다. 경제 실패가 소련과 동구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중국에서의 심한 동요도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계급의 적을 근절시킨 승리일지라도, 그 승리자들이 가난에 허덕인다면 오로지 상처뿐인 영광(Pyrrhic)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동원체제로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힘들어 보인다. 주어진 임무를 위하여 민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는 있으나, 격심한 국제경쟁을 동반하는 복합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 대규모의 복합적 경제는 정치지도자의 헌신이나 결단력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중앙계획 입안자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모두 예측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난 30년 동안의 사건들을 통해서 북한경제도 역시 세계경제의 변천에 따른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1년 5월에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일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단지 외국 독점자본가들만을 살찌우게 하는 것으로, “계획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말은 70년간의 현존 사회주의의 역사와 1960년 이래 북한과 남한경제에 대한 실상을 통해 증명된 바 있는 사실에 분명히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1945년 이래 건설한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희생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제에 대한 주요 분해작업을 시행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을 통해서만이 북한은 성장을 지속하고, 남한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관계진전은 면밀히 주시해 보아야 한다. 비록 진전 속도는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몇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았다.<sup>14)</sup> 본인으로서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진전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14)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나의 연구논문 *Korea Briefing, 1990*(Westview Press, 1991) *North Korea in Transition*, (Berkele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1991), *Toward a New Order in East Asia* (Berkele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Forthcoming) 참고.

빈 면

## 第1會議

# 北韓社會 變化的 理論的 考察

빈 면

# 北韓社會 變化를 어떻게 볼 것인가? :

## 하버마스 危機理論의 適用

Aidan Foster-Carter (英國 리즈大 社會學教授)

### 1. 序論

독일의 비판 이론가인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유명한 ‘위기에 관한 이론’(특히 정당성의 위기)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발전되었다. 특히 그의 이론은 조악한 경제 결정론에 불과한 종래의 정통 맑시즘에 비해 현대 자본주의를 한층 더 현실적이며 또한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발전되었다.

하버마스는 경제적 위기에 더하여 세가지의 위기 —합리성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동기유발의 위기— 를 추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경제적 위기와 합리성의 위기는 각각 경제적 혹은 정치적 하부체계에서 발생하는 것인 반면, 정당성의 위기와 동기유발의 위기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하부체계내에서 발생하며 동시에 이들 하부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감의 위기이다.

이 개념들이 소위 ‘후기자본주의’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들은 북한의 후기 스탈린주의를 설명하는 데에는 특별히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본 논문에서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네개의 위기를 차례로 분석함으로써 상기 주장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 2. 經濟的 危機

하버마스가 설명한 비경제적 부분의 위기에 대한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위기가 전혀 도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도입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비경제 부분의 위기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 위기의 다양한 징후가 후기 스탈린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마르크스에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최근의 4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체계적인 경제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 이것은 그들의 경제가 호조를 보였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경제 자료를 자유로이 공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것이다 -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외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그 내용에 관해서도 꽤 자세하게 파악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몇가지 징후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成長率의 低下

입수된 공식자료가 적기는 하나 그것들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초기의 놀랄만한 성과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비공식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199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있다. 즉, 북한 경제는 초기의 경이적인 도약 이후 최근 2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 2) 計劃 樹立과 計劃 停止

북한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경제개발계획이 원래 예정대로 수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1961-67년의 7개년 계획은 197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1971-76년의 6개년 계획이 끝난 후에는 1977년을 '과도기의 해'로 정해야 했었다. 1978-84년의 7개년 계획과 현재의 1987-93년의 7개년 계획 사이에는 2년간의 계획 공백기간이 있었다. 오늘날 북한의 방송은 현재 진행중인 경제계획의 목표 - 이들은 과거 그들이 선전에 열을 올렸던 '1980년대의 10개 장기목표' 보다 하향조정된 것이다 - 에 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추계에 의하면 북한 경제는 많은 분야에서 목표달성율이 겨우 절반, 심한 경우에는 1/3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제계획의 실패를 위장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3) 병목現狀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의 북한은 헝가리의 경제

학자 Janos Kornai가 심층분석한 각종 경제적 병리현상의 생체 실험장으로 볼 수 있다. Kornai가 설명한대로 통제경제는 재화의 부족현상을 초래거나 악화시킬 따름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통제경제하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재화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부족현상이 생겨나는 것이 필연적이다. 중앙집권화된 경제에서 부족현상이 일단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경제전체에 파급된다. 따라서 병목현상은 전염성과 고착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 북한경제의 모든 부문에 결핍현상이 존재한다. 북한의 언론에서는 석탄, 전기, 교통, 경공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연일 되뇌이고 있으며 정부는 각 산업시설들로 하여금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라고 계속적으로 몰아대고 있다.

한편, 일본 등 외국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생산시설 가동율이 기계고장, 원자재미비, 전력부족 등의 이유로 50%를 밑도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근에 망명한 북한의 외교관의 생생한 증언은 중요산업시설 (대안중기공장 등) 역시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동안의 몇분 동안만 가동시킨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또한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파급'의 실례를 들었는데, 이에 의하면 만년필의 부족을 금속, 전기, 교통, 심지어는 철도 침목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 4) 落後된 技術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의 대부분은 그 원인을 또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북한기술의 낙후성이다. 기술의 낙후성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다음의 두가지 의미로 파악된다. ①대부분의 기계설비가 20-30년전의 것으로 자본집약적이 아니며 ②마찬가지로 기계의 노후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많은 기계가 마모된 상태에서 또한 계속 고장이 일어난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은 아마도 북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보여지며, 특히 경제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술적 제약은 산출량 증가나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하자”는 캠페인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5) 消費財의 不足

각종 재화의 부족현상 가운데 소비재의 부족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체제를 가진 여타 국가(이들 체제는 대부분 소멸되었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중공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공업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아주 드물기는 하나 경공업에 대해서 그 운영을 지방단체에 이관하여 산출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분권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

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식품, 의복,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주택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평양 등에 건립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립), 식품과 의복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는 상품을 거의 진열하지 못하는 가게들이 옹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 6) 農業

농업은 어떤면에서 북한의 지금까지 경제정책 가운데 다소의 성공을 거둔 분야라 할 수 있겠으나, 농업용지의 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남북분단과 함께 이미 오래전에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되었던 정책들 중 일부는 오히려 농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개관과 농업용 펌프의 전기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들이 크게 자랑했던 화학화(비료와 살충제의 사용)는 과용으로 인해서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감소되거나 농토면적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의 UNDP보고서는 토지침식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게다가 흉년이 드는 경우 식량위기는 더욱 악화된다. 망명 외교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수준에 있던 식량 배급량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최근 수년간 북한은 식량 원조와 식량수입에 정책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중국, 태국은 물론 최근에는 (고무적이게도) 남한으로부터도 식량을 공

급받고 있다. 농업분야야 말로 경제적 위기가 다른 영역의 위기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분야인 것이다.

### 3. 合理性의 危機

북한의 경제적 위기에 관하여 우리는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고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지금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다른 부분의 위기를 얼마나 야기시키고 상호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합리성의 위기에 있어서는 이슈가 약간 다르게 제기된다. 하버마스의 이론도식에서 합리성의 위기는 “경제체계로부터의 명령을 행정체계가 감수하여 만족시키지 못할 때” 생긴다. 이것 또한 북한에 잘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위기의 많은 징후들이 적절한 시기에 현명한 정책을 택했다면 치유되었거나 적어도 경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르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는 그의 많은 구체적인 지도가 오히려 재난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1) 經濟改革 拒否

북한사람들은 소경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다. 1960년대 말부터 소련의 리베르만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오타 시크(Ota

Sik)의 책을 읽은 북한의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의 초기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들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예측은 이론적으로 불충한 궤변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말은 틀렸고 경제학자의 예측이 정확하였다. 사실 북한의 경제성장율은 정말로 쇠퇴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현재도 북한 지도층은 경제성장을 위해 주민을 독려하는 것이 건전한 경제정책을 대신하리라고 간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한 문제이다. 아마도 몇몇 기업은 현재 그들의 예산과 수입에 대해 약간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연계된 회사들은 전 동독의 콤비나트를 모방하여 기업 연합소 형태로 합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즉 강력한 (아마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경제적 통제는 계속되고 있고, 생산성 증대와 중앙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정치적 충성심의 지표가 된다는 위협적인 경고도 완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폭력적인 정치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의미있는 경제개혁은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 2) 위로부터의 干涉

북한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지적되지 못했다. 북한은 모든 통제경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중앙집중화된 경제계획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립된 계획에 대한 무작정하고 서툰 간섭들에 의해서도 손해를 입고 있다. 이 점에서 또한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차라리 계획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가 된다. 김일성 전집에서 반복적으로 예증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현장지도’를 통하여 이미 설정된 계획을 심각하게 변경시키거나 철회하곤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그가 편애하는 공장으로 옮겨가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중앙계획 책임자나 지방 간부들이 김일성이 매년 여름 함경남북도를 오랫동안 오가며 행하는 것과 같은 현장지도를 속으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지시는 반박될 수 없고 반드시 복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김일성의 잘못된 지식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간섭에 의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의 아들 김정일도 현장지도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북한경제의 장래는 더욱 어둡다.

### 3) 어설론 改關

1980년대 중반과 후반에 현저하게 나타난 계획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경제부처를 매우 자주 개편하고 (대규모 위원회로 만들고 그중 몇몇은 다시 해체시키는 등) 경제각료를 빈번히 바꾸는 것이었다. 때때로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일어났다. 1986년과 1988년 사이에 최고 계획책임자는 여섯번 바뀌었다. 홍승남의 경우는 1988년 2월에 해임되었다가 3달 후 다시 복직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개각은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대신할 수 없는 일로서 단지 정신나간 일일 뿐이다.

### 4) 外債의 災難

거의 20년 동안 외국 부채의 지불을 꾸준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보다 북한정책의 합리성 위기를 더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예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합리성의 위기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순간적인 국제수지의 적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불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아마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 계속되는 행태는 북한 지도층이 교활한 조치로서 부채를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김일성이 저지른 해악 중에서 부채를 갚지않는 것이 아마도 북한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사항이 될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에 대한 부채를 갚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는 선례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1949년 이래 소련에 대한 부채를 갚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둔하게도 이러한 일방적 우호관계가 무한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1991년에 이러한 예상은 어긋난 결과를 초래했다.

엘친은 말할 것도 없고 고르바초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은 종속국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 소련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끊고 수출을 줄여 1990년에 8억8천7백만 루블이던 수출액을 1991년 상반기에는 약 3천만 루블로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서방국가를 속이면 그 결과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들의 공급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몇나라 (예를 들면 일본)에는 부채를 지불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갚지 않는 술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에 대해 똑같이 부채를 갚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등을 돌리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가?

다른 곳에서 나는 이러한 근시안적 조치를 ‘촌부의 심리’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제한된 재화속에 사는 제로섬적인 사고방식이다. 정상적인 국제관계속에서 보는 상호신뢰에 기초한 지속적인 관계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한번 잡으면 끝난다는 식의 생각이다. 또는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자폐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주체사상이란 “나 먼저” 또는 “너를 이용해 먹겠다”는 사고이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며 이러한 태도 때문에 북한은 현재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 5) 努力動員의 強化

현대적 자본집약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정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북한은 필연적으로 봉건시대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노동절약적 기술을 투입하지 못하고 대신 노동을 더욱 착취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이같은 속수무책의 예는 많이 볼 수 있다. 한 예를 들자면 ‘속도전’인데 이것은 지금 비생산적인 운동이 되었다. 김일성도 이제는 이것을 비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소비제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부업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여성들이 그들의 여가를 활용하여 버리는 물건으로 양동이와 같은 저질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동원을 강화시키는 것은 엄격한 경제적 수준에서의 실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해 더 이상 쥐어짤 비축품이 없고 생산력의 증대

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다른 영역에서 반발을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년간 고된 일에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시책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 6) 非生産的인 支出

또 다른 합리성의 위기의 예로서 정부예산의 우선 배당순위를 들 수 있다. 김일성 개인송배는 직접·간접적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평양에 불필요하게 많이 있는 '위대한 기념건물' (주체탑, 개선문, 미완성의 105층 호텔)들과 축제행사에서 잘 나타난다. 1989년 7월에는 서울올림픽에 대항하여 평양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하였는데, 15,000명 이상을 북한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초청하여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였다. 40억불을 투자하여 건설한 남포갑문과 댐공사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수익성이 없는 것이다.

#### 7) 絶對 無誤謬의 誤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위기는 합리성의 위기에 의해 악화되었다. 일련의 정책과 실천 그리고 우선순위 등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문제는 몇몇 실수에 기인하기보다는 더욱 심층적인데 있다. 북한에 하버마스가 말하는 합리성의 위기가 팽배해 있

다면 그것은 북한의 정치이념과 용어가 합리성의 기준을 택하기를 체계적으로 거부하는데 이유가 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철저하게 자의적이다. 그것은 인간이 충분히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 결과는 위협적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같은 자세는 실수를 용인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경제계획 책임자와 기술관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공산당은 사실상 절대 무오류성을 주장한다. 당의 모든 정책은 세부사항에 있어서까지 항상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이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가 분열주의자나 비열한 자들을 제거하기 전에 이들이 잠시 동안 해독을 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약 실수가 정직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그 결과는 북한의 정책결정 체계에서 정직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의 통로를 박탈하는 것이다. 실패는 감추어지고 단지 낙관만이 허락된다. 물론 비공식적인 피드백의 통로는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 전체는 이같이 우스꽝스러운 무오류성의 걸치레 때문에 해를 입고 있고 불구가 되고 있다. 물론 무오류성의 주장은 김일성의 거짓된 진지한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고 더욱이 계속 잘못을 저지르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 4. 動機誘發의 危機

경제와 정치체제 외에 하버마스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측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정체감의 한 요소로서, 특히 제3의 위기로서 '동기유발의 위기'를 들 수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 위기는 사회·문화체제가 국가와 사회 분업체제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비록 이 분야는 동향과 증상이 관찰에 의해 추론되어야 하지만 그 양상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동기유발의 위기가 만발했다고 여겨지지는 않으나 북한에서 동기유발의 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반세기에 걸친 끊임없는 노역에 전쟁에 비유되는 각고의 노력을 더하여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육체적으로나 의욕면에서나 지친 상태이다. 그들이 더 이상 바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따라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영웅심에 들며 초창기의 자발적인 열정으로 당명에 충실히 이행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 1) 努力不足

다른 공산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과거나 현재에) 북한주민들이 상점과 사무실, 그리고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북한 방문자들은 쉽게 알 수 있다.

보상이 없으므로 의욕도 없다. 라디오와 선전간행물을 통해 모든 인민들에게 생산에서 경이적인 위업달성과 충성심을 보일 것을 독려하는 공식적인 미사여구가 끊임없이 범람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선전과 생활상과의 관계는 정반대이다. 이는 상호 보강관계로서 인민들의 노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수록 과대선전을 하기 마련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꺼놓긴 했지만 내부의 귀(inner ear)가 발달되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자면 평양의 호텔 휴게소에 있는 텔레비전은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지 않는다.

## 2) 젊은이들

많은 선전물에서의 우려와 동요는 정권이 젊은이들을 동기 유발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에서 정기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젊은 세대들은 투쟁기간 동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모른다. 다르게 말하자면, 북한의 젊은이들은 불만거리가 많다. 저급의 장기 병역의무(5년 혹은 그 이상이다)는 매우 인기가 없다.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평양의 건설현장, 외곽진 북구철도 건설, 혹은 최근의 무산광산 등 소위 말하는 '자발적' 노동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고, 데이트가 통제되는 등 일반적으로

명령체제하에서는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다른 곳에서의 생활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제한된 지식만을 갖고 있지만 말이다.

이상은 선형적 주장일 뿐임을 잘 알고 있으며, 개방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같은 폐쇄국가에서 개성, 동기 혹은 가치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으로부터 탈주한 사람이나 북한을 방문한 재일교포들로부터 그곳의 불평 불만(봉기가 있었다는 소문까지도)에 대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둘째, 비록 북한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해 무지하다고는 하나, 만약에 그들이 저급의 노역과 보상받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찾아 즐기고 있다면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문화 보편성의 측면을 주장하고 싶다. 누가 과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 3) 身分制: 社會階層의 問題

앞에서 밝힌 것은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특히, 선택의 결여에 관한 주장은 북한 사회구조의 다른 측면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나 그것의 사회계층적 함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계급뿐만 아니라 베버의 신분제 문제와도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몇몇 신빙성있는 보고를 소개하면 -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저작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 북한에서 모든 인민들은 세가지 기본 계층으로 분류된다. 즉 핵심계층, 동요계층, 복잡계층이 그것인데 이들 각각은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분류되어진다. '신분제'로 명명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비록 분류가 정치적이고 임의적이기는 하나 기능적으로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삶의 선택을 결정해 버린다. 오로지 핵심계층만이 평양에서 살 수 있다 (김주석이 늘 강조하듯이). 반대로 대부분의 복잡계층은 외곽의 시골에서 살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성분의 분류는 복합적이다. 배경(지주, 기독교인, 남한인은 모두 반동분자)은 개개인의 사상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종합되어 적용되는 것 같다. 비록 정보가 개략적이기는 하나, 실상에 있어서 파슨즈의 개념을 빌면 귀속(ascription)이 업적(achievement)을 지배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듯하다. 예를 들자면, 간부 자제들에게만이 김일성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체가 충분히 (옛 동독의 Stasi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이 체제의 동기유발의 위기에 관한 명백한 함축성을 내포한다.

한마디로 말해 복잡계층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으며 동요계층에게도 기회는 희박하다. 그러나 이 두 계층이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많은 사

람들이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받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중심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므로 비록 그러한 경우가 무한정 계속 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쉽게 눈에 띄는 반대운동을 펼 수 없을 따름이다.

#### 4) 엘리트도 動搖하는가?

그렇다고 핵심계층들이 동기유발 위기에서 아주 제외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와는 반대로, 처해진 위상에 따른 다른 특별한 요인이 압박을 가하고 회의를 자아내게 한다. 이미 경제관료에 대한 주어진 압박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정기적으로 많은 도표를 산출해야 하면서 적은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술선수범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결코 쉬운 삶일 수가 없으며 머리를 많이 짜내야 하는 것이다.

최고위 간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세계의 변화에 대한 의식은 동시에 고민을 하게 만든다. 최근에 한 고위간부는 서방 방문자에게 이전의 동독 외교관들의 현재 운명에 대해 물었다. 독일방식, 소련방식, 루마니아 방식이건간에 공산주의의 다양한 몰락과정은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적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초연해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앞으로는 더욱 자주 징벌 받을

것에 대한 공포가 망명을 부추길지도 모를 일이다).

#### 5) 現象 對 本質

한 측면의 모순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동기유발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고상하고 높은 미덕들(사랑, 충성, 이타심, 용기 등)을 끊임없이 선전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고상하기보다는 누추하고 냉소적이다. 그러한 체제하에서 흔한 일이지만, '담당자들'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관리들,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서 나무를 베고자 갈망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담당했던 망명 의사 김만철)에 대한 뇌물공여는 만연하고 있다.

특권층인 외교관들조차도 밀수로 박봉을 보충해야 하는 처지이고 보면 낯뜨겁고 비열하기까지 하다고 느낄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완전히 위선적인 사회라고 하겠다. 모든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감히 말을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 6) 忠誠에 대한 過大評價

그러나 모든 것을 불문에 부치더라도, 북한주민들은 유별나게 순종적이다. 이것 자체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규범은 '전통으로 도금되어 지는 것'이라 했다. 나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순응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만은 말할 것도 없고), 적

어도 별개의 세가지 연속적인 사회·문화적 전통과 경험에 의해 철저히 조장되어 왔다.

첫째가 전통적 유교사상으로서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공식 캠페인을 통한 공격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둘째는 일본 식민주의로서 천황숭배로 절정을 이룬 일반적인 권위주의는 오늘날 김일성 역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스탈린주의로서 집단(계급 혹은 당)의 지시사항에 대한 개개인의 정직한 복종을 요구한다.

반대로 적용해 보자면, 자유주의의 근원은 - 남한에서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 휴전선 이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위험을 안고 있으며 더욱 다원화된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유의 선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한국사에서의 다원주의는 부정적인 당파주의로 인식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는 사실은 유일사상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입장을 더욱 견고히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5. 正當性의 危機

오늘날 북한에 하버마스가 제기한 네가지 형태의 위기 중에서 세계 정도는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위기들

이 국가존립의 기반을 위협하는 전면적인 정당성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정권의 위기관리가 실패하면 그 댓가는 정당성의 상실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오늘날 북한이 그와 같은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반체제인사는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 인민들은 진실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추정할 도리 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는 있다.

#### 1) ‘보이는 손’

하버마스의 ‘조향(操向)기제’ (steering mechanism) 개념 중의 하나를 빌어서 본다면, 정당성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누가 욕을 먹어야 할 책임자인지를 판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사회 (또는 후기 근대)에서는 이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은데 체제가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익명이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힘에 있어 어떤 단일한 중심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광범위한 토대 위에 조직되어 있으나 일치된 목표를 가진 사회운동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북한의 경우 이와는 아주 정반대이다. 정부가 전부이며 모든 것을 관장한다. 앞서 논의한 것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이미

드러난 객관적인 약점이 주관적인 취약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잠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해 보자. 김일성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히드라(헤라클레스가 퇴치한 머리가 9개인 뱀)의 목을 자르는 것이다(또한 루마니아의 경우를 생각하라). 아니면 김정일에 관해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도 덜 불경스러운 죄에 해당할 것이다. 지난 2월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쿠데타 기도 소문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실제 발생했든 아니든 군부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 루마니아에서처럼 ‘작은 황제’ 증후군을 회상할 때 비록 그 아버지보다는 아들을 불만의 표적으로 삼는 것이 용이하겠지만, 어느 경우에도든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는 지극히 명약관화하다.

## 2) 金日成의 카리스마

북한에서 김일성의 통치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조건은 베버의 유명한 (정당성의) 3대요소를 모두 혼합한 것과 같다. 그의 카리스마(개인적으로는 거의 예외적이라 할 정도인)는 새로운 전통주의적 배경(수대에 걸친 혁명적 가계로 선전)을 업고 부각되고 있다. 한편 그 정권은 겉으로 드러나 기로는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헌법이나 의회 등의 제도적 형태를 법치주의와 합리주의적 규범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실제 혼합되어 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수십년간에 걸친 교화과정은 상당수의 일반 북한주민들 사이에 ‘위대한 수령’에 대해 거의 종교적 신앙에 가까운 경외심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북한의 조직적인 대중 집회의 예로서 폴란드 제작의 “행진” (The Parade) 이란 영화를 보면 어느 면에서 보다 잘 조정되고 다소는 초연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20년 전에 5차 당대회 때 보았던 그러한 흥분과 감격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궁핍과 위선에 찬 일상생활로 인해 과거 영광의 일부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 3) 過去의 榮光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자는 (비록 남한의 대다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 초기에는 상당수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이고 자발적인 충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작부터 잔인한 전체주의의 요소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원래는 억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요인들에 의해 김일성의 초기 정당성이 확대된 것이다. 뿌리깊은 반외세·반엘리트 감정으로 이루어진 동학의 유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1945년에 다시 전면에서 등장한 것이다. 적어도 이중 두가지 측면이 남한에서는 여전히 꺼림직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대협이란 다소 기묘한 집단의

행위를 부추기고 있음) 북한은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을 제거 하였으나 남한은 일본 식민지국가를 유산으로 이어받았다. (경찰제도를 비롯한 모든 것) 북한에는 현재까지 30년 이상 동안 외국 군대가 진주하고 있지 않다. 일부 한국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왜곡된 사고방식에는 그같은 일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대로 김일성은 두 종류의 대단히 절묘한 술수를 사용했다. 첫째, 몇년이 채 가기도 전에 김일성은 자신의 러시아식 모습 (예를 들어 군복같은 것)을 벗어던지고 자신을 순수한 한국인으로 보이도록 조작하였다. 이같은 기술은 북한정권이 90년대에까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동구나 심지어는 몽고와 같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부분적이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외세에 의해 탄생되고 지탱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곳의 공산주의는 몰락했다고도 할 수 있다. 김일성의 두번째 절묘한 술수는 한국전쟁이란 대재난을 위대한 승리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이다. 확실히 그 당시 북한 인민들은 투철한 신념을 갖고 전쟁에 임했고 미국과 유엔이 그들에게 가했던 그 비참한 상태를 (비록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용케 견뎌냈던 것이다. 필자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자부심을 가져다 줄 만큼 미화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후에 10여년 동안 급속한 경제건설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김일성으로서는

더 많은 술수를 썼어야 했을 것이다. 한반도의 양쪽 진영의 경제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현재의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쪽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남쪽을 앞서고 있었다(통일원의 자료에 의하면 1973년까지도 사정은 비슷했음). 현재의 정세 상태와는 판이하게 북한은 한때 성공한 나라요 잘 해내는 정권이였다.

필자 견해로는 이 모든 것이 두개의 의미를 가진 애매한 유산으로 남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김일성이 그들에게 이전보다 풍족한 식량과 교육,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연로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적어도 최근 20년간은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영광 때문에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재 사정,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상쇄할 수 있을런지 하는 것이 의문이다.

#### 4) 制限的인 暴力手段

여타의 충성심들을 제외하고라도 북한내 대다수 인민들이 항거의 소리를 높일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단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도 변할 것이다. 최근 망명한 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자주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대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안전부에서 이들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도저히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그리고 합리성의 위기는 정당성의 위기와 이를 토론할 공간을 창출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를 연속적으로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 6. 結論 및 展望

하버마스의 논거에 의하면 체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정체감(identity) 상실의 위기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는 그대로 북한사회에도 적용이 될만하다. 합리성의 위기가 경제적 위기를 격양시키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 정치체제의 본질상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기유발이나 정당성 등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필자 생각으로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소련의 원조가 거의 완전히 중단된 현 상황에서 그리고 그를 대신할 후원국이 없는 상황에서(일본을 포함하여) 경제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생활수준은 더욱 비참해 질 것이다. 이는 결국 최악의 상태에서 주민의 충성심과 인내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필자 의견으로는 폭동이나 엘리트 또는 군부 쿠데타의(양자가 모두 소문은

있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쫓아 정치적으로는 통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룩하는 것이다.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직관은 어떤 면에서는 옳은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1991년은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 확실히 너무 늦었다. 딜레마는 명확하다. 하버마스파의 용어로는 합리성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개선하고 가능하면 동기유발의 위기(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분단된 한국의 상황에서 정당성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의 문호를 넓히면 남한의 엄청난 경제적 우월성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북한 인민들이 남한 형제들의 소득이 그들보다 무려 5배나 높다는 것을 알고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을 그들이 속아왔고 아무 이유나 목표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김일성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북한의 장래는 불길하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양자 모두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여 인민봉기를 유발할 것이고, 개혁을 추진한다면 경제는 희생시킬 수 있겠지만 북한체제의 정당성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는 정말 끔찍한 딜레마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양은 보다 완고한 형태의 선택을 할 것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의 실패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점점 더 많은 수의 엘리트들이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진다. 모든 이념적인 문제들을 접어두면 (쇠망해가는 북한에 누가 과연 희망을 가질런지 의문이다), 패배자 진영에 가담하여 종말을 고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하버마스의 내부적 추진 모델에 대한 수정이다. 외부조건 변화 (남한의 성장,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 공산주의의 붕괴)가 북한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경제개혁을 받아들이고 1970년대에 일본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이룩했다면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저항운동의 소지가 다분히 일련의 현안 사건들에 봉착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992년 4월이면 김일성의 80회 생일이 된다. 1993년 12월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이다(과거에는 조기달성을 자랑하였음). 그리고 당대회를 개최하여야만 한다 (1980년에 마지막으로 열렸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거리이다.

셋째로, 균열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데는 부패한 구조가 도리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붕괴는 신속하고 급작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상당수의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러니컬하게도) 필자 자신도 김일성이 장수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점진적인 통일과정은 체제붕괴가 가져오는 엄청난 위험과 비용을 소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80세에 접어든 노인들은 그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절대권력 통치에 바쳤는데 자신들이 이룩한 일을 완전히 180도 돌리거나 자신들이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완곡히 표현하자면 북한에서는 이제까지 융통성을 보인 적이 별로 없다.

오히려 김일성의 지나친 오만이 그리이스 비극에서처럼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종말을 고할 것 같다. 정확한 방법이나, 시기, 그리고 사태추이는 본질적으로 예견 불가능한 것이지만 1995년까지도 북한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존재한다면 필자로서는 대단히 놀랄 일이다. 이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후기 스탈린주의에서는 하버마스의 네가지 위기가 매우 뚜렷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맑시즘의 이론구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비판이론가의 시도가 그 분석대상으로 자본주의를 택하지 못하고 마르크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그 연구 적용대상을 발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 世界體制理論에서 본 中國革命과 北韓社會의 變化 展望

Alvin So (美國 하와이大 社會學教授)

## 1. 序論：世界體制理論과 社會主義 社會의 變化

1991년 세계 G-7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세계경제에의 편입’에 관한 내용의 23페이지에 달하는 편지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및 캐나다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이를 통해 고르바초프는 서방세계로부터 ‘원조와 부채 삭감 그리고 투자 촉진’을 기대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과 내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련을 경제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보다는, ‘혼합 경제’를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해 서방세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서방 각국은 소련에 대해 원조와 차관을 보증해 주기 보다는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전례없는 우대관계를 주선하여 소련이 서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태환화폐 창출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처방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서방세계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소련의 경제위기는 마침내 정치적 위기로 파급되면서 쿠데타와 고르바초프의 실각, 공산당의 몰락과 소련연방의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상의 사건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하에서 사회주의 발전의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이든 보수주의자이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고도로 자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혁명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Arrighi 근간; Chase-Dunn 1982, 1990; Dixon 1979, Gorin 1984; So 1990a; Wallerstein 1982a, 1989, 1990), 사회주의 국가는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속해 있으며 그 형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에 의해 많은 구속을 받고 있다.

사실상 이미 1974년에 Wallerstein(1979, p. 90)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속에서 국가소유권 체제를 이룩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도발적인 논제를 제시한 일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 그 소유자가 하나의 개인이든 개인으로 이뤄진 그룹(주식회사와 같은)이든 주권국가(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든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다. 모든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소유한 국가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시장에 참여하는 단지 한개의 자본주의 회

사일 뿐이다(So 1990a, p.186).

이러한 세계체제이론의 기본 전제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이 이론은 사회주의 국가의 궤적을 결정하는 세계체제의 역동성을 고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의거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기적 형태(Wallerstein 1982b)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중심부 국가의 반응(So 1986a, 1990b; Eckstein 1982), 그리고 지역블럭이 사회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Cumings 1984)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이상의 역동성이 밝혀지면 세계체제이론에 의거, 사회주의 발전의 변동과정에 있어서 세계체제의 역동성과 국가세력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So 1982b). 물론 세계체제의 역동성이 발전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을 제시하지만, 발전전략을 선별하고 선택해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행위자이다. 따라서 계급, 신분집단 그리고 관료기구 및 당과 같은 국가행위자가 세계체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정한 궤적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세번째 기여로서는 세계체제이론이 사회주의 궤적을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Kraus 1979; So 1990a). 사회주의 혁명 직후에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중심부 국가)의 강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신생 사

회주의 국가는 세계경제체제에서 소외되고 만다. 이들은 중심부 국가로부터의 극단적인 적대감이 해소되고 자체 통치력을 공고히 한 연후에야 세계경제에 재편입이 허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체제이론은 사회주의 국가의 상반되는 발전목표들을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Wallerstein(1982a, 1990)에 의하면 사회주의 혁명은 민족국가를 쟁취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반체제운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초기에는 세계경제에서 착취와 부정 그리고 지배를 배격하여 혁명의 제목적들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회주의 국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주된 목적은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됨으로써 국가내 제반 정치세력들 뿐만 아니라 국외의 정치세력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혁명 공약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 세계경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단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추격하고 세계경제에서 상향적 이동을 이룩할 수 있기만을 희망하게 되면서 '일국사회주의'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중상주의가 최고의 발전전략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딜레마는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혁명적 목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중상주의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고도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체로 간주하는 전통적 연구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세계체제이론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오는 구조적 제약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체제이론의 장점은 세계체제의 전반적인 정세 및 세계체제의 역동성과 국가세력간의 상호작용, 사회주의 발전의 양면성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상반되는 발전목표(혁명 혹은 중상주의)와 같은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세계체제이론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이상과 같은 통찰력을 이용하여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사회주의 발전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난 40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의한 여러가지 제약에 대응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상주의 전략과 혁명목표간에 전략적 선택을 했는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사회주의화 연구의 타당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 2. 重商主義(1949-1955)

### 1) 世界情勢

1949년 중국의 공산혁명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승국면 시기에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경제부흥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여러 국가들은 세계경제에서 상향적 이동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미국은 최대의 전승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대신해서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군사, 재정, 상업, 산업 및 이념 면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유진영'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 공산혁명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미국은 전함을 대만해협에 파견하고, 공산당에 패배한 대만의 국민당 정부를 지지했으며, 공산당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중국본토에서 반혁명운동을 지지했고, 미국에 있는 중국의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했으며, 중국의 유엔가입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매체를 통해 중국공산당 전체주의에 대해 이론적 공박을 감행했다. 물론 이 시기는 '냉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했다. 일본을 지배하려던 정책을 철회하고

강하고 부유한 일본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 군사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해 미국시장을 개방했으며,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지원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 한국, 대만에 확고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반공세력을 형성하는 첩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철두철미한 적대감으로 사회주의 중국은 특정한 발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단절로 중국의 사회주의 정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나 수입대체형 정책을 채택할 수 없었다. 전자는 서방시장의 폐쇄로 인해서, 그리고 후자는 경제제재 조치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중국은 세계경제의 상승국면 동안의 호기를 탈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사회주의 중국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자본주의의 황금시기에 사회주의 동맹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소련의 정치적 지지는 자본주의 중심부국가로부터의 적대감에 대처하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소련의 경제원조 및 차관과 기술제공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혁명전략상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 사이에 큰 차이점은 있으나,

중국은 1950년초에 소련과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소련을 '큰형님'으로 대우하였다.

## 2) 開發目標와 推進計劃

이 시기에 중국공산당의 절대절명의 목표는 전쟁복구 사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이후에, 빈곤과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경제재건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되지 않고 어떻게 중상주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중국이 소련을 따라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으로서의 허약한 빈곤국에서 벗어나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여 자본주의 중심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소련의 성공적 사례를 모방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1차 5개년계획은 경공업이나 농업보다는 중공업, 농촌보다는 도시 그리고 내륙지방보다는 연안지방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연안 도시에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경제에서 중국을 강하고 부유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전략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무렵 중국의 발전목표는 중상주의였으므로 혁명적 사회주의 달성이라는 목표는 지연되었다. 이 중상주의 전략을 합리화시킨 프로그램은 '신민주주의'로서 이는 단지 제국주

의, 관료자본주의, 봉건주의 타파만을 목표로 할 뿐, 소상품 생산과 산업자본은 존속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적 경제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자산과 국민당 자산의 국유화를 단행했으며, 봉건지주로부터 소작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부농, 영세상인, 산업자본가, 신중산층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록 농촌의 집단화와 도시산업의 국유화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점진적이고도 자발적인 진전을 선호한 공산당 방침에 따라 1950년대초까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산업화와 기계화를 통해 대규모 집단농업의 기술적인 기초를 다지는 데만도 세차례 이상의 5개년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중상주의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연합전선을 전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비숙련공이나 소작농민들을 정당의 핵심 지지자로서 동원하는 한편 부농, 산업자본가, 영세상인, 신중산층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했다.

### 3) 評價

처음에는 중상주의 전략이 정치안정을 꾀하고 경제성장을 높이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첫째, 중심국의 적대감과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명분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모든 계급의 역량을 합치는데 기여했다. 둘째,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자원을 재분배하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세째, 중상주의 정책은 중소기업분야의 확대를 가져왔다. 중국공산당의 지원 아래 부농은 농산물 생산확대와 농촌의 산업화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영세상인들은 보다 열심히 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자본가들도 외국 및 관료 자본가들과의 시장경쟁이 배제된 가운데 한층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 정책은 1950년 중반에 들어서 중국공산당의 혁명 노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중공업 육성은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다. 소련 방식은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농민을 차별하는 정책인데 중국공산당은 농민들에 정치적 지지기반의 대부분을 두고 있었다. 또한 토지개혁은 부농들이 이웃의 가난한 농민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계급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만약 이러한 중상주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중국공산당이 1920년 이래 계속 투쟁해온 혁명목표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소련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농촌지역의 혁명투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결의하였다.

### 3. 革命的 社會主義(1956—1977)

#### 1) 世界情勢

이 시기는 아직도 지난 시기에 있었던 세계체제의 역동성이 상당 부분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세계경제는 아직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상승국면에 있었고, 자본주의의 중심부 국가들은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적대관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원조로 산업화를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중국과 사회주의 ‘큰형님’간의 격렬한 경쟁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50년대말 중국은 소련의 헝가리 침략과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을 비난하는 한편, 소련으로서는 소련방식을 포기한 중국공산당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1960년대 초반 두 사회주의 국가는 서로 공개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배반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소련은 중국으로부터 그들의 기술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마침내 1960년대말에 두 사회주의 국가는 국경분쟁을 일으켜 무력충돌이 발발할 정도로 사태는 악화되었다.

소련의 ‘제국주의’와 ‘수정주의’에 대한 반발로 중국공산당 주석인 모택동은 혁명과업을 가속화시키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진척시킬 것을 결정했다.

## 2) 開發目標와 推進計劃

결과적으로 1950년대 중반, 중국의 개발목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소련의 중상주의적 방식을 폐기하고 중국공산당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산업화와 기계화 이전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첫째, 1950년대 중반 ‘사회주의 전성기’ 동안에 지방에서는 농업의 집단화가 이루어졌으며, 도시에서는 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었다. 농업의 집단화와 도시의 국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중국 자원은 획일화된 국가계획에 의해 분배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장과 개인의 역할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둘째, 1950년대말의 대약진운동 기간 중에 농업의 협동화는 농업과 산업활동을 병행하는 집단농장화를 추진하였고, 중앙정부는 여기에 고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시도를 하였다.

셋째, 1966년에서 1976년까지의 ‘문화혁명’ 시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사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신중산층과 산업자본가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한’ 당간부들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노동’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하방되었다.

넷째, 발전전략에도 변화가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외부의 도움(소련의 원조, 기술, 전문지식)에 의존하기보다 국내자

원을 활용하고자 했다. 자립경제 발전방식을 도입하고, 민족자주를 역설하며, 자신이 후진국이란 사실과 인민동원, 노동집약적 산업 등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도 바뀌었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는 도시보다 농촌개발에, 연안지방보다는 내륙지방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중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농촌 인민공사를 통해서 중국공산당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침략에 의한 파멸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지지계급의 분포도 달라졌다. 중상주의가 부농, 숙련공, 소상공, 신중산층 또한 산업자본가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면, 혁명적 사회주의는 가난한 농민과 비숙련공에 보다 의존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혁명적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직업보장, 주택, 탁아, 연금 등의 권리보장제도가,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교육, 건강진단, 복지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확대 적용되었다.

### 3) 評價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 주변국과 비교하거나 부채에 허덕이는 동유럽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프로그램은 가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20년에 걸친 제도적 변혁, 인민동원, 그리고 사회간접자

본에 대한 투자 등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연간 GNP 4~5 % 성장)을 낳았다. 사회적으로는 Selden(p.2)이 지적한대로 “중국은 10억 인구가 기본식량에서 자급자족을 이룩하였는데, 특히 도시에서 소득과 서비스면에 있어서 비교적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계급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초에는 68세의 평균수명, 하루 2,600 칼로리 식사, 낮은 문맹률과 건강관리 등이 말해주듯이 중국의 제반 사회상은 훨씬 높은 소득을 가진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했다.” 혁명적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100년에 걸친 외세의 지배와 비싼 댓가를 치른 수차례의 전쟁 끝에 드디어 동아시아의 주요 지역국가로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 프로그램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경제방면의 성공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5억이던 인구가 1980년에 10억으로 불어남으로 인하여 중국의 개인소득은 350불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을 면치 못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었다. 중국인민을 기아와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인민동원 전략은 중국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대결한다든가 혹은 신흥개발도상국을 추격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의 일차 혁명적 열기가 식어버린 이후에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소비제품을 제공하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과제가 점차적으로 중국공

산당에 압박감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계획경제는 이러한 중상주의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연성예산제도’(soft budgetary constraint)하에 운영되는 국영기업들은 대단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으며, 적자가 발생하면 언제나 국가에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하곤 하였다. 국영기업은 또한 적정한 자원과 인원보다 더 많은 양을 비축함으로써 낭비와 자원의 남용,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 등을 초래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혁명적 사회주의에서는 직업이 보장되고 작업성취도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비용품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신중산층(기술자, 전산프로그래머, 핵과학기술자 등)의 지지를 획득하지 않고 또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 기술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보다 더욱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1970년대 혁명적 사회주의로서는 세계 최대 숫자의 자국 인민들에게, 중국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여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강대국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1950년대말과 1960년대초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중상주의정책을 중국에 다시 도입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를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1970년대말에는 초기

혁명세력들의 퇴진과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따라 중국공산당으로서의 중상주의정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 4. 重商主義로의 復歸(1978-1986)

##### 1) 世界情勢

1970년대말 세계경제의 하향국면 추세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으며 성장의 기회 또한 줄어들고 있었다.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에서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므로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었다.

이때는 또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낮은 생산성과 경기의 일시적 후퇴에 봉착하고 있었다. 미국의 생산품은 세계시장에서 일제와 독일제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아직까지 월남전에서의 패배에 시달리고 있었고,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기에 미국은 중국이 세계경제로 편입되는 것을 환영했고,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과 일본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해 주는 새로운 지역세력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광대한 중국시장, 값싼 노동력 그리고 무한한 중국의 원

자재와 광물자원은 세계시장에서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은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경제부흥 성공에도 매료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국 원조로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이 국가들의 국민들은 중국인들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중국은 성공적인 이웃 국가의 사례를 모방하여 같은 방식인 수출주도형 산업화로의 전환을 피하고자 했다.

만약에 중국공산당이 미국과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교류하게 되면, 이전의 사회주의 동맹국들에게 많은 불만을 초래할 일이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경제는 외채, 저성장과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동구권의 실패는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정체된 중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다시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 2) 開發目標와 推進計劃

이 시기는 생산능력을 가능한 한 신속히 향상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4대 현대화정책 - 농업, 산업, 과학과 기술 그리고 군사의 현대화를 통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추격한다-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발전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국공산당은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민족통일을 시

도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정치개혁에도 손을 댔다.

첫째, 중국은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외국과의 교역량은 1978년의 200억불에서 1989년에는 1,110억불 수준으로 증가했다(Yang 1991, p.42). 세계경제에 새로이 참여한 이후 중국은 외국정부로부터 보조를 얻어 공급자 신용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 세계은행으로부터 1979~1982년 동안 대부받은 총액은 매년 약 27억불에 해당한다. 그것은 1987년과 1988년에 이르러서 각각 58억불과 65억불으로 증가되었다(Perkins 1991, p. 272). 중국은 또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개의 경제특구와 14개의 해안도시를 개방했다. 초반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특별히 장려했다. 1990년에 중국은 160억불에 달하는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다(Lall 1991, p.3; Battat 1991, p.1). 따라서 세계경제로 재진입함으로써 중국은 외화와 차관, 그리고 서방의 발전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중국은 민족통일을 달성하고자 했다. 중국공산당의 원로세대는 대만과 홍콩과의 민족통일을 죽기 전에 완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민족통일への 열망은 민간차원의 교류를 강화시키는 것, 즉 가족상봉, 관광, 학술회의, 체육교류, 무역과 투자 등으로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은 홍콩 자본가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민간교류가 제도화되었을 즈음

에 대륙 측은 통일에 대한 논의를 강요했으며, 1980년대초에 중국공산당은 영국 정부로 하여금 홍콩에 대한 통치권을 1997년까지 중국에 반환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Hsiao and So 근간).

셋째,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를 재도입하고자 했다. 농촌에서 집단인민공사는 해체되었다. 농민가족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주어져, 각자가 손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팔고, 농촌공업에 종사하며, 인접한 도시의 공장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장려했다. 도시에서는 청년들에게는 소규모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상점(예를 들면 이발소나 식당과 같은)을 운영하도록 장려했으며, 특히 국가부문에 고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권장했다. 국영 또는 협동기업들은 자신들이 이윤을 내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규모 기업이나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하청을 주었다.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시장기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민간부문,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와 집단기업과 함께 부상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넷째, 중국공산당은 일련의 정치개혁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반대 의견에 관대해지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자유를 허용하고, 군단위의 지방선거를 허용했다. 외국기업과의 합영법을 필두로 상법의 전체 골격을 제정하였으며, 문화혁명 당시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신중산계급의 성원들이 대거 중국공산당에 입당했으며 이는 당을 전문화하는데 기여했다.

요약하면 중상주의를 지지하는 계급세력이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4대 현대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외국자본가, 부농, 소상공인, 산업자본가와 신중산계급에게 지원을 요구했다. 현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급박함을 극명히 표출하는 것으로 공산당은 “노동으로 이윤추구를 한 결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중상주의를 향한 노력은 국가 자본주의에 근거를 둔 까닭에 절반 밖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막대한 민간부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아직까지 국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비록 시장이 번성하고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의 가격과 유통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부문에서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아직도 권력을 독점하며, 마르크스-레닌-모택동주의에 충성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요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국공산당이 달성하고자 한 것이 있다면 중상주의적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만을 개방함으로써, 중상주의의 제한된 처방이 국영부문의 효율성, 생산성과 수익성을 자극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評價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중상주의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를 뚜렷이 가져왔다. 경제특구의 운영으로 수년 사이에 마을시장은 현대도시로 탈바꿈했다(So 1988). 1978년과 1988년 사이에 중국의 수출은 97억5천만불에서 475억달러로 연간 17%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총 증가액 375억달러 중에서 286억달러가 수출업체에 의해 달성되었다. 이러한 실적은 같은 기간내 한국과 대만의 실적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농업생산은 놀랄만한 증가를 나타냈다. 1978년과 1984년 사이에 곡물생산은 연간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1988년에는 중국 농가의 평균 소비량이 두배로 증가했다(Perkins 1991, p.270, 274). 더욱 많은 소비재가 민간부문에서 이용 가능해졌고 중국인민은 이전에 비해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불완전한 중상주의정책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농민들의 열정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까닭에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농산물 생산이 한계에 이르렀다. 농민들이 생산의 기계화와 합리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농산물 생산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민공사와 집단농장이 소규모 가족농장 형태로 해체되면서 기계화와 합리화는 선택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당시의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들은 중국의 관료주의에 불

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과실 송금,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쿼타제도에 대한 수많은 제약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중심부국가의 자본가들은 중국이 주변국으로서의 역할을 저항없이 수행하고 외국의 주도적 역할을 받아들일 것을 원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완전한 주변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더욱 많은 자율권을 보유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투자는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여 중국에 대한 총직접투자의 11.4%와 9.5% 밖에는 차지하지 못했다(Perkins 1991, p.273).

마지막으로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존은 중국경제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자원부족을 심화시키고 시장에서의 가격인상을 초래했다. 따라서 불평등한 이중가격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보다 국가의 계획가격이 훨씬 낮게 책정되었다. 당 간부들은 정치적 연고를 활용하여 부족한 자원을 국가 계획가격으로 싸게 구입한 다음 이를 비싼 시장가격으로 다시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쉽게 챙길 수 있었다. 기업 역시 기술개발, 생산단가 절감,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연고와 부족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중가격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국가간의 유착을 단절시키지 않는 한,

중국의 기업은 시장 이익율에 의해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처하면서 중상주의 세력들은 생산에 있어 사회주의적 족쇄를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구조적 개혁을 주장했다. 비록 중상주의자들이 1983년의 '반 부르조아 정신 혁명운동'과 1986년의 '반민주 운동'으로 억압받기는 했으나, 1987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새로운 중상주의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 5. 重商主義와 國家社會主義의 對決(1987-1989)

### 1) 世界情勢

이 시기는 지난 기간 동안의 세계체제 변화가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때였다. 세계경제는 하향 추세로, 미국의 해게모니는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보였고, 동구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실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소련의 경제 역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는 형편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30여년에 걸친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결과로 대만, 한국, 홍콩 및 싱가포르의 생활수준은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다. 임대료, 평가절상, 공해 및 노동조건의 국가규제 강화 등의 요소들은

생산원가의 증대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신흥 공업국가들은 기술집약적 생산체제를 갖추거나 아니면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웃 주변국가로 이전시켜야 했다. 대만 및 홍콩과 중국 본토간의 경제통합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90년까지 홍콩은 약 100억달러를 중국본토에 투자함으로써 총외국 직접투자분의 60%를 차지하였다. 홍콩회사들은 200만명에 달하는 공장노동자를 중국 본토로부터 고용했는데, 이 수치는 홍콩내에서의 고용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대만의 투자 역시 1987년의 1억달러에서 1990년에는 20억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0년에 대만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중국 본토 제일의 투자자가 되었다(Hsiao and So 근간; Lee 1991). 1980년말 홍콩과 대만의 자본가로부터의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보고, 중국공산당은 대대적인 중상주의정책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 2) 開發目標와 推進計劃

1987년에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사회주의로부터 기인하는 생산제약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구태의연한 경제와 정치제도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중상주의자들은 해안지역 개발전략, 민족통일, 기업혁신, 가격개혁 및 정치쇄신 등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개혁들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에서 파생된 특권

을 누리는 당 지도부와 국가 공무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었다. 우선 중국공산당은 ‘해안 개발전략’이라고 명명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 계획을 통하여 전해안지역이 - 1986년을 기준으로 중국 인구의 41%에 해당되고, GNP의 60% 및 해외무역의 79%를 차지함 - 해외투자와 교역을 위하여 개방되었다. Yang(1991, p.42)이 설명하였듯이, 이 전략은 보다 발전된 해안지역에서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을 개발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완전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들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였다. 자립에 의한 개발보다는 외국과의 교역 자체가 중국 경제개발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믿어졌다. 지방관료 및 기업에게는 외국 교역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자유재량이 주어졌다. 따라서 과거의 중국 경제정책이 경제특구와 같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해외 교역을 한정한 반면, 해안지역 개발전략은 광범위하게 세계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민족통합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협상을 통해 성사시킨 뒤 관심을 대만으로 돌렸다. 해안개발전략은 대만과 중국 본토의 경제적 통합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또한 대만 경제인들은 대만 국민당에게 중국공산당과의 정부 차원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셋째, 중상주의자들은 기업혁신의 촉진을 원했다. 목표는

①기업들을 그들의 손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적 경제 단위로 바꾸고 ②당원들은 경제적 결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로서, 국가와 기업간의 유착을 단호히 척결하며 ③기업 간부들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고용인의 해고권, 규율의 강화, 타기업과의 계약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④임금을 기업의 이익과 연결시켜 임금의 개선을 단행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기업은 노동자해고, 월급감봉, 복지수당의 감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넷째, 중상주의자들은 가격개혁을 제안하였다. 소비재 및 주요 산업 원료에 대한 국가의 모든 가격통제는 4년 내지 5년 이내에 중지되도록 조치하였다. 국가가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계획가격이 없다면 단지 시장가격만이 존재한다. 이는 당 고위간부들이 국가가 책정한 싼 가격으로 자원을 구매하여 시장가격으로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치적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였다.

마지막으로, 중상주의자들의 상기 제안에 대한 반대를 잠식시키기 위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다. 중국 당서기인 짜오즈양은 그의 두뇌집단과 함께 중앙 정부기구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분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종신제의 종식, 개인의 자율권 한계에 대한 헌법상 규정, 인민회의의 실질적인 정치적 우월권 회복, 정치적 논쟁의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Nathan 1990, p.9).

### 3) 評價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중상주의자들의 공세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무엇보다도 해외교역 분권화가 해안개발전략을 통하여 집행된 이후 많은 무역회사들이 지방에 설립되었다. 1978년부터 1986년 사이 약 2000개의 무역 회사들이 있었지만 1988년 한해 동안 20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해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되었다(Yang 1991, p. 5). 이러한 지방 무역회사의 급작스런 확산은 ①수출용 원자재 확보 경쟁으로 인한 국내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②외국 바이어 선정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수출 이윤의 감소 ③수출품의 품질에 대한 관리 소홀, 사기, 계약 위반, 수출에 대한 신뢰도 저하 ④국내회사가 보유 외환을 사용하여 고가의 소비제품을 구입함에 따른 외국상품들의 반입증가 ⑤암거래 외환시장의 확대로 인한 외환의 투기 등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업의 개혁은 수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바로 포기될 수 밖에 없었다. 당직자들은 이러한 개혁이 그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위협함에 따라 반대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직업 보장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상실하게 됨으로 저항하였다. 대중 매체의 선전과 환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개혁은 완전한 실패였다.

널리 알려진 가격개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1988년 여름

에 가격통제가 해제되자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공식 인플레이션 비율 20.7%는 지난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중국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가들의 사재기의 결과로 소비재와 산업 원자재의 품귀를 유발시켜 시장가격을 더욱 상승시켰다. 인플레이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1988년 9월 중국공산당은 가격개혁을 무기한 연기하고, 긴축재정과 이념순화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대적인 중상주의의 채택을 둘러싸고 일어난 경제문제들은 1989년 중국공산당을 거의 와해시킬 만큼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급진적 중상주의자들의 정책은 도시에서 중국공산당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과 1989년 동안 농촌 거주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상승 탓에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국영 노동자들은 점진적인 권리의 상실(예를 들어 무료 건강진료서비스와 주택)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고, 신규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보장도 주어지지 않았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의 도시 유입은 심각한 실업문제와 범죄를 야기시켰다. 또한 신중산층들은 서양의 생활양식에 접해 본 후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정책들에 대하여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다. 이들은 같은 지위에 있는 서구인들이 누리는 동등한 특권을 바라며, 자유, 자주, 신분, 고임금, 그리고 직업이전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자신

들이 연로한 당 지도부보다 중상주의정책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정치범의 사면, 민주적 선거, 다당제 및 인권의 보호를 포함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갈등은 당내의 갈등 그리고 승계 위기와 연계되어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그것은 호요방(대대적인 중상주의 계획을 옹호한 전 당서기)의 죽음 직후 응집되고, 인권, 민주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서구화된 학생들에 의해 발화되었으며,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 기회를 포착하여 도시 민중이 이에 가담하면서 서방 언론의 지지를 받는 학생들의 단식파업은 곧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도시에서의 대규모 봉기로 전환되었다. 중국공산당이 평화적 대화로 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로 폭력과 유혈 사태가 야기되었다 (So and Hua 근간).

## 6. 重商主義의 再考(1990-現在)

### 1) 世界情勢

1989년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중국의 천안문사건 직후, 동구에서 정치폭동이 일어났다. 차례차례로 동구의 공산당은 권좌에서 쫓겨나고, 동구 국가들은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국가사회주의의 붕

과 이후 동구의 '신생국'들은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투자, 차관, 원조, 전문지식 등을 구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주의 동독은 자본주의 서독과 신속히 통합을 이룩했다. 동구에서의 공산주의 몰락은 소련에서 정치 불안정을 가속화시킨 결과, 공산당의 와해를 초래하고 다양한 민족과 공화국 정부들은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서방의 언론매체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공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승리로 묘사했다. 세계체제이론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재편입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자본주의 중심부국가들이 동구사태를 주시하면서 매우 고무되었던 반면, 중국의 경우는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천안문 사건 직후, 자본주의 중심부국가들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탄압을 비난하고 중국에 대한 차관공여를 거부함으로써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철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몇 달 후에, 중심부국가들은 중국공산당이 계속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치적인 비난을 점차적으로 약화하고 경제제재 조치도 슬그머니 철회했다.

아시아 국가들도 천안문 사건에 대해 같은 형태의 반응을 보였다. 대만과 홍콩에서는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과 그 이후에 대륙의 공산정권의 독재체제에 대해 격렬히 항의했다. 그러나 일단 감정이 가라앉자 대만과 홍

콩의 자본가들은 마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였다. 1990년초에 대만과 홍콩의 자본가들은 중국 남부 뿐만 아니라 중부와 북부지역에까지도 진출을 했으며, 산업분야 이외에도 부동산, 관광업과 증권에까지 투자를 확대했다.

이상과 같이 세계체제의 변화를 중국공산당은 상반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만약에 중국이 전반적인 중상주의정책을 수용하게 되면, 동구 사회주의국가와 같은 경로를 거쳐 마침내 몰락하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이나, 반면에 중국이 혁명적 사회주의체제로 회귀하게 되면 홍콩과 대만의 자본가들은 당연히 대륙을 외면하게 될 것이며 민족통일의 염원 또한 요원해질 일이었다. 이러한 상반되는 양면성으로 인해서 중국공산당으로서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발전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 2) 開發目標와 推進計劃

중국은 10년에 걸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노력으로 이미 외국과의 무역, 투자, 기술과 관광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국내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중국공산당은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자본에 의존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세계경제로부터의 완전 탈피나 혁명적 사회주의로의 복귀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결단을 요하는 사항은 “어떠한 여건하에서 중국이 세계체제의 역동성에 유리하게 대처하고, 이를 국내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강력한 반(半)주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아직도 국내 발전을 위한 세계체제의 범위와 심도 및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달성하고자 염원하는 것은 시장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 상품경제’라고 불릴 수 있는 혼합 형태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이상적인 형태로는 국가사회주의와 중상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혼합형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을 공존시키고 수출주도형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를 창출하여, 남한이나 대만과 같은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Lee and Lee 1991).

천안문사태 이후에 개발목표를 수정한 중국공산당은 가격, 신용대부과 무역정책을 보다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의 재중앙집권화를 도모했다. 한편 국영기업은 이제 신용대부와 자원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수출산업도 마찬가지로 신용대부와 원자재 구입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므로, 수출대금으로 외국의 부채를 갚고, 국내 고용을 창출하며, 현대화에 필요한 수입을 증가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열된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국가지출 및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민간대출 등에 대한 긴축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정부는 많은 외국 무역상사들의 ‘음성적인’ 사업 영역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서 이를 폐쇄하거나 합병시켜버렸다. 또한 무제한적으로 범람하는 외국 소비제품을 통제할 목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였다.

경제 분야에서 집중하는 행정적 통제와 더불어 정치분야에 대한 탄압도 가중되었다. 중국정부는 반체제학생, 지식인과 서방기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지지한 당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단행되었고, 원로 당 지도자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과거의 혁명 구호가 옹호되었다. 정부는 또한 정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사무직 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가하였다.

경제의 재중앙집권화와 정치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중국공산당은 아직까지도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외세 지배에 관한 전통적인 수사적 구호들을 언론에 자주 등장시키고, 서방세력이 중국 국내정치에 간섭을 한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민족주의를 중국인들간의 연대성을 창출하는 중심 응집력으로 활용하였고, 당내 분쟁과 계급적 이질성을 대만과 홍콩과의 민족통일을 달성한다는 커다란 목표 아래 잠재울 수 있었다.

‘대중화권’(大中華圈)의 개념을 창출하여, 중국대륙, 대만,

홍콩의 경제가 서로 보완적 관계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중국대륙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원자재 그리고 시장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고, 대만은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며, 홍콩은 세계적인 재정과 무역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세 중국 국가의 경제통합은 그야말로 중국을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評價

단기적으로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정책은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과열된 경기는 냉각되었다. 중국의 상품수출은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대만과 홍콩의 자본가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순한 학생운동은 멈추었고,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도시에서의 항거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 시장사회주의는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중국 경제를 괴롭힌 똑같은 유형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농촌 책임제는 한계점에 다다랐고, 생산의 기계화와 합리화 없이는 농업생산량은 증대될 전망이 없다. 이중가격제는 아직까지도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정치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영기업 또한 아직까지도 시장기능보다는 행정수단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므로 효율

성과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오로지 한가지 기대할만한 요소가 있다면 대만 및 홍콩과의 경제통합 추세라 하겠다. 대만과 홍콩으로부터의 자본, 기술, 전문지식 등의 유입으로 대륙경제는 숨통을 트고 있다. 중국인들의 민족통일애의 염원이 과연 시장사회주의의 혼합경제 형태의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가에 따라 중국의 미래는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7. 結論：北韓發展에 대한 含意

지금까지 세계체제이론을 중국 사회주의 연구에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시각의 장점은 세계체제의 역동성(세계경제의 주기적 경향, 중심부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와의 연계성, 또한 지역간 불력 등)이 발전 목표(중상주의 대 혁명노선)와 사회주의 발전의 다양한 국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중국이 1950년대 초반 전후 경제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중상주의 전략을 습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은 1950년대 중반에 중상주의가 중국공산당 혁명의 유산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소련의 헝가리침략과 흐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을 접한 중국공산당은 자립, 집단화, 평등주의와 인민동원 프로그램을 통한 혁명적 사회주의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자본주의 중심부국가들의 적대감이 약화되고 혁명세대가 사멸하면서 성공적인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생활수준을 추격하고자 1970년 말에 사회주의 중국은 중상주의정책으로 회귀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재 생산을 재개하고 대외무역과 기술도입을 독려했다.

국가 사회주의와 민간부문 활성화의 병행이 생산성 저하와 근로의욕 감퇴라는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1980년말에 중국공산당은 기업혁신, 가격개혁과 정치개혁 등의 급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사회주의의 다양한 제도를 와해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중상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접목은 경제위기(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와 정치위기(천안문 사건)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초반에 중상주의 전략에 대한 재고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마침내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혼합형태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경제를 향상시키고 정치의 단일화를 고양함으로써 대만과 홍콩과의 민족통합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그재그식의 중국 사회주의화의 궤적은 세계체제의 역동성과 국내세력들(계급, 당, 국가등)과의 함수관계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사회주의화 궤적은 북한의 사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과정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첫째, 북한 역시 1940년대 말부터 중상주의정책을 채택했다. 소규모 개인농장을 허용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했으며, 소련으로부터 원조와 기술제공을 받아 소련형 중공업 개발계획을 채택했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경제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평양시에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건물은 단 두채밖에 없었으며 인구는 40만에서 8만으로 격감했다(Foster-Carter 1978).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말에 북한에는 혁명적 사회주의로의 변화 추이가 있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외면하고, 두 사회주의국가(중국과 소련)간의 분쟁을 이용해 북한은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창조할 수 있었다. Perry(1990. p.182)가 지적했듯이, "주체사상은 자아 실현과 자주, 자국의 혁명 재건의 완수와 독립적 관계를 굳건히 하고 종속적이기를 거부한다."

주체사상의 확립으로 김일성과 노동당은 북한의 경제와 사회를 자신들의 뜻대로 재편할 수 있었다. 1961년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공업관리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소련식 지배인 책임제를 대체했다. 이 방식은 공장 당위원회에 의한 집단경영으로서 자재, 자금 및 노동력을 동원하는데 '속도전'을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혁명열기에 가득 차 있다고 간주

되었다(Kang 1989; Toshio 1990).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주의 프로그램도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적’으로까지 불리기도 했다(Robinson 1965). 그러나 1970년대초에 낮은 생산성과 저성장율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인민동원의 긍정적인 측면은 한계점에 봉착했다(Kahng 1991). 산업의 저생산율을 고양하기 위해, 북한은 1970년대초에 부분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외국의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 광물과 금속을 수출하였다. Perry가(1990. p.179) 설명했듯이, “석유위기와 북한수출품의 단가하락으로 말미암아 무역 불균형, 국제수지 적자와 채무 불이행을 초래했다. 경화부족으로 북한 외교관의 외국생활은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1980년대초 중국의 초기 중상주의 정책의 성공에 영향을 받은 북한은 서방기술의 도입과 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984년에 새로운 합영법을 채택하고 세계경제와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다시 노력했다(Yu 1987). 1987년 발표된 제3차 7개년계획은 국영기업의 재정책임과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고(독립채산제 확대실시), 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증대하고 중앙계획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또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장려하였다(Kang and Lee 1991).

그러나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은 단지 부분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수한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하였고(재일 조총련 기업은 제외), 과연 기업개혁을 시도하였는

지에 대해 의아심도 생긴다 (Mazaar 1991; Perry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로의 미미한 진전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겪었던 중상주의와 혁명노선간의 대결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점이라면 북한이 중국보다 더 오랫동안 혁명적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는 북한은 아직까지도 혁명 제1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까닭에, 개인의 책임차원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과거의 혁명정책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수십년간 동일한 인물들이 북한정부를 지배해 왔으므로 혁명적 사회주의정책에 따른 실패는 곧 정책입안자들 자신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Mazaar 1991). 김일성의 지위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그의 강력한 정부는 어떠한 조직적인 반발도 즉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Phipps 1991). 김일성이 생존해 있는 동안 중상주의로의 실질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은둔의 나라’(Hermit Kingdom)로 남아 있으나, 1980년대말부터 전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1988년 이래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적 패배를 맛보고 있다.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남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평양에 실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990년 9월에 소련과 남한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국과 남한은 북경과 서울에 각각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Rhee 1991). 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패배는 극심한 경제난과 더불어 북한으로 하여금 중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도록 하는 세계체제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화 궤적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북한은 중상주의와 국가사회주의와의 최적의 혼합형태를 취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추진할지도 모른다. 나아가 북한으로서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민족통일이란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 북한은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봉착해 있으며, 북한지도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만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rrighi, Giovanni. Forthcoming. "World Income Inequalities and the Future of Socialism." *New Left Review*.
- Battat, J. 1991. "FDI in China in the 1980s and Prospects for the 1990s within the Asian context,"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ia and the Pacific in the 1990s, East-West Center, March 26-28.
- Chase-Dunn, Christopher. (ed.) 1982.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 \_\_\_\_\_. 1990. "Resistance to Imperialism: Semiperipheral Actors." *Review* 13: 1-31.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1-40.
- Dixon, Marlene. 1979. "The Transition to Socialism as a World Process." *Synthesis* 3: 28-30.
- Eckstein, Susan. 1982. "Cuba and the Capitalist World-Economy." Pp. 203-218 in Christopher Chase-Dunn (ed.)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System*.
- Foster-Carter, Aidan. 1978. "North Korea: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Pp. 115-152 in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en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Gorin, Zeev. 1984. "State Socialism, the Highest Stage of World Capitalism: Socialist Societies According to the World-System Theory."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Hsiao, Hsin-Huang Michael and Alvin Y. So. Forthcoming. "Ascent Through National Integration: The Chinese Triangle of Mainland-Taiwan-Hong Kong." In Ravi Palat (ed.) *Asia-Pacific and the Future of the World-Economy*. Greenwood Press.

Kahng Gyoo-Hyoung. 1991. "North Korea in the Era of Decaying Communism." *Korea Observer* 22: 65-74.

Kang Myung-Kyu. 1989. "Industrial Management and Reforms in North Korea." Pp. 200-211 in Stanislaw Gomulka et al. (eds.) *Economic Reforms in the Socialist World*. London: Macmillan.

Kang Myung-Kyu and Keun Lee. 1991. "Industrial Systems and Reform in North Korea: A Comparison with the Case of China." Paper presented to the Far Easter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Seoul, June 29-30.

Kraus, Richard C. 1979. "Withdrawal from the World-System: Self-Reliance and Class Structure in China." Pp. 237-259 in Walter L. Goldfrank (ed.) *The World-System of Capitalism*. Beverly Hills: Sage.

Lall, Sanjaya. 1991. "Emerging Sources of FDI in Asia and the

- Pacific."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ia and the Pacific in the 1990s, East-West Center, March 26-28.
- Lee, Kuen. 1991. "The Emerging Unofficial Economic Ties in East Asia." Research proposal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Hawaii-East West Center Collaborative Research Committee.
- Lee, Kuen and Hong Yong Lee. 1991. "Political Authority and Economic Exchange in East Asian Capitalism and Socialism." Unpublished paper, East-West Center.
- Mazarr, Michael. 1991. "Orphans of Giansnost: Cuba, Korea, and U.S.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XV: 58-84.
- Nathan, Andrew. 1990. *China's Crisi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Perkins, Dwight. 1991. "China's Industrial and Foreign Trade Reform." Pp. 269-282 in Andras Kovcs and Paul Marer (eds.) *Foreign Economic Liberalization*. Boulder: Westview Press.
- Perry, John Curtis. 1990. "Dateline North Korea: A Communist Holdout." *Foreign Policy* 80: 172-191.
- Phipps, John. 1991. "North Korea — Will it be the Great Leader's Turn Next?" *Government and Opposition* 26: 44-55.
- Rhee Sang-Woo. 1991. "North Korea in 1990: Lonesome Struggle to Keep Chuch'e." *Asian Survey* 31: 71-78.
- Robinson, Joan. 1965.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Jan.).

- Selden, Mark. 1983. "Imposed Collectivization and the Crisis of Agrarian Development in Socialist States." Pp. 227-252 in Albert Bergesen (ed.) *Crises in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 \_\_\_\_\_. Forthcoming. "The Social Consequences of Chinese Reform: The Road to Tiananmen." In Ravi Palat (ed.) *Asia-Pacific and the Future of the World-Economy*. Greenwood Press.
- So, Alvin Y. 1986a. "The Economic Success of Hong Kong." *Sociological Perspectives* 2: 241-258.
- \_\_\_\_\_. 1986b. *The South China Silk District*. Albany: SUNY Press.
- \_\_\_\_\_. 1988.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9: 313-323.
- \_\_\_\_\_. 1990a.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Modernization, Dependency, and World-System Theories*. Newbury Park, CA: Sage.
- \_\_\_\_\_. 1990b. "Japan as the Number 1: Insights from a World-System Perspective." *Asian Profile* 18: 217-226.
- So, Alvin Y. and Shiping Hua. Forthcoming. "Are Democracy Movements Antisystemic? A Comparative Study of Mainland China, Taiwan, and Hong Kong." *Sociological Perspective*.
- Toshio, Watanabe. 1990. "Isolation and Stagnation in North Korea." *Japan Echo* 17(3): 55-69.

-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2a. "Socialist States: Mercantilist Strategies and Revolutionary Objectives." Pp. 289-300 in Edward Friedman (ed.) *Ascent and Decline in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 \_\_\_\_\_. 1982b. "Crisis as Transition." Pp. 11-54 in Samir Amin et al. (eds.) *Dynamics of Global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 \_\_\_\_\_. 1989. "Marx, Marxism-Leninism, and Socialist Experiences in the Modern World-System."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xism and the New Global Society," Seoul, Oct. 25-27.
- \_\_\_\_\_. 1990. "Antisystemic Movements: History and Dilemmas." Pp. 13-52 in Samir Amin et al. (eds.) *Transforming the Revolution: Social Movements and the World-System*. New York: Monthly Review.
- Yang, Dali. 1991. "China Adjusts to the World Economy: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Coastal Development Strategy." *Pacific Affairs* 64: 42-64.
- Yu Suk Ryul. 1987.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8: 351-370.

## 토 론

사회자 : 安秉俊 (연세대 정치학교수)

토론자 : 梁性喆 (경희대 정치학교수)

李洙勳 (경남대 사회학교수)

林玄鎭 (서울대 사회학교수)

**안병준 :**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은 꼭 10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토론을 해주실 분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에 계시는 양성철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최근에 귀국하셨고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양 교수님은 1981년에 미국에 계신 학자들과 일행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양성철 :**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Foster-Carter 교수와 So 교수 두 분은 두가지 공통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 분 다 사회학자이고 둘째는 두 분 모두 사회학 이론을 북한에 한번 적용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So 교수 논문은 영어로 미리 읽을 수 있었습시다만 Foster-Carter 교수의 발표문은 오늘에 서야 받았기 때문에 미처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

늘 발제를 듣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분 다 현실을 이론에 맞추려다 보니까 현실을 너무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란 것이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현실이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는 아닌데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So 교수는 전체 논문 가운데 마지막의 세 페이지에서만 북한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우선 느낀 것이 뭐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마땅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잘된다 해도 맞고 안된다 해도 맞고 이렇다 해도 맞고 저렇다 해도 맞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Wallerstein이란 사람의 개념인 중상주의(mercantilism)와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1949-90년 동안의 중국 현대사를 몇개 단계로 나누는 기준에, 사회자이신 안병준 교수께서도 중국 전문가이십시다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시대분류 기준과 전혀 동떨어진 Wallerstein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상주의라는 개념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초기 1949년에서 55년까지를 초기 중상주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당시가 스탈린 모델이 도입된 때이고 1차 5개년 계획이 상대적으로 꽤 성공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경우 그것을 중상주의 기간이라고 파

악하는 것은 개념의 노예가 됐다고나 할까, 또는 자기 개념에 사로잡히다 보니 현실을 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o 교수의 시대구분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상주의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더구나 1949년 부터 90년 까지를 몇 시대로 나누는 것도 중국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데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사미격으로 북한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Foster-Carter 교수의 논문은 우선 “북한은 붕괴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여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고 있는가, 동구나 소련 등 다른 공산국가가 붕괴하는데 왜 북한은 지금 그러지를 앓느냐 하는 소위 체제 내구력 (system durability)에 가정을 둔다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버마스의 네가지 위기개념을 가지고 북한을 설명하셨는데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동구나 소련에 적용을 해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동구나 소련에 적용해 보니까 그들은 망했는데 북한에 적용을 하니까 아직도 붕괴를 안했다 말입니다. 학자로서는 바로 그 사실에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영 동떨어진 서구 이론을 가지고 북한에 대놓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북한마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좀 신랄하게 비판이 돼

서. 고맙습니다.

**안병준** :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학술회의를 하는 이유도 학문이라는 것이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볼 때, 양 교수께서 좋은 논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자는 이수훈 교수입니다. 이분은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고 극동문제연구소의 기획실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체제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수훈** :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Alvin So 교수의 논문은 양성철 박사님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 논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세계체제론은 물론 서구에서 나온 이론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론 가운데 서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론을 갖고서 이분이 중국전문가이기 때문에 중국 발전의 모델이 중상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전략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주변의 정세랄까요 세계경제적인 맥락의 변화에 비추어 살펴보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상주의 개념이 제가 보기에 좀 애매모호하고, 또 발전전략으로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등의 용어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들 역시 개념의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인상은 저도 받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불행하게도 북한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양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중국에 적용된 것을 결론 부분에서 북한에다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So 교수의 발표에서도 말씀이 계신대로, 북한과 중국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So 교수께서는 주로 지도층의 엘리트가 다르다, 정치적 불안의 성격이 다르다, 이런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계체제론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했을 때, 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한반도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따라 붙는 현실적 특수성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나 김일성을 비롯한 지배 엘리트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는 외부적인 압력이 성격상 중국이 하나의 대국으로서 받는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스트레스와 상당히 다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반도의 정치현실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So 교수께서도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Foster-Carter 교수의 논문에 대한 코멘트와 더불어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Foster-Carter 교수 역시 국제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저명한 북한전문가이고 또 저희들보다 북한에 대한 자료접근이 훨씬 폭넓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밤에 논문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북한에 관한 논문을 많이 읽

은 사람이 아니어서 과문의 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제가 읽은 글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지적 배경을 몰랐다면 이 건 분명히 한국의 강경보수우파 반공주의자가 쓴 것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도 역시 의미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지 정당성의 위기 개념을 북한에 나름대로 적용하여 북한의 현 정권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찾아집니다. 그런데 북한이 위기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너무 서술적이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다 보니 양성철 교수께서 잘 지적 하신 대로 기술이 경직되어 보이기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조금 편향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기에 달린 것이어서 우리 한국사회도 총체적인 위기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Foster-Carter 교수께서는 엘리트의 쿠데타에 의한 변화와 민중봉기, 그리고 체제 자체가 그냥 붕괴할 것이다라는 세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논문 끝 부분에서 1995년도까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면 자기 이론은 성립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계신데, 돌아가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조금 과한 진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해 통일이 된다는 것인지,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인지,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인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지금 통일논의를 하고 또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게 되는 것은 북한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북한은 변할 수 밖에 없다고 볼 때,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자리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붕괴주의자와 점진주의자를 굳이 가른다면 저는 점진주의자가 되겠다는 생각이요, 그것은 북한이 지금 하루 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 부담이 분명히 우리 쪽에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는가 하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So 교수가 말씀하신 시장사회주의를 북한이 서서히 도입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것에 일정하게 편입을 한 뒤에, 우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준** : 감사합니다. 다음 차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계시는 임현진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종속이론 또는 세계체제론 등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내시고 이 분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임현진** : 임현진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느낀 바도 많습니다. 항상 논평하는게 그렇습니다만 맨 뒷 차례에서 하다보면 먼저 분들이 좋은 말씀은 다 하

셨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 교수께서 So 교수와 Foster-Carter 교수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동정적인 입장에서 논평에 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자신을 포함한 한국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 소위 우리 고유상표를 갖는 제조업자가 되어야겠다, 맨날 수입 초과상만 하다보니까 외국이론이 바뀌는 토양에 따라서 그것을 들여다가 팔아먹고 결국 조그만 기여나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민족자본가, 다시 말씀드려 우리 고유상표를 갖는 제조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동정적인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사회의 변화이며 특히 이론적인 고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의 입장을 조금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사회라고 할 때 흔히 말 하는 소위 사회주의적인 도식에 의해서,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목상 그런 것이고 사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은 여러가지 의미를 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올만이라는 학자가 소련의 과학아카데미에서 한 연설을 읽다가 소위 섭정 (Regency)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북한이라는 사회도, 저도 양 교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김일성 주석

의 측근, 곧 혁명 1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섭정관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지, 노동자 계급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다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맑시스트적인 도식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가동되었던 적은 없었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사회는 체제 안팎으로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북한의 체제위기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의 시각이 다릅니다. Foster-Carter 교수는 보다 내부적인 정당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셨고 So 교수는 세계체제론이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셨는데, 하여튼 두 시각이 보완적인 입장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진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시켜 언제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질문을 재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Foster-Carter 교수는 앞으로 5년이라는 명확한 예측을 하셨고 또 변화의 원인이라는 면에서 한분은 외생적인 변수, 즉 세계체제내 국가간의 압력,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부터의 영향들을 강조하셨던 반면에 다른 한분은 내부적이고 체제내적인 정당성 위기라는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분은 와해설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고 다른 한분은 소위 재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사회주의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앞으로 조망하는데 결국

이론이라는 것이 항상 현실을 뒤쫓아갈 따름이지 현실을 앞에서 견인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두 분 선생님의 발표가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So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가지 보완을 드린다면, 아까 양성철 교수님께서서는 중상주의 또는 혁명사회주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세계체제론자들이 다 쓴 이야기입니다.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보면 중상주의라든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말은 항용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문제는 뭐냐하면 맑스적 언어로 볼 때 세계체제론자들의 주장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국내적으로는 소위 집합적 사용가치를 위해서 생산활동을 해 나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향해서 이윤확대를 위해 교환가치를 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체제론의 시각에 의하면 현존 사회주의국가는 국가 자본주의로 파악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So 교수의 입장을 조금 옹호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럼 왜 이러한 국가사회주의가 세계체제론적인 맥락에서 어려움을 갖느냐 하는 것인데 So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탈 사회주의(Break-Away Socialism)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이탈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물

적인 토대가 내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소위 이탈 사회주의는 정치적, 경제적인 모순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결국 이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중인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대중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를 지탱할 수 있는 소위 생산력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결국 세계 체제론적 시각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진단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So 교수의 논문이 시장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을 So 교수는 민간부분과 국가부분이 혼합된 형태로 수출지향적이다 하는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장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소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혼합경제라든지 또는 국가 조합주의, 또는 사회조합주의 등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무언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주문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Foster-Carter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Foster-Carter 교수는 제가 7년전에

서울대학교 종속이론 세미나에서 만났을 때 북한과 남한을 ‘초당적 접근’ (Bipartisan Approach)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은 사정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1995년 이전에 살아남기도 힘들다는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으며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Foster-Carter 교수가 북한의 경제적인 위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논의는 지금까지 신고전 경제학의 입장에서 다 제기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외국학자를 차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직시한 ‘Soft Budget Constraint’ 개념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자료가 빈곤해서 그렇지 북한경제에 어느정도 적용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영기업이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과장된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과잉투자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는 궁핍의 경제이다 하는 것인데, 북한경제의 어려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되어질 때 하버마스의 경제적 위기의 개념속에 있는 정당성의 위기를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병준**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약정 토론자들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25분 남았는데 우선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응답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론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사회자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체제가 기타 사회주의 체제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아시아 사회주의 체제가 서양의 사회주의 체제와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소련이나 동구라파 사회주의와는 달리 아시아 공산체제는 탄생부터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도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공교롭게도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직도 혁명의 제1세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며 따라서 혁명세대가 죽는다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정치문화적,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학자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양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구성이 근대 민족국가에 선행했으나 동양에서는 역시 국가가 먼저고 그 다음으로 시민사회가 지금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런 입장에서 아시아 사회주의체제는 서양의 그것과 다르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에 지나지 않고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먼저 So 교수가 대답하시겠습니다.

**앨빈 소우** : 답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양 교수님의 비판에 답하겠습니다. 이론과 현실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나 하면 그것은 후자입니다. 따라서 서양이론을 동양의 현실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기 사회는 역사적으로 독특하고 또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령 미국에서 이론을 수입하여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 적용하려 할 때 일반화의 위험부담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논문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서양 이론을 중국이나 북한에 적용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중상주의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것 나름대로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저는 거장 Wallerstein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사실 저도 보다 분명한 개념, 예컨대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선택의 문제는 늘 중요합니다. 혁명과 같은 정치나 경제발전이나, 세계체계내에서의 혁명이나 아니면 한 국가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쓰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느냐 하는 것은 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스탈린주의는 분명히 중상주의였습니다. 그는 한 때 “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소련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진정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신속한 공업화이며 따라서 농민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수탈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경제적인 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죠.

이제 임 교수의 논평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대해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와 같은

모든 이데올로기적 어휘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상호 배타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흑백논리나 제로섬 논리로 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와이 대학교 동서연구소에 있는 제 동료 Collins는 최근 보다 연속적인 개념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족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다양한 결합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미국이 자본주의의 극단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주의적 부문 혹은 국가 부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예컨대 스웨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시장 부문의 결합입니다.

이제 관심을 중국과 북한으로 돌려볼 때 비록 그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면서도 시장의 역할을 점차 채택하는 것을 보면 국가와 시장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북한체제의 붕괴이론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점진적인 것이고 방향설정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선택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갈등이 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양 교수의 질문으로 눈길을 돌린다면 중국과 북한이 그 영토의 규모면에서나 역사적 위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현재 고립되

어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운명은 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50-60년대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양다리외교를 해왔고 현재에는 기존의 소련의 역할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령 대만이나 홍콩을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소위 북한 모델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발전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논문은 그 차이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이 그들 두나라의 사회발전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포스터-카터 : 제 논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토론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선 누구보다도 저는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못지않게 저도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이 교수 못지않게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사태발전이라고 믿고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향한 증거가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바라는 바처럼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양 교수께서는 제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정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의미했던 것은 사회과학자로서 가급적 경험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동원

해본 결과 만약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을 두고 제가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붕괴 쪽이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자 가운데 한 분은 제가 너무 이론적이고 또 다른 분은 너무 서술적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양 교수는 우리가 주의깊게 분석해야 할 나라는 북한, 쿠바, 베트남, 그리고 중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 국가를 둘로 분류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경제개혁을 했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같은 부류에 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북한과 쿠바가 또 다른 그룹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어떠한 의미있는 경제개혁의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무방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토론자 한 분의 논평에 약간 실망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위기를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비판하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헤드폰을 통한 통역이 제대로 되었다고 믿고 싶지만) 어떤 대목에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들은 것은 단지 희망사항으로서 점진적 개혁이며, 또한 제가 너무 이론적이라거나 너무 서술적이라고 하셨지만 그에 대한 대안적 의견개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이나 과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던줄

믿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반공주의자는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저는 제 입장이 인간주의(humanist)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과학자로서 가능한 객관적인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간의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디만, 저는 여기서 약간은 특수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이 무언가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극단적이고 또 오래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한때 번영하게 만들었던 조건들이 오늘날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위기가 팽배하고 있으며, 건물이 금이 나 있을 경우 그것이 퍼지는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견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내부적 요인들을 이야기 하였지만 위기를 촉발하는 외부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외부적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과거 소련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아무 것도 얻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산주의권 블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의 논지가 틀렸다면 저는 매우 행복하겠습니다. 저의 예견이 빗나가서 북한이 점진적인 변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저는 진실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 또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통일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게 그것에 대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광고 같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제가 한국의 통일에 대해 최근 책을 한권 썼다는 것과 그것이 런던에서 곧 출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병준 :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과 토론해 주신 세 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가 느낀 것은 북한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론에 대한 논쟁이 많고 또 앞으로 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족통일연구원의 할 일이 산적해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 연구원이 좋은 업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 第2會議

### 北韓經濟의 變化

빈 면

# 北韓經濟의 實相과 展望

고또오 후지오(日本 도쿠야마大學 經濟學教授)

## 1. 北韓經濟의 現狀

### 1) 概況

한국의 국토통일원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의 북한 경제 개황은 <표-1>과 같다. 1989년의 1인당 GNP 규모는 987달러로서, 이는 한국의 4,968달러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북한당국은 '1인당 국민소득'(아마도 이는 NNP)을 1988년에 2,530달러로 공표하고 있어, 한국측 추계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되어 있다.

GNP에 대한 군사지출 비율을 보면, 한국이 4.4%인데 비하여 북한은 21.3%에 달하고 있다. 또한 통일원 데이터를 근거로 수출입을 합제한 무역총액을 비교하면, 한국의 1,182억 달러는 북한의 48억 달러를 압도적으로 상회한다.

<표-1>

최근의 남북한 경제개황

(1989년말 현재)

		한 국	북 한	
인 구	(千人)	42,380	21.375	
G N P	(億 \$)	2,101	211	
1인당 GNP	(U.S \$)	4,968	987	
경제성장율	(%)	6.7	2.4	
군사비/GNP		4.4	21.3	
재정규모	(億 \$)	328.4	149.7	
군사비지출	(億 \$)	91.8	44.9	
군사비/재정규모	(%)	27.9	21.3	
무역규모	(億 \$)	1,182.2	47.9	
수 출	(億 \$)	614.1	19.5	
수 입	(%)	568.1	28.5	
무역수지	(억 \$)	46.0	-9.0	
생 산	식 량	(천t)	7,160	5,482
	철 강	(万t)	2,221	594
	자 동 차	(万대)	178	3
	조 선	(万t)	350	21
	화학비료	(万t)	417	351
	합성수지	(万t)	291	1
	시 멘 트	(万t)	3,635	1,178
	텔레비전	(万대)	1,300	24
섬 유	(万t)	120	18	

출처 :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 2) 國內經濟

현재 북한은 1987년부터 시작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5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많은 정보가 북한경제의 부진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태를 통계자료로 실증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북한의 국민경제에 관한 거시경제 데이터가 장기계획이 끝난 후에도 주요한 계획목표의 달성 비율의 형식으로 밖에 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공표된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북한이 공표한 실적치로 계산한 성장율을 보이는 <표-2>에는 국민소득의 실질성장율이 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북한의 국민소득과 공업의 연평균 성장율(실질)

(단위 : %)

북 공 표	한 치	제1차5개 년 계획	제1차7개년계획 (3년연장)		6개년 계획	완충의해	제2차 7 개년계획	조정기간	제3차 7 개년계획 (목표)
		1957- 60	(1961- 64)	(1965 70)	1971- 76	1977	1978- 84	1985- 86	1987- 93
	국민소득	20.9	10.0	-	14.2#	-	8.8	-	(7.9)
	공업총생산액	36.6	14.4	11.5	16.5	-	11.9	-	(9.6)
	생산재	38.8	12.8	14.8	17.3	-	11.9	-	(9.6)
	소비재	35.0	16.9	7.0	15.7	-	11.2	-	(9.6)
	공업생산재	29.2	12.2	10.9	10.2*				
	생산재	33.0	13.2	11.9	9.9*				
	소비재	17.0	7.8	4.8	12.5*				
한 국 참 고	공업총생산액	12.5	10.8	19.6	21.7*				
	생산재	15.2	20.5	19.5	23.9*				
	소비재	3.9	2.2	21.2	21.5*				

주 : # 1971-74년의 성장율. \* 1971-75년의 성장율.

추계치는 서방측 개념의 광공업생산을 근거로 계산되어 있으며 한국의 성장률과 비교가능.

출처: 북한의 공표치 : 『조선중앙년감』 각년판, 아시아 경제연구소 『아시아 동향년보』 각년판, 小牧輝夫 『북조선경제의 현상과 전망』, 小此木政夫(編) 『기로에 선 북조선』 일본국제문제연구소, 昭和63년 12월에 게재된 공식 데이터로부터 계산.

북한의 추계치 : 拙著 『북조선의 광공업-생산지수의 추계와 그 분석』 국제관계공동연구소, 昭和56년.

이와같은 정보의 제약으로 인하여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최근의 북한경제가 상당한 곤란에 직면하고 있음을 다음의 정보는 시사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업 총생산액의 전년대 비만은 생산이 부진했던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공표되어 왔으나, 그 공업성장률이 1983년 이래 현재까지 전혀 공표되지 않고 있다.

농업에 관해서는 곡물생산량이 공표된 유일한 시계열 데이터이지만, 그 증가율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말 이래 크게 저하하고 있다.

<표-3>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생산량 (만톤)	연 평균 증가율 (%)					
		1956-60	1961-63	1964-74	1975-77	1978-84	1985-93
1956년	287	7.4					
1960	380		9.6				
1963	500			3.1			
1964	700				6.7		
1977	850					2.3	
1984	1,000						(4.6)목표
1993	(1,500)						

주: 1993년은 목표치

출처: <표-2>

아시아경제연구소(동경)의 『아시아동향연보』에는 북한이 단편적으로 공표한 각종 공장과 사회자본 등의 건설 상황, 농업생산의 달성 상황이 집계되어 있는데, 이들의 목표 달성 상황은 순조롭지가 못하다.

와타나베 토시오(渡邊利夫)씨가 그의 저서 『아시아 신조류』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현재 북한경제의 침체에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10대 전망목표'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시작되어 있는 제2차 7개년계획의 과정에서 갑자기 그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던 것이 인원과 자원 배분의 균형을 깨어

1980년대의 북한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 3) 對外貿易

고마키 테루오(小牧輝夫)씨를 중심으로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북한의 대외무역 데이터를 무역상대국의 데이터로부터 추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숫자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표-4>이다.

<표-4> 북한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 (100%)						합계 (100만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공 산 국			자본주의 공업국		발전 도상국				
	소련	중국	기타	일본	기타					
1975	24.5	24.4	10.6	12.8	18.6	9.1	2,020	785	1,235	-450
1980	26.6	19.8	9.0	16.6	11.3	16.7	3,478	1,646	1,832	-186
1985	44.5	16.2	9.5	14.5	2.8	9.7	3,008	1,223	1,785	-562
1988	57.5	12.1	3.1	11.4	5.9	10.0	4,883	1,756	3,127	-1,371

출처: 1975-85년은 小牧輝夫 『북조선경제의 현상과 전망』, 小比木政夫 (編) 『기रो에 선 북조선』,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88년, p.63, 1988년은 『아시아동향연감』, 1990년판, p.104.

〈표-4〉에 따르면 1988년 북한의 수출은 17억 5,600만 달러, 수입이 31억 2,700만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13억 7,100만 달러의 적자로 되어 있다. 이 무역적자의 규모는 수출액의 78%에 상당하여, 최근에는 외화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상대국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국과 자본주의 공업국의 점유율이 저하된 반면, 소련의 점유율이 대폭 확대되어 북한 무역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

자본주의 공업국의 점유율 저하의 원인은 채무누적에 있다. 고마키씨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채무 누적은 총액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내역은 소련이 36억 달러 이상, 서방측 채권은 채권은행단(약 140개소)이 약 9억 달러, 일본이 약 5억 달러, 그 외에 서구국가들과 중국 등을 합쳐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보여진다(단 소련의 채무에 관해서는 환율 방식에 따라서 크게 축소될 수 있음)(小川和男, 小牧輝夫, 『環日本海經濟圏』, 일본경제신문사, 1991).

대중(對中)무역 점유율이 축소된 배경에는 1980년대에 들어 중국이 경제개혁을 본격화했던 점과 그에 따라 중·소관계가 강화된 점이 있다. 한·중무역은 수출입 합계로 1990년에는 38억 4,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액인 5억 9,200만달러(1988년도)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또한 단지 무역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간에는 이미 합작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대소(對蘇)무역 점유율 확대는 상술한 이유와 같이 대중, 대서방무역의 신장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소련측은 1991년부터 종래의 바터거래를 바꾸어 경화에 의한 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것이 실행될 경우 외화 부족으로 고민하는 북한이 대소무역을 종전처럼 계속해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소무역 규모는 1990년에는 수출입 합계로 이미 8억 89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소련무역 28억 900만 달러(1988년도)의 거의 30%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소간의 자본제휴 움직임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같이 북한의 대공산권 무역은 공산권 국가들의 국내사정 변화와 한국의 '북방정책'으로 인하여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후 더욱 더 곤란한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산권 무역을 대신하여 근년에 급속히 확대되어 온 것이 한국과의 무역이다. 한국을 인정치 않는 북한의 입장 때문에 제3국 경유의 간접무역이지만, 그 수출입규모는 1988년 103만 달러, 89년 2,230만 달러, 91년에는 8월말 현재로 1억 2,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마 금후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北韓의 ‘經濟改革’ 兆朕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에도 개혁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경제개혁의 도래를 예감케 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변화가 중국이 신정책에 앞서서 ‘체제전환’에 착수한 개혁·개방정책과의 유사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 1) 對外經濟의 變化

북한경제의 변화는 우선 대외경제에 나타났다. 1984년 9월에 ‘합영법’, 그리고 1985년에는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들 일련의 법률들은 중국의 합영관련법과 극히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전까지의 북한은 ‘자립경제’ 수립을 방침으로 하는 폐쇄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에 반하여 서방측과의 관계강화로 이어지는 합영법 제정은 분명한 노선변경이자 대외개방의 전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1) 北韓內의 合營企業 現況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받아 1984년부터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고마키씨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합영기업만도 1990년말로 약 110건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70%가 제일조

선인 기업과의 합병이다. 나머지 약 20%는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합병이고, 마지막 10%가 프랑스, 홍콩, 태일랜드, 이탈리아, 또는 재미 한국인과의 합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小川和男, 小牧輝夫, 전계서).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에 있어서 화교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 바와 같이, 북한이 재일조총련 기업에 거는 기대는 커서, 1986년에는 재일조총련 기업과의 합병을 추진할 목적으로 일본의 조총련과 북한정부에 의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기금 120만 달러는 양자의 균등분담)가 설립되었다(M. 토리그벡코, G. 토로라야, A. 만스로프, “조선에 있어서의 합병기업”, 『극동의 제문제』, 1990년 제4호).

같은 목적으로 또한 1989년에는 합병기업의 은행업무를 다룰 ‘조선합영은행’(자본금 20억엔)이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조총련과의 합작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박삼석, “재일조선인에 의한 합병사업의 현상과 과제(상)”, 『조선자료』, 1990년 5월).

재일조선기업과의 합작인 소위 ‘조조합영기업’은 1989년 말 현재 ‘설립 합의를 본 것’을 포함하면 전제로 총98건(계약체결이 73건, 그 가운데 조업중이 41건)이 있고, 그 총투자액은 약 113억엔, 1건당 평균투자액은 계약베이스로 약 1억 6천만 엔으로 되어 있다(전계서). 실체는 소규모기업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 2) 國內經濟의 變化

국내경제에서는 대외경제에서 보이는 만큼의 변화는 아직 표면화되고 있지 않으나, 그래도 이미 실행된 정책과 시행단계에 있는 변경은 경제개혁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 (1) 國營企業의 再編

북한에서는 1985년부터 기존의 국영기업을 집단화시킨 ‘연합기업소’를 만드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6년 9월에 이미 그 수는 120개소에 달하고 있다 (강일천, “조선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제 강화에 관하여(하)”, 『조선자료』, 1987년 7월). 더욱이 1987년에 발표되어 현재 진행중인 제3차 7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 드러나 있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기존기업의 집단화방식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고승효, 『현대조선경제입문』, 1989). 첫째는 주로 중화학기업을 중핵기업으로 하여 그 생산에 관련된 기업, 공장, 수송기관을 집단화한 연합기업소이며 둘째는 자원채굴기업을 중핵으로 하여 그 관련기업, 공장을 집단화한 연합기업소이고 셋째는 중간재 내지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전문업종 기업을 전국적으로 집단화한 연합기업소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역시 1980년대 중반에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행한 국영기업의 집단화와 유사하며 여기서 말하는 연합기업소는 중국에서 그즈음 만들어진 ‘연합공사’나 ‘전업공

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보면 이는 국영기업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기업의 비효율 부문을 줄이고 기업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생각된다.

## (2) 企業者主權 擴大의 徵候

1985년부터 국영기업의 재편(집단화)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관리·경영시스템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북한측 자료가 전하는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기업개혁에서 말하는 기업자주권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학자 및 관리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내부 개혁 움직임은 전혀 표면화되고 있지 않으며 아마도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편 연합기업소의 관리·경영 시스템에도 북한의 개혁 정책은 도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이하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박영근, “공화국의 공업관리제도와 연합기업소”, 『조선자료』, 1989년 4, 5월; 강일천, “조선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단계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제 강화에 관하여”, 『조선자료』, 1986년 9월, 1987년 2, 7월).

### ○ 生産計劃의 立案·管理 權限의 委讓

지금까지 국영기업의 생산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하에 정무원의 각 부·위원회가 작성하여, 산하의 기업, 공장, 기관에 전달하고 그 실행을 감독하여 왔다. 그것이 연합기업

소 제도의 도입에 따라 연합기업소가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 하에 스스로 생산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정무원의 각 부·위원회의 역할은 월 단위로 생산 계획의 실행상황을 감독, 조정, 지도하기로 되었다. 이를 이하 서술할 변화와 함께 생각해 보면 연합기업소에 생산책임제가 도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 原料·材料의 調達 權限의 委讓

하나의 국영기업을 예로 들면 그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 재료의 공급에 관해서는 여태껏 그 기업을 관리하는 정무원의 담당 부·위원회가 공급선의 공장, 기업을 지정하여 그 양을 배정시켜 왔다.

그것이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연합기업소 스스로가 산하기업의 원재료 자재공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연합기업소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없는 자재에 관해서는 다른 연합기업소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었다. 그 때문에 각종 연합기업소는 각기 독자의 '자재상사'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연합기업소와 수급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정보에 의하면 각 자재상사간의 원재료 자재의 거래는 '중앙자재총연합상사'나 '지역(도)자재연합상사'로 불리우는 '국내 사회주의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고승효, 전게서).

이것이 발전하면 연합기업소 사이에 생산재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 경우 국가가 결정하는 계획가격과는 별도로 시장가격이 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북한에서 그런 종류의 가격이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

#### ○ 外貨使用의 緩和

지금까지 외화사용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놓여 있었다. 그것이 제품의 수출에 의해 외화를 번 연합기업소 일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기관의 인가에 따라 기계 설비, 원재료 자재수입을 위해 외화수입의 7할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勞動力 調整 權限의 委讓

국영기업의 고용자는 지금까지 국가계획에 따라 기업마다 정부에 의해 강제배치에 가까운 형태로 배당되어 왔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식이 취해지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기업소가 노동자를 받아들여 산하의 기업에 할당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 ○ 獨立採算制의 強化

1980년 중반부터 추진된 연합기업소 창설에 따라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우선 연합기업소에 소속된 개개의 국영기업 단위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었다. 기업이윤은 이제껏 대부분이 국가에

산에 흡수되었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기업자금’으로서 내부 보유로 돌리는 비율이 높아졌다(그리고 이점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아마 이 자금이 적립되어 연합기업소 수준에서 ‘기업소자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에 따라 소규모 고정자본 투자(소위 계획외 투자)와 R&D,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등이 자기자금(自己資金)으로 조달되게 되었다(단 이것들과 똑 같은 지출을 연합기업소가 ‘기업소 자금’으로 행하고 있다고도 일컬어지고 있어, 산하기업이 어느 정도 이러한 지출을 자체의 ‘기업자금’을 쓸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대규모 고정자본 투자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가예산의 계획내 투자로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까지 국가예산에서 공급되던 유통자본은 기업 자신이 직접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점 역시 연합기업소 수준에서도 은행차입이 가능하여, 산하기업이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단, “연합기업소와 하부공장, 기업소는 해당지역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기업관리에 필요한 자금활동을 행하고, 해당 지역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연합기업소는 하부기업소의 재무계획과 그에 따른 자금을 융통성을 가지고 조절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박영근, 전계서). 또 계획 외의 고정자본 투자 등 다른 자금수요도 은행융자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개별기업 수준의 독립채산제와는 별도로, 연합기업소 수준에서도 독립채산제가 취해지고 있어, 북한의 국영기업은 ‘독립채산제’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기업소 수준에서 취해지는 독립채산제에서는 예를 들어 어느 연합기업소가 계획을 초과달성하여 초과이윤을 냈을 경우, 그 이윤은 산하기업에 분배되고, 역으로 손실을 냈을 경우는 산하기업이 전체로 그것을 보전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양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 (3) 企業 管理 시스템의 變遷

북한의 국영기업은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소위 소련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즉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기업내에 유보시켜, 그것을 고정자본 투자, 유동자금, 보너스 지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국가예산에 관련된 거시적 통계에 따르면, “이익공제금은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순수입 부문에서 지배인 기금, 내부축적 자금, 유동자금으로서 일정액을 공제시킨 잔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1957년 국영기업의 수익총액은 354억 700만원이 예상되어, 그 50.8%가 이익공제금으로 국가예산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용자주, 이익공제금은 일종의 법인세로, 단위는 원이 아니고 1959년 평가절하 이전의 (舊)원임. 박진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예산 - 1957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조선월보』, 조선연  
구소(동경) 1957년 6월).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대안의 사업체제’가 취해지게 되면  
서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지도·개입이 심해  
져, 급기야는 정부에 의한 국영기업의 중앙집권적 관리체제  
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기업에 인정되는 내부 유보는 극단적  
으로 적어지게 되어, 기업이윤의 대부분이 국가예산에 편입  
되었다. 그에 따라 독립채산제는 명목만의 것으로 변하여 갔  
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에는 여러가지 제도개혁이 행해  
졌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중앙집권 관리체제가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고 있는 독립채  
산제의 강화는 국영기업의 관리체제를 분권화시킨다는 측면  
과 동시에 그 이전 1950년대의 독립채산제를 부활시킨다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정리한 다섯가지의 제도 변  
경을 종합해서 평가해 볼 때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면 북한에도 서서히 시장 메카니즘이 도입되는 셈이 된다.

### 3) 中國의 經濟改革을 통해서 본 北韓의 制度變化 分析

그러면 북한경제에 생겨난 새로운 움직임은 경제개혁으로  
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개혁  
을 북한보다 먼저 착수한 중국의 예를 들어 비교분석을 행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북한이 도입한 신제도에는 중국의 개혁

과의 유사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1) 國內 經濟改革과 對外 經濟改革

먼저 중국에서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소위 개혁초기에 해당함) 이루어진 경제개혁을 국내 경제개혁과 대외 경제개혁(여기서는 대외개방정책으로 함)으로 이분한 뒤에, 각각의 구성항목을 아주 단순화시켜 <표-5>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 북한의 제도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데는 선례를 단순화하는 쪽이 도움이 될 것이다.

<표-5> 중국의 경제개혁(1980년대 전반)과 북한의 제도변화의 비교

		중 국	북 한
국내 경제 의 개혁	농 업	· 인민공사의 해체 (개인농의 성립) 鄉鎮企業의 발전	· 협동조합 농장이 건재
	공 업	· 국영기업의 기업자주권의 확대 · 독립채산제의 강화 · 집단기업, 사영기업의 발전	· 국영기업의 기업자주권 확대의 조짐 · 독립채산제강화 조짐
	기 타	·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 가격개혁 · 금융개혁	· 「시장메카니즘」도입의 조짐
대외 개방 정책	무역관리 체제의 개혁	· 외화사용권한의 위양	· 외화사용권한 위양의 조짐
	외자도입	· 합영관련법의 제정 · 경제특구, 개방도시의 설치	· 합영관련법을 제정

중국의 사례에 북한이 1985년 이후 행한 제도개혁을 대비시켜 보면, <표-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주로 국내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공업개혁, 대외 개방정책에서는 외자도입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것들도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실정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농업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중국의 경제개혁은 농업에서 시작했음에 비하여 북한은 외자도입과 공업으로부터 제도변경에 착수했던 것이다.

## (2) 協同組合農場의 溫存

경제개혁을 농업에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첫째, 농업개혁이 농촌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공업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농업개혁이 이제까지의 ‘축적 메카니즘’을 변화시켜 경제개혁의 연쇄반응적 확대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와타나베 토시오의 중국 경제개혁에 관한 분석을 참고하였다 (渡邊利夫, 『전환하는 아시아』, 弘文堂 1991).

### ○ 中國의 産業改革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일련의 농업개혁에 따라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농업생산 방식은 개인농에 의한 생산청구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은 상승하고, 생산량이 확대되었으며, 농민소득도 증가했다. 그리고 일부의 부유농민 가운데는 ‘화폐잉여’가 생겨났다. 또 농업생산성의 상승은 인민공사 제도하에서 잠재되고 있었던 ‘잉여노동력’을 현재화(顯在化)시키기에 이르렀다.

농촌에 발생한 이들 ‘화폐잉여’와 ‘잉여노동력’이 향진기업(농촌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결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 발생한 잉여노동력을 공업이 흡수하고, 공업이 생산한 제품이 농촌에 보급되는 농공 상호간의 경제발전 순환이 형성되었다. 이 순환이 순조롭게 기능하면, 경제개혁에 따라붙는 인플레이나 실업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이 완화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이 1985년 이후 소련 개혁에서 나타난 커다란 경제혼란과 정체를 피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아마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개혁 이전(1978년 이전)의 중국에서는 공업발전이 정부가 농업으로부터 빨아들인 ‘농업잉여’를 축적원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인민공사가 생산한 농산물(예를 들어 면화)은 정부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싼 가격(국가매입 가격)으로 사들여져, 원재료로서 경공업부문의 국영기업으로 돌려졌다. 거기서 제품(예를 들면 의복)으로 가공된 농산물은 국영상점을 통하여 이번에는 비싼 가격(소매가격)으로 농민이나 노동자에게 팔렸다. 즉 농민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을 싸게 해두고, 거기에 고율의 거래세와 계획이윤을 부과하여, 고가격으

로 농민이나 노동자에게 판매한 것이다(소위 ‘협상가격차’).

이 가운데 거래세는 그대로 국고에 들어가고 이윤도 그 대부분은 국고에 상납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고에 들어온 거래세와 이윤이 세출면에서는 중화학공업의 투자로 돌려졌다. ‘농업잉여’를 자원으로 하는 공업화의 ‘축적 메카니즘’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농업개혁에 따라 이 메카니즘의 일부가 붕괴되었다. 1978년 이후 농산물의 국가매입가격 인상에 의하여 결국은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이 역전되어, 1983년에는 그 순차액을 메꾸기 위한 보조금이 재정지출의 30% 이상을 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의해서 농업잉여를 국고에 편입시키는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중국의 중화학 공업화를 지탱해온 ‘농업잉여’를 자원으로 하는 ‘축적 메카니즘’이 이같이 붕괴된 이상, 공업부문은 그 축적원을 스스로의 부문내에서 산출할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국영기업의 기업차주권 확대 등 공업개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기업개혁의 일환으로서 이윤의 일부를 기업내에 유보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협상가격화를 통하여 농업잉여를 국가재정으로 빨아올리는 기능은 더욱 저하되었다).

기업의 자주권을 높이려면, 생산재 시장을 위시한 시장 메카니즘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가격개혁이나 금융개혁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외자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영법 제정이나 개방도시의 설치 등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의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여 농업개혁을 기점으로 한 경제개혁이 국민경제 전체에 연쇄반응적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 ○ 北韓의 現狀

북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공업화의 자원을 농업잉여에 의존하는 축적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메카니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경우 협동조합농장이다. 그것이 아직 온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술한 농업개혁의 두가지 효과가 아직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농업개혁이 축적 메카니즘의 변화를 통하여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가능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기업이나 대외경제의 개혁에 착수해도 그것들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 國營企業의 改革

그렇다면 북한이 이미 제도변경에 착수한 공업개혁은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가? 우선 중국의 기업개혁과의 유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① 북한이 국영기업을 재편, 집단화하여 창설한 '연합기업

소'는 중국이 기업개혁의 일환으로서 만든 '연합공사'나 '전문공사'와 유사하다.

② 그 연합기업소와 산하기업의 운영에 도입되었다고 하는 각종 권한의 위양이나 독립채산제 강화 등의 제도 변경도 중국이 기업자주권 확대책으로서 채용했던 개혁과 유사하다.

이처럼 분명히 양자간에는 유사점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차이에 있다.

① 중국의 기업 개혁에서는 기업자주권의 확대나 독립채산제의 강화가 우선 개개의 국영기업에서 실시되었다. 그것은 1980년대 초부터 점차로 도입되어 80년대 중반이 되어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국영기업의 집단화가 행해진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였다. 즉 중국에서는 우선 개개의 국영기업에서 개혁이 추진되어 계획경제 특유의 비효율적 경영으로부터의 탈피가 도모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개혁성파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규모의 적정화를 노린 집단화가 행해졌던 것이다. 게다가 그 재편 자체로 집단화와 재분산을 되풀이하고 있어 시행착오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경우는, 집단화와 기업자주권의 확대를 통한 제도변경이 거의 동시에 개시되었다. 이른바 '기업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효율의 개선'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함을 노린 정책이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② 북한이 도입한 각종 권한의 위양이나 독립채산제의 강화조치는, 어디까지나 연합기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이는 보다 정확하게는 ‘연합기업소의 자주권 확대책’이라 불러야 할 것이며, 말단의 국영기업은 아직까지 연합기업소의 강력한 관리하에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순서로서는 역시 중국과 같이 우선 개별기업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생산현장에 직결된 부분부터 경영효율의 개선을 도모해 가는 쪽에 보다 높은 ‘개혁의 효율’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예로부터 유추하면, 이 대로는 아마 연합기업소의 존재가 기업 개혁의 장애가 되어 금후에는 또 다시 재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때야말로 국영기업의 자주권 확대가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

#### (4) 對外開放政策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중국의 그것과 대비시켜 보면, 역시 북한의 정책에는 커다란 결함이 발견된다.

첫째로 북한의 외자도입에는 토대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합영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심천, 상해 등의 경제특구 개방도시를 설치하여 외국 민간자본을 도입하려는 환경조성을 행한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아직 이러한 경제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

경제특구 개방도시라함은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 체제를 남겨둔 채 그 일부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을 실현시키면서도 정책당국이 서방측 시장메카니즘의 국내 침투를 주변에서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인

것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짜여진 기능을 북한은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중·소와의 국경지대 등이 그 후보지로 선정되고 있는 듯하다.

둘째는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의 개방정책이 국내 경제개혁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케이스에서는 양자가 ‘차의 양쪽 바퀴와 같이’ 기능한 것으로 경제체제 개혁이 가속화되어 서방측 기업의 진출을 유인하였다 (河合弘子 “북조선의 ‘개방정책’과 일조무역” 小此木政夫 (編), 『기로에 선 북조선』,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88).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명히 공업면에 있어서는 개혁의 조짐이 보이나 국내 경제개혁은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장 메카니즘’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기업자주권의 강화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는 서방측 기업은 북한에의 진출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 3. 今後의 北韓經濟

북한이 금후 취할 수 있는 경제노선에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래의 견고한 소련형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경우이나, 아마 이 노선은 이미 취하기 힘들 것이다. 경제개혁에 따른 소련형 경제 시스템의 개조는, 정도의 차는 있으나 이제는 세계적 추세가 되어 있고, 북한 자체도 이미 그 제 1보를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찌기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에 걸쳐 중국이 행했듯이, 북한이 금후 재빨리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인데 이 노선도 아직 당장에는 바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경제개혁에 따른 시장 카니즘 도입이나 기업자주권의 확대가 어느 일정 수준에 달했을 때, 반드시 정치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어 민주화가 요구된다. 그것은 곧바로 노동당 권력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중국이나 소련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민주화 기운이 고조됨을 맞아 북한은 국내정치를 단단히 죄고 있으며, 이는 금년 8월 소련 정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경제개혁을 본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셋째는 상기의 두가지 노선의 중간으로서, 경제개혁에는 착수하지만 경제운영 중심에는 소련형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를 온존시키는 경우이다. 이는 이른바 통제경제를 기반위에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는 '통합경제'를 지향하는 노선이자, 최근의 중국이 모색하고 있는 진로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북한이 다른 무엇보다도 당장 취하기 쉬운 노선이 이제3의 길일 것이다.

그러나 '통제와 시장'을 병존시키려 하는 이 시도는 극히 위험하다. 1980년대 전반의 중국이 그랬듯이, 경제의 시장화가 어느 일정한 '한계'를 넘을 때, 시장화가 시장화를 부르는

연쇄반응이 생겨, 북한 경제는 급속히 시장경제로 이행하여 정치개혁의 벽에 직면한다. 거꾸로 통제강화가 이 ‘한계’를 넘을 경우, 통제가 통제를 불러 북한경제는 또 다시 전고한 통제경제로 이행한다. 그러므로 통제경제와 시장경제를 병존시키려는 제3의 길에는 늘 이러한 ‘경제체제이행에 있어서의 한계의 덫’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곤란한 길을 선택중인 북한은 금후 극히 어려운 정책운영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금후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 ① 북한이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우위성’이란 주장 속에서 금후 어떻게 기업의 제도변경이나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양자는 명백히 모순된다.
- ② 북한은 언제 농업개혁에 착수할 것인가? 이미 보았듯이 북한이 농업개혁을 개시했을 때 경제개혁은 크게 진전될 것이다.
- ③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연합기업소는 금후 또다시 재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국영기업의 기업자주권이나 독립채산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④ 연합기업소의 ‘자재상사’간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 자재의 수급조정이 금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것이 발전하면 북한에도 ‘생산재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가격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 ⑤ 연방분열의 위기에 있는 소련과의 무역은 금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⑥ 동북부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 설치는 금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합영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일은 금후의 대외개방에 꼭 필요할 것이다.

# 實物指標에 의한 北韓의 國內總生産 推定<sup>1)</sup>

鄭 甲 泳(延世大學校 經濟學教授)

## 1. 序論

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간의 성과비교에는 항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론상의 문제는 각 경제체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제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안정, 성장, 효율, 생활환경의 개선 등은 모든 경제체제에서 공통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는 항상 경제적 자원이 소요되고, 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계획경제에서는 '사회주의의 건설'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여타 목표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왔다. 어떤 체제에서도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일부 선택된 경제목표를 중점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매

---

1) 본 논문은 영문원고 "Estimating North Korea's GDP by the Physical Indicators Method 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번역한 것임. 본 연구 결과는 본인의 「북한 GDP 추정」 연구의 일부로서 잠정적 추계치이며, Eva Ehrlich 박사의 자료와 조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우 어려운 결정이다. 각 경제체제가 동일한 가치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경제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동일한 관점에서 비교할 수 없으며 경제성과의 전반적인 비교도 매우 어렵게 된다.

이상적인 체제의 성과비교는 경제성장과 효율, 형평, 안정과 경제발전 등의 기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목표 변수를 비교하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계획경제 체제 (Central Planning Economy, CPE)에서는 많은 자료가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성과 비교수단으로 GDP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GDP 자체가 경제발전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사용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GDP가 갖고 있는 고전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CPE와 시장경제의 비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CPE에서는 GDP 자체를 계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화폐의 태환성이 제약되어 있고, 가격과 환율이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실제로 체제마다 GDP 계측의 회계 기준이 다르고, CPE에서는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교방법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CPE의 경제발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발전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계측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GDP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단 경제발전의 척도가 추계되면 국제통화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여야 한다. 이 두 단계 작업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아니라. 특히 북

한과 같이 대부분 CPE의 경우에는 GDP를 직접 추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가 공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표되는 경우에도 정확도에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 조건하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용가능한 제약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편기(bias)가 나타나지 않는 통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실물지표에 의한 추정방법(Method of Physical Indicators, MPI)이다. MPI접근은 「유럽경제 위원회」를 비롯하여 Beckerman, Ehrlich 등에 의해서 활용되었다. Marer가 주도한 최근의 세계은행 보고서도 MPI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추천할만한 성과 비교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실물지표와 GDP와의 일정한 관계를 추정하고, 이 관계를 활용하여 CPE의 GDP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63년 Janossy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후 소련과 동구 및 쿠바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GDP 추정에는 이 방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북한의 GDP를 MPI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다. 먼저 단순한 MPI 방법에 의한 추계치를 분석하고, 실물지표의 주성분 분석에 의한 GDP 추계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MPI의 방법론을 논의하고, 3절에서는 실물지표의 데이터와 주성분 분석방법을 서

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은 결론과 평가이다.

## 2. GDP 推定을 위한 MPI 方法

### 1) 單純한 實物指標 接近法

단순한 실물지표 접근법은 경제발전 수준이 특정한 재화의 소비와 자산 및 사회적 지표 등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MPI는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 및 실물지표 등과 GDP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장경제에서 실물지표와 GDP와의 관계가 추정되면, GDP는 발표되지 않지만 실물지표는 이용이 가능한 사회주의 경제의 GDP를 추계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MPI의 접근은 실물지표와 GDP의 관계를 여러 형태의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해 왔다.

특정한 함수적 관계를 사전에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회귀분석 과정에서 함수관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각 실물지표마다 별도의 관계가 추정되며, 각 실물지표에서 추정된 GDP가 여러개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된 GDP는 일반적으로 기하평균 방법으로 1개의 값을 구하고 이것을 실물지표의 단순한 방법에 의한 GDP 추정치로 결정한다.

MPI는 참고대상이 되는 국가와 목표대상이 되는 CPE의 단순한 실물지표 집합을 활용한다. 따라서 MPI는 여타의

GDP 추계방법보다 간단하게 추정될 수 있으며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MPI는 각 지표의 시장가치를 활용하지 않고 실물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과 가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실물지표는 국민경제 각 부문의 발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석에서 활용된 지표도 다른 연구결과에서 GDP와의 높은 상관성이 증명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MPI는 지금까지 복잡한 과정없이 추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율적인 추정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단순한 MPI에서는 각 실물지표가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실물지표가 제한된 소수 몇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제한된 소수의 실물지표가 과연 GDP 수준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Ehrlich는 49개국에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 결과 “35-40개의 실물지표가 GDP 추정에 충분하며 실물지표를 더 추가해도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er의 연구결과 역시 실물지표의 가중치를 변경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만약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면 실물지표간 가중치 문제는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물지표의 수가 국가 수보다 많은 일반적 경우에는 다중회귀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둘째, 실물지표는 질적으로 상호 비교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철강소비량을 실물지표로 선택할 경우, 각국의 철강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와 TV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물지표에서는 이러한 질적 차이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실제 이러한 재화품질의 차이 문제는 어떤 GDP의 계측에서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질적 차이를 양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저개발국이나 CPE에서는 선진국에서보다 제품의 질이 열위에 있기 때문에 실물지표에 의한 GDP 추정이 이들 국가의 GDP를 상향편기(upward bias)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실물지표가 반드시 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전력과 영아사망을 등은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적이다.

셋째, MPI는 자원의 사용과 소비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생산의 효율은 MPI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저개발국과 CPE의 GDP를 높게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GDP 추정에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부에서는 MPI 방법이 이미 달러화로 환산된 GDP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율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더욱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MPI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별 GDP 비교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자료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매가격을 반영한 환율로 GDP를 계산

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 2) 實物指標의 反復推定方法

Ehrlich와 Marer 등은 단순한 MPI를 발전시킨 실물지표의 반복추정 방법(IMPI)를 이용한 바 있다. IMPI는 궁극적으로 단순한 MPI에서 시작하여 보다 정확한 실물지표와 GDP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IMPI는 먼저 단순한 방법으로 달러 GDP를 추정하고, 1단계에서 추정된 GDP를 이용하여 다시 MPI 방법을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을  $n-1$ 번째 GDP 추정치와  $n$ 번째 GDP 추정치에 수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 결과 수렴치로 파악된 GDP를 최종 추정치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환율문제에서 비롯되는 편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으나 이론적인 설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Joglekar와 Zimbalist는 이 방법이 환율에 의한 편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은 IMPI가 환율에 의한 편기를 제거하고 실물지표와 GDP간의 보다 정확한 관계를 추정한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MPI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 3) 實物指標의 要素分析

단순한 MPI에서는 각 실물지표와 GDP와의 관계를 별도로 파악한 뒤 동일한 가중치로 평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실물지표가 동일한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

다면, 이 지표들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MPI에서 이들 지표를 모두 별개로 사용하면, GDP 추정과정에서 상관도가 높은 지표가 이중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 경우 통계학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변수간에 상관성이 높으면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다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가 제기된다. 나아가 분석대상이 되는 참고 국가가 설명변수(실물지표)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자유도가 매우 낮거나 회귀분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법은 바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를 선형으로 조합하여 어떤 복합변수 또는 복합된 행태를 반영하는 '요소'를 추정한다. 첫번째 주성분 요인은 본래 실물지표가 갖고 있는 변화를 가장 최대로 반영하는 복합지표를 나타낸다. 두번째 이하의 주성분 요인은 첫번째 요인과 직교관계(orthogonal)에 있으면서 여타 실물지표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주성분 분석의 주목표는 본래의 실물지표에 나타나 있는 통계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주성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된 주성분 요인을 이용하면 GDP 추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 사용할 주성분 요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고유근(eigenvalue)이 1보다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

한 방법을 활용하면 공선성과 자유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주성분 요인 분석으로 북한의 GDP를 추정하고 있다.

### 3. 推定結果

#### 1) 資料

본 논문의 기본 실물지표는 42개 국가의 49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Ehrlich가 경제체제간 상호비교 분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그의 분석에서는 북한이 제외되었다. Ehrlich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한 MPI를 적용하여 42개국의 GDP를 추정한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그의 자료와 북한의 자료를 결합하여 단순한 분석은 물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응용하여 GDP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의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각 변수간의 다공선성의 문제 등으로 실제 추정에서는 모형에 따라 18-34개의 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실물지표의 기본자료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실물지표는 경제발전과 후생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자료는 사회 후생수준과 분배를 반영하는 변수도 포함하고 있다. 실물지표의 선택은 과거 많은 연구에서 GDP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들 중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지표가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 후생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라는 데 큰 의의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국민생활의 질을 반영하는 지수(Physical Index of Life Quality)에 포함되어 있다.

실물지표 자료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견해는 변수의 포함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발전정도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GDP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자료의 제약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일부 비판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에 의한 북한 GDP 추정은 큰 의의가 있으며 추정결과도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 GDP가 발표되지 않는 북한의 경우에는 최소한 GDP의 대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 2) 單純한 MPI의 推定結果

단순한 MPI의 추정을 위해 22개의 실물지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상의 다공선성과 가중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활용되었다. 전통적인 방법론은 모든 실물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철강소비량과 취학율, 공업부문의 고용비중 등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경제부문(예컨대

농업부문)의 실물지표가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사용되면 그 부문이 GDP 추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전체 30개의 실물지표중 농업부문이 10개라면 GDP 추정에 농업부문의 영향력이 여타 부문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환언하면 모든 실물지표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므로 실물지표의 수 자체가 GDP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추정방법은 분명히 편기된 추정치를 가져온다. 나아가 일부 실물지표가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사용한다면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부문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단순한 MPI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교적 독립적인 실물지표만을 활용하여 GDP와 각 실물지표와의 함수적 관계를 여러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 방법으로 42개 국가에 대해 단순한 MPI로 각각의 실물지표와 GDP와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이 결과에 북한의 실물지표를 대입하여 1인당 GDP를 추정하였다. 이들 추정치의 산술평균 값은 1,618.9 달러이고 기하평균값은 1,442 달러가 된다. 이것은 1988년의 추정치로서 기하평균 값이 산술평균값 보다도 통계적 특성상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분석에서 단순한 MPI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지만 다중회귀분석보다는 훨씬 비효율적

인 방법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 역시 공선성과 낮은 자유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3) 主成分 分析에 의한 推定結果

단순한 MPI의 제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주성분 분석은 단순한 MPI보다도 정확하게 실물지표와 GDP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흔히 주성분 요소가 무엇을 반영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GDP의 추정작업에서는 결코 주성분 요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실물지표들의 변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것을 활용해 GDP를 추정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된다.

단순한 MPI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문제는 동일한 가중치와 평균개념에 의한 GDP 추정이었다. 만약 주성분 요인을 파악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GDP와의 관계를 추정하고 북한의 GDP를 계산한다면 단순한 MPI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추정치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북한의 GDP를 추정하기로 한다. 기본 실물지표의 자료가 모두 활용되었으나 북한 자료의 제약, 실물지표간의 높은 상관관계 등을 배제하고, 추정 결과 특이한 샘플[outlier]로 판단되는 국가는 제외되었다.

<표-3>은 38개국 22개 실물지표를 바탕으로 추정된 주성

분 분석 결과이다. 여기에 표시된 주성분 요인은 독립변수인 실물지표에 나타난 통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성분요인을 이용하여 GDP를 추정하면 통계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분석이 된다.

전체 22개의 실물지표를 주성분 분석한 바 6개의 주성분 요인이 1이상의 고유근(eigenvalue)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의 주성분 요인이 실물지표 전체의 52%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다. 제1성분 요인을 검토하면 이것은 주로 농업과 서비스 후생변수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6개의 실물지표 주성분 요인이 전체의 86%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6개의 주성분 요인만 분석하면 22개의 실물지표가 갖고 있는 통계적 특성의 86%를 이용하는 것이다. 22개 대신 6개만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6개의 주성분 요인을 이용하여 38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장 좋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GDP} = & 4,751 + 965 \text{ PRIN1} + 435 \text{ PRIN2} - 444 \text{ PRIN3} \\ & (45.5) \quad (31.8) \quad (4.9) \quad (4.9) \\ & - 335 \text{ PRIN4} + 314 \text{ PRIN5} + 273 \text{ PRIN6} \\ & (2.5) \quad (1.5) \quad (2.8) \end{aligned}$$

$$R = 0.972$$

( )내의 값은 t값이며, PRIN1-PRIN6은 주성분 요인을

나타낸다. 이 추정결과에 의한 북한의 GDP는 1988년 1,068불, 1989년에는 1,181불로 나타났다. 이 추정결과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참고국가들의 실제 GDP와 주성분 분석에 의한 GDP를 비교해 보았다. <표-4>는 실제 GDP와 추정 GDP 및 정확도를 비교하고 있다.

정확도는 (추정된 GDP/실제 GDP)로 계측되었는 바, 이집트와 필리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120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확도가 90~110 사이에 있어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형태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1988년의 경우 북한의 GDP가 1,064~1,569불, 1989년은 1,082~1,620불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은 이상한 자료나 참고 국가를 제외하거나, 주성분 요인을 4~5개만 사용하는 등 여러 분석 결과에서 얻은 결론이다.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이 추정치가 모두 큰 차이가 없었으며 R이나 t값이 약간씩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정확도는 저개발경제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마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참고 국가가 대부분 선진국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믿어진다. 또한 저개발경제에 대한 GDP 추정치는 추정방법이나 표본수가 달라짐에 따라 비교적 크게 변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저개발국에 대한 추정치가 선진국보다 불안정한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속해

있는 저개발국의 GDP 추정을 위해 자료의 집합에 저개발국들이 보다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일수록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질이 저하된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1인당 GDP가 15,000불 이상인 고소득 국가를 제외한 추정결과에서는 북한의 1인당 GDP가 1,511불(1989년)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정결과의 통계적 특성은 앞의 결과보다 상당히 저하되었다. 즉, 설명력이나 t값이 모두 앞의 결과보다 저하되었다.<sup>2)</sup> 고소득 국가를 제외한 샘플의 GDP 평균값은 3,105불 이었다.

그러나 8개의 사회주의 국가만을 대상으로한 추정에서는 북한의 GDP가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추정치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7개 국가의 실물지표만을 이용한 것으로서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2)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GDP} &= 2,923 + 648 \text{ PRIN1} + 268 \text{ PRIN2} + 28 \text{ PRIN3} \\ &\quad (18.7) \quad (17.2) \quad (1.4) \quad (0.2) \\ &- 190 \text{ PRIN4} - 73 \text{ PRIN5} + 68 \text{ PRIN6} \\ &\quad (1.0) \quad (0.6) \quad (0.5) \end{aligned}$$

$$R = 0.936$$

#### 4. 結論

국가간 GDP를 완벽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지수가 갖고 있는 고전적인 문제 이외에도 국가간 경제 비교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있다. 특히 북한의 GDP를 추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보다도 더 제약이 많다. 국가별 국민계정의 작성기준이 다르고 각국 통계자료의 신빙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 공식환율을 이용하여 GDP를 달러로 환산하는 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전형적인 문제 이외에도 데이터 자체가 거의 없어 GDP 추정에 큰 애로가 있다.

MPI에 의한 추정결과는 일반적으로 선진국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이것은 바로 저소득 국가에서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북한의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성에 관한 의문을 버릴 수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고려하면 주성분 분석에 의한 북한 GDP의 추정은 최소한 다른 방법 이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귀분석과 주성분 요인 및 추정결과의 정확도 비교에서 여타 분석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과는 주성분 분석에 의한 1988년도 북한의 1인당 GDP가 1,064~1,569불이고 총 GDP는 223.8~330.0억불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보다 더 정확한 북한의 GDP 추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물지표의 자료는 저개발경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자료도 보다 더 정확하게 계측되어야 한다.

여러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주성분 요인 분석은 통계적 방법론상 종전의 어떤 실물지표 분석보다 우월하다. 이것은 제한된 실물지표만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GDP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기법의 하나로서 매우 유용한 결과를 추정한다.

<표-1>

실물지표의 기본 자료

부 문	실 물 지 표(변수명)	단 위
공 업	1. 철강소비(I1) 2. 총에너지 소비량(I2) 3. 광물성 유류 소비량(I3) 4. 시멘트 소비량(I4) 5. 알루미늄 소비량(I5) 6. 아연 소비량(I6) 7. 납 소비량(I7) 8. 동 소비량(I8) 9. 특허 기술혁신 등록건수(I9)	kg/cap. kg/cap. kg/cap. kg/cap. kg/cap. kg/cap. kg/cap. kg/cap. piece/million cap.
농업,식량	1. 트랙터 보유대수(A1) 2. 농업인구 1인당 인구수(A2) 3. 농업부문 취업 비율(A3) 4. 총칼로리 섭취량(A4) 5. 식물성 칼로리 섭취량(A5) 6. 동물성 칼로리 섭취량(A6) 7. 커피, 차 소비량(A7)	piece/million cap. head/head percent gr/cap/day gr/cap/day gr/cap/day kg/cap.
교 통	1. 고속도로 길이(T1) 2. 포장도로 길이(T2) 3. 승용차 수(T3) 4. 상용차 수(T4)	km/1000head km/1000head piece/1000head piece/1000head
건 강	1. 유아사망률(H1) 2. 의료보조원 수(H2) 3. 의사 수(H3) 4. 치과 의사 수(H4) 5. 병상 수(H5)	head/1000head head/1000head head/1000head head/1000head piece/1000head
서 비 스	1. 서비스 부문 취업 비율(S1) 2. 종이 소비량(S2) 3. 인쇄지 소비량(S3) 4. 신문 유통(S4) 5. 우편물 유통(S5) 6. 전화 보유(S6) 7. 라디오 보유(S7) 8. TV 보유(S8) 9. 방 1개당 인구(S9)	percent kg/head kg/head kg/head piece/head piece/head piece/head piece/head head/room

<표-2>

단순한 MPI에 의한 GDP 추정

추 정 치	$\bar{R}^2$	북한의 1인당 GDP
$\ln GDP = 1.902 + 0.975 \ln I_2$	0.837	2044.9
$\ln GDP = 2.617 + 0.814 \ln I_3$	0.779	719.5
$\ln GDP = 6.836 + 0.760 \ln I_5$	0.754	950.7
$\ln GDP = 6.456 + 0.362 \ln A_1$	0.796	3228.9
$\ln GDP = 6.492 + 0.630 \ln A_2$	0.532	1213.9
$\ln GDP = 10.223 + 0.760 \ln A_3$	0.767	2362.6
$\ln GDP = 9.418 + 0.429 \ln T_1$	0.427	1770.1
$GDP = 869.314 + 19.906 T_3$	0.901	1116.7
$\ln GDP = 2.202 + 0.949 \ln H_3$	0.827	2619.7
$\ln GDP = 6.457 + 0.951 \ln H_5$	0.765	1442.6
$\ln GDP = 3.933 + 1.153 \ln S_1$	0.478	1321.2
$\ln GDP = 4.863 + 0.654 \ln S_8$	0.751	636.4
산술 평균 1618.9		
기하 평균 1442.3		

<표-3>

주성분 요인 분석: 각 변수와 고유근

	PRIN1	PRIN2	PRIN3	PRIN4	PRIN5	PRIN6
I1	0.134694	-1.85058	-0.310998	0.336325	-0.532149	-0.077993
I2	0.261883	0.156176	0.111668	0.132026	0.134810	0.51128
I4	0.111132	-0.298596	-0.184798	0.328190	0.156044	-0.185223
I5	0.256930	0.059764	0.052565	0.060709	-0.136243	0.109227
I6	0.148649	-0.394908	0.473396	-0.114597	0.058974	0.047536
I7	0.185452	-0.170344	0.305168	-0.020280	-0.118883	0.049262
I8	0.205530	0.044744	0.410341	0.181502	0.150657	0.119676
I9	0.255717	-0.028903	-0.143449	0.087497	-0.167727	-0.063024
A1	0.254259	0.169222	-0.122094	-0.246448	0.147449	0.114058
A2	0.218304	0.265960	0.268058	-0.089396	0.147716	-0.109524
A3	-0.285154	0.013691	0.099672	0.046351	0.000984	0.193243
A4	0.200957	0.199519	0.110171	0.326790	-0.117284	-0.291594
A5	-0.077903	0.470187	0.173544	0.403154	-0.044033	-0.153893
T1	0.144203	0.224154	-0.072369	-0.409527	0.434857	0.180895
T2	0.185679	0.079700	-0.286336	-0.148546	-0.462494	0.008036
H1	-0.182234	0.059103	0.137544	-0.250030	0.020434	-0.459892
H2	0.284628	-0.023751	0.034794	0.016900	-0.245294	0.172447
H3	0.225971	-0.332669	0.124013	-0.026858	-0.064244	-0.060405
H4	0.216504	-0.074723	-0.142189	0.087124	-0.158935	0.303784
S1	0.219869	0.218538	-0.194987	-0.036315	-0.071676	-0.368713
S8	0.285598	0.146239	-0.160654	-0.076658	0.145639	0.067778
S9	-0.182137	0.231503	-0.041918	0.309241	-0.002339	0.490433

<표-4> 실물지표의 주성분 분석에 의한 GDP 추정

국 가	GDP추정치 (A)	실제 GDP (B)	정 확 도 (%)	비교지수 (남한=100)
북 한	1181			26.7
한 국	4414	4997	88.3	100.0
오스트리아	15896	16642	95.5	359.7
벨기에·룩셈부르크	16306	15683	103.9	369.0
브라질	2065	2166	95.3	46.7
불가리아	1634	1730	94.4	36.9
캐나다	18048	18648	96.7	408.4
칠레	2786	1942	143.4	63.0
체코슬로바키아	3568	3235	110.2	80.7
덴마크	18966	17478	108.5	429.1
이집트	277	619	44.7	6.2
프랑스	16031	17006	94.2	362.7
그리스	4434	3991	111.1	100.3
헝가리	3111	2741	113.5	70.4
인 도	52	282	18.5	1.1
이탈리아	15512	15056	103.0	351.0
일 본	20737	22896	90.5	469.2
멕시코	1763	2372	74.3	39.9
네델란드	14073	14978	93.9	318.4
뉴질랜드	12035	12533	96.0	272.3
노르웨이	24326	22619	107.5	550.4
페 루	1404	1349	104.1	31.7
필리핀	339	739	45.8	7.6
폴란드	1986	1801	110.2	44.9
포르투갈	4266	4357	97.9	96.5
남아프리카	2381	2296	103.7	53.8
스페인	10162	9777	103.9	229.9
스웨덴	18620	19590	95.0	421.3
스위스	24467	26509	92.2	553.6
터어키	1343	1301	103.1	30.3
영 국	13809	12550	110.0	312.4
서 독	18089	10179	94.3	409.3
유고슬라비아	2852	3027	94.2	64.5

\* World Bank Data

# 北韓經濟의 選擇과 發展展望： 北韓의 軍事費와 經濟成長

李達熙(民族統一研究員 北韓研究室長)

## 1. 序論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는 최근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침체는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과 정치군사 우선의 비합리적 경제정책에서 기인된 것이나 최근에는 외화 부족, 기술 낙후, 설비 노후 및 생산의욕 저하 현상이 그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우선의 자원배분 정책은 북한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소련 등 공산권 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군사적 부담의 가중에 기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북한이 세계적인 평화무드와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군축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북한경제에 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과연 군축이 실현되었을 경우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는 정치적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논문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과중한 군사비 지출을 지적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군사비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심층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소규모 군사경제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토대로 군사비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평가하며, 향후 2000년까지의 북한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모형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총량지표인 국민소득은 지금까지 알려졌거나 또는 북한경제의 연구에 사용된 방법 대신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각종 매체나 주요 회의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초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추계되었다. 특히 불충분한 자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업생산과 농업생산 그리고 국민소득 간의 관계식을 이용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북한의 예산배분 자료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예산의 주요항목별 배분 시계열을 재평가, 추계하였으며, 끝으로 북한의 군사적 노력의 지표로서 사용된 군사비를 예결산 자료로부터 추계하였다.

## 2.北韓經濟의 概況

### 2.1. 公表資料의 問題點과 評價

#### 1) 量·頻度數의 貧弱과 範圍의 狹小

북한은 대체로 60년대 초반까지는 그들의 경제통계를 비교적 자세히 발표해 왔으나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 무렵인 1966년 이후부터는 공개하는 데이터의 양과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었으며, 이와 같은 극히 제한적 공개마저도 1985년부터는 다시 축소되어 주요한 생산 소득 지표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원칙으로 바뀌게 되었다 (1985년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 윤기복의 교도통신과의 기자회견). 또 발표하는 자료의 양과 횟수도 축소되어 왔지만 그 대상지표의 종류와 범위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 2) 資料公開 目的의 非純粹性과 方法의 非體系性

현재 북한의 통계발표는 경제통계를 집약한 통계문서나 책자와 같은 체계적인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회나 김일성의 연설, 또는 관련인사의 기자회견 등에서 산발적으로 ‘언급’ 또는 ‘인용’하는 형태로 공개되는데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자료공개는 적어도 1965년 이후부터는 객관적 통계자료의 제시나 실적의 객관적 공개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실적을 대내외에 찬양 선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흘러나온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공식적 회의나 연설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찬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예년의 관례로 보아 당연히 언급되었어야 할 특정지표가 누락되어 있을 때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사후적으로 추적해 보면 많은 경우 실적이 부진하였거나 계획에 미치지 못했던 연도였다는 사실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1965년까지는 가끔씩이지만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중앙통계국에서 몇년간의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하거나(예: 「국민경제발전통계집」) 특정연도의 성과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발표해 왔으나 그 후로는 이것마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 3) 發表資料의 非一貫性和 概念上的 模糊性

자료발표의 이러한 성격때문에 발표하는 자료들도 대부분이 절대규모가 아니라 성장율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성장율도 ‘전년도 대비 몇 %’가 아니라 주로 지난 경제발전 계획의 종료연도나 그 이전의 특정연도 대비 ‘몇배’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연도별 성장율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한 개념도 연도마다 상이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허다하여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일관성이 제한적이다.

#### 4) 公開資料의 價値

공개자료의 위와 같은 성격을 고려할 때 자료에 다소의 과장성과 모호성, 비밀관성이 개재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순수경제관련 자료들에 있어서 상호관련된 자료전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공개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사실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적이 부진할 때는 자료자체를 발표하지 않는 관례를 볼 때 발표된 자료들이 크게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소의 과장은 성장율일 경우 그 숫자를 반올림하여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거나 달러기준의 수치(예: 1인당 국민소득)일 경우 고평가된 환율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개자료들의 상호일관성을 검증하고 반올림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과장성, 비밀관성을 걸러낸다면 북한경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 2.2. 期間別 成長趨勢에 대한 公表資料의 分析

북한은 전후 한번씩의 3, 5 및 6개년 계획과 2번의 7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1987-93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은 계획의 성과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기도 하였으며 계획기간을 끝낸 후 중요부문에 초래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조정 완충기 또는 차기계획을 위한 준비기를 설정해 왔다.

전후 35년동안 추진해 온 경제발전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공업 우선전략, 자력갱생 전략, 그리고 초고도의 대중동원 전략으로 특징지워진다. 북한이 이러한 전략과 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전후부터 50년대말까지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립하고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차 5개년계획이 1년 앞당겨 완료된 1960년에는 반농반공의 사회주의적 농업공업국가로 전변”되었으며, 60년대에는 사회주의적 계획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공업,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1970년에는 “발전된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일부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이들을 능가”함으로써 “공업화 개시 14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전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자기평가는 자화자찬식의 수사(rhetoric)로서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발전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민족적 자립경제’의 기반으로 중공업을 핵으로 하는 공업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성과를 국민소득, 공업총생산액 등 주요 총괄지표의 계획기간별 성장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이들 중 미발표기간 및 다른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공표자료를 추적하여 보완 재구성하였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표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은 전후의 50년대에 연평균 20%를 훨씬 넘는 속도로, 공업총생산은 동 기간중 약 40%라는 초고속성장율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율은 북한의 물가상승율에 대한 국내외 관련기관의 개략적인 평가인 연평균 약 2-3%의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것으로서, 적어도 이 기간만을 두고 볼 때 J. Robinson의 평가처럼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북한당국은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인하한 사실만 공개하고 있어서 정확한 물가상승율은 알 수 없음).

그러나 ‘4대군사노선’을 선언하고 경제-국방 병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1차 7개년 계획기에는 공업성장율과 국민소득 성장율이 연평균 각각 약 12% 및 9%로 50년대의 성장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다소 낮추어 잡은 계획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도 당대표자대회에서 7개년계획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역시 계획에 미달하는 성과를 거두어 60년대 전 기간의 국민소득 성장율은 8%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3대혁명 소조운동’ 및 ‘70일 전투속도’ 등 대중동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제한적이지만 서방(특히 서독,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템포를 다소 회복하였는 바, 1차 6개년

계획 및 1년 조정기(71-77) 동안의 국민소득 성장율은 연 13%를 초과하였으나, 1978년부터 시작된 2차 7개년 계획기간에는 다시 성장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계획에 미달하는 연평균 8.8% 정도의 성장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공표자료에 나타난 바로는 50년대를 고속성장기, 60년대는 침체기, 70년대의 중후반까지를 회복기, 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를 지속적 둔화기로 각각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과 장기적 성장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민소득의 성장은 <표-2>에서 보듯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방력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동구를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성장율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고속 성장추세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제개혁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동구제국에 비해서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 2.3. 年度別 國民所得에 관한 公表資料의 追跡 分析

북한당국은 국민소득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그 절대규모를 발표한 적이 없으며 단지 그 성장율만 산발적이지만 1965년도까지 발표해 왔다. 그러나 그 후로는 주요 경제발전계획의

총결산과 관련한 주요회의나 김일성의 연설 속에서 계획의 종료연도의 국민소득이 시작연도의 몇배라는 형태로만 공개 되어 왔다. 다행히 1966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의 규모에 대해 초기에는 북한 원 단위로, 70년대 이후에는 미국 달러기준으로 수차례 발표함으로써 전체 국민소득의 절대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이들 자료와 추정된 인구 및 환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완전하지만 공표 국민소득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가까스로 구성할 수 있는 실정이다.

<표-3>과 <표-4>는 지금까지 공개된 국민소득 성장율과 1인당 국민소득에 관한 언급들을 정리한 것인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5년까지는 거의 매년 성장율을 발표해 왔으나, 그 이후로는 대체로 실적이 좋은 발전계획의 말기에 그 전 계획의 말기 대비 배수형태로만 발표하고 있다. 또 어떤 연도에는 전년도비 성장율만을, 또 어떤 연도에는 몇년 전과 대비한 성장율만을 발표하기도 하고 일부 연도에는 두가지 형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발표한 성장배수만을 그대로 이용하여 연장하면 성장율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에도 보통 “특정년도의 얼마는 지난 특정년도의 몇 배”라는 형태로 발표되고 있고 특히 1974년 이후에는 달러로 표시한 숫자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초부터 제한적이지만 대외개방을 시작한 이래 내방하는

외국인(특히 기자나 학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대외선전을 위한 것이었음이 거의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70년대에는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소득수준에 있어서 당시에는 아직 낮은 수준이었던 남한의 소득수준보다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달러표시의 경우 복수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환율을 사용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달러표시 1인당 소득을 발표하는 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 원화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공정환율'을 적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왜냐하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도의 1인당소득에 대해 1,920불과 그것의 약 60% 수준인 1,200불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자료가 확인되고 있는 바, 만약 이것이 인쇄상의 잘못이 아니라면 환율적용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표의 주 참고). 어쨌든 미화 표시 1인당 소득은 그 이전에 발표된 소득성장율이나 북한 원화표시의 1인당 소득과 비교할 때 명백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이를 위해 원화표시 소득자체를 (반올림 외의 방법으로) 크게 조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의 규모는 그것이 북한 원화로 표시되었건 달러기준으로 표시되었건, 보통 마지막 한자리 또는 두자리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되는 점인 바, 이는 공개된 1인당 소득이 적어도 정수 첫자리 또는 둘째자리에서 반

올림한 수치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의 국민소득 성장을 자료와 1인당 소득 자료를 발표수치대로만 이용하여 앞뒤로 연결하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2.4. 公表國民所得의 推計

<표-3>과 <표-4>에서 제시된 자료로부터 1946년부터 1988년까지 43년의 기간중 25개년의 '公表國民所得'의 절대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바 그 결과는 다음 <표-5>에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발표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생기는 상호불일치나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우선 '소득자료간의 일관성있는' 시계열로 재구성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첫째, 인구에 대해서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8개년의 경우만 공개해 왔기 때문에(표의 인구란 가운데 \* 표친 것) 불가피하게 내삽(interpolation) 또는 외삽(extrapolation)에 의해 추정한다.

둘째, 소득성장율이나 성장배수 있어서 '몇 배'형태로 제시된 수치는 대부분에 소수 첫자리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해석하고 정수 첫째자리 또는 그 이하까지 제시되어 있는 '몇 %'형태의 자료는 일단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 달러표시든 원화표시

든 정수 둘째자리 이하가 '0'으로 제시된 수치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정수 둘째 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간주한다.

셋째, 달러로 표시된 1인당 소득은 앞서 검토한 바와같이 '공정환율'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북한원화 기준의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한다.

넷째, 반올림을 고려한 성장배수 또는 절대규모로부터 1인당 소득의 연도별 최대최소치를 구하고 여기에 인구수를 곱하여 1인당 소득자료에 기초한 전체 국민소득의 최대최소치를 구한다(표의 C란).

다섯째, 인구 및 1인당소득의 공식발표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또 전체 국민소득의 공표성장율에 있어서 기준연도로서 가장 많이 이용된 1949년도의 국민소득구간(표의 C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고려한 국민소득 성장율 및 배수를 적용하여 가능연도별로 국민소득 구간을 설정한다(표의 C란).

여섯째, 이들중 1인당 소득자료에 의한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 1962년)는 양 구간이 겹쳐지는 부분으로 구간을 축소한다.

끝으로 전체 국민소득 성장율자료로 연장할 수 없는 연도는 1인당 소득자료에 의한 구간을 최종 소득구간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공표국민소득의 구간은 표의 D란과 같은 바, 여기서 제시된 국민소득

의 구간은 어디까지나 발표한 성장을 또는 배수 모두를 만족 시킴으로써 국민소득 관련 자료간의 상호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며 따라서 ‘공표된 국민소득’은 이 구간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국민소득이 반드시 이 구간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과 관련한 공표자료의 모든 수치를 ‘발표한 그대로’ 이용했을 때 생겨나는 상호 불일치성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1962년의 경우 1인당소득에 의해 추계된 국민소득은 4685.9백만원이나 전체소득 성장율에 의한 국민소득은 5023.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0년과 1974년은 모두 1인당소득을 발표하였고 또 “1974년의 국민소득은 1970년의 1.7배”라고 하였는데 결과는 표의 C란에서 보듯이 1.8배를 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올림 등을 이용, 발표수치에 구간을 설정한 것이 곧 표D란의 NMPP 및 NMPG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표수치에 기초하여 계산한 1949년의 12억 6820만원 (표의 C란의 1949년 수치로서 D란의 1949년 구간의 중간치와 동일)을 기준으로 공표된 성장율을 그대로 이용하여 연장한 것이 D란의 ‘종합’공표국민소득이다.

이들 중 특히 1962년의 경우 1인당 자료와 함께 ‘전년비 약 1.1배’라는 자료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구간의 최대치를 ‘공표’국민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1970년 및 1974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1970년은 구간의 최대치를, 1974년은 구간

내의 수치 중 1970년의 1.7배가 되는 수치를 ‘공표’국민소득으로 보았다.

이렇게 추적, 재구성된 ‘공표’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소득관련 자료간의 내적 일관성만을 고려하여 추계된 것인 바, 공표 자료의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하여 곧 정확한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국민소득자료가 불충분하고 그 신빙성도 제한적인 북한의 경우 가능하다면 국민소득과 관련한 ‘다른’ 자료와의 상호일관성 검증을 통해 ‘공표’국민소득은 재조정될 여지를 안고있다. 이를 위해 공개자료가 비교적 충분하고 국민소득과 이론적, 현실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공업 및 농업생산과 관련한 자료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 2.5. 工業 및 農業成長에 대한 公表資料의 追跡과 現況分析

공업 등 생산측면의 자료추적은 위와 같은 이유로서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을 파악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생산과 관련하여 북한이 공개해 온 자료 중에는 사회총생산(GSP)과 공업총생산, 농업중 곡물(‘알곡’)생산 등이 포함되는 바, 사회총생산(GSP)의 경우 1965년까지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그 절대규모와 부문별 구성비까지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사회총생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공업총생산을 중심으로만 발표하

였으며, 농업의 경우 총생산액은 발표하지 않고 농업생산의 핵심인 알곡(벼, 밀, 옥수수 등의 곡물)의 실물생산량만을, 그것도 주로 실적이 좋은 해에만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공업성장율의 경우 생산측면의 통계로는 드물게 거의 매년 성장율을 공개해 왔으나 이 경우도 1985년부터는 자료공개가 중단된 상태이다. 공업총생산의 성장자료에 있어서 또 주목되는 점은, 국민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규모가 아니고 성장율 형태로만 발표해 왔지만 ‘몇배’보다는 주로 ‘몇 %’ 형태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또 성장율 수치도 정수 첫째 자리까지 ‘유효숫자’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므로 수치자체의 신뢰성은 국민소득 경우보다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생산관련 자료들도 국민소득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통계집과 같은 체계적인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 회의보고나 김일성의 연설 중에서 실적을 찬양하는 가운데 ‘언급’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 2.6. ‘公表’된 主要 總量指標의 綜合 및 比較

지금까지 가능한 한 1차 공표자료를 추적하여 정리한 ‘공표국민소득 및 성장율’, ‘공표 공업총생산지침 및 성장율’ 그리고 ‘공표 알곡생산 및 성장율’을 정리하여 대비하면 다음 <표-6>과 같다.

공업총생산은 편의상 1960년도를 기준(=100)으로 한 지수 형태로 추계하였으며 비교를 위하여 가장 완벽하게 공표하고 있는 예산수입의 규모와 국민소득에 대비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예산수입의 규모는 북한이 공개하는 자료 중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자료인 바, 다음 표에서는 국민소득 및 생산과의 비교를 위해 이 가운데 ‘원조나 차관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외하였다(해당기간은 1953-1960년).

그런데 국민소득은 사회총생산 중 생산적 소비부분을 제외한 ‘순생산’이고 사회총생산에는 공업과 농업생산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므로 결국 국민소득의 변화는 이들 양자의 변화에 의해 거의 설명이 되어야 한다. 공업과 농업에 의한 생산과 소득의 상대적 구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소득의 성장율은 대체적으로 공업총생산과 농업성장율의 가중평균, 즉 양 성장율의 어느 중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생산과 거래 등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수입도 공업의 생산액 및 유통액과 일정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사회주의국가의 예산수입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은 대략 60% 전후에서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결국 국민소득의 성장율은 예산수입의 증가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표에 나타난 이들 성장율이나 비율들의 관계를 살펴 보면 몇가지 점에서 상호불일치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55년의 경우 국민소득의 성장율은 공업과 농업성장율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예산증가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예산의 소득대비 비율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 북한이 그해에 노동자 사무원의 소득세를 30%, 농업현물세를 21.1%로 낮춘 점을 고려하면 1955년의 예산수입 비율은 오히려 추세에 비해 낮아져야 하는데도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설명되기 어렵다(1956년도도 비슷한 이유로 설명 곤란). 1960년의 경우 국민소득 성장율은 공업 및 농업성장율의 가중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예산수입 증가율과도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낮은 국민소득의 성장율이 재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2.7. 回歸分析을 통한 一貫性 檢證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미발표연도의 국민소득 성장율 및 공업, 농업 성장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앞의 표에 나타난 각 성장율간의 계량적 모형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다시 이 관계식에 의해 사후예측된 국민소득 성장율과 앞절에서 설정된 국민소득의 구간을 이용하여 '공표'국민소득 및 그 성장율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두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 2차조정은 기

본적으로 '공표'소득성장율과 1차 및 2차 회귀모형에서 예측된 성장율이 크게 괴리가 생기는 경우이거나, 큰 괴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당해 연도의 성장율 자체를 발표하지 않아 '공표'성장율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 행해졌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 조정방법은 먼저 두가지 이상의 성장율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우선 예측성장율과 가까운 공표성장율을 택하는 것이었다.

둘째, 공표성장율은 하나이나 실제로는 괴리가 생길 경우 공표국민소득의 구간에서 최대치나 최소치로 절대규모를 변경시킴으로써 사후적으로 성장율을 조정하였다.

셋째, 큰 괴리는 아닐지라도 추계된 공표성장율이 신뢰성이 낮은 경우는 바로 예측성장율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2차에 걸쳐 조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된 국민소득은 '공표'국민소득의 구간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발표성장율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약간씩 변화되었다.

한편 연도별 국민소득 성장율과 공업 및 농업성장율중 자료가 불명인 연도의 경우에는 2차 회귀모형(다음의 회귀모형참고)으로 구성되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사후예측함으로써 추정하였는 바, 공업 및 농업성장율은 있으나 소득성장율이 없는 경우는 '소득-성장관계식'에 이들을 대입함으로써 구하였으며, 공업이나 농업 성장율중 하나만 있을 때는 '소득

-생산식'으로 이뤄지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국민소득성장율과 불명인 공업 또는 농업성장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공업 및 농업성장율 모두가 없을 경우는 '소득-예산식'을 이용하거나 이를 참고하면서 구간별 공표소득성장율을 구간 및 연도별 예산성장율의 추세를 이용하여 먼저 국민소득 성장율을 구한 다음 소득 및 예산성장율을 위의 연립방정식에 대입하여 계산함으로써 구하였다.

이 결과 1988년까지 국민소득 성장율 및 절대규모, 공업생산지수 및 성장율, 농업생산량 및 성장율이 모두 구해졌는바, 이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한편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국민소득에 대한 예산수입의 비율은 조정되기 전의 비율(<표-6>)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는데, 특히 이 중 1970년도의 경우 조정되기 전에는 당시의 추세인 50~60%를 훨씬 넘는 72.5%에 이르렀으나 조정 후에는 64.3%로 전체적 추세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예산의 소득대비 비율은 1950년대에는 45~48% 수준, 60년대 중후반까지는 55~58%, 그리고 그 후로는 62~65%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 3. 北韓 軍事費의 規模와 特性

#### 3.1. 軍事費의 規模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1972년의 군사비가 1971년의 31%와 대조적으로 세출예산대비 17%라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예결산시에 세출대비 구성비율 형식으로 군사비를 발표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아주 미미한 증가가 있었지만 84년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군사비 절대규모 면에서는 1972년에 전년대비 36%가 감소한 이래 8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86년에는 절대규모 면에서도 줄어들었다. 국내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1972년의 급격한 군사비 감소발표는 실물군사력과 너무나 거리가 있으며 동년에 시작된 남북대화를 의식한 고의적인 은폐로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북한의 실제 군사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미시적인 방법으로서 항목별 추계법(Building Block Method)이나 거시적 추계법으로 국민소득 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항목별 추계법은 미 CIA가 소련의 군사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정보자료에 의하여 판단된 전투서열에 가격을 곱하여 전 항목을 합산한 것이며, 거시적 추계법은 장비조달 규모의 경우 기계공업 생산에서 타

부분 소요의 합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보는 등 국민소득 계정 중 해당지출 부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군사비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거시적인 추계의 경우 발표 군사비 규모의 추세나 구성비율을 직접 이용하여 실제군사비를 추정하는 다소 간편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군사비와 관련된 발표자료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1961년-1971년 기간의 발표군사비가 실제군사비라는 것만을 인정하고 기타 기관의 실제군사비는 북한예산의 다른 항목인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 시책비를 재추정하여 이들 두 예산항목의 합을 총세출예산 규모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실제군사비를 추계한다.

여러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먼저 여기서는 1971년의 인민경제비는 사회문화 시책비 증가율과 군사비 구성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1972년에 발표한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 시책비 증가율은 과장된 것으로 보아 실제증가율은 각 항목의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1972년의 총세출예산 증가율의 평균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추정된 항목별 예산지출 규모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1960년대 후반 이후 군사비는 총세출 예산대비 28%~30% 수준을 유지한다.

## 3.2. 軍事費의 特性

### 1) 軍備增強의 容易性

#### 가. 重工業 中心의 經濟構造와 消費水準의 抑制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유리한 점은 우선 그들이 정권출범 직후부터 군수공업과 연계성이 높은 중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기계제작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은 군사장비와 유사한 성격의 민수장비를 생산함으로써 군수공업의 육성에 있어서 위험부담이나 비용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 주었으며 또 유사시에 군수공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초기부터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해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해왔는바, 사실은 1950~60년대 초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줄곧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보다 중공업에 역점을 두어 왔다.

한편 이러한 전략은 인민들의 소비수준에 대한 억제를 필요로 하였는바, 북한당국은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는 배급제를 실시하여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그리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공급억제 뿐 아니라 가격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를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소비재의 공급 및 가격을 통한 소비억제 외에도 혁명과 조국해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고도의 정치 사상적 교육과 세뇌를 통하여 엄격한  
금욕주의적 생활을 강요하여 왔으며, 그 결과 유발될 지도 모  
를 불만과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사  
회적 공공소비재는 “수령님의 은덕과 배려”라는 선전과 함께  
비교적 광범위하게 공급하였다.

이러한 소비억제는 결과적으로 자원의 국가집중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군수공업 중심의 중공업 육성과 방대한 군사력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軍需物資 裝備 兵力의 低價格 低費用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가격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그 수준이 결정되는 바 특히 생활필수품이나 전략  
적으로 중요한 물자들은 의도적으로 가격수준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물가상승율은  
자본주의국가들 경우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1970~87년의 기간 동안 소련 등 동구권의 물  
가상승율은 연 2% 이하의 수준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약 3  
배, 한국의 경우는 5배 이상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정확한 물가상승율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저명한 국  
제기관들은 대부분 연 2~3%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  
다 높게 추정하고 있는 안기부의 추계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절반 이하 수준인 5.7%로 안정되어 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군사장비나 기타 군수물자의 가격도 필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군사예산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소련에 의해 실증되고 있다. 즉 소련이 지난 6월 인민대표회의에서 국방예산과 우주개발비 등이 773억 루블(39억불)이라고 70년만에 처음으로 공개한 이래, 총참모장 M. 모이세예프가 프라우다지에 기고한 글에서 소련의 전투장비의 가격은 그 질을 고려하면 서방, 특히 미국보다 “10배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소련의 노동임금과 원자재 가격은 미국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으며 또 군수산업의 수익성(즉 이윤)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동아일보」, 1989.9.26). 이와 같은 가격 차이에 대한 총참모장의 발언에 대하여 소련과학원 북미연구소 연구원 알렉세이 이주모프는 다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가격체계나 가격구조가 소련과 유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장비의 가격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며 미·소의 가격차이가 남북한의 장비가격 비교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인 바, 안기부에서 미국 CIA와의 자료 협조하에 추정된 것으로 알려진 개략적인 북한의 장비가격과 한국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소총, 전

차, 자주포의 경우 비슷한 가격이지만 유도탄이나 항공기의 구입 가격은 2배~4배까지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잘 알려진 대로 필수적인 주요 생필품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바 주요 생필품의 가격은 우리의 1/1.1 내지 1/3.8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로 부터의 상품 또는 무기구입시에도 많은 경우 차관형태로 도입되거나 다른 물자와의 정산 내지 바아터(barter)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차관방식일 경우 통상 8~10년의 장기차관에 2% 내외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청산방식일 경우 소위 '우호가격'이라고 하는 낮은 수준의 가격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 소련인은 대북한 무기 판매가격은 '우호가격'을 적용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약 절반 수준에서 판매한다고 언급하였다. 중국도 대북한 원유 제공시에 '우호가격'을 적용하여 제2차 석유파동 직전인 1978년에 배럴당 4.5달러의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북한이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의 구입이나 인력의 유지비용은 한국과 대비할 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일액의 군사비라 하더라도 실질적 구매력 면에서 보면 실질규모는 명목상 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다. 蘇聯의 經濟 및 軍事援助

북한으로 하여금 방대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

도록 해준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북한 우방국들로부터의 경제 및 군사원조라 할 수 있는바 이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해 온 소련의 원조와 역할을 살펴본다.

#### a. 經濟援助

북한과 소련의 공식적 경제협력은 1949년 3월 북·소 경제문화 협력협정이 맺어진 이후부터이며 이 협정을 근거로 북한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원조를 소련으로부터 받아왔다. 1940~50년대의 소련의 대북한 경제원조는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전후 산업복구지원 형태를 유지하였다.

60년대 전반기의 북·소 소원기를 지나 1966년에 소련은 총 1억6천만 루블의 차관을 연리 2%에 제공하였다. 상환조건은 산업설비와 자재의 공급이 끝나고 그에 따른 각 설비시설이 완공된 다음 해부터 10년간 균등지불하는 호조건이었다. 또한 소련은 과거에(49, 61, 65협종) 차관을 받고 60~70년 기간에 상환이 도래한 금액을 7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14년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상환연기를 제공하고 더욱이 상환연기에 따른 이자도 면제하여 주었다. 70년대 전반기에는 다시 북·소관계가 소원해졌으나 후반기에는 관계증진과 함께 소련의 원조는 장기저리의 현물상환을 제공하는 등 한층 증대되었다.

이러한 소련의 경제원조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는데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한 연구보고서는 이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소련의 기술협력하에 70년대 동안에 북한에 건설된 기업들은 이 기간에 전력생산 40%, 석탄 30%, 강철 30%, 압연 40%의 생산증가를 이룩하였으며 소련의 원조로 북한에 설립된 전체기업의 생산비중은 82년에 전력생산 총량의 63%, 강철의 33%, 석유제품 50%, 직물 20%, 화학비료 14%, 금소광석 채취의 42%를 차지하였다 (소련 과학 아카데미 『북한의 정치경제』, 통일원 번역, p.259 참고).

#### b. 軍事援助

소련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무기공급국의 하나인 바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군사장비와 기술을 제공하여 왔다. 소련의 대북한 직접 군사원조는 장기저리의 차관형태이거나 매우 낮은 "우호가격"에 의한 청산방식의 무기공여 및 군수산업협력에 의한 기술제공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와 같은 소련의 무기공급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80년대에 들어와 양적으로 부쩍 증가되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제공 무기의 질적수준도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전력증강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사전략을 바꾸고 있지 않은 북한이 80년대 이후의 북소 밀착을 이용,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제에 부담을 주지않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2) 軍의 經濟的 利用極大化

### 가. 兵力의 經濟建設 動員

북한 인민군의 경제건설 현장 투입정책은 전후복구시기 때 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바 이는 특히 60년대초 북한이 4대군사노선을 채택,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추진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전후복구 당시 인민군이 담당했던 경제건설대상은 주로 도로, 철도의 복구 및 신설 사업이었고 그 외에도 발전소 댐복구, 주요 산업시설의 작업장 지하화 등이 있었으며 60년대 이후 70년대 말까지는 지하화작업과 관련된 사업과 대규모 토목공사장 등으로 이어졌다.

인민군의 주요 건설 실적으로는 70년대 초에 완공된 평양 지하철을 비롯하여 70년대 말경에 완공된 평양-원산간의 고속도로와 평양-남포간의 고속도로건설이 대표적인 것이고 승리자동차종합공장(덕천자동차공장), 회천공작기계공장 등 22개 이상에 달하는 주요 기간산업시설의 지하화 작업도 이에 포함된다. 80년대 이후에는 토목공사 뿐 아니라 중소기업소 건축공사에도 동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80년 10월 당 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0대 전망목표 사업과 4대 자연개조사업 등이며 특히 가장 힘든 공사를 인민군에 맡겨 많은 사상자를 낸 서해갑문공사를 대표적인 군의 경제동원 성공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어려운

공사에 인민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사는 태천발전소, 북부철길공사, 금강산댐공사, 안골체육촌 같은 것들이 있다.

#### 나. 人民軍 經濟建設 動員의 不可避性

북한이 인민군을 경제건설에 동원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노동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전쟁준비가 끝났거나 이를 포기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5%, 남자 총인구의 10%, 산업동원인구 853만의 1/8, 산업동원 남자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군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바,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어느 나라 보다도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건설사업은 거의가 대규모의 힘들고 어려운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의 동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軍 營農事業의 推進

북한 인민군은 쌀과 보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이나 채소 등을 자체적으로 재배, 상당부분을 자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북한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그 확대를 추진해 왔다. 특히 옥수수, 콩은 자체 소비하고도 남아돌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물물교환 형식으로 공공연하게 교환한다고 알려

지고 있다. 또한 인민군은 상당한 시간을 민간인의 영농지원을 위해 할애하고 있으며 특히 전방부대는 하루 일과의 약 1/3을, 후방지역의 경우는 1/2 이상을 군영농과 민간인 영농 지원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귀순병들이 증언하고 있다.

Rand 연구소의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인민군의 노력과 장비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략 GNP의 3~4%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 4. 北韓의 軍事費와 經濟成長

### 4.1. 軍事的 負擔의 認識

북한당국은 과거에 여러차례에 걸쳐 군사력건설과 경제건설은 상호조화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군사비가 경제계획의 목표달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4대 군사노선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군사비 투입을 확대할 무렵인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군사력 건설이 경제발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하자면 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국방에 돌려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응당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같은 회의에서 김일 내각제1부상은 국민소득을 경제 성장, 국방력 강화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축적을 부단히 증가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민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국방건설에 돌리면서도...

또한 70년 11월의 노동당 5차대회에서도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국방력건설이 경제 특히 인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슬회하고 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 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는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한편, 군사비 확대투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60년대 전반 기 군사력 건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최근 2~3년 동안 우리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예견하였던 것보다 일정하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김일성 신년사, 1965.1.1).

최근 2~3년동안 미제가 아세아와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방력강화에 적지않은 자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7개년 계획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로동신문」 1965.7.6).

물론 우리의 7개년 계획이 매우 방대한 것이고 또 우리가 국내 국제적으로 복잡한 정세에서 경제건설을 하고 있는만큼 이 계획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2~3년동안 우리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예견하였던 것보다 일정하게 늦어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의 연설, 1965.4.14).

그리하여 지난 시기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 강화에 적지않은 힘을 돌린 관계로 경제건설에 일정한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개년 계획의 전반적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상동).

최근 수년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계속 힘을 돌려 왔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에 따라 인민경제 발전속도를 일부 조절하면서 국방건설을 적극 다그치도록 하였습니다(상동).

군사비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주로 경제성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60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 경제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경제전문가의 한 사람

이 군사력 건설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왔음을 언급한 바 있다(88년초 「아사히 신문」).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군사비투입이 그들의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바, 군사력 건설의 경제적 부담은 주로 그를 위해 투입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군사부문에 돌림으로써 성장 및 인민생활 향상의 기회를 놓쳤다는 소위 “기회비용”을 강조하고 있다.

#### 4.2. 軍事費의 實證分析

##### 1) 軍事力 建設能力의 決定要因

일국의 군사력 건설노력에 대한 지표로서의 군사비 투입규모는 일반적으로 ‘인지된’(perceived) 군사 안보력의 크기와 군사전략의 목표 그리고 군사비의 부담능력 및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자원 투입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 궁극적으로 가용자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그들의 경제성장 전망, 둘째로 외부정보의 차단과 금욕주의적 정치 사상교육을 통해 가까스로 유지해 온 낮은 수준의 인민소비 수준을 얼마만큼 더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대내적 정치 사회적 측면, 셋째로 소련과 중국 등의 우방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원조와

군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대외 군사경제협력의 측면, 네째로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이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며 특히 소련 및 동구국가들에 의한 개방 개혁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개방 및 개혁가능성과 그 성공여부, 그리고 다섯째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적극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여부 등이다.

## 2)北韓의 軍事-經濟規模의 基本特徵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이들 제 요인을 가능한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경제규모 및 군사비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소규모의 계량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북한경제 및 군사비에 대한 모형분석은 대부분이 자의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추계된 자료이거나 소련 또는 중국 등의 관련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당국이 공표한 자료에 기초하되 그 중 과장 왜곡부분을 반복적으로 걸러냄으로써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모형의 추정에서는 앞서 추계된 북한의 국민소득 및 GNP, 공업생산 지수 및 농업생산량, 재추계된 실제군사비 및 인민경제비, 사회문화 시책비만을 이용하였으며, 자의적 가정을 통해 자본스톡이나 소비수준, 투자규모 등을 추계 사

용하는 방법은 지양하였다.

### 3) 模型의 設計와 推定

본 모형은 크게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부문과 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수입을 경제성장, 인민복지 및 군사비로 배분하는 부문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는 완전연립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 모형으로서, 공업생산, 국민소득, 예산수입, 군사비, 인민경제비 등 5개의 추정된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포함된 변수는 위에서 말한 5개의 내생변수 외에 사회문화시책비와 농업생산 등 2개의 외생 및 정책변수로서 모두 7개의 변수로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 본 모형에 포함되어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estimated)된 각 방정식들의 성격과 추정결과를 살펴본다.

#### 가. 工業生産(IN) 決定式

우선 공업생산은 그 중 많은 부분이 군수공업을 포함하는 중공업이며 또 군사장비의 대부분이 국내 군수산업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민경제비(EC)와 군사비(DE)의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 함수로 가정하였다.

$$\ln(IN) = -3.67884 + 0.852239 \ln(EC) + 0.360661 \ln(DE)$$

(-3.09)      (4.29)                      (3.27)

$$R^2 = 0.9988, DW = 1.68$$

여기서 인민경제비는 공업부문의 투자비에 대한 대리(proxy)라 할 수 있다. 인민경제비 중 기본건설비가 전체 공업투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 기본건설비 외에 포함되고 있는 유동자금, 경제사업비, 과학기술 관련비용 등이 정확히 공업투자 비용은 아니나 지방정부의 기본건설과 기업소의 내부 축적에 의한 투자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민경제비 전체를 공업생산을 결정하는 전체 공업투자의 대리변수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공업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스톡이나 투자 등 관련자료가 부족한 데에 따른 하나의 편법이기는 하나 가능한 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서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추정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5장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공업생산이 군사비와 정(+)<sup>의</sup> 관계에 있는 사실은 주목할 점인 바, 이는 군수공업이 공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비가 ‘비생산적 부문’이나 해외부문으로 누출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생산적 부문’인 국내의 군수산업으로 환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업생산의 군사비에 대한 탄성치는 인민경제비에 대한 탄성치 약 0.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나. 國民所得(NI) 決定式

국민소득 결정식은 공업과 농업생산(AG)의 자연대수 함수

로서 다음과 같이 일종의 정의식의 변형으로 추정되었다.

$$\ln(\text{NI}) = -3.84328 + 0.719820 \ln(\text{IN}) + 0.18416 \ln(\text{AG})$$

(98.1)      (193.2)      (20.65)

$$R^2 = 0.9999, \text{DW} = 2.42$$

이는 국민소득의 성장이 ‘생산적 부문’의 핵심을 이루는 (그 비중은 약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공업성장과 농업 생산의 성장에 의해 80% 이상 설명되어짐을 의미하는 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의 탄성치는 그 구성비율을 반영하여 공업에 대한 탄성치는 0.72로, 농업의 경우는 0.18로 나타났다.

이 식은 일종의 정의식의 변형이므로 그 설명력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각 추정계수(탄성치)의 t 값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豫算收入(BU) 決定式

한 해 동안 생산 배분된 국민소득은 ‘거래수입금’(일종의 간접세)이나 ‘국가기업이익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되어 국가차원의 각종 지출에 충당되는 예산수입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예산수입은 궁극적으로 생산 및 거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는 국민소득(NI)이라 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의 국민소득 추계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

의 경우 예산수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30% 수준인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약 60%수준에 이르고 그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본 모형에서 예산수입은 국민소득과 자연대수형의 함수관계에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ln(\text{BU}) = -0.72843 + 1.02579 \ln(\text{NI})$$

(-3.09)            (42.6)

$$R^2 = 0.9985, \text{DW} = 2.44$$

제시된 바와같이 예산수입의 국민소득에 대한 탄성치는 1보다 큰 1.026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예산수입의 국민소득 대비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軍事費(DE) 決定式

한편 위 식에 의해 국가의 예산수입이 결정되면 국가는 일정한 자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군사비와 경제성장을 위한 인민경제비 그리고 인민의 공적 소비생활을 위한 사회문화 시책비 등이 포함된다.

군사비는 위협인식이나 군사전략의 목표에 따른 안보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국 군사비는 주로 위에서 언급한 경제성장 및

인민소비생활과 관련한 자원배분상의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추구해 온 그들의 경제발전 전략과 인민소비에 대한 억제정책을 고려할 때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성을 띤 것은 인민소비보다는 군사비와 경제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비증감은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비보다 인민소비자원으로부터 충당되어 왔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군사비결정은 총 예산수입의 규모(BU)와 사회문화비 규모(SC)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 예의 다음과 같이 대수함수 형태로 추정되었다.

$$\ln(\text{DE}) = -1.58700 + 1.3188 \ln(\text{BU}) - 0.340939 \ln(\text{SC})$$

(-3.56)
(9.73)
(-2.35)

$$R^2 = 0.9924, \text{DW} = 0.87$$

추정 결과 군사비의 총예산수입에 대한 탄성치는 1.3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군사비가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상당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사회문화비에 대한 탄성치가 -0.34로 나타남으로써 군사비는 사회문화비와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크기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서 사회문화비의 증가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군사비로부터 충당되지 않는 있음을 의미한다.

마. 人民經濟費(EC) 決定式

한편, 총예산수입 중 경제비도 역시 예산수입과 군사비의 자연대수 함수로 추정되었으며, 추정 결과 인민경제비의 예산수입에 대한 탄성치는 1.43 정도로 나타났고 군사비에 대한 탄성치는 -0.40으로 나타났다.

$$\ln(EC) = -1.42809 + 1.42790 \ln(BU) - 0.402293 \ln(DE)$$

(-7.14)      (16.7)                      (-5.30)

$$R^2 = 0.9979, DW = 0.76$$

인민경제비의 예산수입 대비 탄성치가 1.43으로 군사비의 예산수입 대비 탄성치 1.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인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의미한다.

군사비에 대한 탄성치가 부(-)로 나타난 것은 경제비가 군사비와는 대체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은 바, 이는 경제비나 군사비 투입이 대외경제 군사원조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4.3. 北韓經濟에 대한 展望

##### 1) 시나리오의 설정

위의 5개의 방정식 체계로써 사전 시뮬레이션의 방법으로 군사비, 국민소득 등 5개 내생변수와 1990~2000년 기간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 포함된 2개의 정책 및 외생변수 및 각 방정식들의 추정된 파라미터 즉 탄성치나 절편 등을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관련시켜 그 크기를 변화시키는 시나리오를 설계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제시된 바와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비 부담능력의 결정요인은 경제성장의 가능성, 소비억제의 지속여부, 소련 등의 우방국으로부터의 경제·군사원조의 가능성, 개혁 개방의 가능성과 그 성공여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성공여부 등이라 할 수 있다.

본 모형은 그 규모나 구조상의 제한된 성격으로 이러한 제반 결정요인들의 변화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한 이들 요인들의 변화를 단순화시키고 본 모형의 파라메타들을 다소 확대해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보아 <표-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의미있는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즉, 최근의 추세가 대체로 지속된다고 본 ‘중간’시나리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반정책이 성공하고 경제 및 인민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본 ‘최선’시나리오, 그리고 이들이 실패하고 경제 및 인민생활이 침체된다고 본 ‘최악’의 시나리오 등 세 가지로 설계되었다.

### 가. 中間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경제 및 인민 소비생활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선 인민 소비수준에 대해서는 첫째, 인민 소비수준과 관련되는 정책변수 및 기타 파라메타들 가운데 주택, 교육, 보건 등 공공소비목적의 지출인 사회문화 시책비 증가율은 5년 동안의 추세인 4.7%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둘째, 또 국민소득 중 예산수입으로의 배분비율 즉 국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강제징수(일종의 조세징수)율을 최근 추세대로 고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산식의 예산수입의 국민/소득 대비 탄성치나 절편을 최근 추세를 반영하도록 추정된대로 유지한다.

다음 경제성장의 일부를 이루는 농업성장도 최근 5년간의 추세인 연 2%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이것은 농산물이 주요 소비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비수준이 최근 추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과도 관련됨).

또 군사비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의지도 추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의지를 반영하는 예산에 대한 군사비와 경제비의 탄성치를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회귀방정식의 계수대로 유지시킨다.

북한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과학기술 진보의 최근 추세가 유지되는 것 이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공업생

산의 인민경제비에 대한 탄성치를 그대로 고정시킴으로써 예측 시뮬레이션에 반영한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도입을 목표의 하나로 하여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이 이들의 최근 추세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성공적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된다.

한편 우방국으로부터의 경제·군사원조도 최근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자본 및 기업유치 전망 등 대외관계에 있어서 총가용자원의 외생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최근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예산수입의 절편을 추정된 수치 그대로 유지시킨다.

#### 나. 最善 시나리오

이것은 군사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에 있어서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경제성장 및 인민 소비수준을 중간시나리오 경우보다 훨씬 강조하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1989년을 '인민소비 향상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특히 최근의 동구사태가 기본적으로 인민의 생활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도 그들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해 적어도 최근 추세보다는 훨씬 정책적 배려를 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기본가정을 본 모형에서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문화 시책비의 증가율을 최근 추세보다 2배이상으로 증가시키고, 필수 소비재인 농업생산 역시 최근 추세의 1.5배 이상인 연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사비 배분율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민경제비 투입증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위해 군사비의 예산수입 대비 탄성치는 줄이는 대신 경제비 탄성치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최근의 과학기술 개발정책과 기술도입을 위한 개방정책이 성공하여 생산성이 최근 추세를 벗어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위하여 공업생산의 인민경제에 대한 탄성치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대외관계를 통한 가용재원의 증가도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할 때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개혁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소련과 중국 등으로부터 상당한 경제 군사원조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나, 제한적이지만 합작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나 관광사업의 경우 어느정도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본 예측 시뮬레이션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가용재원의 외생적 증가로 보고 예산식의 절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다.

#### 다. 最惡 시나리오

이것은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부분적인 개방정책이나 기술개발 노력이 실패하며 경제성장의 의지는 추세대로 유지되나 인민소비생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사회문화비 증가율은 3%로 줄어 들고 반대로 군사비 투입의지를 반영하는 군사비의 예산탄성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기술도입 및 개발정책의 실패로 공업생산의 경제비에 대한 탄성치는 줄어들고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나 관광사업, 수출 등이 성공적이지 못한 반면, 오히려 외채상환으로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식의 절편이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 2) 軍事費 및 經濟成長 豫測

위와같은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사전 시뮬레이션(ex-ante simulation)의 방법으로 군사비, 국민소득 등 5개의 내생변수에 대해 예측치를 구한다.

#### 가. 中間 시나리오 境遇의 豫測值

최근의 추세가 대체로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중간 시나리오의 경우 주요 변수의 2000년까지의 예측치는 <표-10>과 같다.

<표-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 2000년까지의 모든 예측치는 최근 4년 동안(1984-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다소 하회하는 성장율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주요 정책 및 외생변수가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여년간 북한의 경상 국민소득은 연평균 약 4.18%씩 증가하고 군사비는 연평균 약 4%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중 공업총생산의 성장이 다소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인민경제비의 성장율은 4.5%로서 최근 추세인 6.02% 비하여 그 성장템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 나. 最善 시나리오 境遇의 豫測值

한편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성장 가속 시나리오인 최선의 경우는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약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국민소득은 연평균 4.78%로부터 8.79%로, 군사비는 7.4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인민생활 및 경제성장에 대한 자원투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기술개발이나 외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이 크게 늘어 70년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템포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투입이 연평균 9.11%로 증가하고 군사비투입 의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시나리오임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군사비 절대규모의 증가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다. 最惡의 시나리오 境遇의 豫測值

한편 인민생활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감소하는 대신 군사비 투입 의지는 증대되고 기술개발, 외자유치 등에 실패할 경우인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에는 <표-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성장템포는 최근 추세의 50~60%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군사비는 연평균 3.75%로 그 성장템포가 가장 빨라 최근 추세에 비하여 그 성장속도의 감소추세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인민경제비의 성장율은 연평균 2.3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최근 추세에 비하여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민소득은 연평균 2.7%의 낮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는 바, 이는 최근 추세의 60% 수준이며 이렇게 되면 최근의 소련이나 동구국가들의 성장추이와 유사하게 되어 체제개혁으로 연결될 조건이 한층 성숙하게 될 것이다.

## 5. 結論

북한의 경제는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산정권수립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는 놀

달만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1960년 후반 이래 성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북한경제가 침체된 원인으로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노후, 낙후된 시설과 기술 및 자원과 외화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군사우선의 자원배분정책은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사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북한의 군사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이전에 비해 갑절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쉽게 확인되어질 수 있다.

또한 군사비의 지출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외에 단기적으로는 일반주민에 대한 지출(북한의 경우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비가 이에 속한다)을 억제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취재했던 한 북한기자가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저해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한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도한 군사비의 폐해는 북한의 정책당국에 의해서도 인식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실제로 70년대 중반 이후에는(생활수준의 향상을 추진하여) 비록 소폭이기는 하나 군사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군사비와 경제성장 또는 군사비와 소비수준간의 상

충관계(trade-off)는 체계적인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 중반까지의 북한의 예산과 공업 및 농업생산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군사비에 대한 인민경제비의 탄성치는  $-0.4$ 로 나타났다. 한편, 인민경제비는 공업생산을, 그리고 공업생산은 국민소득을 각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군사비의 감소가 직접적으로는 인민경제비의 증가를,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곤궁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군사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일책이 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군사비의 감소와 병행하여,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교역을 늘려가는 개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채택해 나간다면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주요 巨視指標의 期間別 公式發表 成長率

(單位: 期間別 年平均 增加率 %)

期 間	國民所得a	豫算收入	工業總生産	農業生産b
'54-'56:3YP	27.8	30.5	41.6	7.28
'57-'60:5YP	21.8	23.9	36.6[22]	7.26
'61-'65	9.86	12.5	14.3	3.54
'66-'67	7.00	7.26	7.20	6.26
'61-'67:1-7YP	9.03	11.0	12.2[18]	4.31
'68-'70	5.91	14.9	14.1	-6.51c
'61-'70:1-7YP+3	8.09[10.4]	12.2	12.8	2.77c
'71-'74	14.2	12.6	17.0	8.78c
'71-'76:6YP	[10.3]	12.5	16.3[14]	8.15c
'75-'77	12.0	11.3	14.4	6.69
'71-'77:6YP+1	13.3	12.0	15.9	6.25
'78-'84:2-7YP	8.76[9.6]	9.67	12.2[11.9]	2.35
'85-'88	5.66	4.99	4.09d	?
'87-'93:3-7YP	[7.88]	?	[9.60]	[4.61]e

參考): - "n-mYP"은 "제 n차 m개년 經濟發展計劃期"를 의미하며 그 뒤의 숫자는 該當 計劃期 後의 緩衝, 調整 또는 延長期間을 의미.

- [ ]친 것은 計劃值를 의미

-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3·4·5> 참조.

주) a: 國民所得成長率은 <표-3·4> 의 公表國民所得 成長倍數와 公表資料로부터 再構成한 公表國民所得데이터로부터 推計한 것임. 따라서 부분적으로 實際發表 數值와는 正確히 一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을 認을 고려하여 比較해야함.

b: 벼, 옥수수 등의 알곡 生産量 增加率

c: '69, '70 및 '71년은 곡물 生産量 및 그 增加率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자료 발표상의 慣例나, 당시의 工業 및 豫算收入增加率, 그리고 氣候 조건을 고려하여 '70년의 穀物生産量을 500만톤으로 假定하여 계산한 數值임.

北韓當局은 통상 減少했거나 前年度 수준밖에 되지않을 때 흔히 관련 수치를 公開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70, '71년의 南韓의 食糧작물도 감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氣候條件은 극히 不利한 狀況이었음. 또 '70년도에 경우 "...豐作을 이루었다" 고만 언급하고 있고 511만톤을 기록한 '67년도 실적을 "奇蹟"이라고 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70년의 穀物生産量은 500만톤 가량 될 것으로 판단됨.

d: '86년도의 工業生産指數가 불명이므로 '85-'87 기간의 平均成長率임.

e: '86년 곡물생산량 不明이므로 '85-'93년 9년간 年平均임.

〈표-2〉 北韓과 社會主義國家들의 國民所得 成長率 推移 比較  
(生産國民所得의 年平均 成長率 %)

區 分	'50-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3	'81-85	'86-87
불가리아	15.6	11.7	7.7	10.4	9.1	6.9	4.3	-	-
체코	9.6	7.9	1.6	7.9	6.1	3.9	0.8	-	-
헝가리	6.4	6.8	4.4	7.8	7.1	3.0	1.8	-	-
東 獨	17.0	8.2	3.8	5.7	6.0	4.5	4.1	-	-
폴란드	10.2	7.5	6.9	6.7	11.9	1.3	-4.0	-	-
루마니아	18.8	7.5	10.9	9.0	14.4	8.1	2.9	-	-
蘇 聯	14.2	10.9	7.5	8.9	6.3	4.7	4.0	4.6*	1.1*
算術平均	13.1	8.6	6.1	8.1	7.7	4.6	1.9	-	-
社會主義全體a	-	-	-	-	6.3	4.9	-	4.7	4.6
北 韓	成長率	27.8	21.8	9.86	6.35b	13.3	8.76		5.66
	期 間	'54-56	'57-60	'61-65	'66-70b	'71-77	'78-84		'85-88

註) a: 東歐 CNEA國들을 외에 다른 社會主義國家 일부 포함.

b: 北韓의 '66-70 기간의 平均成長率은 〈표-1〉로부터 推計.

資料) 東歐 各國 및 算術平均은 Statisticheskii ezhegodnik stran-chlenov SEV 1971 및 1984(Moscow, 1971, 1984)로부터 계산한 것을 World Politics 1986 (호수 불명), "Economic Performance and Legitimacy"에서 再引用.

"社會主義全體" 및 "蘇聯"의 '81-85, '86-87의 成長率은 The State Committee of the USSR on the Statistics(1987), p. 278 參考.

<표-3> 北韓의 國民所得成長에 관한 公式發表 및 言及資料

年度 및 期間	發 表 內 容	資料出處, 發表者 및 機關
'49 '53	'46년의 2.09배 '49년비 30%감소	YB* 「北韓의 政治經濟」, 蘇聯科學아카데미, p.41
'55 '56 '53-56 3年計劃期	'49년비 11%증가, '53년의 160% '54년비 30%증가 '53년의 2.1배, '49년의 146% 3년간 2.1배(=연 28%)	WP 3, 金日成 SPA 1-11 財政部長 SPA 2-2 財政部長 리주연
'57 '58 '59 '60 '57-60 1-5計劃期	전년비 137% 전년비 1.3배 대비가격으로 약 1.3배로 장성 '58년의 1.2배 '56년의 2.2배 '57의 약 1.1배 4년간 2.1배(=연22.1%), [2.2배]	SPA 2-2 財政部長, SPA 2-5 송봉옥 SPA 2-7 송봉옥 NPC-CSO '58중화보고(복자3, p.79) NPC-CSO 1차5개년계획 중화보고 WP 4, 金日成 SPA 2-9 WP 4, 金日成, SPA 2-9
'61 '62 '63 '64 '65 '61-67 1-7計劃期 '69 '61-70 延長計劃期	'57년의 1.8배 '61의 약 1.1배 '62의 약 1.1배 '62의 6.8% 전년비 1.1배 전년비 7% 증가 '60의 1.6배 [7년간 연평균15.2% 증가, '60의 2.7배→'67은 전쟁전수준의 9배] [ '68의 116%] [10년간 2.7배]	SPA 3-1, 최용건 閉會辭 NPC-CSO '62중화보고 및 SPA 3-2 NPC-CSO '63중화보고 YB* NPC-CSO '64중화보고 YB* WPR-66 金一 제1부수장 WP 4, 金日成
'74 '71-76 6計劃期	'70의 1.7배 ( '75.8 조가완수발표시 '71-74기간 실적만 발표), [6년간 1.8배]	NPC-CSO 6년계획조기완수보고, YB'76 · , YB'71 p.101-116
'84 '78-84 2-7計劃期	'77년의 1.8배, '46의 65배 7년간 1.8배, [1.9배]	SPA 8-2 리근모 SPA 8-2 리근모
'87 '87-93 3-7計劃期	'47-87의 40년간 국민총수입 108배 [7년간1.7배=연7.9%]	金日成大 經濟學專 教授 김원석(經濟 計劃擔當)記者會見, 中央日報'89.7.20 SPA 8-2 리근모

- 參考: · [ ]는 計劃 또는 豫想을 의미  
· YB: 「朝鮮中央年鑑」  
· WP: 勞動黨 大會 (뒤의 숫자는 大會 次數)  
· SPA: 最高人民會議(뒤의 숫자는 會議 期 및 次數)  
· WPR: 勞動黨 代表者會議(숫자는 開催年度)

註) 1: " '57년의 1.1배"는 '59년도와 비교하고 있는 전후문맥상 "59년의 1.1배"의 잘못으로 판단됨  
\*: 發表資料 中 \* 표는 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46-'85) 등에서 間接引用資料인.

<표-4> 北韓의 1인당 國民所得(純物의生産) 發表 및 言及資料

該當 年度	發 表 內 容	資料出處, 發表者 및 機關
'66	. 500원으로서 '62비 1.2배 . 510원	SPA 4-1 金日成 YB'66-67 p.227
'67	. [580원으로 늘어남] . '46의 9배, '49의 4.4배 . '67년의 580원은 '46의 9배, '49의 4.4배	SPA 4-1 金日成 北韓創建 20돌기념演說, 金日成 YB'70 p.276
'70	. '46의 9.4배	YB'74 p.242
'74	. 1000\$가 넘음 → 國民所得에서 발전된 나라들 대열에 들어섬	工業熱誠者大會演說('75.3.4) 金日成 및 SPA 5-5 財政部長 金경련
'79a	. 1920\$ . 1인당國民所得 ...1200\$에 a	新年辭('80.1.1), 金日成 의 다수의 자료 SPA6-4, 최재우 보른
'82	. 2200\$	對外文化連絡協會副會長 김우중 記者會見, 日本 마이니찌新聞 '83.9.13
'86	. 2400\$	「朝鮮概觀」 방예주, 平壤外國文出版社
'88	. 2530\$	金日成大 經濟學課 教授 김원석(經濟計劃擔當) 記者會見, 中央日報 '89.7.20

주) a) '79년의 1200\$ 언급은 1920\$의 인채상의 잘못된지 일종의 '이중장부' 중의 다른 '내부자료'로부터의 '잘못된' 인용인지 또는 환율적용상의 '실수'인지 불분명함. '79년의 긍정환율은 0.84(EIU) 또는 0.879(Europa)로 알려지고 있고 상업환율은 1.79(통일원)로 알려져 있는데 1920\$ 계산은 긍정환율을 적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볼 때 동일액(北韓 원 단위)을 1200\$로 계산했다면 '내부적용' 환율은 긍정 환율과 상업환율의 대략 중간정도가 됨. 1200\$을 언급한 사람이 관련부서의 책임자나 담당자가 아닌 최고인민회의의 일반 대의원이므로 이와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김일성의외에 다수의 자료에서 공식언급되고 있는 1920\$를 일단 공식발표자료로 간주함.

<표-5> 소득관계자료만에 의한 공표國民所得(NMP)의 추계  
 (단위:1인당 NMP는 北韓원, 총 NMP는 北韓 백만원)

구 분	A. 인구a (천 명)	B. 공 표 國民所得			C. 공 표 자 료 에 의 한 구 간			D. '49 기준 공표國民所得	
		PNMP b	NMPP c	NMPG d	PNMP e	NMPP f	NMPG g	총 합 h	계산근거 i
'46	9257*	64.44	596.5	606.9	63.6-65.4	588.7~605.4	596.2~619.2	606.9	'49-'46의 12.09배
'49	9622*	131.82	1268.4	1268.4*	129.5-134.5	1246.0-1294.2	1246.0-1294.2*	1268.4*	B의 NMPP(=기준)
'53	8491*	-	-	887.9	-	-	872.2~905.9	887.9	'49비 30.0% ↓
'54	8771	-	-	1189.5	-	-	1168.6-1186.6	1189.5	'46의 196%
'55	9060	-	-	1407.9	-	-	1383.1-1436.6	1407.9	'49의 111%
'56	9359*	-	-	1851.9	-	-	1819.2-1889.5	1851.9	'49의 146%
'57	9691	-	-	2537.1	-	-	2492.3-2588.6	2537.1	전년비 137%
'58	10036	-	-	3298.2	-	-	3115.4-3468.7	3298.2	전년비 1.3배
'59	10392*	-	-	3957.8	-	-	3582.7-4301.2	3957.8	전년비 1.2배
'60	10789*	-	-	4074.2	-	-	3911.3-4232.5	4074.2	'56의 2.2배
'61	10928	-	-	4566.8	-	-	4361.5-4763.0	4566.8	'57의 1.8배
'62	11246	416.67	4685.9	5023.5*	399.2-443.5	4489.3-4987.4	4579.6-5429.8	4987.4*	NMPP 최대치
'63	11568	-	-	5525.8	-	-	4808.6-6190.0	5486.1*	전년비 1.1배
'64	11880	-	-	6078.4	-	-	5049.0-7056.6	6034.8*	전년비 1.1배
'65	12200	-	-	6518.7	-	-	6062.5-6941.3	6518.7	'60비 1.6배
'66	12529	500	6264.5	-	495~510*	6201.9-6389.8	-	6264.5	← 1인당 NMP
'67	12868	580	7463.4	-	575~585	7399.1-7527.8	-	7463.4	← 1인당 NMP
'70	13924*	605.74	8434.3	'74÷1.7	594.7-617.4	8280.6-8596.3	'74년×1.7 *	8596.3*	NMPP 최대치
'74	15317	996.2*	15258.8	'70×1.7	960*-1045.2*	14704.3-16009.3	'70년×1.7 *	14957.6*	'74-'70의 1.7배
'77	16323	-	-	21915.8	-	-	20899.4-23140.4	21915.8	'84-'77의 1.8배

'79	16959	1670.4*	28328.3	-	1608.6~1691.2	27280.2~28681.0	-	28328.3	← 1인당 NNP
'82	17877	2123.0*	37952.9	-	2064.0~2172.8	36898.1~38843.2	-	37952.9	← 1인당 NNP
'84	18468	-	-	39448.5	-	-	39448.5	39448.5	'46의 65배
'86	19060*	2484.0*	47345.0	-	2397.0~2562.0	45686.8~48831.7	-	47345.0	← 1인당 NNP
'88	19672	2499.6*	49172.1	-	2373.5~2503.6	46691.4~49250.8	-	49172.1	← 1인당 NNP

참고) PNMP: 공표자료로 구한 1인당國民所得, NMPP: 1인당소득에 인구를 곱함으로써 구한 國民所得,

NPPI: '49년을 기준(base)로 國民所得성장율을 이용, 인장함으로써 구한 國民所得

주) a: 인구 데이터 중 \* 표시는 공식발표치이며 그외는 공식발표치를 이용하여 내삽하였. '70년수치는 제5차당대회 보고서 제시된 식량 및 강철의 총생산량과 1인당 생산량으로부터 역산하였음.

b: 1인당 NNP에 대한 발표자료는 앞의 <표>참고. 자료 중 '74~'88년의 기간은 달러로 발표되었는바 이들은 공식발표 성장률을 추정치(4장 참고)를 적용하였음. '74년의 경우 추정환율은 0.9622(北韓 원/\$이나 이것이 불확실하여 구간의 최소치 0.96원/\$을, 최대치는 1.005(Europa)를 이용. '79년은 추정치 0.87원(최소0.84, 최고0.879)을, '82년은 0.965(최소0.96 최대0.97), '85년은 1.035(최소1.02, 최대1.05), '88년은 0.988(최소 0.94 최대 0.94)를 이용. 구간설정 시 '74년의 경우는 1000달러 이상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1000~1040\$로 설정.

d: NMPI는 앞의 <표III-2-4>에 나타난 NNP성장율 발표자료를 기초로 인구, 1인당 NNP, NNP성장율 모두가 발표되어 있는 '49년 공표 1인당 NNP를 기준으로 인장추계한 것임. '62년의 경우 NMPI와 상응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의. '70 및 '74년의 경우는 모두 1인당 NNP가 공개되어 있고 國民所得 성장율도 '74년이 '70년의 1.7배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연도와 다른 연도와 國民所得 성장관계에 대한 자료불명이므로 연결 불가.

e, f, g: 구간의 설정은 본문의 설명대로 반올림을 고려한 것임. 예를들면 성장율 1.1배는 1.05~1.14 배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구간의 최소, 최대치를 결정하였음.

e: '66년의 경우 1인당 소득이 앞의 표에서 보듯이 500원 및 510원 두가지 자료로 확인되었는바 여러 군데서 확인된 500원을 중심으로 하되 510원을 상한으로 간주하였음. '74년의 경우는 주 b) 참고.

g, h: '49년을 기준으로 성장율 적용하여 연장한 것. 특히 h의 "발표치" 경우 성장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1인당 NNP자료에 의한 NNP를 사용. ("개산근거")는 "발표치"의 개산근거임)

g: '70 및 '74년은 주 d) 참고.

<丑-6> 公表 國民所得, 工業 및 農業生産과 豫算收入의 總括比較

(단위: 증가율, 비율은 %)

年 度	殘表國民所得		工業總生産 指數a		알 곡 生産量		豫算 收入r		NNP對比
	百만원	增加率	'60=100	增加率	萬 噸	增加率	億 元	增加率	豫算比率
'46	606.9	-	4.66b	-	199.8	-	-	-	-
'49	1268.4	-	15.7b	-	265.7k	-5.38k	-	-	-
'53	887.9	-	10.1b	-	233.8	-12.0	378.1	-	42.6
'54	1189.5	34.0	-	?	224.2	-4.11	566.4	49.8	47.6
'55	1407.9	18.4	-	50.6c	234.0m	4.9	751.7	32.7	53.4
'56	1851.9	31.5	28.7	?	287.0	22.8	840.9	11.9	45.4
'54~56	-	27.8	-	41.6[33]	-	7.28	-	30.5	-
'57	2537.1	37.0	40.8	42.2c	320.0	11.4	1235.9	47.0	48.7
'58	3298.2	30.0	56.7c	39.0c	370.0	15.6	1522.7	23.2	46.2
'59	3957.8	20.0	86.8	53.0	340.0	-8.1	1631.6	7.15	41.2
'60	4074.2	2.94	100.0	14.8	380.3	11.9	1978.9	21.3	48.6
'57~60	-	21.8	-	36.6[22]	-	7.26	-	23.9	-
'61	4566.8	12.1	114.0	14.0	483.0	27.0	2400.0	21.3	52.6
'62	4987.4	9.21	136.8	20.0	500.0	3.5	2896.4	20.7	58.1
'63	5486.1	10.0	147.7	8.0	492.4n	-1.52	3144.8	8.6	57.3
'64	6034.8	10.0	172.8	17.0	484.8p	-1.54	3498.8	11.3	58.0
'65	6518.7	8.02	195.0	12.8	452.6	-6.64	3573.8	2.1	54.8
'61~65	-	9.86	-	14.3	-	3.54	-	12.5	-
'66	6264.5	-3.90	191.5	-2.8	440.5m	-2.67	3671.5	2.7	58.6
'67	7463.4	19.1	224.1	17.0	511.0	16.0	4106.6	11.9	55.0
'61~67	-	9.03	-	12.2[18]	-	4.31	-	11.0	-
'68	?	?	257.7	15.0	567.2	11.0	5023.7	22.3	-
'69	?	?	255.8d	-0.75d	?	?	5319.0	5.9	-
'70	8596.3	?	332.5e	30.0	500*	?	6232.2	17.2	72.5
'68~70	-	4.82	-	14.1	-	-0.73*	-	14.9	-
'71	?	?	379.2f	14.1f	?	?	6357.4	2.0	-
'72	?	?	447.5	18.0	392.9q	?	7430.3	16.9	-
'73	?	?	532.5	19.0	534.4q	36	8599.3	15.7	-
'74	14957.6	?	624.1	17.2	700+	31	10005.3	16.3	66.9
'71~74	-	14.9	-	17.0	-	8.77*	-	12.6	-
'75	?	?	748.9	20.0	770+	10	11586.3	15.8	-
'76	?	?	822.8	9.86	800+[700]	3.9	12625.8	9.0	-
'77	21915.8	?	932.5g	13.3g	850[850]	6.3	13787.0	9.2	62.9
'75~77	-	13.5	-	14.4	-	6.69	-	11.3	-
'78	?	?	1091.1	17.0	787[880]m	-7.41	15657.3	13.6	-
'79	28328.3	?	1254.7h	15.0h	900	14.4	17477.9	11.6	61.7
'78~79	-	13.7	-	16.0	-	2.90	-	12.6	-

年 度	發表國民所得		工業總生産 指數a		알 곡 生産 量		豫 算 收 入r		NMP對比 豫算比率
	百만원	增加率	'60=100	增加率	萬 畧	增加率	億 畧	增加率	
'80	?	?	1468.0	17.0	900	0.0	19139.2	9.5	-
'81	?	?	?	?	[950]	?	20684.0	8.1	-
'82	37952.9	?	?	16.8	950	?	22680.0	9.6	59.8
'80~82	-	10.4	-	?	-	1.82	-	9.07	-
'83	?	?	?	?	?	?	24383.6	7.5	-
'84	39448.5	?	2087.4i	?	1000	?	26305.1	7.9	66.7
'83~84	-	1.69	-	?	-	2.60	-	7.70	-
'78~84	-	8.76	-	12.2[12]	-	2.35	-	9.67	-
'85	?	?	?	?	?	?	27438.9	4.3	-
'86	47345.0	?	?	?	?	?	28538.5	4.0	60.3
'85~86	-	9.56	-	?	-	?	-	3.83	-
'87	?	?	2354.3	?	?	?	30337.2	6.3	-
'88	49172.1	?	?	?	?	?	31958.0	5.34	65.0
'87~88	-	1.91	-	?	-	?	-	5.82	-
'93	[80487]	?	[4081]j	?	[1500]	?	?	?	-
'87~93	-	[7.88]	-	[9.6]	-	4.61('85~)	-	?	-

- 註) a: '59년 이전은 그 후와는 달리 전체工業이 아니라 國營 및 協同團體(즉 社會主義 형태)부문의 生産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고 이들 기간에 전체 工業總生産에 대한 이 부문의 비율이 漸增해왔기 때문에 成長率이 誇大評價되어 있음. 따라서 工業 成長率 및 指數의 推計에 있어서는, 이전을 考慮하여 먼저 '60년을 100으로 하고 '59 이후의 指數부터 推計하고 그 이전의 指數는 가능한한 '60년 이후에 제시된 관련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것이 어의치 못할 경우('55, '57, '58)는 社會主義 형태부문만의 成長率을 그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할인하였음. '56년 指數는 "'57~60 기간 연평 36.6% 增加"에 의해 逆算.
- b: '46~'53의 指數는 '61~'64년 各년도 生産의 '49년 對比比率로부터 '49년 指數를 계산한 다음, "'49년은 '46년의 337%, '53년은 '49년의 216%" 로부터 '46년 및 '53년 指數를 계산하였다. 특히 '49년은 '46년의 377.1%라는 발표는 '77 및 '84년 指數의 '46對比 比率을 고려할 때 337%의 잘못으로 判斷됨.
- c: '58년의 指數는 "'63년='58년의 2.6배"로부터 逆算. '58 및 '57, '55년의 成長率은 各 연도의 '國營工業'成長率을 '國營'부문의 비중변화를 고려하여 할인하였고 各 연도의 指數는 割引成長率을 차례로 적용하여 역산.
- d: '69년은 未發表年度로서 "'70년은 '69년의 1.3배..."를 이용하여 역산.
- e: '70년 指數는 "'57~70 연평 9.1% 증가"와 "'61~70 연평 12.8% 증가"에 의한 指數 331.6 및 333.50의 中間值.
- f: '71년도 未發表年度이나 '72 및 '73년의 各 發表成長率과 "'73년은 '70년의 1.6배..."를 이용하여 역산.

- g: '77년은 未發表年度이나 '71~'79년 기간 연평균 15.9% 증가'와 '78, '79년도의 成長率을 이용, 역산하여 '77년 指數를 구하고 '76指數를 나눔으로써 成長率 계산.
- h: '79년은 " '71~79년 9년간 연평균 15.9%증가"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 '70~79년간 연평균 15.9%→3.8배"를 이용, '70년 指數로부터 延長 推計(10년간 이면 3.8배초과)
- i: '78~'8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12.2%로써 '77년으로부터 延長推計.
- j: " '93년은 '86년의 1.9배계획 (연 9.6%성장)"으로부터 '87이후도 연9.6%로 성장한다고 가정하여 推計.
- k: " '56 287만톤='49비 8%증가"로부터 역산.
- m: 1차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1차자료를 기초로 推計한 統一院의 「北韓 經濟統計集」에서 간접인용.
- n: '63년은 "500만톤 高地 더욱 鞏固化"로 발표되었는바 이는 "'44비 2배"로 발표된 '64년이 " '63년 수준을 見地"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484.8~500만톤 사이로 보고 그 중간치인 492.4만톤으로 해석하였음.
- p: " '64년은 '44년비 2배" 및 " '57년의 320만톤은 '44년의 132%"로부터 推計.
- \*: '70년 500만톤은 推定値이며 '68 및 '74년 사이의 成長率은 이를 기초로 推計한 推定値.(推定根據는 <표>의 註 c 참고)
- q: '73, '72년의 생산량은 '74년 생산량과 '74, '73년의 증가율을 이용, 역산.
- r: 豫算收入은 國民所得 및 그 增加率과의 相關關係를 분석하기 위해 그 중 援助 借款收入과 其他收入을 제외한 것임.(該當期間'53~'60)

<丑-7> 北韓 國民所得, 工業總生産, 農業生産의 最終確定 規模 및 成長率  
(단위:증가율, 비율은 %)

年 度	國民所得		工業總生産 指數		알 곡 生産 量		豫 算 收 入 r		NMP對比
	百萬元	增加率	'60=100	增加率	萬 噸	增加率	億 元	增加率	豫算比率
'46	606.9	-	4.66	-	199.8	-	-	-	-
'49	1268.4	-	15.7	-	265.7	-5.38	-	-	-
'53	887.9	-	10.1	-	233.8	-12.0	378.1	-	42.6
'54	1189.5	34.0	15.6e → 54.6e		224.2	-4.11	566.4	49.8	47.6
'55	1544.0	29.8	23.5e ↘ 50.6		234.0	4.9	751.7	32.7	48.7
'56	1851.9	19.7	28.7 ↘ 22.1e		287.0	22.8	840.9	11.9	45.4
'54~56	-	27.7	-	41.6[33]	-	7.28	-	30.5	-
'57	2527.8	36.5	40.8	42.2	320.0	11.4	1235.9	47.0	48.9
'58	3185.1	26.7	56.7	39.0	370.0	15.6	1522.7	23.2	47.8
'59	3822.1	20.0	86.8	53.0	340.0	-8.1	1631.6	7.15	42.7
'60	4148.3	7.94	100.0	14.8	380.3	11.9	1978.9	21.3	47.7
'57~60	-	22.3	-	36.6[22]	-	7.26	-	23.9	-
'61	4651.2	12.1	114.0	14.0	483.0	27.0	2400.0	21.3	51.6
'62	5134.9	10.4	136.8	20.0	500.0	3.5	2896.4	20.7	56.4
'63	5505.3	7.21	147.7	8.0	492.4	-1.52	3144.8	8.6	57.1
'64	6076.2	10.4	172.8	17.0	484.8	-1.54	3498.8	11.3	57.6
'65	6442.5	6.02	195.0	12.8	452.6	-6.64	3573.8	2.1	55.5
'61~65	-	9.20	-	14.3	-	3.54	-	12.5	-
'66	6276.2	-2.58	191.5	-2.8	440.5	-2.67	3671.5	2.7	58.5
'67	7227.0	15.2	224.1	17.0	511.0	16.0	4106.6	11.9	56.7
'61~67	-	8.25	-	12.2[18]	-	4.31	-	11.0	-
'68	8162.7	12.9	257.7	15.0	567.2	11.0	5023.7	22.3	61.5
'69	8406.9	2.99	263.9	2.40e	589.4s ←	3.920s	5319.0	5.9	63.3
'70	9697.5	15.4	332.5	26.0e	500* ↘	-15.17s	6232.2	17.2	64.3
'68~70	-	10.3	-	14.1	-	-0.73*	-	14.9	-
'71	10103.6	4.19	379.2f	14.1	402.0 ←	-19.6s	6357.4	2.0	62.9
'72	11317.0	12.0	447.5	18.0	392.9 ↘	-2.26s	7430.3	16.9	65.7
'73	13838.7	22.3	532.5	19.0	534.4	36	8599.3	15.7	62.1
'74	16000.9	15.6	624.1	17.2	700+	31	10005.3	16.3	62.5
'71~74	-	13.3	-	17.0	-	8.77*	-	12.6	-
'75	18564.2	16.0	748.9	20.0	770+	10	11586.3	15.8	62.3
'76	20106.0	8.56	822.8	9.86	800+[700]	3.9	12625.8	9.0	62.8
'77	22261.3	10.7	932.5	13.3	850[850]	6.3	13787.0	9.2	61.9
'75~77	-	11.6	-	14.4	-	6.69	-	11.3	-
'78	24651.5	10.7	1091.1	17.0	787[880]	-7.41	15657.3	13.6	63.5
'79	27995.7	13.6	1254.7	15.0	900	14.4	17477.9	11.6	62.4
'78~79	-	12.1	-	16.0	-	2.90	-	12.6	-
'80	31069.3	11.0	1468.0	17.0	900	0.0	19139.2	9.5	61.6

年 度	國民所得		工業總生産指數		알곡生産量		豫算收入r		NMP對比 豫算比率
	百萬원	增加率	'60=100	增加率	萬 噸	增加率	億 元	增加率	
'81	33220.3	6.92	1566.6s	←6.72s	965.4s	→ 7.27s	20684.0	8.1	62.3
'82	36898.1	11.1	1829.8s	↓ 16.8	950	↘ -1.598s	22680.0	9.6	61.6
'80~82	-	9.64	-	13.4	-	1.82	-	9.07	-
'83	38780.3	5.10	1949.0	→6.517s	976.8s	→ 2.818s	24383.6	7.5	62.9
'84	40863.9	5.37	2087.4	↘ 7.099s	1000	↘ 2.378s	26305.1	7.9	64.4
'83~84	-	5.24	-	6.807e	-	2.60	-	7.70	-
'78~84	-	9.06	-	12.2[12]	-	2.35	-	9.67	-
'85	43361.9	6.11	2433.1	16.56s	844.5	-15.55s	27438.9	4.31	63.3
'86	45686.8	5.36	2820.9	15.94s	710.8	-15.83s	28538.5	4.01	62.5
'85~86	-	5.74	-	16.25s	-	-15.69s	-	4.16	-
'87	47615.7	4.22	2320.7	-17.73	1072.7	50.92s	30337.2	6.3	63.7
'85~87	-	5.23	-	3.595*	-	7.274s	-	4.869	-
'88	49250.8	3.43	2616.1	12.73s	935.6e	-12.78s	31958.0	5.34	64.9
'87~88	-	3.83	-	6.860s	-	-2.988s	-	5.822	-
'93	[80487]	?	[4081]	?	[1500]	?	?	?	-
'87~93	-	[7.88]	-	[9.6]	-	4.61('85~)	-	?	-

註) e: '70년 工業成長指數는 "'57~70 연평 19.1% 증가"와 "'61~70 연평 12.8% 증가"에 의한 指數 331.6 및 333.50의 중간치. '70년 成長率은 "1.3배"라 하였으나 전후의 공·농·豫算 증가율을 고려하여 반올림을 고려한 구간내에서 재조정한 것. '69년 工業指數 및 成長率은 '70년으로부터 역산.

\*: '70년 500만톤은 推定値이며 '68 및 '74년 사이의 成長率은 이를 기초로 推計한 推定値.(推定根據는 <표>의 주 c 참고)

s: 이는 기본적으로 工業이나 農業成長率 또는 兩者 모두 資料不明일 때 위의 所得 및 豫算關係式으로 구성되는 聯立方程式에 의해 계산하여 推定한 것. 그러나 이들 중 특히 '85년 이후의 수치들은 전반적 趨勢로 볼 때 工業 및 農業成長率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됨.

<표-8> 북한의 예산지출

년 도	총지출 규모 (억원)	인 민 경 제 비		사 회 문 화 비		군 사 비	
		금액(억원)	%	금액(억원)	%	금액(억원)	%
1955	100.82	75.35	74.7	9.51	9.4	19.96	15.8
1956	95.60	71.05	74.3	11.14	12.7	12.41	13.0
1957	102.20	62.10	70.5	17.70	17.3	12.40	12.1
1958	132.21	93.73	70.9	25.56	19.3	12.92	9.8
1959	164.90	113.53	68.8	38.23	23.2	13.14	8.0
1960	196.79	136.16	69.2	47.38	24.1	13.25	1.7
1961	233.68	172.08	73.6	48.71	20.8	12.89	5.5
1962	281.10	197.96	70.3	61.67	21.9	21.47	7.6
1963	302.82	224.09	74.0	65.37	21.6	13.36	4.4
1964	341.82	237.72	69.5	75.63	22.1	28.47	8.3
1965	347.61	240.02	69.0	64.78	18.6	42.81	12.3
1966	357.14	243.21	68.1	61.69	17.3	52.24	14.6
1967	394.82	205.70	52.1	69.09	17.5	120.03	30.4
1968	481.29	235.35	48.9	82.91	17.2	163.03	33.9
1969	504.46	248.58	49.3	99.50	19.7	156.38	41.0
1970	600.27	305.75	50.9	119.39	19.9	175.13	29.2
1971	630.16	311.65	49.5	122.53	19.4	195.98	41.2
1972	738.66	355.59	48.1	142.53	19.3	240.43	32.5
1973	831.39	411.20	49.5	159.63	19.2	260.56	31.3
1974	967.2	476.34	49.2	181.98	18.8	308.90	31.9
1975	1136.75	562.08	49.4	209.28	18.4	365.39	32.1
1976	1232.55	599.81	48.7	233.98	19.0	398.76	32.4
1977	1334.92	64.79	48.5	257.38	19.3	419.75	32.2
1978	1474.36	716.46	48.6	276.17	18.7	481.73	32.7
1979	1697.26	853.20	50.3	304.06	17.9	540.0	31.8
1980	1883.69	948.02	50.3	344.47	17.8	601.2	31.9
1981	2033.30	1036.19	51.0	357.88	17.6	639.23	31.4
1982	2223.60	1155.35	52.0	371.12	16.7	696.53	31.3
1983	2401.86	1260.48	52.5	388.84	16.2	752.44	31.3
1984	2615.80	1400.40	53.5	418.11	16.0	797.29	30.5
1985	2732.88	1466.21	53.7	418.98	15.7	837.69	30.7
1986	2839.61	1548.33	54.5	437.59	15.4	853.72	30.1
1987	3008.51	1661.35	55.2	463.59	15.4	883.57	29.4
1988	3166.09	1769.34	55.9	489.09	15.4	907.66	28.7
1989	3355.07	1877.26	56.0	516.48	15.4	961.33	18.7

〈표-9〉 시나리오 설계

정책·외생변수	의미	중간시나리오	최악시나리오	최선시나리오
사회문화시책비 연평균 증가율	인민생활 향상 의 정책의지	최근추세 4.7%	↓ 3%	↑ 10%
농업평균 증가율	소비 및 경제성장	최근추세 2%	최근추세 2%	↑ 3%
군사비의 예산 탄성치	군사비 투입의 지	최근추세 1.3188	↑ 1.3276	↓ 1.3100
인민경제비의 예산탄성치	경제성장 의지	최근추세 1.4279	최근추세 1.4279	↑ 1.4289
공업생산의 경 제비탄성치	생산성변화: 개방, 기술도입	최근추세 0.8522	↑ 0.8512	↑ 0.8532
예산식의 절편	가용재원 증감: 원조·개방·외 자유치	최근추세 -0.72843	↑ -0.73643	↑ -0.72043

〈표-10〉 中間 시나리오 경우의 主要 變數 豫測值

(단위:백만 북한원)

년 도	문화비	농업생산	예산수입	군사비	경제비	공업생산	국민소득
1988	4890.9	1082.4	31508	9084	16325	2653	49399
1990	5360.3	1126.1	34723	9833	17831	2943	53621
1993	6150.2	1195.0	38882	11075	20355	3439	60640
1995	6740.5	1243.3	42299	11989	22235	3815	65828
1997	7378.4	1293.5	46013	12984	24283	4233	71458
2000	8465.7	1372.7	52207	14625	27722	4946	80820
1990~2천 증가율	4.7%	2%	4.3%	4.0%	4.5%	5.3%	4.18%
최 근 추 세*	4.7%	2%	4.99%	4.29%	6.02%	5.81%	4.78%

\* 최근추세는 1984~88기간의 4년 년평균 증가율임.

〈표-11〉 最善 시나리오 경우의 主要 變數 豫測值

(단위:백만 북한원)

년 도	문화비	농업생산	예산수입	군사비	경제비	공업생산	국민소득
1990	5360.3	1126.1	34273	9833	17831	2943	53621
1993							
1995	8632.8	1305.5	60022	15849	33118	5987	91873
1997							
2000	13903.2	1513.4	81975	20218	46877	8791	124496
1990~2천 증가율	10%	3%	9.11%	7.47%	10.1%	11.6%	8.79%
최 근 추 세*	4.7%	2%	4.99%	4.29%	6.02%	5.81%	4.78%

〈표-12〉 最惡 시나리오 경우의 主要 變數 豫測值

(단위:백만 북한원)

년 도	문화비	농업생산	예산수입	군사비	경제비	공업생산	국민소득
1990	5360.3	1126.1	34273	9833	17831	2943	53621
1993							
1995	6241.8	1243.3	36105	11256	18192	3112	56854
1997							
2000	7203.8	1377.7	44690	14203	22466	4051	69976
1990~2천 증가율	3%	2%	2.69%	3.75%	2.34%	3.25%	2.70%
최 근 추 세*	4.7%	2%	4.99%	4.29%	6.02%	5.81%	4.78%

\* 최근추세는 1984~88기간의 4년 년평균 증가율임.

## 참 고 문 헌

### 1.北韓關聯 1次 資料

#### <北韓 發刊資料>

사회과학원,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경제사전』 1985년판 1권 및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970년판 1권 및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경제연구』, 1988-89년도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근로자』 주요 연도별 (평양: 근로자사)

———, 『김일성 저작선집』 1권-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7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주요 연도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The Party History Institute of the C.C.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ed., *KIM IL Sung: Selected Works III-V*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 <國內 發刊 1次 資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편, 『김일성 선집 I』 (평양, 1979), (서울: 도서출판 대동, 1988)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도서출판 태백, 1989)

—————,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7권(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5), (서울: 도서출판 태백, 1989)

國土統一院 편,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I—IV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 『最高人民會議 資料集』 I—IV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돌베개 편집부 편,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1988)

백두연구소 편,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서울: 도서출판 백두, 1989)

亞細亞問題研究所 편, 『北韓研究資料集』 第1輯—9輯 (高麗大 出版部)

통일문제연구소 편, 『북한경제자료집』 (서울: 도서출판 민족통일, 1989)

## 2. 國文

고승효,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그 이론과 실제』 (일어판: 김한민 한글 번역), (서울: 청사, 1988)

國土統一院, 『북한개요』, 1983

- , 『北韓經濟統計集 1946—1985』
- , 『北韓 GNP 推計方法 解說』, 1988
- ,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5—1988년 각 연도
- , 『북한경제개관』, 1988
- ,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9
- 國防部, 『國防白書』, 1988, 1989년 판
- 권태영 외, 『北傀軍事費 및 投資費規模 分析』, 國防管理研究所, 1985
- 극동문제연구소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경남대출판국, 1979)
- 김영규, “북한의 GNP산출방법” 『통일정책』 제6권, 3.4호, 국토통일원, 1980.
- , “북한의 군사비실상과 그 영향 — 북한측의 개념과 발표를 중심으로”, 『북한』 1980. 9월호.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 입문』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87)
- 맥코맥과 셀던, 『남북한 비교연구』 (영어판, 1978 : 장을병 등 한글 번역), (서울: 일월서각, 1988)
- 박영희, “북한의 군사비,” (제5회 한국정치학회 및 재북미 한국인 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 발표논문, 1983.8)
- 백원기, “(북한)군사비의 특성과 군수산업,” 『북한』 1982.4월호
- 민병천, “북한의 소련 및 동구외교,” 『미소연구』 제2집, 1988, 단국대 미소연구소
- 사토 다치야, 『한반도의 군사지도』 (일어판: 이재선 한글번

- 역), (서울: 과학과 사상, 1989)
- 소련과학 아카데미 세계사회주의경제연구소, 『북한의 정치 경제』 (러시아어판: 국토통일원 한글번역), (국토통일원, 1988)
-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 , 김병원, 『남북한 경제비교』,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연구자료 88-05, 1988.
- 육성태, “북한경제계획의 실속과 문제점,”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발표논문, 1989.8.
- 이달희 외, 『세계의 군사비와 한국안보』 한국국방연구원, 1987
- 이 풍, “북한의 GNP추계방법,” 『북한』 1981.12월호
- 포스터-카터, A., “북한의 발전과 자력갱생: 비판적 평가,” 맥코맥과 셸던(1978) 한글번역판 (1988)
- 하영선 편, 『한반도 군비경쟁의 재인식』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1988)
- 한국은행, 『공산권의 국민경제체계 해설』 조사연구자료 88-2, 1988
- 황동준 외, 『북한의 경제성장 전망 및 군사비 추정』 국방관리연구소, 1984

### 3. 外國文

Becker, A.S., *Sitting on Bayonets: The Soviet Defense Burden and the Slowdown of Soviet Defense Spending,*

- RAND/UCLA CSSB, JRS-01, 1985
- Bergson, A., *Productivity and the Social System - The USSR and the We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8)
- Brun, E. and Hersh, J., *Socialist Korea: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 Cassidy, R., *Arms Transfer and Security Assistance to the Korean Peninsula, 1945-1980* (M.A. Thesis to Naval Postgraduate School, June 1980).
- Chung, J.S.,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74)
- Clark, R.A. and Matko, D.J.I., *Soviet Economic Fact, 1917-81* (London: Macmillan Press, 1983)
- Crane, K., *Military Spending in Eastern Europe* (RAND, R-3444-USDP, 1987)
-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사회주의 각국별 Country Profile 1988-1989*,
- EUROPA,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1988* (Europa Publications Limited)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 Yearbook 1982-1988*.
- Goose, S.,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Sullivan and Foss (1986)

- Halliday, J., "The Economies of North and South Korea,"  
in Sullivan and Foss (1986)
- Hutchings, R., *The Soviet Budget* (New York: State Univ.  
of New York, 1983)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4–1990*.
- Joglekar, G. and Zimbalist, A., "Dollar GDP per Capita in  
Cuba: Estimates and Observations on the Use of the  
Physical Indicator Method,"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85–114, 1989.
- McCormack, G. and Selden, M.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 Robinson, J., "Korea, 1964: Economic Miracle," in  
*COLLECTED ECONOMIC PAPERS*. Oxford Basil  
Blackwell, 1975.
- SIPRI, *SIPRI Yearbook*, 주요 연도별.
- Sivard, R.L.,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87  
–88*, 1988–89.
- Sokoloff, G., *The Economy of Detente: The Soviet Union and  
Western Capital*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 Sullivan, J. and Foss, R.(eds), *Two Koreas – One Futur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6
- Trigubenko, M.E., *Koreyskaya Narodno–demokraticheskaya*

- Respublika* (Moscow: Nauka, 1985, 국토통일원 한글번역판, 『북한의 정치 경제』 1988)
- US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주요 연도별.
- US CIA, *Korea: The Economic Ra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ER 78-10008, 1978
- ,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7*, 88 (Washington: US GPO)
- US Congress, JEC, *Soviet Economy in the 1980's: Problems and Prospects*, Part 1 and Part 2 (Washington: US GPO, 1983)
- ,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 1975* (Washington: US GPO, 1975)
- White, G., „North Korean Juche: The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in Bienefeld, M. and M. Godfrey, eds., *The Struggle for Development* (John Wiley and Sons, 1982)
- World Bank, *China: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Vol. I - III (Washington: World Bank, 1983)
- 兵勝彦 編, 『經濟開放下のアジア社會主義帝國』 (東京: アシア經濟研究所, 1985)
- 松井茂, “ソ連軍事豫算の實態” 『軍事研究』 1989 (號數不明).
- 玉城素, “北朝鮮社會主義體制の構造と變動,” 兵勝彦 編

(1985)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 經濟的 試鍊と 摸索  
—’80年代の 動向分析,” 木村哲三郎 編『ソ連型社會主義  
國の 經濟改革』(東京: アシア經濟研究所, 1988)

野副伸一, “北朝鮮における開放政策の 限界,” 兵勝彦 編  
(1985)

現代朝鮮問題講座 偏執委員會 編, 『社會主義朝鮮の 經濟』  
(日本: 1980, 도서출판 광주 한글 번역판, 1988)

矢吹 假, 『中國の 經濟水準』(東京: 蒼蒼社, 1986)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각호 (東京: 日朝貿易會)

日本貿易振興會(JETRO)編, 『北朝鮮の 經濟と貿易展望—  
'87年の 回顧と '88년의 展望』 1988 (국토통일원 한글번  
역판, 1988)

後藤富士男, “北朝鮮工業發展過程の特徴,” 『海外事情』 제36  
권 3호, 拓植大學, 1988.3.

小牧輝夫, “北朝鮮經濟の 實狀: 工業部門を中心に,” 『アシ  
アトレント』 1984 春, 第26號

金元奉, “軍事力增強 重工業優先が招いた 北朝鮮經濟の混  
迷,” 『軍事研究』 1985.11월호.

## 토 론

사회자 : 金宇澤 (한림대 사회과학대학장)

토론자 : 朴熊緒 (삼성석유화학 사장)

李 浩 (통일원 제2분석관)

黃義珏 (고려대 경제학교수)

김우택 : 사회를 맡은 김우택입니다. 오늘 이 학술심포지움의 주제가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입니다만,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북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경제적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곳 경제의 실상일 것입니다. 북한경제의 실상과 변화에 대해서 논하게 될 이번 토론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에 서방 경제학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놀랐던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동구권의 경제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고 교류가 적은 다른 지역의 경제적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붕괴 이전의 동구 경제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태부족이며 따라서 북한 경제의 실상을 알기는 그만큼 더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북한 경제전문가 몇분이 바로 이 북한의 경제실상을 보다 깊이있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자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토론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박웅서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웅서 :** 방금 소개받은 박웅서입니다. 저는 지금 학계를 떠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북한 경제연구, 나아가서 북한연구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편의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제일 먼저 고또오 후지오 교수의 발표는 간략하면서도 나름대로 내용이 명쾌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작은 질문을 고또오 선생께 드린다면 영어로 말씀하신것 중에 “In Japan and Korea, Dualism Worked”라는 표현을 쓰셔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였는데 문맥으로 봐서 이중경제구조가 성공을 했다는 뜻으로 밖에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경제구조가 일본과 한국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 교수의 논문은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옛날 학창시절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도 좀 해보고 기타 여러가지 통계적 장난도 쳐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통계가 실물 데이터로 나오지 않고 여러가지 사회적, 산업적 지표로 또는 증가율로 나오는 북한의 실물경제를 이런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또 정 교수께서 재미있게 이용을 하셨습니다.

한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모델상에 Coefficient를 측정하실 때 41개 국가의 Cross-section을 써서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국가의 Time series, 즉 시계열을 쓴 것이 아니고 세계 공통적인 Principal component 4개 또는 6개의 상수 앞에서, 상수는 세계 어느나라에 적용해도 비슷한 형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대가정 위에 작업을 했고 또 그런 전제하에서 북한의 GNP를 측정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표-1>에 나타난 북한의 각종 지표들이 북한의 GNP와 가지는 상관관계가 과연 세계 공동모델하고 비슷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 질문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북한에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을 리도 없고 만일 나왔다면 밖에서 추정을 했거나 북한사람들이 했을 거짓말 중 일부를 사용했을 것인데, 그렇게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모델에 그냥 내삽, 외삽을 해서 사용할 경우 과연 믿을 수 있는 전망

이 나오겠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표-1>에 있는 데이터가 북한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소비량, 납소비량, 동소비량, 공업부분의 취업비율, 총칼로리 섭취량, 식물성칼로리 섭취량, 동물성칼로리 섭취량, 고속도로 길이, 유아사망율, 치과 의사 수, 서비스부분의 취업율, 우편물 유통, 전화보유 등 북한사회에서 우리가 도저히 기대하기 힘든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획득에 문제가 있고 모델 자체에 개념상의 문제가 있으며,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북한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외삽에 사용을 했는가 하는 세번째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교수에게 방법상의 문제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경제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겐 별로 흥미가 없겠습니다만 역시 방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생소하더라도 참고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9-10 페이지에 두 개의 Equation이 추정이 되어 있는데 둘 다 Principal Component를 여섯개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R^2$ 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만 Principal Component의 Coefficient들이 마이너스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Over-Explanation이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많은 Principal Component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이미 설명된 것을 더 설명하자면

그것을 제거시켜야 되니까, <표-14>에 나오는 요인분석에도 있다시피 무리하게 많은 Factor로서 마이너스 Coefficient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어느 사회지표도 Linear Combination을 통하든 어떤 Combination을 통하든간에 GNP라는 변수하고 연결시킬 때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달희 선생님의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보니 북한문제 연구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Principal Component에다가 Simultaneous Equation Model까지 하는데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보니까 IN공식, BU공식, DU공식 이 네개의 Equation 가운데 Simultaneity가 존재하느냐를 보았더니, 첫번째 Function에는 두개가 있는데 DE와 EC가 있어서 NI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IN과 AG (Agricultural Product)로 설명하고 다음에는 전부 계량경제 공식에는 오는 Diagonal Form입니다. Diagonal Form이라서 꼭 한군데 Violate가 돼요. DE는 다시 한번 오른쪽에 나타나고, 그래서 DE만이 오른쪽, 왼쪽에 나타나니까 동시성이 생겨서 동시성이 생기면 추정에 Bias가 발생하니까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DE를 잘라버릴 것 같으면 Diagonal Model로 쉽게 Bias 없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연립 방정식 모델을 썼어야만 했는가에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느끼는 점은  $R^2$  각 공식마다 변수는 하나, 많이 봐

서 들만 썼는데  $R^2$ 가 전부 99% 이상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데이터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Time Series가 Indicator를 발표하는 것에 대개 조작이 들어 있으니깐 하나쯤 잡아서 나머지를 다 설명하는, 그래서  $R^2$ 가 높는데 변수 하나까지 다  $R^2$ 가 높아질 수 있는 거기서 데이터에 거짓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Model을 만들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거짓말을 찾아내지 못하고 거짓말을 이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거짓말이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림이 전부 다 벗어났지요. 비판적 의견으로 그것은 뭐냐하면 Error가 지금 Auto Call 입력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에 나머지 Trend 찌꺼기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그 범주를 못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없는 계량경제학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경제에 관해서 요즘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망한다면 다

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못살아서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경제를 놓고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현재 북한이 얼마나 얼마나 어려우며, 정말 망해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좀 잡고 싶은 것이 아닌가 느껴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세 분 모두 이점을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택 :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장님을 초청한 주최측의 의도는 업계를 대표해서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십사 한 것 같은데 학계에서 나오신 분들보다 더 전문적인 계량경제학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한테 모아서 하는 걸로 하고 두번째 우리 이 호 통일원 제2 분석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호 : 지금 박웅서 사장님께서 계량경제학을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도 했거니와 저는 불행히도 계량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번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의 결실이고 따라서 북한연구의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박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먼저 고또오 후지오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변화증후를 여러군데에서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은 이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더이상 말씀드리거나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1984년 6월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북한의 기업변화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독립채산제의 강화문제를 부쩍 논의하였습니다.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서기관과 기업소들에 대해서 완전 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를 실시했다고 하는 사실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8월에는 합영법이 나왔습니다. 85년 8월 4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우리가 북한의 경제변화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논설이 발표되었는데 제목은 “경제적 공간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힘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으로, 경제적인 공간은 지렛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독립채산제 공간, 가치 공간, 가격 공간 등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대폭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업에 자율권을 대폭 이양해야 하며 심지어 소비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질에 따라 가격결정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의 발표까지 나와서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보는 저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까닭은 고또오 후지오 선생은 북한에 끊임없는 경제적 개혁의 노력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85년 이후 이러한 논조들이 신문지상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 개혁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후퇴한 이유는 합영법 이후에 실적도 좋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중외합자경영 기본법을 발표하고 나서 자본주의적 폐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고, 그러나 후퇴과정에서 최근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중국이 그러한 자본주의 폐해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감에 따라서 북한이 다시 개방, 개혁을 재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또오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정책에 기복이 있어 온 것이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그 점을 질문 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북한에서 84년부터 경제부문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8-9년이 지났는데 진척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럴 때 이것을 과연 개혁의 징조로 봐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내에서의 어떤 개선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혁이라고 말을 붙이려면 보다 급진적이고 일괄적이며 변화의 폭도 깊어야 할 터인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체제내에서의 개선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개혁을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인 결합을 고쳐나가는 것으로 보고 개방을 대외관계에 있어서 폭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 중에서 개혁의 차원은 가급적이면 제동을 걸어놓고 한쪽에 개방만 밀고 나가

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할 때 수레의 두 축이 같이 돌아가야 북한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한축은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한쪽만 밀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이달희, 정갑영 박사 두분은 계량경제학적 측면에서 좋은 논문을 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북한경제를 추이를 분석하는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물지표에 의한 국내총생산 추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정 교수의 논문에서 지적된 대로, 적은 자료를 가지고도 그것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북한의 GDP를 추정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의 결과로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우리 정부당국에서 제시한 내용과 큰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얼마 전에 KDI가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전홍택 박사가 발표했던 내용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GDP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는 방법의 차원에 좌우되기보다는 북한에서 발표된 기초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정갑영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달희 박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중에서 저는 결

론부분을 유의깊게 봤습니다. 물론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가지는 관심은 그런 연구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공감이가려면 우리가 느끼는 현실문제하고 어떻게 유사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서도 국민소득 연평균 성장율은 앞으로 2.7%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분석의 대상 기간을 약 10년간이나 너무 장기간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최소한도 89년도 이후부터는 성장율이 나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속에서도 2.7%의 성장을 한다면 북한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우택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의 황의각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황의각 :** 앞에서 박용서 사장님과 이호 국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발표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고또오 후지오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또오 선생께서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연

구를 통해서 북한의 제도변화를 분석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성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1987년 농촌부분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발표문에도 있드시피, 정부가 농산물 구입가격을 78년부터 높이자 그동안 농업잉여를 자원으로 하는 축적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그 결과 공업부분의 자립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대두하자 가격과 시장부분을 포함한 공업개혁이 뒤따라 왔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그러한 개혁 이전과 개혁 이후의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하는데 대한 평가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연후에 북한에도 그것을 권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의 개혁이 경제발전을 촉진했는가 후퇴시켰는가에 대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의 북한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조만간 북한경제가 개혁될 것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문제점은 통제와 시장을 어떻게 병존시키는가 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개혁이란 시장기구의 점진적인 도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정치개방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같이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느 하나만 먼저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북한이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음으로 정갑영 교수의 실물지표에 의한 북한 국내총생산 추정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는 적절하게도 사회주의의 경제성과와 시장경제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회주의의 경제개발 목표라든지 방법이 시장경제의 그것들과 차이가 있고 또 사회주의 경제는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으며, 또 NNP와 같은 자료가 있어도 그것을 GNP로 평가하는 데는 균형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가격이 획일적인 기능밖에 하지 않는 사회주의식 가격 체계를 가지고 GNP 가격개념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가간 비교에 있어서 환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실물지표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실물지표도 있고 GNP나 혹은 GDP 자료도 있는 참고국가에서의 GDP 혹은 GNP와 실물지표간의 관계를, GNP, GDP는 없고 실물지표 자료만 있는 나라에 갖다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단순화된 거울반사 효과, 즉 여기에서 어떤 음영이 저쪽에 반영된 것을 그대로 따다가 뒷면에 가서도 동일한 반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히 환율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산업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과 각 나라에서의 가격기구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로 국가간 무역은 각 나라의 비교 우위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A나라에서의 컵의 가격이 B나라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에는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실물지표 자체나 가중치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이것은 KDI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시다만, 또 회귀분석 하는데 있어서 주성분 분석을 도입하므로써 계량경제학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결과가 나왔다고 독자를 현혹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대상국들을 상대로 각 실물변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관련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집하는데 따르는 측정상의 난점 같은 것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에서 소비라고 하는 성분이 GDP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살피기에 앞서서 소비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Factor Analysis가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Measurement Area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큰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통계자료들간에 상관 또는 회귀 분석에서 나온  $R^2$  값이랄지 t Value의 통계치의 유의성 여부만을 가지고 이 접근방법이 다른 국민소득 혹은 GDP의 추정치보다 더 낫든지 더 객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달희 박사의 논문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 보겠습니다. 논문에 보면 인민경제비에 대한 공업생산의 탄력성이 0.855%인데 국방군사비는 0.36%입니다. 즉, 북한에서 국방비를 쓰면 쓸수록 공업생산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국방비와 공업생산이 0.36 정도의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북한공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이고 그 중화학공업의 2/3가 군사쪽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박용서 박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기  $R^2$ 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t Value가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오고  $R^2$ 가 높다는 것이 사실은 변수들 상관속에서 F Statistics를 보지 않고서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데 여기에서 F Statistics를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것을 추정하는데 관찰치 (Observation)의 수가 얼마인지도 전혀 얘기가 없으며, 인민경제비라든지 군사비의 자료가 <표-8>의 자료인지 아니면 북한이 발표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독자를 상당히 혼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추정해 놓은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050달러 내지 1,200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원에서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발표한 자료와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들의 공정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고 여기서는 무역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자료가 그대로 맞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이 쪽에서 만들어서 썼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우택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하신 순서대로 먼저 고또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고또오(통역) : 우선 이중경제구조라는 표현에 대해 박사장님께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려 했던 것은 경제학자 Kuznets가 말한대로 Factor Contribution이나 Market Contribution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일정한 Surplus를 만들어 그것이 자본이든 노동력이든 공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품들의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의 그런 역할 정도를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국장님께서 북한의 경제변화가 지속적이었느냐 아니면 기복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일본에서 입수하고 있는 북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택 : 그럼 두번째로 정갑영 교수님께서 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 질문과 논평에 감사합니다. 우선 박응서 박사께서 질문한 것을 보면 내용이 좀 Technical하니 저도 그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자료를 어떻게 구했느냐와 같은 신빙성의 문제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나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나올 때 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반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자료는 22개인데, 이 22개의 출처를 밝힌다면 World Bank에서 6개 구하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과 CIA 자료에서 각각 10개, 그리고 국토통일원에서 6개를 구했습니다. 이 기관들의 자료가 다 엉터리라고 하시면 저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두번째 문제로 Principal Component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논문에 있는 지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유아사망율이나 식물칼로리 섭취량은 선진국일수록 낮습니다. 또한 Principal Component 6개를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위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만 취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통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자료가 정확해야 이 추정치가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초적인 자료가 맞지 않으면 전체적인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호 선생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통일원의 자료하고 KDI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실물지표하고 저의 연구결과가 거의 유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GDP가 1,181 달러라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택한 통계적인 방법론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Principal Component에 의한 분석은 제가 알기로 오늘 이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호 선생이 World Bank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GDP를 어떻게 추정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실물지표의 방법이 World Bank의 분석으로 일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료가 엉터리다 이야기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황의각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면 수차 강조한 대로 이것은 특정한 소비수준을 위주로 해서 추정된 것도 아니고 가격개념이 도입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하면 세계각국의 실제적인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으로 GNP, GDP하고 쓰기 때문에 GNP, GDP로 환산한 것일 따름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의 제일 마지막 표를 보시면 Index가 나와 있어서 한국을 100으로 하고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이 계량경제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독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Measurement Error의 문제는 북한의 완벽한 GDP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제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계 어느나라에 대해서도 완벽한 GDP나 GNP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모르는 국가에 대한 Measurement Error를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알려진 국가에 대한 GNP 추정방법을 개발해 놓고 그것과의 비교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논평자들이 지적해 주시지 않은 두가지입니다. 실물지표가 예컨대 일인당 철강 소비량이나 인구 몇명당 의사의 수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세계각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다릅니다. 똑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포니일 수도 있고 벤츠일 수도 있으니까 이 실물지표자체의 Quality가 다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는 북한이 1,180 달러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World Bank에서 중국의 GNP를 350 달러 수준으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왕래하는 사람들 또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오히려 중국보다 못사는 것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보다는 3배이상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정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상당히 낮습

니다. 그 이유는 이 실물지표의 Principal Component들이 선진국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 혼자 힘으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3-40개 되는 실물지표들을 다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계량경제학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택** : 끝으로 이달희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크게 보면 첫째 통계학적인 내지는 계량경제학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황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걸러서 사용하는데 유독 군사비 자료만 왜 새로 추정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 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 2.7%인데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웅서 박사님께서 5개의 방정식이 완전한 Simultaneous도 아니고 하나만 없애버리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반대할 의사가 전연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해본 것 중에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왜 군사비 자료는 72년 이후에 새로 추정을 했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 문제는 제 옆자리에 계신 박웅서 박

사께서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북한경제 내지는 북한의 군사를 연구하시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북한이 군사비를 67년부터 71년까지는 계속 북한정부 예산의 30% 내외로 발표하다가 72년에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나서 갑자기 북한의 군사비를 절대액에서 전년대비 36.7% 감소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예산에 대비하여 얼마가 되나 계산하면 약 16.7%는 되겠지요. 제가 민족통일연구원에 오기전에 국방연구원에 있었습니다. 해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 그 정도로 줄었으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군사력이 무장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만한 돈이 지금 인민경제비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동안은 북한경제가 엄청나게 나아지든지 하는 뭔가 좀 큰 Indicator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북한의 국방비가 72년에 전년대비 36.7% 절대액 줄어들 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황의각 교수님께서 제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국민소득 내지는 GNP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비교의 잣대로서 잘 아시겠지만 환율문제라든지, 감가상각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부문을 얼마나 넣어줄 것인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또 GNP가 그냥 천방지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을 가지고 해보자

하여 제가 해본 것이었고 지금 통일원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북한의 GNP를 끌어내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택 :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들께서 신랄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자들이 곤욕을 치른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 第3會議

# 北韓의 對外經濟關係 變化

빈 면

#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延 河 清 (KDI 北韓經濟研究센터 所長)

## 1. 序論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대하는 것은 두가지 면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첫째, 양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접촉은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둘째, 경제적 교류는 정치적 통일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념, 사회 및 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어느 쪽이라도 자신의 이념·사회·경제체제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대립과 분열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의 발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호간 경제·기술 교류를 증대시켜 나아가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안일 것이다.

최근 소련·동구의 개혁·개방화 추세로 인한 탈이념화 및 동서간의 화해분위기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 됨에 따라 남북한간에도 긴장완화에 따르는 상호 군비축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군비축소는 통합된 경제체제를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정치적 민주화 및 인권과 자유의 추구

그리고 경제협력의 추진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 진전은 남한이나 북한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북한의 경제현황을 정확히 비교·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남북한간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및 정책결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둘째로 북한의 경제개혁 현황을 검토하여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이를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시하기로 한다.

## 2. 北韓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현재 북한경제는 이제까지 취해온 정책 자체가 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경제의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은 기존 산업구조의 개선, 기술개발, 국내자원의 최대활용으로 자립적 산업구조를 이룩하고자 했다. 이러한 폐쇄적 경제정책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자본의 유입을 제한

함으로써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낙후된 체제를 초래하였다.

둘째, 각 산업분야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한 결과, 소비재생산을 비롯한 경공업분야의 발전이 지연되었고 또한 에너지·운송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발전을 소홀히 했다.

셋째, 북한 경제정책의 고질적인 약점은 Stakhanovist식의 독려에 과도히 의존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은 기술, 설비 및 생산과정의 혁신없이 단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되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사상에 의존하는 대중조직·대중동원의 역할은 이제 한계생산체감의 단계에 이르렀고 생산효율 증대, 기술진보 등의 경제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경제의 당면과제는 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 경제구조의 개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 관리체계의 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폐쇄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정책을 견지해 왔는데 국내시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각 산업은 생산비가 최저로 되는 최적규모에서의 조업경험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적은 시장규모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산업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자본집약적으로 됨에 따라, 북한의 국내수요를 초과하

는 대규모 조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대체의 강화와 국제경쟁으로 부터의 보호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제품들은 비 교우위에 의한 국제적 특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가격경쟁율도 낮은 실정이어서 북한의 수출증대 및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수출증대 정책도 이러한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단지 외채상환을 위해, 그리고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진자본과 기술을 계속 도입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자급자족적 산업정책은 대외부문과 대외무역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왔다.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혹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한정시키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만 추진되어 왔는데 이 정책의 문제점은 기술발전과 생산의 확대를 위해 외화수요가 필요할 때 수출 이외에는 외환조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무역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수출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1차상품과 반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수출경제이다. 주요 수출상품은 연, 아연 등 비철 금속과 산업용 금, 마그네사이트 등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최근에는 경공업제품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으로 1988년의 경우 소련·중국·일본이 전체무역의 77.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대소련무역은 전체의 53.9%에 달하고 있다.

셋째, 무역수지의 균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79년, 1980년을 제외하고는 1970년 이후 줄곧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1985년 이후에는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1988년에는 미화 11억8천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의 개선을 위한 무역구조의 전환이 북한 무역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에서 무역액의 증가목표를 사회총생산(Gross Output Value of Social Products)의 증가목표 1.8배를 훨씬 초과하는 3.2배로 책정하고 특히 수출산업의 육성과 수출상품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북한무역의 일반적인 제약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한 국가의 수출능력은 그 경제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생산설비와 기술수준이 낙후된 북한의 경우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술 및 생산설비의 수입이 증가되어야만 한다. 또한 투자를 제약하는 과도한 군사비지출과 에너지 공급의 애로 등이 생산력 증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한편, 수입의 제약요인으로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부족과 북한 기술수준의 낙후 및 흡수능력(absorption capacity)의 취

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확실히 대처하지 않는 한 무역의 증가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 3. 南北韓 經濟協力을 위한 諸 段階

#### 1) 北韓의 改革政策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혁조치들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첫째, 북한은 무역의 증가와 서방국가들을 포함한 대외 경제협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폐쇄정책을 고수했던 북한정부가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시정하고 생활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독자·자립노선을 수정하려 한다는 것을 엿보게 해주고 있다. 물론 아직도 이념에 집착하고 있는 평양 당국자들이 완전히 개방적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미미하나마 물질적 유인의 확산을 용인하고 있으며, 구조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농민시장의 확대, 도시지역에의 상설시장의 설치, 소비재 생산부문에 있어서 실적당 급여체제, 공장의 독립된 경영체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 소비재, 일상용품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경공업육성 3개년계획(1989년 6

월)을 발표하고 지방공업부를 신설(1989년 7월)하는 등 주민 생활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외선전, 외화획득 및 개방화의 조심스러운 추진을 위해 관광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외국자본·기술의 도입을 위한 합영법(1984년 9월) 발표 이후 북한에는 1989년 말까지 100여개의 합작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경제운용 방식은 아직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틀 안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을 어느 정도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해 북한 내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최근 제9차 최고인민회의 2차회의(1991년 4월)에서는 사유재산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민법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은 일용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재의 사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법은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완전한 사유화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의 정책변화는 결코 동구권 국가들과 같은 개방화 혹은 실용주의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아니며 단지 경직된 경제구조에서 초래된 경제침체의 극복을 위한 임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제조건과 그 진전의 속도를 이러한 맥락에

서 검토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南北韓 交易擴大 方案

현재 북한은 자국내의 경제 침체와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 개방화 추세로 인해 문호개방의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증진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양자간의 이념·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경제교류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남북한간에는 단지 1984년 11월부터 1986년 3월 사이에 다섯 차례의 경제회담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서독간에는 1972년부터 1987년 사이에 36회에 걸친 경제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로 과학기술협력, 환경보호 등에 협의하였다. 동서독간 경제협력은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① 교역단계(소강기, 1950~1971), ② 민간교류 수송협력단계(안정기, 1971~1987), ③ 과학기술 협력단계(발전기, 1987년 이후), ④ 사회 경제통합(1990).

이론적으로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산업부문별 비용의 차이 등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의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각자의 국내 정치·경제적인 요인이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한 사이의 교역은 국제간이 아닌 국내교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경제교류는 부문별·부분별 접근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간접교역, 직교역, 간접·직접투자 순서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연대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 동시추진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비교우위의 논리에 입각하여 남한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북한은 철·석탄과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식의 수직적 분업형태의 무역은 북한이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초기단계에서의 남북한 교역으로 분업형태의 교역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교역의 방법 이외에도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도 추진해야 한다. 간접교역은 이질체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합작투자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합작투자를 추진하는데는 북한에 투자하는데 수반되는 위험 부담과 북한측이 느낄 수 있는 그들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안해야 하므로 남한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함께, 서방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에 공동진출하거나 소련, 중국 혹은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 국가들과 같은 제3국에 북한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방법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대외부채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남북한교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기술·자본 등 북한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남한이 제3국에서 수입하여 북한에 이전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이들 생산요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여 일부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일부는 남한에 수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자본 원조와 차관보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채무상환능력을 지닌 나라로 인정받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북한이 IMF나 IBRD, 그리고 ADB 등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한 대북한지원은 자연스러운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이 될 것이며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교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남한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노동력을 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북한의 수입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남한은 차관을 포함한 대규모의 경험 프로젝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합작투자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남한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합작투자를 본격화하기 전에 남북한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한 단일경제공동체를 추진해 나가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간에도 독일에서와 같이 도시간(예를 들어 진남포와 인천, 함흥과 부산),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간의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

도 남북한 관계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 단계에서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 적당하다. 이러한 형태의 교역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남한의 대기업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라이선스, 특허, 생산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공급을 위한 소비재생산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다. 또한 동일 상호의 사용으로 남북한 및 해외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단계에서 남북한의 합작투자를 실현하고 신기술 개발 및 경영기술의 연구 또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의 합작투자는 소규모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후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직·간접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南北韓 經濟共同體의 設立

한반도에의 영구적 평화 정착과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공유하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호대립과 충돌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평화적, 자주적 그리고 민주적인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남북한 공히 정치적 통합에 필요한 사전 단계로서의 사회, 문화, 경제적 교류를 늘이는 것이다.

다른 분단국가의 통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통합은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통

일을 위한 점진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 공동체는 양국민 모두에게 지대한 이익을 줄 것이다.

경제통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경제 문제를 포함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행동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의 상호 개방, 상호 유익한 경제협력 등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한반도 전체를 공동시장으로 하는 남북한간의 경제적 동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성립을 위해서는 두가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는 남북한 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상반된 경제체제에서 오는 격차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은 현재 진행중인 제3차 7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성적인 애로부문인 수송 및 에너지분야 뿐만 아니라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수산물 가공 및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에 합작 투자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남한이 축적한 기술, 경영 노하우, 해외시장기반 등은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3국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데 시베리아나 기타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의 투자가 가장 유망하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관광자원 및 천연자원의 개발 등도 합작투자를 통해 남북한 공히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공동체의 실

현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남북한 모두의 번영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류·협력의 확대가 정치적 통합을 통한 궁극적 통일에 초석이 될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 4. 結論: 經濟交流의 障礙要因과 成功的인 經濟協力을 위한 提言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허용한 이후, 간접교역 형태의 북한물자 반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북한의 외화부족과 남한을 최종 교역상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북한의 입장 때문에 그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1988년 10월부터 1991년 6월 사이에 남한의 대북한 반입은 246건으로 1.17억불에 달하였으나 반출은 15건의 1천 7백만불에 불과하였다. 주요 반입품목은 아연, 동, 금, 은 등 비철금속 및 귀금속과 철강, 수산물 등이다. 이러한 간접교역의 성사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없이도 상호 경제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991년에 북한으로부터의 물자반입은 철강, 아연,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상반기 6개월 동안 10배나 증가, 미화 7천 570만불에 달하였고, 북한으로의 반출은 석유화학제품, 섬유,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1천 250만불에 이르렀다. 더욱 상

징적인 중요성을 갖는 케이스로 1991년 4월에 양국은 남한의 쌀과 북한의 시멘트를 직접 물물교환 하는데 합의했으며, 1991년 7월에 남한의 쌀은 목포항을 떠나 나진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교역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첫째로, 양국은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체제와 남쪽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상이한 사회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둘째로, 남북한의 교역이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남북한의 경제교류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로, 양국간의 교역은 소규모 교역으로 인한 채산성 문제, 직접 교역상담의 불가능, 정보의 부재로 인한 교역수단 미비 등 간접교역 자체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는데는 망설이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만히 진전될 경우, 물자교류는 물론 생산요소들의 교류도 가능할 것이며 정치적 협상과 상호협의를 통해서 자본과 기술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국간의 정치·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교역은 양측정부의 관리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교역에는 경제협정의 체결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의 중앙은행과 북한의 중앙은행내에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상호교역의 차액을 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교역역조가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측이 합의하는 공신력있는 국제통화로 일정 기간 경과후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균형있는 수출입을 행하는 한편 신용공여제도(swing credit system)를 사용하면 남북한간의 교역결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개혁으로 북한경제가 회복되고 남한은 이에 대응하여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과 함께 대북한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신뢰구축 단계, 협력증진 단계, 동질성회복 단계의 순서로 추진되어야 한다.

신뢰구축 단계에서는 직·간접교역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신뢰를 축적하고 북한의 개방·개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상·통행·통신의 소위 '3통협정'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제반제도를 정비하며 경제특구로의 공동진출 등을 모색한다.

다음 협력증진 단계에서는 직·간접투자와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상호 경제적 유대관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관광 및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투자보장 및 과학기술 협정의 체결, 경공업분야의 합작투자와 차관제공 및 지불보증,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이전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질성회복 단계에서는 경제·사회의 동질성 회복과 생활양식의 동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시장을 개방하며 생활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사회간접자본의 공동투자 및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경제교류는 양자간의 자원이나 산업구조상의 보완성 때문에 상호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남한의 소련, 동구,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남북한 교류전개로 인한 미국,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 변화는 남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남북한은 한 민족(nation)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1990년대에 “우리는 남북한이 한민족으로 공동번영을”이라는 기치 아래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체제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북한 관계는 종전의 ‘제약과 대립하의 공존’에서 ‘공영을 위한 협조관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북한 경제성장 계획 목표

(연평균 성장%)

	1차 7개년계획 (1961~67)	6개년 계획 (1971~76)	2차 7개년계획 (1978~84)	3차 7개년계획 (1987~93)
목 표 <sup>1)</sup>	14.6	10.3	9.6	7.9 <sup>2)</sup>
결 과	8.6	6.0	4.5	3.0

주 : 1) 추정치 2) 1988년 추정치

출처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No. 4, 1989, London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1989, p.35.

<표-2>

남북한 무역 비교

(단위 : 백만, %)

	1970	1975	1980	1985	1988	1990
북한						
수출	341	806	1,642	1,179	1,836	2,020
수입	378	1,155	1,710	1,664	3,019	2,620
무역수지	-37	-349	-68	-485	-1,183	-600
남한						
수출	882	5,003	17,214	26,441	59,648	65,020
수입	1,804	6,674	21,598	26,460	48,203	69,840
무역수지	-922	-1,671	-4,382	-19	11,445	-4,820

출처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서울 : 경제기획원) 여러 연도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Washington, D.C.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various years ; United Nation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New York, various years ; JETRO, *The Prospects for Economy and Trade of North Korea*, Tokyo, various years.

<표-3>

북한의 무역, 1989

(단위 : 백만달러, 괄호는 %)

	수출 (A)	수입 (B)	(A)+(B)
사회주의 국가	1,101(56.5)	1,895(66.7)	2,996(62.5)
소련 (1)	891(45.7)	1,492(52.5)	2,383(49.7)
중국 (2)	185(9.5)	377(13.3)	562(11.7)
비사회주의 국가	849(43.5)	945(33.3)	1,794(37.5)
일본 (3)	284(14.6)	207(7.3)	491(10.3)
서독	26(1.3)	76(2.7)	102(2.1)
홍콩	36(1.8)	142(5.0)	178(3.7)
싱가포르	51(2.6)	49(1.7)	100(2.1)
(1)+(2)+(3)	1,360(69.7)	2,076(73.1)	3,436(71.7)
총계	1,950(100.0)	2,840(100.0)	4,790(100.0)

출처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서울 : 경제기획원) 여러 연도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Washington, D.C.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various years ; United Nation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New York ; JETRO, *The Prospects for Economy and Trade of North Korea*, Tokyo, various years.

<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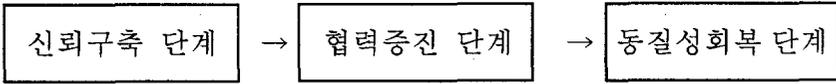
남북간 교역, 1988-1991

(단위 : 천달러)

	남한의 대북한 반입		남한의 대북한 반출	
1988-90	강 철	9,424	테트론 솜	2,450
	아 연	9,740	양말 편직기	2,188
	감 자	4,021	담배필터	83
	시멘트	3,946	잡 바	69
	기 타	17,568	설 탕	10
	소 계	41,504	소 계	4,800
1991 (1-6)	비철금속 및 철강	9,021	폴리에틸렌	6,250
	수산물	17,057	쌀	1,750
	채소제품	16,608	비닐 박막	1,283
	광 물	6,337	직물류	1,180
	금, 은, 기타	12,714	기 타	2,107
	소 계	75,737	소 계	12,570
1988-1991.6	총 계	117,241	총 계	17,370

출처 : 통일원

<도표-1>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위한 접근방법



중재 단계		동화단계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체결. 제3국 경제특구에의 공동진출.	관광 및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경공업분야의 합작투자. 비무장지역내 자유교역지대 설치. 차관제공 및 지불보증.	남북한 경제개발계획의 공동추진. 사회간접자본 공동투자. 생활격차 해소. 경제구조·제도정비.

# 北韓의 情勢와 經濟發展 推移

秦 鴻 祥

(中國 遼寧省 亞細亞·太平洋經濟研究센터 副會長)

## 1. 急變하는 國際情勢下의 韓半島

제2차 대전 후 국가간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국제경제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소를 주축으로 한 양대진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전후에 형성된 양극체제는 다극체제로 대체되었다. 더불어 경제의 국제화와 지역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접어들어 이와 같은 추세의 확대는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과 서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 일, 유럽 등 3개 세력의 정립(鼎立)시대가 도래하였고,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개혁·개방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소련과 동유럽국가의 개혁정책은 심각한 시련에 처해있다. 1980년대 이래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이들 국가는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서방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

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타파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의 '네마리 작은 용'과 동남아제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바,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금세기 말까지 이들도 개발국가 또는 신흥공업국가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비감축 협상의 진전, 동서관계의 개선, 그리고 국제정세의 완화로 인하여 국가들간의 경쟁은 앞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가간의 경계를 타파하고 이데올로기의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했으며, 그 결과로 경제적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또한 생산 및 자본의 국제화 현상의 증대는 인접국가간의 경제협력과 상호 의존관계를 부단히 강화하는 계기를 초래하였다.

현재 세계경제에는 북미, EC,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3대 지역경제권이 형성되었다. 북미와 EC는 발전수준이 서로 비슷한 국가들간의 연합체이다. 따라서 이 연합체의 협력의 정도는 비교적 높다. 그러나 아·태지역 경제권은 PECC와 APEC 등의 조직을 형성하였지만 지리적으로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북미와 EC의 경제협력의 정도와 비교하면 아직 고도의 협력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태지역의 협력은 환태평양지역과 소지역협작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이 강력

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 그중에서도 한반도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황해경제권’, ‘발해황해 경제협력구’, ‘환동해경제권’, (일본의 학자들은 ‘환일본해경제권’이라고 자칭한다) ‘도문강유역 삼각지대개발’ 등의 각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안들은 아직 논의의 단계에 있을 따름이다.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 측면에 있다. 남북한이 대치해 있고, 일본과 소련이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한과 중국간에 아직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적 대국인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해 차지하고 있는 무역과 투자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도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이후야 비로소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최근 동북아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있다.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였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사무소를 교환·설치하여 쌍방간 경제무역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일본과 북한은 수교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일·소관계도 개선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이 지역과 몽고간의 관계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지역 경제 협력의 증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도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역경제 협력체의 구성에는 여전히 몇가지 장애

요인이 남아있다. 관련 국가들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진지하게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진정한 지역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은 동북아의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한 관계에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은 각종 형태의 대화와 체육문화 등의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단일 탁구팀 및 단일 축구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쌍방은 현재 직·간접 무역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고위급 회담을 이미 세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대치상태가 아직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해 말부터 국제정세에 부합되는 일련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는 또한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더욱 미묘한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초 세차례에 걸쳐 일·북한 수교 교섭이 있었고, 현재도 쌍방은 교섭을 진행중에 있다. 일·북한간 국교정상화는 단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1991년 5월 27일, 북한은 UN에 가입할 것임을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5월 30일 남한은 성명을 발표하여 지지하였다. 9월 18일 유엔 총회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의미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다. 핵안전협정에의 가입과 핵사찰 수락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조치이므로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2. 韓半島 經濟發展의 推移

### 1) 南韓의 經濟發展 展望

NICs의 일원으로 부상한 남한의 경제발전 전망은 아주 밝지만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6년 동안의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남과 북 두개의 국가로 분단되었고, 남북한은 각각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모색하였다. 남한은 이승만정권 시기에 광복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남한경제는 심각한 정도의 통화팽창과 실업 등 악순환의 연속을 경험하였다. 1961년도에 국민 일인당 GNP는 87 달러에 불과하였다. 1961년 박정희정권이 출범하였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경제입국', '무역입국'을 표방한 대외수출지향적 개발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여섯 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

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켰다. 국민생산 총액의 절대치가 1962년의 22억 7천만 달러에서 1977년의 314억 8천7백 달러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1985년에는 834억 달러로 그리고 1990년에는 2,300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1985년에 국민 1인당 GNP가 2,000달러를 초과하고, 1990년에는 이미 5,000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수출액은 1962년 5억 8백만 달러에서 1974년에는 127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1985년에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어 세계 12위의 수출대국이 되었다. 이는 1990년에 650억 2천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한편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 되었는데, 1989년 1, 2, 3차 산업의 비율은 각각 10.1%, 30.5%, 59.4%였다. 이로써 남한은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중진공업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한편으로 남한경제에 몇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외채부담의 증가, 공업과 농업간, 수출공업과 내수공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에는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6%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금세기 말까지 한국의 경제규모는 7,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국민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수출액은 1,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수지는 매년 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채권국이 될 것이며 선진

국의 경제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기타 아시아 NICs들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함으로써 가능했다. 미·일과 이들 아시아 신흥공업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미국은 항상 적자를 보았으며, 일본은 흑자를 유지했고 그 흑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말 이후 미국경제 적자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대아시아 경제 무역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상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과거 한국에 부여했던 각종 특혜조치를 취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국은 미국시장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을 모색하고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은 '북방정책'을 과감하게 추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소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바,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

필자는 앞에서 동북아 협력문제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한국과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진전상황은 90년대와 21세기의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 2)北韓의 經濟發展 展望

### (1) 經濟發展 概況

북한은 1947년부터 1948년까지 1년 동안 1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후 실시한 2개년 계획(1949-1950)은 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한국전쟁이 종결된 후 북한은 전쟁의 상처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경제회복 3개년계획을 수립,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공업화의 기초를 다진 5개년 계획(1957-1961년, 2년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룩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나중에 1970년까지 연장하였음)을 추진하였고, 사회주의 물질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한 6개년계획(1971-1976, 1977년은 완충기로 정하였음)을 추진하면서 국민경제의 주체화를 가속화시켰다.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1985-1986년은 조정의 해였음)은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는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집행중에 있다.

이상 40여년에 걸친 경제건설 과정에서 북한은 줄곧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하였고, 민족자립경제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로써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표-1〉, 〈표-2〉 및 〈표-3〉 참조). 전후의 경제회복과 제1차 5개년계획의 조기 달성으로 1950년대에 사회주의 공업화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됨으로써 경제건설의 건실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여 현대화된 공업과 발달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공업국가가 되었다.

<표-1>            각 경제계획 기간중 경제발전 실적

(단위: %)

경제계획	공업생산 연평균 증가율	기간 대비 증가비율		
		공업생산액	생산재	소비재
전후 경제회복 3개년 계획(1954~1956)	41.7	2.8	4.1	2.1
5개년 계획(1957~1960)	36.6	3.5	3.6	3.3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12.8	3.7	3.7	2.8
6개년 계획(1971~1976)	16.3	2.5	2.6	2.4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12.1	2.2	2.2	2.1
제3차 7개년계획 (기준치)	10			

\* 북한 당국의 발표에 기초 하였음.

<표-2>            공업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연    도	연평균 증가율
1954~1956	41.7
1957~1970	19.1
1970~1980	16.1
1978~1984	12.1

출처 :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 『朝鮮資料』

(日本) ; 『근로자』, 1982년 4월; 『今日 조선』 등.

<표-3> 「제2차 7개년계획」과 「제3차 7개년계획」 지표

상품, 항목		2차 7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3차 7개년 계획
		단위 (1978~1984)			(1987~1993)
전 력	억와트	560~600	1000	1000	
석 탄	만 톤	7000~8000	12000	12000	
강 철	만 톤	740~800	1500	1000	
비철금속	만 톤	100	150	170	
시 멘 트	만 톤	1200~1300	2000	2000	
화학비료	만 톤	500	700	720	
직 물	억미터	8	15	15	
수 산 품	만 톤	350	500	1100	
식 량	만 톤	1000	1500	1500	
간척지 개간	만정보	10	30	30	

출처 : 「로동신문」 배포자료

1970년대에도 북한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였다. 북한 경제는 농업과 공업 등 각 경제부문이 잘 조화된 종합적인 민족공업체제와 주체적인 관리체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체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이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 1인당 소득이 2,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 (2) 對外貿易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당시 국제환경의 제약으로 북한의 주요 대외무역 대상국은 중·소와 동유럽국가였다. 1970년대 초까지도 이들 국가와 북한과의 무역액은 북한 대외무역 총액의 85.1%에 달했다. 이후 무역 다변화정책의 실시로 그 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갔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일본, 서독, 프랑스 등 서방국가와의 무역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1971년도 수출액은 5천8백25만 달러였고, 1979년에는 2억6천3백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증가는 약 3.5배에 이르고 있다. 수입액은 1971년 5천6백75만 달러에서 1979년 4억3천2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것은 1975년 북한 무역총액의 31.4%였으나, 1989년에는 14.2%로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중동, 인도, 브라질, 페루 등의 국가와의 무역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1970년대 말 북한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약 20%였으나 1980년대에는 이보다 줄어들었

다. 그 주요 원인은 외채상환 부담의 가중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의 외채는 약 6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점차 부각되었다. 기술설비의 노후화, 외채부담의 가중 및 최근 농업생산의 감소로 북한경제는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經濟發展의 特徵

지난 40여년 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을 일별해 보건대, 북한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 왔다. 첫째,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경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아주 빠른 성장을 보여왔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물질과 기술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는 경제계획의 목표를 너무 높이 설정하여 실적달성에 급급하여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였다.

둘째, 이원적 구조의 경제이다. 남북한간 첨예한 대립하에서 경제건설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중공업 우선정책을 시종 지속하여 왔다. 즉, 유한한 자원을 생산재생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중공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은 부차적으로 인식되었다.

1960년대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이 80 대 20이었는데, 1970년대에는 그 비율이 83 대 17로 변화되었다.

1950년대에는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부문간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북한의 경제는 순조로운 발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국가안보 문제를 고려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국방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도 역시 경제구조상의 불합리성을 야기시킨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셋째, 주체형 경제이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그리고 과학화를 강조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자체의 기술, 자원, 인력에 의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력갱생노선이다. 따라서 원료, 연료, 기술설비, 그리고 기타 모든 부문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부지향적인 국내순환식 경제이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는 자급자족의 정도가 매우 높아서 외부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폐쇄경제에 따른 결함은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국내자원의 부족과 시장의 협소는 경제발전을 필연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또한 경제의 분업화를 이루기가 곤란하여 국제적인 선진기술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넷째, 철저한 공유제의 경제이다. 북한은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고 있다. 사영경제부문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집권적 국가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그리고 분배를 모두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국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경직성으로 기업의 자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기업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하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효율성 저하와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탁아소, 유치원,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11년간의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에 있어 그다지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복지형 경제이다. 북한은 식량과 주거문제에 있어서 저가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의료,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전국민이 무료 혜택을 받고 있다. 적정량의 식량을 공급해 주고 있으나, 생활필수품을 계획대로 공급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정부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형성되었고, 당시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이미 많은 폐단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과 개방문제가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모델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각 나라들은 그들이 처한 국내외 환경에 따라 그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개혁 개방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 4. 北韓의 經濟展望

과거 40년 동안 경제발전을 추진해 오면서, 북한은 몇 차례 개혁과 개방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1차 5개년계획 기간중 지역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와 군 등 지방에 관리권한을 확대해 주었다. 1960년대에는 중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공업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형기업을 직접 관리하였다. 1981년에는 정무원 직속 도 경제지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도인민위원회가 행정업무를 관할한 반면, 도 경제위원회는 경제문제를 전담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구분하고, 중앙 각 부와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고, 당정분리 등 문제에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1960년대 농업관리 체제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중앙농업위원회 - 도농업위원회 - 군농업위원회 - 협동농장의 수직적 농업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 1960년대에 채택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제도 협동농장과 공업부문의 관리분야에 개혁을 단행한 실례중의 하나였다.

개방문제에 있어서도 1960년대 말부터 대외무역 확대정책

을 추진하여 사회주의국가 이외의 서방국가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들과의 무역을 발전시켰으며 외자와 기술을 도입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4년 9월 ‘합영법’을 채택, 합작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합작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한간의 무역 확대이다. 1988년 쌍방간 무역액이 104만 달러 였고, 1990년에는 2천5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1년 상반기 쌍방간에는 이미 8천6백만 달러어치의 교류를 추진하였고, 그중 북한의 그것은 7천3백61만 달러, 그리고 남한의 수출액은 1천2백57만 달러였다. 또한 1991년 4월부터 쌍방은 이미 직접무역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쌍방간의 무역은 급속도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청진과 두만강 중간에 위치한 합산도(哈山島)에 경제특구의 건설을 준비중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또한 남한,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해 투자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남한은 이미 이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였다. 최근 북한은 고급호텔을 건설하고, 교통·통신설비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명소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북한이 이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 나라의 대외개방의 정도와 속도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처한 국내외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의 정도는 북한 내부정세, 경제상황, 대외개방의 준비여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

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국제적 요인도 역시 북한의 대외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과 중·소·미·일 등 강대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강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도 역시 중요하다. 북한과 중·소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북한은 일본·미국과 수교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노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응하고 있다. 북한과 미·일간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지지하여 왔으며, 남북한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 달성을 지지하여 왔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 국민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소망이다. 남북한 쌍방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필자는 '흡수통일'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972년 남북한 쌍방이 발표한 '7·4공동성명'은 아주 고무할 만한 조치였다. 남북한은 이 성명의 정신에 따라 우선 쌍방간에 존재하고 있는 냉전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상호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남북한 쌍방이 평등하고도 성의있는 협상과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상호이해와 신뢰가 가능하다. 현 동북아 정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민족의 화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국가의 통일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이다. 통일은 '하나의 국

가, 두개의 정부' 모델을 기초로 해야하며,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민족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통일 은 대화와 교류의 축적에 의한 점진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이러한 방법을 '융합모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 추진은 당연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환경이 이에 부응할 경우 금세기 말 혹은 21세기 초까지는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충돌과 대립의 해소 및 경제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친 교류의 확대가 현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제3국의 중재는 남북한 쌍방간 대립의 해소와 교류의 증대에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北·日 接近과 北韓經濟 開放의 展望

金 泳 鎬 (慶北大 經濟學教授)

## 1. 머리말

동북아구조에 있어서 한국과 중·소간의 접근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과 미·일간의 접근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측보다는 더욱 극적으로 한·소 국교수립이 이루어졌고, 그후 역시 예상보다는 더욱 극적으로 북한·일본간의 국교수립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일의 접근은 시기에 있어서나 속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다소 의외였고 돌발적이었다. 그것은 전후 동북아 정치경제사의 복잡한 전개에 일정한 구조적 귀결이다. 한편에 있어서는 어쨌든 한번 겪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한 경과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겠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경제적 블랙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남북한과 일본 및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어느 한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은 두 측면을 묶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구조적 시각이 필요하다.

다고 하겠다.

동북아에 있어서의 북·일관계는 실은 양자관계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한국은 물론 미·중·소를 포함한 다자관계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러한 양자관계와 다자관계가 기능적으로는 삼각관계로 나타난다. 가령 북·일관계는 곧 남북한과 일본이라는 삼각관계로 나타나면서 다시 북·소·일이라는 삼각관계로 이어지고 북·중·일이라는 삼각관계와 북·미·일이라는 삼각관계로 접속되어 가는 것이다.

한·소관계도 곧 남북한과 소련이라는 삼각관계 즉, 한·소·일, 한·미·소, 한·중·소라는 삼각관계가 다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관계나 북의 대미관계도 결국 마찬가지로 귀결된다. 이것은 ‘다중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북·일 접근의 각각의 전략적 의도를 살펴보고, 북한의 대일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경제적 변신의 내용을 분석해 본 후, 북·일 접근외교의 과정을 따져 보고, 끝으로 북·일 접근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北·日 接近의 戰略的 意圖

북·일 접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국인 북한

---

1) 연구보고 89~20,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한국의 기술분업전략 연구』, 과학 기술 정책연구평가센터, 1989.

과 일본의 각각의 의도 혹은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은 어떠한가? 우선 김일성의 최근의 일본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두장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 장면은 1990년 9월 일본의 가네마루 신 일행을 상대로 한 발언이다. 이때 김일성은

일본은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정치대국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취해온 일본의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채권국이고 미국은 채무국이다. 스타워즈 계획으로 (미국의) 채무는 더욱 늘고 있다. 일본은 헌법에서 군사대국화를 막아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좋은 상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sup>2)</sup>

라고 하여 종래 미·일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탈피, 일본을 미국과 구분하여 전자를 높히 평가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보수적 정책과정에 대한 긍정론이라는 인상까지 준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아세아는 아세아인이 해결해야 하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sup>3)</sup> 고 하여 일종의 아세아주의적 태두리 속에서의 상호접근을 강조하여 미·소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발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을 끌어들이며 미·소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작년 8월 평양에서 「범민족대회」가 열렸을 때 그 대표단에게 한 김일성의 발언이다. 이때 그는

---

2) 「한겨레신문」, 1990. 9. 28.

3) 위와 같음.

일본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도 경계해야 돼요. 미국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을 키웠는데, 일본이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지금 군사대국까지 가게된 실정이에요. 일본이 또 다시 아세아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의 군국화가 가장 큰 장애가 되는데 미국사람 나가면 일본사람 들어와요... 우리의 성까지 고쳤던 일제를 잊어서는 안되지요.<sup>4)</sup>

여기에서는 일본에 대한 첨예한 경계론이 엿보이고 있다. 미국보다는 일본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위의 두 장면은 얼핏 서로 모순되는 듯 하고 이중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표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하자면 앞의 장면이 외교적 내지 전략적이라면 뒤의 장면은 그 표면에 있는 내심 혹은 우려인 셈이다. 일본을 가장 경계하는 내심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에 적극 접근하는 외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현실적 위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일본 경계론을 간직하면서 일본에 적극 접근하는 전략적 노림은 무엇일까? 먼저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소와의 접근 특히, 한·소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종의 맞불작전 혹은 돌파전략으로 대일접근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삼각관계에 있어서의 한 각은 다른 두 각의 경합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

4) 조재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삼민사, 1990)

수도 있고 '새우등'이 될 수도 있다. 북한·중·소의 삼각관계에서 중·소대립으로 '어부지리' 외교를 경험한 북한으로서는 소·일의 복잡한 관계에 뛰어들어 '어부지리' 외교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미·일 경합관계에 뛰어들어 또 하나의 '어부지리'를 바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물론 한·일관계나 중·일 관계에 뛰어들어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했음직도 하다.

따라서 동북아 다중 삼각관계에 있어서 대일접근을 잘하면 '다중 어부지리'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전력투구 외교를 전개했다. 이러한 '다중 어부지리'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면 북한의 경제재건의 돌파구가 생긴다고 판단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누적된 외채를 갚을 길이 없는데다가 제2차 7개년계획의 실패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전망에 설상가상으로 대소, 대동구 무역의 후퇴와 대소무역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달라결재 요구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북한경제로서는 한국에의 흡수통합을 피하기 위해서도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기술도입, 그리고 일본과의 경협을 담보로 한 구미 및 동남아와의 경제관계의 활성화로 북한경제를 재건하려는 시나리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절을 달리하여 다시 상론해 보기로 한다.

한편 일본으로서도 대북접근의 정치경제적 이점이 매우 컸

다. 우선 대북접근이 이루어지고 북한경제가 일본의 자본·기술에 접목이 되면 남·북한·일의 삼각관계에서 북한카드로 남한을 컨트롤하고 남한카드로 북한을 컨트롤하면서 남북대립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으며, 한반도 전체가 분단·대립한 채 일본통제권에 편입되면 대중·소 전략에도 크게 유리한 것이며, 나아가 대미 전략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카드를 쥐면 동북아 전체전략의 고지를 차지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중국의 동북부지방(구 만주지역) 진출에 미련을 갖고 있고, 소연방 붕괴에 직면하여 극동 시베리아 진출의 야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진출에 있어서 북한은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된다. 말하자면 북한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시베리아의 자원, 구 만주지역의 농산물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일본경제의 후방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청진과 일본의 니이가따를 연결하는 소위 북한루트의 부활은 일본의 대동북아전략의 핵심적 고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루트는 중국의 동북부 철도 혹은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EC국에 접근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최근 타일랜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을 사실상 자국경제권에 편성시키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북한을 확보하면 동북아에 또 하나의 일본 후방기지를 이루어 호주의 후방기지과 함께 일본 경제블럭을 구축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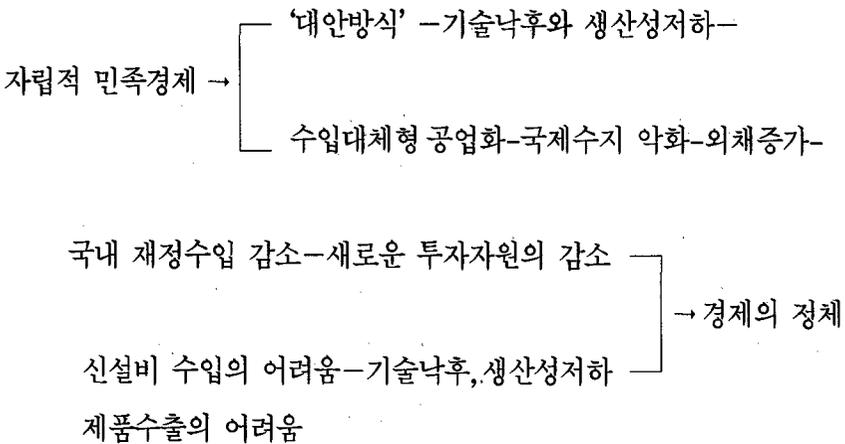
일본인의 여권에는 “이 패스포트로 북조선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여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북한은 일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최후의 나라였던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항일투쟁을 정권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일본인의 역사적 원죄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북관계 개선은 일본의 ‘전후 총결산’을 완료하는 의미도 갖는다. 물론 ‘전후 총결산’은 반드시 ‘전전(戰前) 총결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전문제에 대한 은폐와 도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일본은 후자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3. 北·日間の 經濟的 다리놓기

북한의 경제건설 이념은 흔히 ‘자립적 민족경제’로 표방되고 있고, 현재의 도달수준에 대해서는 ‘발전도상국’(북의 김달현 부총리의 표현) 혹은 ‘사회주의 중진국<sup>5)</sup>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자립적 민족경제’ 개념 그 자체의 수정과 재구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선 ‘대안방식’으로 일컬어지는 비이윤동기의 강조, 말하자면 주체사상에 의한 작업방식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단순노동의 경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장기

5) 小牧輝夫(編), 『朝鮮半島 開放化する 東 アシアと 南北對話』, (アジア經濟研究所, 1986)

적으로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효력을 잃어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산업기술면에 있어서는 구일제시대의 설비, 구동독을 비롯한 동구의 설비와 기술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준으로서는 역시 생산성의 심각한 정체를 막을 수 없었다.<sup>6)</sup>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는 기능적으로 수입대체형 공업화의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입개념은 있으나 수출개념이 결여되어 결국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가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북한형 악순환이 정착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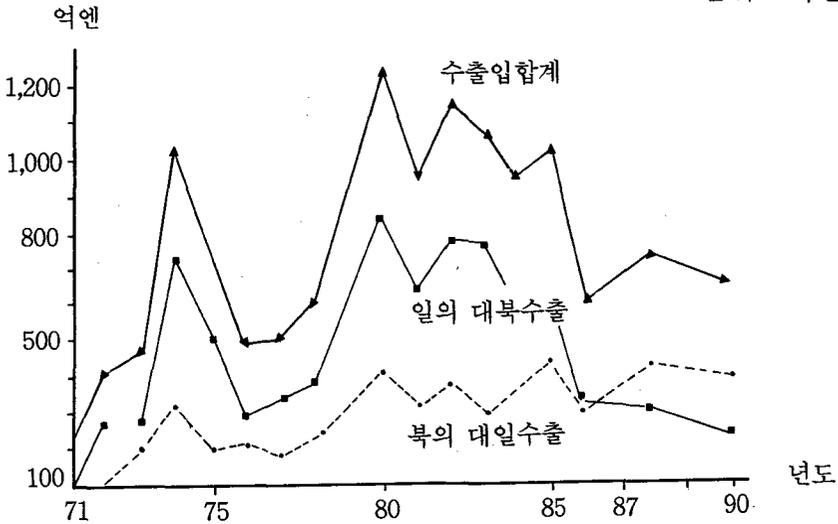
이러한 악순환은 GNP의 20%를 넘는 국방비의 증압으로

6) 박성조, 『동구권(동독)의 대북한 기술이전 연구』 (과학기술처, 1991)

더욱 악화되고, 다시 소·동구제국의 시장경제화로 경화결재가 요구됨으로써 더욱 더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의 돌파구를 외형상으로는 일본과의 경제관계의 수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개념이 일정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변신은 북한경제로서는 세번째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첫번째는 1970년대 초의 제1차 개방기의 변신이다. 이때에 북한은 서방과 비교적 활발한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1차 오일 쇼크의 와중에 실패로 끝나고 누적적자만 안은 결과가 되었다. 오늘날 북한이 안고있는 50억불의 외채는 대부분 이때의 실패 결과이다. 두번째는 1980년대 전기의 제2차 개방기의 변신이다. 이 무렵은 다음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과의 수출입도 상당히 증가하였고 또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 실시하기에 이른다. 합영법 이후 합작투자는 북한에 약 110건, 대외공동사업으로 40건 등 모두 약 150건이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중이며 그 중 약 70%에 이르는 98건(1986년 4건, 87년 26건, 88년 34건, 89년 34건)이 '재일조선인'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조선무역형'이다. 그중 41건이 현재 조업중이나 1건당 평균투자액은 1억 6,000만엔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2의 변신도 거듭되는 경제적 악순환과 제1차 변신 때의 외채부담으로 실패로 끝나고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일무역도 격감일로이며 91년에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그림-1> 북·일 무역의 추이(1971~90년)

단위: 억엔



자료: 일본 JETRO 통계로 작성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지금 제3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경제의 위기와 소·동구 공산권의 붕괴에 대응한 것으로 종래의 두 차례의 변신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대규모의 변신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로, 대외 경제관계인데 종래의 사회주의 제국과의 바터무역에서 이제는 사회주의내의 시장경제와의 달라결재 무역으로, 그리고 다시 자본주의 제국과의 '자본주의적 무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제국과의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경우 외화부족이 문제인데, 대일 국교회복으로 받는

보상금 내지 경제협력 자금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 경제의 최고책임자인 김달현 부총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본주의적 방법’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종래 사회주의권이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고 무역관리 시스템도 국제적 관습에 기초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적 관습이란 자본주의적 관습이다.

둘째로 종래의 ‘자립적 민족경제’ 개념 속에 다소 미약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던 수출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수입대체형에서 일종의 개발수출 혹은 일종의 수출주도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달현 부총리는 “우리나라에의 투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sup>7)</sup> 혹은 “투자를 받으면서 차금을 갚아나가는 무역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조선아세아 무역촉진회’의 「대일경제 및 무역의 제문제에 관한 의사」에서 “일본측이 우리나라의 수출능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수출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은 합영총국을 부(部)수준으로 승격하고 합영법속에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던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을 바꾸고 있다. 즉 종

---

7) 앞과 같음.

래에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북한의 국내법에 기준하여 해석하였는데, 이제는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을 구분하여 외국인의 경우는 다른 기준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합영법에는 외국투자 비율 규정이 없어 북한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의 투자 비율로 해석해 왔으나 최근 그것을 “외국인의 100% 투자도 인정한다”<sup>8)</sup>는 식으로 해석을 바꾸고 있으며 따라서 합작기업과 투자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측에서 ‘개발수입촉진단’이 발족, 이미 ‘개발수입촉진 선견단’이 방북하여 조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때 북에서는 기계공업부, 자원개발부, 전재공업부, 수산위원회 그리고 조선금속 기계수출입 총회사를 비롯한 각종 회사가 참여하여 합자, 합작, 가공, 보상무역의 방법으로 다양한 개발수출 희망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무역형’에서 ‘조일무역형’으로의 전환은 ‘개발수출’을 다리로 하여 우선 전개될 양상이다.

셋째, ‘개발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합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중국형의 경제특구 그리고 경제무역지대 및 자유무역항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무역지대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소위 북한·중국·소련의 골든델타 구상의 일환으로 두만강 하류에 설치하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홍콩·

---

8) 위와 같음.

마카오같은 조차지 방식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또 이외는 별도로 청진·홍남·나진·선봉·원산·남포 등에 자유무역항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철로 노폭규격과 소련의 철로 노폭규격이 다른데 북한철로는 중국 규격에 일치하지만 지금 선봉까지 연결되어 있는 소련 규격 철로를 청진까지 연장하면 청진·나진은 환동해권과 중·소·몽골내륙을 연결시키는 국제적인 무역항이 될 수 있으리라는 구상하에 적극적인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경제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허용한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그리고 이 경우의 법적 보장은 '일본과 중국간의 많은 경험' 즉 중국방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네째, 이상과 같은 세가지 내용의 변신은 주로 대외적 변신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일정하게 대내적 변신과도 연관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대내적 변신의 구체적 형태로서는 정신주의적 동기를 기초로한 '대안방식'에서 부분적으로 물질적 유인 내지 이윤동기를 도입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해 나가면서 자영업과 기업의 독립채산제 특히 이중 독립채산제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결과 농촌의 농민시장과 도시의 상설자유시장 및 직매점이 광범하게 보급되고 있다. 소비재 부문에 있어서 능력별 임금제의 보급과 모든 기업에 있어서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하면 그 이익을 배분하려 하는 방식이 장려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물론 북한에 있어서 농민

시장과 자유시장 및 직매점 등이 아직은 배급제나 집권적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운영의 대외적인 일대변신이 대내적인 변신으로 연결될 때 중국 정도의 시장경제의 도입이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 4. 北·日 接近의 드라마

북한·일본의 접근상황을 드라마로 본다면 지금은 제3막의 초반쯤이 아닐까 한다. 제1막은 북·일간의 수차례의 비밀교섭 끝에 1990년 9월 북한의 묘향산 초대소에서 김일성 주석과 가네마루 신의 극적인 정치절충을 거쳐 소위 조선노동당, 일본 자민당, 일본 사회당의 3당 합의의 ‘조·일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때까지의 드라마이다. 이때에는 북한에 접근해 오는 일본을 바짝 끌어들이면서 정치적으로 북한 페이스로 밀어붙여 정당차원의 공식사과와 전전은 물론 전후배상까지 합의해 낸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정부 대신에 당을 내세우고 당은 가네마루 신 개인을 내세우고 가네마루 신이 또 일본과의 통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노쇠를 핑계로 하여 슬며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망을 돌파한 일본의 허허실실(虛虛實實) 외교 또한 무척 인상적인 것이었다. 이 경우 한·소 대화와 북·일 대화가 드라마의 주류가 되어 남북대화는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했다.

제2막은 3당합의에 따른 예비회담과 제3차 본회의까지의

드라마이다. 제1차 평양 본회의 때는 북한측이 전전 ‘교전’개념을 내세워 ‘정식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제1막의 페이스를 아직 유지하는 듯 했으나, 제2차 동경회담에서는 일본의 거대한 국력과 노련한 외교경험이 십분 발휘되면서 점차 일본 페이스로 양상이 바뀌어 가면서 지난 평양에서의 3당합의 공동선언 발표 당시의 무대양상을 반전시킨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었다. 더구나 제3차 북경 본회의 때에는 ‘이은혜’문제로 북한이 막다른 코너로 몰리는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된다. 여기에서 남북대화는 북·일 접근을 위한 보조장치로 격하된 듯한 상황이 되었다.

제3막은 금년 8월 말의 제4차 북경 본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개입이 전면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북한 또한 제3차 본회담 이후 일본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으로서는 마치 중국이 북한의 일본 접근을 자국의 콘트롤하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일본의 북한 접근을 미국의 콘트롤 하에 두려고 하였고, 그것은 핵사찰 문제를 매개로 가능하게 되었던 셈이다. 어떤 점에서는 동북아에 대한 미·일의 이니셔티브 경쟁의 한 장면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경향보다 한반도 문제의 4강화(四強化)의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드라마를 다중 삼각관계론과 일본의 대북보상 형태론으로 비교해 본다. 그 경우 제1막은 이미 한·소 국교수립으로 외교적 타격을 입은 북한과 일본이 서로 제휴하여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었으며, 말하자면 한국이 새우등 구조로 접어든 것이다. 보상형태로는 전전·전후를 포함한 전쟁배상형이 합의되었다. 제2막은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여 한·일 합작으로 북한의 옆구리를 걷어찬 장면들이었다. 말하자면 남·북·일 삼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새우등 구조에 떨어진 셈이다. 이때 보상형태는 배상이든 청구권이든 다 좋다는 정도로 되었다. 제3막은 미국이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기회로 한국과 일본을 미국 페이스로 끌어들이고 소련과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반대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북·일 접근이 점차 미국 페이스로 옮겨가는 과정들이었다. 이때의 보상형태는 더욱 후퇴하여 배상이나 청구권의 형태가 아닌 경협방식이 일본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제4막이 유엔 동시가입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직 추론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북·일 양자관계에서 남북한과 일본의 삼각관계로, 다시 미·중·소를 포함한 다자관계의 다중 삼각구도로 무대가 확대되고 중첩되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며 결국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가의 문제는, 북·일관계를 기본으로 다중 삼각관계가 전개되느냐, 남북관계를 기본으로 다중 삼각관계가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北·日 關係가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

북한·일본 관계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다. 낙관론은 북·일 경제협력이 북한경제를 호전시켜 남·북이 어느 정도까지 대등한 수준이 되어야만 남북대화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북·일관계 개선은 한·중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적인 다자관계를 이룩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반대로 비관론은 일본이 남북관계에 썩기를 막아 일본페이스의 분할통제(divide and rule)를 시도할 것이며, 일본의 대북경협은 북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부자 체제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의 전망은 앞으로의 여러 다양한 가능성의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그중 어느 쪽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다음의 몇가지의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우선 남북대화가 북·일 접근드라마의 보조장치가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북·일 접근이 남북대화의 보조장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경제적으로는 대북진출에 있어서 한국선행형(韓國先行型)이 되느냐 일본선행형이 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대북진출이 다자관계의 틀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사정은 마찬가지로 될 터인데 현재의 추세는 압도적으로 북·일 접근에 남

북대화가 그 보조장치로 쓰이고 있는 인상이며 경제적으로도 단연 일본선행형이다. 아울러 동북아의 다중 삼각구도에서 본다면 일본의 대북한 접근이 현재로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한국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일본측의 한국협력형 대북접근 전략에 북한이 오히려 새우등 구조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그 결과는 북·일 접근에 있어서 북한의 일방적 후퇴가 강요되게 마련이다. 이미 전전(戰前)문제에 대한 사과수준과 보상형식 그리고 경제협력 방식에 있어서 북한의 후퇴조짐이 역력하고 결과적으로 종속적 대일 경협체제가 이룩될 공산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으로는 북·일 협력체제에 의하여 한국이 새우등 구조로 전략될 수 있다. 일본의 남북분단 통제정책에 말려 남북이 연쇄적으로 새우등 구조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일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남·북협력이 선행하여 남·북협력 선행형 대일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일본이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하고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갖게 하는 조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일본의 산업기술의 수준으로 보아 남북이 모두 일본의 기술적 수직 분업체제에 편입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웃나라에 전화를 할 때도 런던을 경유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남북한간은 중국, 동남아 제국과 함께 일본의 핵심기술, 기반기술을 매개로 하여 분업적으로 서로 연계되는 ‘산업적 동경경

유형'(東京經由型)의 위기앞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신판 '대동아 공영권'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북·일 접근이 일본의 신판 '대동아 공영권'을 도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할 조건을 남북한이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 토 론

사회자 : 安承哲 (전 KDI 원장)

토론자 : 徐鎭英 (고려대 정치학교수)

金基德 (KBS 북한부장)

李榮善 (연세대 경제학교수)

안승철 : 지금까지 세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하청 박사는 남북한 경제발전 협력에 대해, 오늘 이곳에 참석은 못 하였지만 진홍상씨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경북대학교 김영호 교수는 북한 일본의 접근관계, 특히 그것이 남북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고려대학교 서진영 교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서진영 : 서진영입니다. 본인은 정치학자로서 이 분야가 전공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세분의 발표 모두가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다같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 질문은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다루는 논평식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변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언론

에서나 학계에서나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연 박사나 김 교수도 언급이 있었지만 본인은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 요인들을 대략 두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제적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내부적인 요건으로서 특히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북한이 변할것이나 하는 논의는 소련이나 동구와 비슷하게 변화할 것이나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들로서 북한에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의 변화나 경제적인 혼란은 그 자체가 심각하고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할 객관적인 압박요인입니다. 요는 북한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나 하는 것인데, 즉 강요 당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나 아니면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북한의 대응이나 변화의 조짐으로서 여러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가 여러가지로 나왔습니다. 즉, 독립채산제라든가 토과세 증가라든가 자영적 상공업 활동의 허용이라든가 또는 대외무역 또는 대외경제 관계의 중요성의 확대 등등을 우리가 지적하는데 그 중에는 새로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라면 우리의 이해가 좀 더 명확해 질 것인데, 예를 들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같은 외교정책의 변화같은 것은 과거와

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 개방이나 개혁정책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여러가지 변화라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새로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과거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될 것은 독립채산제 문제라든가 대외무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것들과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Context Analysi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교적인 분석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비교라는 것은 똑같은 개방정책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도, 예컨대 대외무역 관계의 경우, 김 교수께서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지표 제시하면서 1970년대라든가, 1984년도 합영법을 전후한 시기, 또 최근이라고 하는 세 차례를 제시하셨는데, 그것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면 북한의 변화양상과 방향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김 박사께서 이른바 Japan Factor가 북한의 개방, 대외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대외개방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북한의 가장 종합적인 반응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함축되어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저의 코멘트는 현재 일본 카드라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아닌가 하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마저 일본의 경제적 예속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신판 대동아공영권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남북한의 정치적 경쟁관계가 계속되는 한 북한도 남한도 항상 미묘한 관계에서 Best Interest를 추구하지 않으며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일본에 의한 경제적 예속 때문에 남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 북한이 비록 현실적으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그 카드가 유일한 것이고 자기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냥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한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다른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국제적 협력체제 쪽으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철** : 시간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토론하실 분은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BS의 김기덕 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발표자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본인의 어설픈 토론은 자칫 주제넘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나 몇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하청 소장께서는 남한이 차관을 포함한 대규모의 경협 프로젝트를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이 국내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왕래와 시장의 상호개방 등을 꾀해야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정치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두번째는 북한이 경제특구 건설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투자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인데,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영토가 적은 탓에 다른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진홍상씨) 현재의 중국과 북한의 생활수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생활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이 더 높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군사적 충돌과 대립의 해소 그리고 경제,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친 교류의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과제들을 추진하는데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재자로서는 어느나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

유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김영호 교수님께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일본 접근드라마를 제3막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3막은 1991년 8월 말에 4차 북경 본회담을 전후해서 북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전면적인 작용을 하게 된 때 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이 9월 하순에 내놓은 선언, 그리고 10월 초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내놓은 핵무기 감축선언, 또 남북 총리회담의 진전 등이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일본의 국교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끝으로 만약에 북한에 대한 일본의 배상금, 즉 일본이 북한에 주는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킨다고 가상할 경우에 북한이 오히려 남북한 경제교류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일본간의 배상금 교섭, 그리고 경제협력 논의에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철 :** KBS 김부장께서는 방송계의 활동이 몸에 체질화되어서 그러는지 짧은 시간에 요지만 잘 질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이선영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영선 :** 사회자께서 저더러 KBS(김부장) 님아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웃음) 서진영 교수께서 서두에 본인께서는 정치

학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분야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실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모든 문제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학적 입장에서든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통일문제도 그렇고 남북 경제협력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국 정치적 해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의 코멘트가 오히려 유효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간략히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연하청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의되어지는 사실이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 교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개방을 강요 당하고 있는데 그것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지요. 북한이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방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개방을 하면 민주화의 바람이 들어올 것이고 개방자체가 그 사회의 안정을 흔들게 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 경제학적으로 정치현상을 설명할 때 흔히 Self-Interest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데,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결국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쪽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소비재가 모자라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정권세력이 기본적으로 관

심을 두는 것은 자기 정권의 유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개방, 개혁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두만강 유역을 통해서 개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곳은 인구도 가장 적고 개방의 효과를 가장 축소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실익을 얻어 보자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개방을 시행하기 까지에는 상당히 먼 길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간의 교류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 하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평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자동차를 사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어 정치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직분업, 수평분업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상호 산업구조에 맞춰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상 선생께서 발표한 것 중 상당부분이 경제분야인데 저는 맨 뒤 결론 부분에 조금 흥미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필자는 흡수통일이 한반도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점진적인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통일은 금세기 말 혹은 21세기 초까지 실현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김영호 교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결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발전이 종속적인 경제관계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려스러워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뜻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진영 교수가 이미 지적했듯이 결국 정치적 가능성은 그것 밖에 더 있느냐, 북한이 바라는 것이 현 정권이 뒤집혀지지 않는 것인 한, 남한하고 손잡는 것 보다는 일본으로 부터 여러가지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남한의 역할에는 상당히 한계가 주어지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일본사이에 어떤 협력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 문제 해결에 꼭 부정적인 것이기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후발국가로서 한국의 경제가 여태까지 일본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서 발전하였으며, 사람에 따라 종속이다 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경제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성장해 왔다고 평가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여, 어떤 비용과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철** : 지금까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한분이 2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참한 진홍상씨에 대한 KBS 김기덕 부장의 질문은 오늘 회의를 주관하는 민족통일연구원이 대신 전달하여 적당한 시기에 그분의 의견과 답변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 박사께서 말씀하시지요.

**연하청** : 시간상 제약 때문에 대답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서진영 교수와 이영선 교수의 질문을 묶어서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가 서로 그 유형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최근과 종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셨는데, 간단히 지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최근 북한이 대외무역의 증가를 3.7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한데 반해서 경제 총량은 1.8배를 신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만 봐도 북한이 자립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두번째는 가령 1991년 5월에 개정된 민법에 소유권 내지 재산권 조항이 있는데 민간인이 자동차 따위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것을 잘 음미해 보면 북한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종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기덕 부장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처음

에 제가 경제협력의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 측면을 나누어 얘기했는데 김 부장께서 언급하신 생산요소의 교류나 시장상호 개방 등은 단계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최종 단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 다음 질문은 수평적 분업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북한이 명분상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 제약 때문에 단계적으로 볼 경우 꼭 경화를 요구하지 말고 물물교환이라든가 투자시 제품 재구매방식이나 상용구매방식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호 :**저도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답변하기 좋은 것 몇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한국 사이에 수직적 무역관계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수직적 무역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공산품과 1차적 원자재를 주고 받으면 수직무역 형태이지만 중요한 것은 부등가교환의 형성 여부이며, 과거에는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면 수직무역이었지만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는 부등가 교환 현상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를 검토할 때 그것이 단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양국 관계였다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안되었을 것이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과 삼각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보다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의 수요가 일본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이 수요면에서 한국 내지 동북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철**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 면

## 第4會議

# 北韓 政治體制的 變化

빈 면

# 北韓의 政權移讓: 問題와 展望

高 秉 喆 (美國 일리노이大 政治學教授)

## 1. 序論

김일성의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장기집권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상층부의 권력이 양이라는 체제탄력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이며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인 김일성은 1948년 9월 공화국 수립 이래 계속 권좌를 지켜 왔다. 동시에 거의 20년 동안에 걸쳐 북한에서는 권력이 양이 진행중이다. 만약 김일성의 계획이 무사히 실행된다면 이는 사회주의 역사상 첫번째 세습이양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일이 최고통치권을 세습하게 되어 있는 이 계획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특히 우리는 세가지 문제점 ① 개념화 ② 정당화 그리고 ③ 제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첫째 문제는 '북한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은 무엇인가'라는 이론적 문제이다. 다른 두가지 문제는 '부자간의 권력이양을 정당화하고 아들의 정통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그 권력이양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조

치들을 취해 왔는가'라는 현상에 대한 실제적 문제이다.

이러한 계획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는 다음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려 볼 수가 있다. 그것은 ① 단기 실패 ② 단기 성공 ③ 중기 성공 그리고 ④ 장기 성공이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이 등식에 대입될 수 있으므로 이중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를 바로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상이한 시나리오들의 확률에 대하여 직감적으로 평가(impressionistic assessment)하는 일일 것이다.

## 2. 概念化의 問題

만약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왕조세습의 개념이 전무후무했다면 북한 정치체제의 주요 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개인숭배는 스탈린, 모택동, 차우세스쿠와 사담 후세인의 숭배에서 그 전례와 유사성을 찾아 볼 수는 있지만 그 숭배의 범위, 강도 그리고 기간에 있어서는 위의 예들을 능가하는 것이다.

숭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① 이상 ② 영감을 받은 성경 그리고 ③ 무오류의 지도자'<sup>1)</sup> 외에 김일성 숭배는 광범위하게 역사를 다시 쓴다든가 이상의 신전에 지도자의 가족과 친척

---

1) Mary Allen Fischer, "The Ceausescu Cult: National or Personal?," 본 논문은 1984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Chicago에서 열린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연례회의에서 발표되었음. p. 1.

그리고 조상까지를 포함시키는 특색을 갖고 있다. 모든 성인의 왼쪽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필수적으로 달아야 하는 사실은 그간의 전례들, 특히 중국에서 문화혁명 기간에 실시되었던 행태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김일성 숭배와 북한 정치체제에 있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도할 목적을 가진 이념을 선전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그 이념은 애초에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 주장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맑스-레닌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근래에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보다 우월하며 이것만이 새 시대 즉 ‘자주성의 시대’<sup>2)</sup>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 민족의 존엄성과 자부심, 자립, 인민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격찬하는 주체사상에 의해 북한은 경직되고 비타협적인 경향을 띤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고도의 통제를 실시해 왔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도 물질적인 자극보다 여전히 규범적인 자극을 강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오직 대외정책에 있어서만 눈에 띄게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북한을 독특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북

---

2) 고병철,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 분석”, 최명 편, 『북한 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87-111.

한이 단지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판이하게 되어가는 국가와 사회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수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조성해 온 정권 승계계획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명맥을 유지하고,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불꽃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강렬한 희망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정식 교수는 이를 “현대화라는 목표와 지속적인 혁명열의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김일성의 응답”<sup>3)</sup> 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징적 불멸성’의 개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한 심리 역사적 이해를 돕고 있다. 리프톤(Robert J. Lifton)에 의하면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죽음에 직면하여 그 자신의 존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또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한 내적지각(inner sense)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상징적 불멸성’ 즉 ‘후손의 출생,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창조적 일이나 영향력’ 혹은 ‘죽음에 대한 영적 정복’<sup>4)</sup>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불멸성의 감정에 의해서

---

3) Chong-Sik Lee,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l,” Robert A. Scalapino and Jun-Yop Kim (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3), p. 66.

4) Robert J. Lifton, *Revolutionary Immortality: Mao Tse-Tung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8), p. 7.

충족될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의 경우 상징적 불멸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sup>5)</sup>

첫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김일성이 그의 항일 빨치산 경력에 관한 꾸밈없는 진실때문에 그의 부풀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에 대한 실제 기록은 북한의 전기작가들이 수년에 걸쳐 제조해 놓은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영웅적 행위 및 초인적 공적의 신화’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sup>6)</sup> 김일성은 초기 북한의 정권장악에 관한 모든 이야기 특히 눈에 띄는 보호를 해 준 소련 점령당국의 결정적 역할과 김일성이 그의 정적들을 술수로 누르고 제거한 마키아벨리식 책략을 북한주민에게 알릴 수는 없다.

또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 특히 박헌영과 그의 동지들에 대한 피의 숙청에 관한 진실을 마찬가지로 숨겨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마지막으로, 김일성 사후 그

---

5) 설명은 좋고,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 8, No.3 (Fall 1984), pp. 557-574를 참조.

6) 김일성의 게릴라 기록의 신빙성 있는 설명은 다음의 저술을 참조.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202-230;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art 5;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art 1. 북한의 공식적인 일대기는 다음의 저술을 참조. 백 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Vol.1, 2 (평양: 인문과학사, 1968, 1969).

7) 박헌영의 숙청에 관해서는 Scalapino and Lee, 위의 책, Part I, pp. 436-452 와 Dae-Sook Suh의 위의 책, Ch.7을 참조.

의 이데올로기의 평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김일성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은 모택동사상과 현저한 유사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깊이가 별로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sup>8)</sup>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와 같은 고려는 김일성이 자신의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화와 통일이라는 미완성의 과업이 김일성의 사후에는 완성되겠는가? 북한 인민의 혁명적 열정은 지속되겠는가? 어떻게 관료화과정의 역제될 수 있겠는가? 북한이 그들의 군간부와 기술관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민들로 하여금 당성과 전문기술을 함께 겸비하게 하는 위업은 달성할 수 있겠는가?

만약 김정일을 선택한 것이 혁명을 지속하고 김일성 신화의 영구화를 보장하는데 있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그의 권력승계 계획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 3. 正當化의 問題

정당화는 권력승계에 대한 광범위한 인민의 용인을 필요로

---

8) B. C. Koh, "Ideology and Political Control in North Korea," *Journal of Politics*, Vol. 32, No. 3 (Aug. 1970), pp. 660-665.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교화 뿐만 아니라 후계자의 업적에 대한 신빙성있는 기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9)</sup>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운동은 그가 1973년 9월 조직 선전 선동을 책임맡은 당 비서직에 선출된 직후 바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제5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위의 사실이나 1974년 2월 제5기 중앙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정치국원으로 선출된 사실의 그 어느 것도 발표되지 않았다.<sup>10)</sup>

몰간 클리핑저(Morgan E. Clippinger)의 예리한 분석이 지적하듯이 김정일을 부상시키기 위한 선전 캠페인은 이원적 차원 즉 언론과 방송매체 차원, 그리고 개인 대 개인 접촉차원으로 진행되었다.<sup>11)</sup> 이들 둘은 상호보완적이다. 언론과 방송매체 캠페인에 사용된 난해한 표현을 볼 때 개인 대 개인 접촉차원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촉없는 언론 방송매체 캠페인이 외부 관찰자는 물론이고 북한

---

9) B. C. Koh,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in Chong-Sik Lee and Se-Hee Yoo (eds.), *North Korea in Transition*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p. 3.

10) 두 차례의 당대회에서 최고 당직으로의 김정일의 상승을 확인하는 첫 공식적인 자료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Inoue Shuhachi, 『현대조선과 김정일 비서』 권순희역 (평양: 근역사, 1983). 명목상 일본학자가 저술한 이 책은 성인 언행록과 유사한 관선 일대기의 특징을 모두 보이고 있다.

11) Morgan E. Clippinger, "Kim Chong-il in the North Korean Mass Media: A Study of Semi-esoteric Communication," *Asian Survey*, Vol. 21, No. 3 (March 1981), pp. 290-293.

주민들에게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개인 대 개인 접촉차원에서 북한 인민은 김정일의 사상과 미덕을 학습하도록 노골적으로 강요받아 왔다. 이러한 교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서적과 팸플렛이 간행되었다. 김정일을 찬미하는 노래와 구호가 대중화되었다. 아버지와 짝은 그의 사진이 공공장소에 전시되고 일반구매가 가능해졌다. 그의 생일도 대단히 과시적으로 기념되었고 체육행사와 함께 다른 축전이 펼쳐지는 ‘청년축제’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시작하여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 끝난다. 여러가지 다양한 경칭을 시험해 본 후 노동당 지도층은 드디어 김정일의 호칭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정착시켰다.<sup>12)</sup>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 방송매체 캠페인은 암호명, 구호, 상징,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시각적 전달(visual communication)<sup>13)</sup> 등 난해한 상징 사용으로 특징지어진다. 주요 암호명은 ‘당중앙’이었다. 외부인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철저한 노력으로 주요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근로자』에서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그 어휘를 사용하였다. 반면 북한밖에서는

---

12) Inoue는 북한 주민이 1960년대 후반부터 이 호칭을 쓰기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그 ‘자발적인 행위’는 김정일의 지도자로서 작업 이행과 인민 복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인민의 순수한 감탄과 신뢰를 반영한다고 덧붙이며,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Inoue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북한 전역의 인민들로부터 김정일을 비서직과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하라는 강한 요망을 표현한 편지와 청원이 넘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Inoue Shuhachi, 앞의 책, pp. 87-88.

13) Morgan E. Clippinger, 앞의 논문, p. 291.

널리 읽히지 않는 『로동청년』, 『조선예술』, 『조선문학』과 같은 간행물에서는 그 표현의 실질적 대상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당중앙’은 당 중앙위원회를 일컫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기구만을 뜻하는 것도 아닌 바로 김정일 자신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 지도부는 공식적인 선전매체를 총망라하여 김정일에 대한 개인 대 개인 접촉차원의 선전매체를 보완하고 강화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그의 아버지의 후계자로 선택된 이유에 대하여 북한 인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 관찰자들에게 알려진 시기는 1977년 2월이었다.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연합인 조총련은 당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김정일에 관한 특별 강연집회를 개최했고, 주요강의와 학습지도의 내용은 일본 언론에 발표되었다. 그 자료들은 왜 김정일이 ‘위대한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인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위대한 수령의 혁명적 대업은 한 세대에 완성될 수 없으며 대를 이어 수행되어 나아가야 한다. 둘째, 다른 공산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위대한 수령의 후계자는 그에게 절대 충성해야 하고, 그의 사상에 완전히 정통해야 하며, 최고의 덕성과 영도력을 타고 나아가 할 뿐만 아니라 새 세대의 일원이어야 한다. 끝으로 김정일만이 이러한 필수조건들을 충족시키므로 그가 위대한 수령의 ‘유

일한 후계자'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sup>14)</sup>

드디어 김정일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당비서와 정치국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제3의 직책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일은 당 비서국내에서 그의 아버지만이 상위서열이고 정치국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상무위원회에 임명되어 서열 4위가 되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서열 3위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실제 권력에 있어서 김정일을 김일성 다음의 제2인자로 위치하게 하는 것이다. 김정일보다 서열이 앞서 있는 두명의 당 원로중 한 사람인 김일은 후에 사망했고 생존해 있는 군의 원로 오진우는 김일성보다도 나이가 많다. 1984년 초에 북한언론은 확실하게 오진우보다 김정일을 첫서열로 지칭했다.

김정일에 대한 정통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교화는 그에 대한 개인숭배가 시작된 이래 약화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그의 연설문과 논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다는 덕성과 업적을 찬양하는 작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강산 봉우리를 포함하여 그에게 헌납된 '역사적 유적지'는 늘어가고 있으며 그는 북한에서 아버지 다음의 제2인자가 되어 그의 이름으로 명명된 꽃을 갖게까지 되었다.

---

14) 조총련 자료의 일본어판은 Kita Chosen Kenkyu, *North Korean Studies*, Vol. 3, No. 34 (Mar. 1977), pp. 56-73을 참조.

그러나 앞의 방법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후계예정자의 가시적인 업적을 기록함으로써 미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권력승계와 관련된 교화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이 성취하였다는 업적의 선전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효율성은 많은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진실성(veracity)과 혜택(benefit)이다. 전자는 주장과 사실간의 일치성을, 후자는 그 선전된 업적이 실제 인민의 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의 정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혜택은 추정할 수 있으나 진실성은 가장 알기 힘든 것이다.

광범위하게 선전되고 있는 김정일의 활약상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가운데 일부가 혜택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숭배의 강화과정에서 행한 김정일의 역할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노동당 비서와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김정일이 이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후계자로 훈련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추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967년 6월 보천보전투 승리 30주년 기념일에 제막한 함경남도 해산의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의 구축을 명령한 사람은 김정일이었다. 또한 김정일은 학교와 직장에 ‘김일성 동지의 혁명력사 학습을 위한 공부방’ 설치를 명령했다.<sup>15)</sup>

15) Sakai Takashi, "Kim Jong-Il no Kenryoku kiban: Sono Keisei Katei o Chushi to shite" - (Kim Jong-Il's Power Base: With Focus on Its Building Process). 이 논문은 서울에서 1991년 4월에 동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1차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었음. p. 5.

김정일은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철저히 정치화시키는 주동 세력이었다. 그의 독려와 지도하에 모든 형태의 문학과 예술은 김일성의 항일 혁명활동을 찬양하는데 종사하는 선전 수단으로 변형되었다.<sup>16)</sup>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한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사실이다.<sup>17)</sup>

김정일은 또한 경제정책의 책임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속도전을 창조하고 북한 공장의 자동화를 감독하며 평양의 현대도시화를 지도하는 등 1970년 초반 이래 '3대혁명 소조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이들 중에서 생산성 증대를 가능케 한 공장자동화만이 혜택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3대혁명 소조운동'과 '속도전' 그리고 1988년 수행된 '200일 전투' 등을 통해서 산출증대를 꾀했지만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평양의 현대화도 북한인민들에게는 착잡한 축복이었다. 그 이유는 북한 인구중 오직 5-8%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수도 평양에 살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에 세워진 거의 모든 '기념비적 건축물'은 과시적으로 설계되었고 그 주요기능은 인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충족보다는 외국인 방문자들을 감동시키

---

16) Sakai Takashi, 앞의 논문, pp. 6-12.

17) Inoue Shuhachi, 앞의 책, pp. 128-143.

18) Inoue Shuhachi, 앞의 책, pp. 150-187.

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생각할 때 평양의 이러한 과시적 건축에 대한 기회비용은 너무 큰 것이다.

김정일이 인민들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지 여부의 관건은 그가 침체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sup>19)</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의 정당화가 기정 사실이 될 때까지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이다.

#### 4. 制度化의 問題

어떤 권력승제도 확고한 기반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김정일은 북한의 주요기관들을 포함한 권력기반을 견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0)</sup> 계승계획이 진행되어 온 지난 20년 동안 김정일은 그 목적달성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사카이 다카시가 그의 신중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은 세 종류의 전략적 영역, 즉 선전기관, 경제부문 그리고 군부에서 그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해 왔다. 더구나 그

---

19) 수년 동안 직접 체험하며 북한 경제를 관찰할 기회를 가졌던 독일경제학자의 이에 관한 평가는 Siegfried Scheibe의 강연, “기로에 선 북한의 경제 사회: 실상과 전망”을 참조. 본 강연은 민족통일연구원과 문화방송이 1991년 6월 28일 서울의 타워호텔에서 공동주최한 강연회에서 발표되었음.

20) B. C. Koh, 앞의 논문, p. 3.

성취방법이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식의 연속적 접근이었던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사카이에 따르면 김정일의 권력기반의 특징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조직적 또는 구조적 입장에서 보면 그 관장범위가 수평, 수직 양면을 망라하고 있다. 수평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세 중추기관을 망라하고 수직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 기초단위에까지 미치고 있다. 인사면에서 보아도 수평, 수직 양면 모두를 관장하고 있다. 수평적으로는 예술가, 과학자, 기술자, 관료, 군인 등을, 수직적으로는 구세대(항일계렬라 세대), 중년, 청년 등 모든 세대를 포함한다.<sup>21)</sup>

김정일이 선전부문에서 그의 경력을 시작하였으므로 그 부문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의 초기 작업의 하나는 김일성과 그의 동지들의 혁명적 활약을 북한 영화제작의 주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이 조직 선전선동의 책임을 맡는 조선노동당 당비서로 임명되기 약 10년전인 1964년 12월의 일이었다. 그의 지도 하에 예술과 문학은 철저히 정치화되었고 김일성 숭배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하였다.<sup>22)</sup>

김정일은 3대혁명 소조운동을 통하여 경제문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3대혁명’이란 사상혁명, 기술혁

21) Sakai Takashi, 앞의 논문, pp. 1-3과 pp. 42-43.

22) 위의 논문, pp. 3-13.

명, 문화혁명으로 구성된다. 김일성은 3대혁명의 동시 실천만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나아가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sup>23)</sup> 1972년 가을 김일성은 당원과 젊은 지식인들로 구성된 소조를 몇몇 공장에 파견하여 3대혁명을 지도토록 했다. 1973년 1월 그들의 보고서를 받은 후 김일성은 북한 전역의 공장과 농장에 소조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sup>24)</sup>

김정일은 1973년 초부터 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조원들은 공장과 농장의 간부들에게 사상과 과학 그리고 기술분야에 있어 도움을 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김정일은 소조원을 훈련시키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소조원들을 독려하고 도와 주었다.<sup>25)</sup>

1975년 김정일은 '3대혁명 소조운동의 획일적 지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sup>26)</sup> 실제로 이는 소조운동에 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사실상 김정일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북한 경제구조의 운용 그리고 문제점에 친숙해졌을 뿐 아니라 그 자신과 소조원간의 강한 유대를 형성하였다. 1990년 초까지 소조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수는 17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들을 김정일

---

23) Inoue Shuhachi, 앞의 책, p. 151.

24) Sakai Takashi, 앞의 논문, p. 14.

25) Inoue Shuhachi, 위의 책, pp. 152-156.

26) Sakai Takashi, 위의 논문, pp. 15-16.

의 추종자로 볼 수 있다.<sup>27)</sup>

김정일은 작업장에서 소조활동의 강조점을 당과 행정관료의 이데올로기 지도로부터 점차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그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공장과 협동농장에서 뿐만 아니라 철도 노동자, 군부대 그리고 과학자, 교원, 작가, 예술가, 출판 노동자, 의사 등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3대혁명운동에 입각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여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 받았다. 1990년 후반기 5,736단위에서 459,530명의 붉은 기수를 배출한 붉은기 운동은 북한전역에 걸쳐서 정치, 행정, 경제부문에 김정일의 영향력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sup>28)</sup>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정일은 또한 경제건설에 있어서 '속도전'이라는 방법을 창안해 냈다. 그 방법은 대중동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생산성 증가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교의의 주입을 포함하였다. 특별명령과 통제체제가 구축되었고 모든 '전투단위'는 임무수행에 대한 일일보고를 명령계통에 제출하도록 되었다.<sup>29)</sup>

김정일의 북한경제관리의 특징은 동원과 선동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그는 또한 북한경제를 개방할 수 있는 일련의 방법

---

27) 앞의 논문, p.18.

28) 위의 논문, p.17과 pp. 22-25.

29) Inoue Shuhachi, 앞의 책, pp. 166-173.

을 제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방법들에는 무역에 대한 강조, 합병법의 제정, 기업의 독립채산제 그리고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착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운동이 주목될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소비재의 부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서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 분배의 양면이 국가계획의 틀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시장사회주의의 제한된 실험을 의미한다.<sup>30)</sup>

요약하면, 김정일은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창조하고 오래된 지도계층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선도하며 북한경제의 명백한 관리자가 되었다. 아마도 북한의 권력승계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는 군부이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여기에서도 역시 서서히 강화되고 있다. 1975년 하반기에 발족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군부가 포함된다고 사카이는 추측하는데, 김정일은 이 운동을 통하여 군부에 세력을 확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항일계렬라 활동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조선인민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조선인민군의 창립일을 1948년 2월 8일에서 1932년 4월 25일로 갑자기 변경시킨 것과 연관이 있다. 변경된 일자는 조선인민군의 전신이라고 주장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창건했다는 날이다. 김정

---

30) 8.3 인민 소비품에 관하여는 다음 논문을 참조.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 12 (Dec. 1988), pp. 1268-1271.

일에 의해 시작된 이같은 움직임은 1978년 당시 조선인민군의 최상부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던 항일게릴라 출신들을 만족시켰다.<sup>31)</sup>

또한 조선노동당에서 김정일이 장악한 세가지 지위중의 하나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1990년 5월 그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장악한 정부기구내의 유일한 지위가 군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현재 북한 정규군 명령체계에 있어서 제2인자이며, 김일성 유고시 북한의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뿐만 아니라 인민경비대와 노동적위대까지 장악할 수 있다.<sup>32)</sup>

일반적으로 북한군대의 명령구조의 개편이 김정일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가정하지만, 1988년 2월 인민군 총참모장직이 오극열에서 최광으로 교체된 것과 같은 좀 미묘한 조짐도 있었다. 오극열이 김정일의 사람으로 알려진데 반하여, 최광은 항일게릴라 투쟁을 한 김일성의 오랜 동지였다. 군부 최고위층에 다른 노장 게릴라출신이 있는데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인민무력부 부부장 전문섭이 그 예이다. 그러나 김일성과 밀접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이 군부 고위층에 있다고 해서 김정일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sup>33)</sup>

---

31) Sakai Takashi, 앞의 논문, pp. 34-37.

32) 앞의 논문, p. 41.

33) B. C. Koh, 앞의 논문, pp. 10-11.

## 5. 展望 : 4가지 시나리오

숨가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년동안 진행중인 김일성의 권력승계 계획도 돌연 변화할 수 있다. 여러 가능성 중 다음의 네 경우가 관심을 끈다. 이는 단기 실패, 단기 성공, 중기 성공, 그리고 장기 성공이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김일성의 권력승계 계획이 그의 죽음 후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한다. 군사혁명이나 민중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지도자들과 새 정치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아무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본다. 아무튼 20년에 걸쳐 권력승계 계획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해 온 준비작업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권력승계 계획의 단기성공을 예상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1년까지는 잘 되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중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승계가 성공한다고 보는 이유는 오랜 기간 승계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당화 작업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1년 후까지 승계가 지속할지는 의심스럽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화의 주요변수는 후계자의 수행능력,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정일이 얼마나 확실한 혜택을 북한인민들에게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김정일이 현재까지 그 시험을 통과했

다는 징조가 단편적이거나 가능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김일성이 고안한 승계체제가 1년을 넘어 아마도 4-5년 정도는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후 혁명이나 변혁에 의해서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나리오 역시 앞의 두 경우와 같이 세습적 계승은 조만간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차이점은 시간, 예를 들면 얼마나 빨리 실패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승계계획이 즉시 아니면 일년 이내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승계에 따르는 정당화와 제도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상황을 개선시키느냐는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대부분의 관찰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길게, 적어도 6년에서 10년 정도 북한이라는 배의 키를 잡는 지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대정치에서 장기예측으로 여겨진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권력기반은 너무 견고하여 도전은 불가능하다. 그의 권력은 널리 정당화되고 제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착된 정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타성 역시 현상유지를 지속케 할 것이다.

위의 4가지의 시나리오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두번째와 세번째이다. 김일성의 승계계획은 단거나 중기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꿔 말하자면 이 계획

은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권력세습 계획이 아무리 시대착오적이고 격세유전적이라 하더라도 그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권력기반의 관리에 있다. 이미 진행된 정당화와 제도화 작업만 보더라도 승계계획 고안자의 사망이 승계계획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행중이거나 수개월 혹은 수년내에 다가올 후속조치들은 승계계획이 여러 해 동안 지탱할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북한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있게 북한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승계시기는 매우 중요하나 아무도 아직 그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죽음전에 주석직이나 총비서직중 하나를, 혹은 모두를 이양할 것인가? 만일 그가 끝까지 권력에 집착한다면 얼마동안이나 지속할 것인가? 1년, 2년, 5년 아니면 더 오래?

주변환경의 변모라는 면에서 볼 때 북한에 어떤 종류의 변화가 닥쳐올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든다면 1991년 8월 소련에서 실패한 쿠데타나 중국에서 발생한 민주혁명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북한에서도 일어날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환경을 실제적 그리고 심리적 양면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그 독특한 정치체제 즉 주체지향적 또는 북한식의 사회주의의 유지능력을 급

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다.<sup>34)</sup> 북한·일관계의 정상화와 크게 진전된 한반도내의 관계개선 등이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한다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전에 의한 경제적 성과는 김정일정권의 인민장악 능력을 강화해주고 김정일에 대한 정통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요약하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겨주려는 김일성의 승계계획은 북한땅에서 성장되어 온 특이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지속시키고 그의 영명함과 혁명적 업적의 신화를 보존하려는 노지도자의 시도로서 개념화할 수 있다. 김일성은 권력승계 계획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려고 거의 20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져왔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주요 장애와 더불어 승계계획의 정당화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미 다져진 기초작업은 적어도 단기 또는 중기에 있어서 순조로운 권력계승을 보장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

34) 북한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이라는 주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이 행한 다음의 연설문에 나타나 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5.27. 조선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처음 세 면에 김정일의 연설문을 복사하여 실었다.

# 轉換期 北韓의 政治文化와 市民社會

James Cotton (濠洲 國立大 政治學教授)

## 1. 序論

과거 사회주의 진영국가들 중에서 북한은 종종 마르크스주의에 가장 깊이 잠식되어 있는 체제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한때는 견고하던 정치사회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는 것을 볼 때, 북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게될 수도 있으리라 추정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건 발생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했던 것처럼,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사회' 세력이 북한사회에도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비교·역사적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첫째, 1989~90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표현된 사회주의 체제들의 변화 그 자체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된다. 둘째, 베이징과 하노이 체제가 상대적으로 끈질기게 마르크스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그 정치적 논리가 무엇이든간에) 이러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와 조직의 영속성은 어떤 지역적 (따라서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셋째, 북한사회의 갖가지 특성에 대한 정보가 빈곤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를 참고하는 것을 포함한 추론에 의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먼저 시민사회의 개념을 밝힌 후 그러한 개념이 사회질서에 대한 유교적 이해와 어느 범위까지 양립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체제는 ‘시민사회’를 말살 또는 통제하려고 했으나, 북한은 오랜 유교적 유산 또한 물려 받았다. 그 유산으로부터 추론적 이해가 가능하다면 국가권위가 약해짐으로써 시민사회의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유교체제의 붕괴와 1940년대에 있었던 공산주의 체제로의 교체 기간에 작용하였던 무엇인가서로 모순된 세력과 발전양태를 경험했다. 수십년 동안의 공산주의 통치가 사회구조와 기대양식을 규정지어 왔던 것처럼 이들 역시 그들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체제 창시자인 김일성이 열망하여 왔던 (그러나 모든 정치적 경험과 정치, 철학이 부인해 왔던) 불멸성을 김일성 정권이 실제로 성취하지 못한다면, 지도체제의 변화나 경제적 위기 또는 이들 양자에 의해서 국가권력의 약화나 거부까지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 권력과 권위는 다시 사회로 환원될 것이다. 그러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몇개의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에서 시민사회 그 자체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남한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흡입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질서의 구심점이자 기초가 될 시민사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남한 주도하의 통일가능성을 한결 높여준다고 하겠다.

## 2. 市民社會의 定義

서구의 정치이론에서 ‘시민’(civil)이란 말은 원래 ‘정치’(political)란 말과 동의어였으나, 17세기에 와서 ‘자연상태의 사회’(natural society), 이어서 ‘시민사회’(civil society)란 개념은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 또는 국가라는 개념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Keane 1988, 2장).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자 한 이론가들의 전략은 ‘자연인’(natural man)의 특성이라고 알려진 것으로부터 국가의 진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로크로부터 헤겔에 이르면서 가족보다 더 크고 다양한 집단들이 인류의 일정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하였다고 여겨졌는 바, 그러한 인간행위의 공간으로부터 자연 또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부각되었다. 비록 국가가 인간결합의 잠재성을 보완하고 완성하거나 혹은 시민사회가 수행할 수 없는 광범위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해졌다고 (또 그래서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그만큼 조화롭고 자주적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사회가 대표하

는 이익을 흡수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비록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민사회의 이익들을 조정한다거나 (Hegel) 혹은 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킨다고 (Locke) 하더라도 말이다. 아마도 이러한 입장은 로크에게서 가장 명료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국가가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권력과 그 권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국가가 그것에 부여된 임무와 신뢰를 남용하는 경우, 시민들은 저항하여 다른 국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국가들은 국가 형성 이전의 사회에서 향유해 왔던 자유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억압의 원동력이라고 믿었던 루소조차도, 제대로 된 국가라면 시민적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가 시민이 됨으로서 상실하였던 자유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헤겔의 접근법은 (여타의 전략 가운데) 국가가 초보적인 시민사회의 조합주의적이고도 자율적 성향을 보호할 필요성과, 그럼으로써 중간 집단들이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루소의 이론에 내재한 자코뱅주의의 잠재적인 악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Cohen 1982, 1장).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제반 활동이 국가의 고유업무와 명백한 갈등관계에 있지 않는 한 국가가 여기에 간섭한다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신념이다. 시민사

회의 영역은 설혹 그것이 인간집단의 우선적이거나 우월한 형태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적 조건에 필요불가결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의 이론가들이 인식해 왔던 것처럼, 적절한 정치적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민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

### 3. 市民社會와 東亞細亞의 傳統

‘자연인’의 개념은 동아시아 사상에 있어서도 없던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도교철학은 이런 개념위에 기초 (그리고 노자에게 있어서 자연상태는 명백히 우월한 내용의 인간결합 형태임) 하고 있으며, 묵자나 순자와 같은 다른 사상가들도 같은 개념을 사용했다. 사실 순자는 국가가 자연상태에서 부터 파생하는 희소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발달해 왔다는 견해를 진전시켰다. 비록 그는 (흙과 비슷하게)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받드시 그러한 기능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게는 인간과, 그가 필연적으로 한 부분일 수 밖에 없는 더 넓은 인간망 사이에 명백한 개념적인 구분이 없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이며, 가족 생활의 책무는 주어진 운명이자 동시에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이다.

유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욕구충족 특히 상업활동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기피한다고 하더라도)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나 이는 도덕적 욕구의 충족에 종속된다고 가르친다. 통치자의 의무를 논함에 있어서 공자는 잘못 인도된 백성보다 굶주린 백성이 낫다고 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국가가 물질적 만족의 기초 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같은 정책의 지시를 받는 국민 역시 신뢰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면에 있어 맹자의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에는 저항권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도 역할이나 세력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윤리가 모든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과 국가윤리의 본질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은 환영받지 못했다 (비록 법치주의자로서 한비자와 같은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우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진실인 것은 행위에 있어서도 유력한 동기가 된다. 이런 판단은 여러가지 '법치주의적' (따라서 권위주의적) 장치와 조치들로 이루어진 유교국가에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다.

한국에서 유교적 규범이 얼마나 강력하였나 하는 것은 역사적인 논쟁의 문제이나 그것은 확실히 심대한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한국 정부는 광범위하게 중국 본류를 모방했고, 유교적 영향은 고려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불교의 질서를 대체시키려고 한 초기 조선 통치자들에 의해

국가정책으로서 강화되었다 (deBary & Haboush 1985). 유교적 정부형태가 한국의 통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해서 실제 통치행위가 이론에 부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궁정에는 파벌주의가 만연하였고, 19세기에 대원군이 중앙집권화를 시도했으나 귀족들의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Palais 1975). 그러나 중국에서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현상은 차치해 놓고라도, 그 당시 정치적 갈등이 결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비록 전통적인 정부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단면일지라도, 파벌주의는 유교의 이론에 의해서 결코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실을 놓고 보면, 그 존재를 물론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도 개인주의의 개념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리 발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deBary 1983). 19세기 일본에서 월남에 이르기까지 인권 및 개인권리의 서구적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조어가 필요하였는데 그때 신조어를 지성적으로 보이도록 애썼다.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정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재가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공식적인 윤리규범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크게 결여된 시민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Wang 1980).

#### 4. 東亞細亞 歷史에서 市民空間의 形成 展望

최근의 동유럽 사태는 중국 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추세인 시민사회 출현의 징후들을 조사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정치적 상황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의 경험을 환기시키듯이, 비권위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정치적 요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중국 사회의 능력에 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한 사람들은 국민당정권 시기 혹은 19세기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되돌아 보았다. 이 중 가장 그럴듯한 논쟁은, 청나라 말기에 몇몇 지역의 지방 토호들이 국가의 직접적 명령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질서 및 공공업무들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에 관련된 것들이다. 공중영역의 대두에 대한 또 다른 예들은 역사가들에 의해 초기 공화주의 기간 동안에 있어 상해와 북경 그리고 화남지역에서 탐지되었다 (Rowe 1990; Strand 1990). 비록 이런 증거들은 역사가들로 하여금 중국 사회가 사회변동 수용의 잠재성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나, 그것들의 정치적 충격은 지역적이며 일시적이었다. 지방자치적 요소의 등장은 청조 몰락의 한 요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요소들은 곧 군벌주의의 파도에 의해 일소되었으며, 1927년에 창립된 국민당은 후일 중국공산당이 달성한 것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 통제를 열망

하였었다. 베트남에서도 기존 제국의 권위가 무너짐에 따라 프랑스에 대한 저항이 지방귀족들에 의해서 활발히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이르러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추종자를 가진 사회 정치적 집단들은 카오 다이와 호아 하오로 대표되는 특권적 분파였으며, 이는 바로 호지명이 이끈 ‘중국식 프롤레타리아’가 국가 지도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것을 용이케 한 것이다 (Woodside 1976).

한국의 초기 근대화 시도는 독립협회의 개혁과 지식인들의 개혁추진안에 대한 대중지지 부족으로 실패했다 (Chandra 1988). 한일합방 이전부터 일본은 서울에서 참여정치의 대두를 분열시키기 위하여 몰락계급과 반외세적 요소를 동원하였다 (Henderson 1968). 식민통치 기간 동안 노골적인 정치적 표현은 차단되었고, 정치의식이 높던 지식인들조차도, 전통적인 형태의 정치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문화 교육사업을 선행하여 그러한 전술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분리되어 있었다 (Robinson 1988; Wells 1990). 이때에 한국의 자본주의가 시작됐으나 그 자본주의는 시장의 발달에 대응한 자율적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에, 초기부터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후에 그것은 ‘재벌’이라는 형태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McNamara 1990).

## 5. 市民社會, 마르크스主義 그리고 東亞細亞 共產主義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비록 시민사회가 실로 인간육구의 충족과 관계있다 하더라도, 이 영역에는 노동의 공급자와 자본가들 사이에 기본적인 적대관계가 존재한다. 그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초기의 조합주의도 이러한 두 계층의 존재에 의해서 표출된 모순을 반영하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본 소유자의 이익이 우세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단지 노동계급이 지배하게 되는 조합주의를 고무시켰으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조합주의 그 자체의 몰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다른 계급과 계층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대한 레닌주의자들의 해석은 이러한 비타협적 강령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도구를 제공하였으나, 마르크스 자신은 이 점에서 명백했다. 그러므로 1850년대 프랑스에 있어서 (당시 마르크스는 진보된 자본주의라고 간주했는데) 마르크스는 그의 두 계급 모델이 많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프랑스 경제와 정치적 생활의 한 단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데 실패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단결하게 될 다수의 노동자계급에 의해 압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듯이 이들

자작농들에 의한 어떤 일관되고 독립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려는 주장을 즉각적으로 무시하였다 (Marx 1977, pp. 561-63).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레닌과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당에게 명확하게 이전되었다. 공산당이 그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어,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가 성숙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조건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보편적이라 함은 그것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떠한 영역이나 공간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개념은 마치 사유재산이 그런 것처럼 공산당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는 신유교적 요소를 이 프로그램에 투입시킴으로써 독특해졌다. 스탈린은 과거의 생산관계가 붕괴된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은 자본주의 사상과 야망의 잔재에 의해 내부로부터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자는 아마도 세대의 변천과 더불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어 공산당이 이제는 전인민의 당이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만의 당이 아니라는 후기 스탈린 시대의 공식을 갖게 되었다. 반면, 모택동에게 있어서 적과 우방들 사이의 갈등은 태도의 문제이며, 따라서 혁명의 초기국면에 진실로 최전선을 담당했던 동지들은 그들이 권력과 지위에 익숙해짐에 따라 인민의 적대자가 될 수도 있었다 (Wakeman 1973). 사회구조 보다는 차라리 의식이 혁명의 열쇠가 된 것이다. 즉 공산당에 의해서

도입된 사회 정치구조 그것 자체가 아마도 공산주의 목표에 상반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혁명의 저변에 깔린 사상이었다). 이 주장은 바로 성공적 혁명의 수행이란 주체사상을 실행하는 것이며, 김일성과 그의 친위집단에 완전히 충성을 바라는 (모택동의 사고와 거의 유사함) 북한의 주장에서 그 극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Cotton 1988). 결국 충성심이 태도를 대치한 것이다. 북한에서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충성의 가르침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구조의 틀에서 이탈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사상을 생산하기 위해 바쳐진 체제에서는 그럴 수 있는 전망이 거의 없다. 정치에서 분리된 사회적 영역이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6. 市民社會와 共產主義의 變遷

동유럽 공산주의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Arato 1981; Markus 1984; Pelczynski 1988). 문제된 정권의 보편주의적 야망은 대중적 무관심이나 불복종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포기되었거나 몰락하였다. 신스탈린주의하에서의 정치구조의 부패와 이기적 이익 추구 못지않게 경제운용의 실패도 이러한 변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들 정권이 생활필수품이나 무형의 재화에 대

한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는 동안에도 강제력만은 유지되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경제가 막 실험되면서 정통성의 위기도 고조되었다.

비공식적이고 특히 비정치적 활동으로 시작한 그룹이 국가의 영역 밖에서 그 힘의 분출 계기를 찾았다. 이들은 종교단체에서부터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집권당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떠한 정치기구도 기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정치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격렬한 내부 토론을 거친 후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의 자유연대 노조였다. 특별한 권리를 수호하거나 특별한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헬싱키체제와 함께 시작된 유럽 화해에 의해 재촉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존국가들과 불편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했다. 소련연방이 개혁을 추구할 뿐 만 아니라 개혁이 진행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동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명백해지자, 시민사회의 요소들은 국가와 경쟁을 시작하거나 국가권력의 약화로 인하여 남겨진 공간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이런 일반화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는 있다. 동독에서는 서독의 기존 정당들이 이와 같은 움직임에 신속히 대체하였고,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쿠 계승자들과의 갈등에 결코 필적하지 못했으며, 헝가리의 경우에는 집권당 내부로부터의 개혁 약속이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을 예상하였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흔히 시

민사회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대항 세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이다.

1989년의 천안문 사건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 진행의 경우, 시민사회가 그 해의 반정부 투쟁에 사회적, 이념적 기초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였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1978년 이래 10년 동안의 개혁은 중국에서 민간부문의 등장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러한 기반내에서 공산권력에 대한 도전이 촉진되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하였다 (Schell 1990; Strand 1990). 천안문 사건에 참가한 일부 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논평가들은 이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데 (Bergere 1991; He & Kelly 1991), 그들은 민주화 운동의 실패는 실제 운동에 앞장 섰던 학생,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도시 인민들 중에서 추종자가 숫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 반체제 운동가들은 새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건설하기보다는 대안적인 도덕적 비전에 고무된 새로운 그룹이 기존의 정치적 리더쉽을 대치하기를 (따라서 여전히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바랬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있다 (Pye 1990). 이러한 관점들 가운데 어느것이 옳든, 중국에서의 시민사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대한 한계점에 직면하였다.

## 7. 現代 東亞細亞에서의 市民社會

1949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국가에 의해 직접 통괄되지 않는 개인적인 정치참여의 유일한 형태는 인적 유대나 파벌 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뿐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모호성, 지도층 내부에서의 분열, 그리고 정권의 목표에 대한 인민의 동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동원전략의 한계성 때문에 이들 인적 유대나 파벌 관계들이 없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Pye 1988).

비록 어떤 면에 있어서 김일성의 지도력이 국가에 의한 사회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모델이 갖는 잠재력을 좀 더 이용하였겠지만, 북한 공산주의의 기본성격은 중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했다. 거의 일반화된 궁핍 상황에서도 개혁 이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견되던 시장이나 민간주도를 허용하려는 징후가 북한에는 거의 없다. 농촌지역에서 사적으로 농업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은 미미하다. 1980년에 발표된 산업의 지방분권화 조치는 그냥 말 뿐이었고 1984-85년에 입안된 외국과의 합영법은 어떠한 가시적인 결실도 맺지 못했다.

파벌이 극도로 산재한 당조직에서 출발한 김일성은 그를 추종하지 않는 어떠한 그룹에 의한 권력의 장악도 방지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비록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혼란

을 피해 왔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은 부단한 숙청 작업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고위간부들을 장악해 왔다 (어림잡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의 60% 정도가 새로 진출한 인물들이고 장수 위원들은 소수일 뿐이다). 그리고 가끔은 당이나 고위급 지도자 전부에 대해 선수를 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의 3대 혁명 운동과 1972년에 있었던 강력한 국가 대통령제의 도입이 보여 주는 것처럼) (Suh 1988). 이러한 전술은 부분적으로는 가족들의 수중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그의 욕망의 결과로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의 친족 (처음에는 그의 동생 그리고 나중에는 장남)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의도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인구에 비례하여 볼 때, 공산주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당원수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사회는 거의 유일하게 김일성 일당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이는 김일성이라는 천재와 그에 의해 친히 양육된 후계자 없이는 혁명과 당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고 명백히 주장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자 교리에 반영되어 있다.

전후 남한의 매우 다른 역사적 경험은 제한적이거나 비교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유용성을 제공해 준다. 비록 연이은 군부 집단이 민중에게 포괄적인 통제를 가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억압기구들이 설치되었을 지라도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은 조선노동당과 같은 정도로 국민을 복종하게 하는 대중적 기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체적 독재시기에 남한의 정당들은 영속성이 부족했고, 지도력

에서 파벌주의를 겪었다. 농촌 재건운동인 새마을운동도 도시 바깥의 주민을 동원하는데 부분적인 성공 밖에 거두지 못했다. 동시에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등장은 허용되지 않았고, 경제는 정부와 유착된 재벌그룹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하나 예외적인 요소는 기독교 (비록 당파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습적이며 가끔은 독특한 민족주의적 이념과 혼합된)에서 발견될 수 있다.

사회이론에서 개인주의의 발달과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장관계의 침투는 아마도 1960년대 이래 남한에서 시민 사회적 요소의 기반을 다져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초기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개인주의적 반응은 근대화의 요구들에 잘 적응하여 온 집단주의적 전략에 의해 대부분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Chang 1991). 일제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의 공생은 한국 자본주의의 큰 특징의 하나로 되어 왔다 (Woo 1991).

1987년 민주화여로의 전환과 함께, 소비자 운동의 시작, 자주적 노동조합의 증가, 그리고 문화생활의 부흥은 모두 새로운 의식의 출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정치적 군사적 인물들이 지난 시대부터 아직도 정부에 견재하여 남아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많은 과거 야권 인사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태 발전에 따른 정치적 영향의 한계로 지적된다 (Lee 1990). 공개된

일련의 부패 스캔들과 정부의 실정 (특히 환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선거의 결과는 노태우 정부와 새로운 정치적 연합이 대중의 큰 지지를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조차 정부에 대한 견제로서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수용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0여년이 넘도록 시장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왔고 민주화도 아직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출현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8. 北韓의 變化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온 시민사회의 개념이 북한의 경우에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에서 1989년의 사태를 발생시킨 몇몇 요소들이 북한에서 찾아질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주요 무역 상대국인 소련이 새로 채택한 경제 우선순위에 대해 평양은 이제 그들의 계획체제로서는 적응할 수가 없고 특히 1991년 부터 모든 무역거래를 경화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소련이 천명함으로써 인하여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점증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가 도처에서 붕괴되고, 김일성의 해외 동맹국 및 추종국 군단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감에 따라서 (지금은 피델

카스트로, 로버트 무가베만 남아 있다) 김일성 체제는 정통성의 위기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남한과 많은 양의 무역을 진행시켜 온 중국은 지금 공식적인 외교관계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남한의 노대통령을 만나 재정적 원조를 약속받음으로써 이미 이러한 단계에 진입하였다 (반면 고르바초프는 아직까지 북한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러한 위기는 그들이 북한 사회주의는 독특한 것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결점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세계 도처에서 경험하고 있는 개혁은 필요하지 않고 그것은 단지 제국주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데서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주제를 일반대중에게 설명한 김정일의 연설은 1991년 5월에 있었던 방송 첫날에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방송되었다) (North Korea News, #582, June 10, 1991). 그 위기는 북한체제가 그동안 집요하게 고집하여 오던 정책을 역전시키는 조치였던 UN 가입 결정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수세적 자세에서도 역시 감지될 수 있다.

지금 북한의 곤경상태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외부로 부터 흘러 들어오는 정보에의 접근을 (단파방송을 통해서나 정부가 배포하는 외국정보 초록을 통하여) 허락받은 소수 엘리트들만이 그러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것이다. 일반 주민들조차도 옛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대한 언급이 정보매체

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체제의 공식적인 강령에 대한 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사실로부터 이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일부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의 죽음 (현재 79세)과 김일성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그의 선택된 후계자 김정일의 명백한 능력 부족은 북한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 같다.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없애는 것이 언제나 어려울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 위기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조치들에 직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질서는 갑자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시민사회'의 취약성은 비록 이러한 과도가 혼란을 동반할지라도 헝가리나 체코의 모델보다도 루마니아의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비록 북한의 정치문화와 특수한 역사적 유산 때문에 태동하는 시민사회가 약하고 모순될지는 모르지만, 정치문화와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은 급속한 체제붕괴를 제어하는 힘이 될 것이다. 북한사회는 관료적 문화속에 고도로 관료화된 사회이다. 그리고 동시에 크게 병영화된 사회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이 고유의 체제로서 존속한다면 김일성 사후에 있어서 정치권의 중요한 인물들은 이들 분야에서 배출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볼 때 국가가 해체되어 발생할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북한판 자유노조가 탄생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차기 체제가 기껏해야 사회경제 체제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기초를 유산으로 물려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한편으로, 김일성 개인숭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기해야 하는 필요성은 결국 북한체제의 고유한 존재이유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의 평생 과업은 그의 독특한 체제를 불굴의 민족주의의 횃불로서 살아남게 하는 것이었다. 이 과업은 이미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있음을 인정하여 난처한 입장에 빠졌듯이, 앞으로도 점점 더 그가 공언한 목표는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만약 민족통일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보다 더 부유하고, 인구가 많고, 강력한 남한과의 통합이 합리적인 귀결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안고 있다. 그 자본이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획기적인 시장경제 프로그램과 정보개방 조치들을 수용하여야만 그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남한이 그것들을 직접 제공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어떻든 은둔의 왕국으로서의 북한체제는 포기되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제까지 크게 호언장담해 온 자급자족 경제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망쳐진 유산과 타협하면서, 북한주민들은 시장경제 체제, 특히 남한의 체제 운용에 대한 지식을 점차로 넓혀가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시작만 한다면, 남

한경제의 근접성과 역동성이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한경제는 북한경제의 10배 수준임). 이것이 (1989년 천안 문 사태와 같이) 단호한 조치없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부터의) 비교적인 증거사실들은 잘 시사해 주고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공산당 간부 그리고 전직 관리들이 중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해 온 것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유) 마찬가지로(Baum 1991) 북한에 있어서도 전문관료 엘리트들이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북한이 혼합 시장경제를 발전시킴에 따라, 한국의 분단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야기된 신념들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1919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중요한 세력으로 존재해 왔다. 민족주의적 표현은 식민지 시대에 아주 강력한 통제로 억제되었으며, 강대국에 의한 분단의 비극경험과 남북한간의 전쟁은 이런 아픔의 원인을 제공한 외국인들을 민족의 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점증하는 국력 및 국제적 위신과 함께 남한은 민족주의적 감정이 증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크게는 동아시아 전역) 세계주의를 초래하는 근대화이기는 커녕 민족주의적 요구가 전면에 대두하고 있다. 동시에 여러 비교적인 증거에 의하면 사회주의가 민족주의를 제거시켰다기 보다는 (스탈린의 주장처럼

럼) 오히려 적어도 동구나 소련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격세유전적인 표출은 보다 더 부화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대다수의 북한 정책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목표는 한국의 민족적 성취와 고유성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에의 호소는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일성의 경험이 하나의 과거지사가 되고 옛 사회주의 후원국들과 북한의 관계도 지금은 통상적인 국가 대 국가관계로 위축됨에 따라, 내재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의식은 결국(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고유한 북한체제의 포기로 귀결될는지 모른다.

이 밖의 시나리오 작성도 분명히 가능하며, 북한 변화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패턴도 절대적으로 미리 결정될 수 없다. 남한이 채택한 정책들은 북한의 발전에 상당한 관련을 갖게 될 것이며, 김일성은 그의 황혼기에 비록 그것이 그의 일생과 업의 실현을 향상시켜 줄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날의 추세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몇몇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소의 인민폭동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북한에 있어서의 엄격한 계급체제, 불완전하게 충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혹독한 처단,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한 배신된 약속 등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일거에 폭발시킬 수도 있다. 쇠퇴하는 정치적 결단과 김일성 이후의 지도력에 있어서의 분열 등은 부카레스트에서 경험한 폭동과 같은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체제능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 북한사회의 군사화 및 국가 전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그러한 폭동의 강도를 한층 더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비교 역사적인 사실증거에 의하면, 결국 북한의 변화는 첫번째 시나리오 즉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것으로 귀결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 9. 結論

북한이 가진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최근 경험에 있어서도, 동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시민사회의 출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경제적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는 김일성 이후의 시대에 그 체제로 하여금 개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특히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개혁의 역동성과 시장경제화는 통일에로의 운동을 분명히 재촉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ndrew Arato, 1980, "Civil Society Against the State", *Telos* 47:23~47.
- Richard Baum (ed.) 1991 *Reform and Reaction in Post-Mao China: the Road to Tiananmen* (N. Y.: Routledge).
- Marie-Claire Bergere, 1991, "Tiananmen 1989: Background and Consequence", in Marta Dassu and Tony Saich (eds.), *The Reform Decade in China: from Hope to Dismay* (London: Kegan Paul).
- Vipan Chandra, 1988, *Imperialism, Resistance, and Reform in Late Nineteenth-Century Korea: Enlightenment and the Independence Club*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Chang Yun-shik, 1991, "The Personalist Ethic and the Market in Kore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3:106-29.
- Jean L. Cohen, 1982, *Class and Civil Society: the Limits of Marxian Critical Theory* (Amherst: Univ. of Mass. Press).

- James Cotton, 1988. "Ideology and the Legitimation Crisis in North Korea" in David S.G. Goodman (ed.), *Communism and Reform in East Asia* (London: Frank Cass).
- Bruce Cumings,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W.T. deBary, 1983, *The Liberal Tradition in China* (Hong Kong: Chinese Univ. Press).
- W.T. deBary and J-H Kim Haboush (eds.), 1985,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 Y.: Columbia Univ. Press).
- He Baogang and David Kelly, 1991, "China's Civil Society and the Intellectuals"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London: Allen and Unwin).
- Gregory Henderson, 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George Hicks (ed.), 1990, *The Broken Mirror: China after Tiananmen* (London: Longman).

- John Keane,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 Manwoo Lee, 1990, *The Odyssey of Korean Democracy: Korean Politics 1987-1990* (NY: Praeger).
- Dennis L. McNamara, 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Industrial Enterprise, 1910-1945*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Maria Markus, 1984, "Constitution and Functioning of a Civil Society in Poland", in Robert F. Miller (ed.) *Poland in the Eighties: Social Revolution Against 'Real Socialism'* (Australian National Univ., Canberra: Dept. of Political Science Occasional Paper 18).
- Karl Marx, 1977, "On Bakunin's Statism and Anarchy", in David McLellan (ed.) *Karl Marx: Selected Writings* (Oxford: Oxford Univ. Press).
- North Korea News* (Seoul: Naewoe Press).
- James B. Palais,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Z. A. Pelczynski, 1988, "Solidarity and the 'Rebirth' of Civil

- Society' in Poland, 1976-81", in Joh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Verso) pp. 361-80.
- Lucian W. Pye, 1988, *Mandarin and the Cadre: China's Political Cultur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 Lucian W. Pye, 1990, "Tiananmen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The Escalation of Confrontation", in Hicks (ed.), 1990, pp. 162-79.
- Michael E. Robinson, 1988,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 William T. Rowe, 1990, "The Public Sphere in Modern China", *Modern China* 16:309-29.
- Orville Schell, 1990, "The Re-emergence of the Realm of the Private in China" in Hicks (ed.), 1990 pp. 419-27.
- David Strand, 1990, "Protest in Beijing: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in China", *Problems of Communism* 34: 1-19.
- Dae-sook Suh, 1988,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 Y.: Columbia Univ. Press).

- Frederic Wakeman Jr., 1973, *History and Will: Philosophical Perspectives of Mao Tse-tung's Thought*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Wang Gungwu, 1980, "Power, Rights and Duties in Chinese History",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3: 1-26.
- Kenneth M. Wells, 1990,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Sydney: Allen & Unwin).
- Jung-en Woo, 1991,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 Y.: Columbia Univ. Press).
- Alexander B. Woodside, 1976, *Community and Revolution in Modern Vietnam* (Boston: Houghton Mifflin).

# 北韓體制的 變化展望과 軍의 役割

李 錫 浩 (國防大學院 教授)

## 1. 序論

어느 국가나 세계정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세계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그 추세를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기본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민족과 국토의 반쪽인 북한이 우리와 다른 이념과 체제를 신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를 극복하여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세계정세의 변화 그 자체와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나아가 보다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그러한 변화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60년대에 북한의 외교정책은 중·소 관계, 미·소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소 틈바구니에서 ‘줄다리 기 외교’를 하여 대외정세변화에 적응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초 중·소분쟁과 미·소관계를 보고 소련의 대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중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기에는 중국의 문화혁명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때문에 중국보다는 소련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sup>1)</sup>

1970년대에 북한은 미·소가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을 인정하고, 미·중이 관계를 증진시켜도 이에 대해 반발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1975년 8월에 비동맹운동에 가입하여 제3세계 외교활동에 발판을 구축하였고,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1973년부터는 유엔에 발을 들여놓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1970년대에 북한은 무력으로 한국을 적화시키려는 전략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화를 갖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60년대보다 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1960년대, 70년대에는 국제정세(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대외정책, 특히 대남정책(전술적 차원에서)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시작된 소련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는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과 국제체제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성격은 정치적 측면에서 이념적·군사적 대결구조의 종식, 정치적 민주화의 유행,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경제개념의 범세계적 확산,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역할,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지역적 경제블럭화 현상 증가, 안보와 군사적 측면의 중시로 부터 정치·경제중심의 안보에로의 전

---

1) Chin O. Chung,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Alabama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8) 참조.

환, 국가간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즉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북한체제 환경의 변화는 과거처럼 단순히 대외정책의 변화만 갖고서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1978년경부터 중국이 점진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던 배경, 지난 몇년 사이에 일어난 소련, 동구국가들의 변화의 배경을 북한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갖고서는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군사적·경제적 경쟁을 할 수가 없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기본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차 북한은 다른 구공산주의국가들처럼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치체제와 이념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한반도에서 한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을 논할 때 어떤 사회세력 또는 집단이 변화를 주도하는지도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구공산주의체제의 정치권력 구조를 논할 때 정치 이데올로기파와 경제 및 기술관료파로 나누어 권력구조의 변화를 서술했다. 그러나 구공산주의체제에서 사회적 혼란이 매우 클 때 군대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였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인민해방군의 역할, 1982년 폴란드에서 야루젤스키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군대의 개입, 1989-90년 루마니아 사태에서 군대의 정권장악, 1991년 8월 소련에

서 개혁에 반대하는 쿠데타에 군대의 참여 등의 예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주어진 제목에 의하면 북한 체제변화와 군의 역할, 두가지 주제가 중점이다. 이 글에서 북한체제의 변화에 관해서는 첫째 체제환경의 변화가 북한 체제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북한은 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오고 있는가를 토의하고 군대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① 북한정권 수립 이후 북한군대가 북한 정치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왔나? ② 최근 체제환경의 변화가 북한의 군대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③ 장차 (1991~1995) 북한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군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연구에는 커다란 제한점이 있다. 필자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야기되는 편견 이외에도 첫째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변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반응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둘째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 정치권력 구조의 내부사정이 거의 바깥에 알려져있지 않아 군지도자들의 동향은 거의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상당부분이 필자의 주관적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 2. 體制目標와 軍隊의 役割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는 이념형(Ideal Type)의 사회체제 모델을 구축하면서 어떤 사회체제이든 4가지 기능 — 행태유지, 목표달성, 적응, 통합—을 갖고 있으며, 이 4가지 기능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체제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고 한다.<sup>2)</sup> 북한의 정치체제도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체제로서 최소한 이 4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4가지 기능 중에서 목표달성 기능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어떤 정치체제이든간에 ① 체제유지와 변영의 목표가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 체제유지와 한반도 공산화 통일), ② 경제적 변영 ③ 정통성 확보 등의 3가지 목표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한다. 북한도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기존의 영토와 주민들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 권한을 전한반도에 확대하려는 것이다. 체제유지는 소극적이며 최소의 목표이다. 북한의 경우 체제유지에 위협을 가하는 기본적 요인들은 대내적으로 김일성 지배체제와 주체사상에 반대하는 세력과 경제적 침체일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주한미군일 것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보다 적극적인 목표로서 전한반도의 공산

---

2)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k:Free Press, 1951).

화 즉 남한적화의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이 오늘날 불가침협정 체결, 남북대화, 남북한간에 고려연방제 방안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여 남북한의 이념적·제도적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체제목표가 공산화통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북한이 이 최대목표로 가는 길에 그 접근방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공산화통일이라는 목표는 변화될 수가 없다. 지난 40여년간 남한 적화통일에 관한 한 북한의 목표가 변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 두가지는 상호 밀접한 것으로서 체제의 존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남한의 공산화는 불가능한 것이며, 반면에 남한의 공산화가 달성되면 체제의 유지는 그만큼 더 증진되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국력의 증진,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 나아가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위해서 경제적 번영을 달성해야 한다.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경제정책 기조로서 자립적 경제건설, 중공업 우선, 군사·경제병진, 둘째 경제체제로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셋째 경영관리 방식으로서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제, 독립채산제, 사회주의 노력경쟁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sup>3)</sup> 오늘날 어느 국가이든 경제적 번영은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가 없이 독자적으

3)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1), pp. 99~116.

로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자립경제 정책을 강조하면서 가능하다면 자급자족 경제체제(Autarky)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강조하지만 자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3월 15일 「모스크바 방송」은 1986~1990년 기간의 쌍방간 무역 총규모를 1980년대 전반기의 2배가 넘는 94억달러로 설정했으며 같은 기간에 북한의 동평양 화력발전소 등 10여개 산업 대상을 지원하고, 2,700건 이상의 설계도면과 기술공정 자료 등 400 종의 기계 계기제품과 재료 등을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up>4)</sup>

셋째로 안보와 통일, 경제적 번영 이외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정통성의 문제가 단순히 국제사회에서 권위의 상승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정통성 경쟁 때문에 매우 민감한 목표이다. 북한체제의 정통성 확보문제는 체제안보의 문제이며, 국내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거의 모든 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정통성 목표와 관련되는 구체적 이슈로서는 김일성의 과거 경력과 지도력에 대한 우상화, 북한체제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

---

4) 「내외통신」(자료판), 제486호 (1986.6.6).

을 물려주는 세습체제가 있으며 대외적으로 북한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이 있다.

북한의 군대는 이 3가지 체제목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로, 체제유지와 한반도통일 목표분야에서 북한군대는 조국해방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현재는 한반도의 반쪽인 북쪽 지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며, 장차 언젠가 남조선 혁명이 있을 때 커다란 한 뭉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4월 북한군 총참모장 최광은 북한군대 창건 59주년 기념연설에서 한국전쟁때 북한군대의 공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전투력 위력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같이 싸움이었으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당의 위업,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보위하는 준엄하고 치열한 현대전쟁이었습니다.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면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의 땅을 피로써 사수한 수천 수만의 유명 무명의 전사들이 세운 전투위훈은 조국과 더불어 생사운명을 같이하여 당의 위업, 인민의 위업을 목숨바쳐 지켜 나서는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숭고한 충실성이 빛나는 발현이었습니다.”<sup>5)</sup>

---

5) “조선인민군 창건 59돌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방송」, 1991년 4월 24일 17시.

북한군대가 체제유지와 한반도 통일분야에서 현재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는 김일성이 정의한 ‘군대의 임무’와 ‘군사력’에 잘 나타나 있다.<sup>6)</sup> 김일성은 군대의 임무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는 임무이며, 다른 하나는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고 남반부의 근로자, 농민, 근로인민을 미제국주의자와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에서 해방할 위대한 혁명과업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군사력이란 것은 이미 얻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무력을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무력으로 보위하며, 또 앞으로 승리를 무력으로 보위하며, 또 앞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무력을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무력으로 혁명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군사적 힘을 말합니다.”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현대전쟁의 승리 요인으로서 정치사상을 다른 요인에 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 군사적 요인을 무시한 적이 없다. 김일성은 군사력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성취물을 지킬 수도 없으며 정치

---

6) 안전기획부(편), 『김일성군사노선, 1979』, pp. 251~265. 김일성군사대학 7기졸업식에서 한 연설,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1963.10.5).

적 역량과 경제적 역량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더욱 강화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sup>7)</sup>

북한군대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많은 공사장에 동원되어 북한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경영관리 방식의 하나로 ‘사회주의 노력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본래의 직업과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 예를 들어 당과 정부의 관리, 기업소 직원, 학교의 선생과 학생들 - 당의 계획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북한의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군대는 다른 직업과 달리 북한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해야만 하는 배경이 있으며, 북한군대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대는 혁명전통 중의 하나가 주민들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일성이 1958년 2월 제324부대에서 연설할 때 그는 항일 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항일 유격대의 사상체제, 사고방법과 사고기풍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항일 빨치산은 지주,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며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과 같

---

7) 김철만, “현대전쟁의 특성과 그 승리의 요인,” 『근로자』 1976년 8월, pp. 34~40 ;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68), pp. 77~96를 참조.

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정신의 전통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했다.<sup>8)</sup> 1963년 2월 8일 군창건 15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일성은 “주민들과의 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민들을 단계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9)</sup>

따라서 북한군대는 주민들의 문제 나아가 북한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게 해야만 “군대가 인민들 속에 튼튼히 뿌리 박을 수 있고”,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어떠한 강적도 타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sup>10)</sup>

북한군대의 병력 중에서 얼마만큼이 어떤 건설 작업에 동원되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군대의 병력이 농촌, 공업단지, 탄광지역, 주택 및 교량건설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군대의 건설사업 동원은 1970년대 이전부터 시작했으며 1980년대부터는 더욱 빈번하고 그 규모도 대단위 사업을 전담하는 식이 되었다. 지난 1970년대에 평원고속도로, 안주탄광 확장공사, 평양지하철공사, 미림갑문공사에 투입된바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

8) 안전기획부 (편),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김일성 군사노선』, pp. 30~39 참조.

9) 위의 책, “군대의 당사업 방향,” p. 81.

10) “군민일체의 전통성 미풍을 높이 발휘하자,” 『로동신문』, 1987.4.23.

태천발전소, 금강산댐 및 발전소, 남포갑문건설, 순천비날론공장, 사리원카리비료공장, 상원시멘트공장, 북부철도건설, 광복거리 및 안골체육촌공사, 능라교 건설, 능라도 경기장, 원산-금강산 고속도로공사,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사, 안주, 덕천 등의 탄광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 동원되었다. 지금 현재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일반주민들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대략 19개 공사장에 16만 정도라고 한다. 북한군대는 이외에도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작업도구와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며 나아가 광산에서 금을 채취하여 소위 ‘외화벌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군창설기념일이 되면 북한군대가 군사적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제건설 투쟁에 많은 공로를 세우고 있다고 그 업적을 찬양한다. 예를 들어 1988년 군창설 기념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제건설 전투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또한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당과 조국의 권위를 높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인민군대가 우리 인민들의 복구건설투쟁과 천리마대진군에 발맞추어 전진하며 일어세운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에 건설해 놓은 많은 갑문들과 운수시설, 문화기관들과 공장들은 지금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자력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sup>11)</sup>

11) “우리 인민군대는 창조와 건설의 군대, 혁명의 군대,” 「중앙방송」, 1988.4.23.

이제 북한에서 군대가 경제에 참여하는 형태는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민 지원사업이 아니며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갖고 있지않다. 실질적으로 북한 군대는 북한경제에 노동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체제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어떠한 집단도 군대 만큼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집단은 없다. 김일성이 권력투쟁을 전개할 때 군대가 그의 뒤에서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지난 40년간 군대가 북한의 고위급 정치지도자들의 공급처이었으며 또 군대는 북한에서 국가정책결정에 중요한 참여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군대가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에 다른 집단보다 더 밀접한 이유는 북한이 자신의 정통성을 항일 무장투쟁에서 찾고 있으며 오늘날의 북한군대가 이 무장유격대의 후계자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김일성은 이 유격대의 지도자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군대와 김일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전통'이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무력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로 조국이 해방되었으며 이제는 남조선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전통은 일제하에서 김일성이 세웠고 해방후 김일성이 계속 발전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군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그 혁명전통의 후계자이며 과거에 항일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처럼 현재도 앞으로 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혁

명전통을 논할 때 김일성과 군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일성과 군대의 상호밀접한 관계는 김일성 일인 지배체제 구축과 유지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1948년 9월 북한에 공산정권이 세워진 이후 수차례에 걸친 파벌간의 투쟁과 파벌내의 투쟁이 있었으며 이 투쟁을 거칠 때마다 김일성의 일인 지배체제는 강화되었고 드디어 김일성은 북한에서 ‘신’처럼 되었다. 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의 북한군대에 대한 신뢰성은 대단히 높았고 지금도 그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북한노동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민간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전 기간을 통하여(각 전당대회를 기준) 전자가 약 20% 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군인들의 재선율과 평균 재임기간이 민간인들 보다 훨씬 높았다.<sup>12)</sup>

북한군대는 80년대에 와서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김일성시대에 완수하기 어려우므로 대를 이어서라도 완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충성하는 전통도 대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군대는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는 충성을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도 바쳐서 부자세습 체제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군대의 주장은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

12)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Seoul, 1989), pp. 211~227.

의 혁명무력은 반세기가 넘는 간고한 투쟁로정에서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충실성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고 계승하여 왔다. 인민군대의 위력과 전투력은 이 위대한 전통을 어떻게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인민군 장병들은 전군이 ‘80년대 김혁이 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역세계 전진해야 한다.”<sup>13)</sup>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도 ‘충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자고 강조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위대한 영장의 품모를 빛나게 계승하고 그대로 구현하여 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전군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부대는 이 길에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충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sup>14)</sup>

오늘날 북한군대는 ‘영광스런 혁명전통’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부자세습 체제를 지지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제는 ‘영광스런 혁명전통’이란 개념 속에 항일유격대의 전통 이외에도 해방 이후에 대두된 “영도자를 높이 받들어

13) 『로동신문』, 1986. 4. 25, 사실 “조선인민군은 혁명위업을 튼튼히 보위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14) 오진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 『근로자』, 1987. 4. p. 27.

나가는 충실성의 빛나는 전통”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북한군대를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말하는 대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그 위치와 역할은 종속적이고 수동적이다. 즉 북한군대는 남조선혁명의 중요한 수단이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주체사상)의 보호자이며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국내의 다른 집단이나 대외적으로 한국 또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의 군대와 비교하면 북한군대는 권력의 핵심이며 모든 역할이 합법적이면서 참여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역할의 성격은 한마디로 매우 정치적이다. 정치권력과 긴밀하게 밀착된 상황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3. 體制環境 變化와 그 影響

여기서는 구공산권세계, 북한과 한국의 변화를 주로 서술하여 이러한 변화들과 북한의 체제목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토의하려고 한다.

공산권세계의 변화를 볼 때 언제, 어느 국가를 출발점으로 간주해야 될지 정확히 서술하기는 어려워도 의미있는 변화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오늘날 만큼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은

오늘날 소련변화의 기초와 소련국민들의 욕구를 잘 대변하고 있다.

오늘날 소련의 변화는 정치적으로 서구의 민주주의를 닮아 가려고 한다. 우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가 소련사회의 새로운 사회논리로 정착되어 정보의 접근과 공개가 정치의 기본원칙이 되어버렸고, 정치권력과 정책결정의 중심이 각 공화국으로 이전되었으며, 공산당은 이제 더 이상 소련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사유화 및 자유경쟁, 토지의 사유화, 시장에서 가격결정,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국제관계원리로 삼아온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론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고 군사 또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동안보를 주장하면서 ‘방어적 방어’와 ‘합리적 충분성’ 개념에 입각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변화가 북한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진다. 단적인 예로서 중국의 수상 이붕이 1991년 5월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당국자와 무엇을 토의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중국이 북한에게 한국의 유엔 가입신청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국의 커다란 변화이며, 이것은 북한의 유엔 가입결정에 중

요한 변수였다고 보여진다. 단지 중국의 변화가 북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그것은 중국의 개혁방식이 점진적이면서 대내외적 경제개방과 개혁조치를 정치이념과 체제와는 완전히 분리시켰고 또 정경분리 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분리의 한계성을 호요방과 조자양의 실각, 천안문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자신이 중국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중국 또한 자신의 변화가 북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북한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보여진다.<sup>15)</sup>

중국이 정치적으로 변화를 안했다고 하지만 외교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 문호를 개방하여 경제협력을 증진시켰고 대내적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사유재산과 사기업을 확대시켰으며 중국주민들의 해외여행과 국제적 접촉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북한과 중국이 의도적으로 차단하려 하여도 오늘날 중국의 모습과 중국이 택한 발전모델은 북한 지도자들이 가상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 접촉경험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중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15) 그 예로서 1978년 이후 등소평 이하 중국의 당 총서기와 수상 등 중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의 빈번한 북한방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변화를 “사회주의를 보다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진통”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북한은 절대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처음부터 그들과 전혀 다른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 방법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했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6)</sup>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변명하여도 그들이 받은 충격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 체제우월성 선전, 소련에 대한 비판, 대일 외교관계 추진 등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4~5년 동안 소련과 동구국가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 어떤 사건들은 북한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70여년간 군림하여온 공산주의체제와 이념이 1년여 동안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 서구식의 경제체제와 정치이념이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동독은 서독에 흡수되었고 루마니아의 지도자 차우세스쿠의 죽음, 특히 소련 공산당의 허무한 몰락과정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했을 것이다. 이 국가들의 정치 경제체제의 변화 방법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이념

---

16) 북한 조국통일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한시해가 1991년 1월 헬싱키에서 해외기독교인에게 행한 연설. “북한고위당국자가 바라보는 동구개혁,”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소(편),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서울:형설사, 1991), pp. 338~350.

과 이를 준거로 하는 정치체제가 독점적으로 그 주민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지난 1980년대 중·소, 동구 국가들이 변화하는 동안에 남북한간의 상호정책이 기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으며, 상대방을 보는 시각과 인식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 각각은 변했고 국제적으로 상대적 비중도 많이 달라졌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80년대 후반에도 연평균 8%, 이상을 기록했으며 '88년, '89년도 GNP와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은 북한보다 각각 10배, 5배이었다.<sup>17)</sup>

외교적으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두행사는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상승시켰다. '88 서울올림픽행사가 끝나면서 부터 시작한 동유럽국가들의 변화는 모든 동구국가들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과 소련의 외교관계도 1990년 9월 30일에 수립되었고 한국은 소련에 30억불의 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정치적으로도 1988년 2월 제6공화국 출발부터 한국은 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분위기 아래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한국이 대내외정책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정책수행의 결과가 성공적이었으므로 한국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

17)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국토통일원, 1990. 9, pp. 4~6.

북한의 경우에 경제성장이 계속 부진하여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정치지도자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도 확고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sup>18)</sup> 우방국가들의 변화에 대항하여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도 어느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지 못할 것이다. 한국처럼 북한의 경우에도 대내외정책의 변화는 없었으나 정책수행의 결과가 외부의 변화에 동조할 만큼의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다.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관계를 특징지운 냉전을 종식시켰다. 1989년 12월 2-3일 지중해 몰타섬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WTO는 해체되었고, NATO의 위상은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전구주 안보협력회의(CSCE)중심으로 새로운 안보체제가 수립되었다. 1990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가맹 24개국은 ‘구주지역 재래식무기 감축조약’과 ‘상호불가침선언’에 조인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 특히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를 - 지원하기 위하여 대소 최혜국대우, 10억불 차

---

18) 「내외통신」, 730호 (1991.2.8), “김정일 우상화 그 어제와 오늘,” 719호 (1990. 11.23), “김정일 권력세습 옹호 캠페인 전개”를 참조할 것.

관, 경제개혁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8월 쿠데타 이후 대소 경제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소련은 유럽지역에서 새로운 질서구축, 독일통일, 구주통합, 군비통제(INF, CFE, START)와 미국 주도의 페르샤만 사태 해결에 협조하였다.

걸프전쟁이 국제환경에 미친 영향 또한 크다. 걸프전이 국제정세 흐름의 방향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탈냉전 이후 세계 신질서 구축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냉전하에 있었던 동서간 대결양상의 종식을 확인하였고, 국가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법의 지배’ 원칙을 존중하게 하였다. 이를 위배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유엔 주도하의 국제평화와 안정유지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강대국간에 긴장이 완화되었다. 19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 이후 중·소관계의 정상화가 꾸준히 추진되었다. 중국이 제시한 3대 장애물 - 중·소국경에서 소련군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 철수 - 이 해결되었고,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 1991년 5월 중국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의 소련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상화되었으며, 상호 경제와 군사협력, 국경지대 영토문제 해결, 국경지대 병력배치 문제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일·소관계는 고르바초프가 1991년 4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거의 풀리지 않았으며, 양측이 노력한 평화협정 체결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양국간에 군사적 위협이 증가되고,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소한도로 소련은 일본과 북방 영토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북방 4개섬이 군사적으로 일본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sup>19)</sup> 소련의 국내정치 문제와 일본이 이 섬을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북방 4개섬은 일·소 평화협정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소관계가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양측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8월에 있었던 소련의 실패된 쿠데타 이후, 일본의 대소경협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북방 영토문제 해결과 일·소 평화협정 체결이 낙관적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구 공산권의 붕괴, 미·소간의 신데탕트, 동서간에 냉전종식이 일·중, 미·중 관계에 직접적으로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이미 1978년, 1979년에 각각 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의 변화는 어느 정도 중국 국내문제에 영향을 주어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였고 순조롭게 관계가 증진되어오던 일·중, 미·중관계가 악화되었다. 1990년 초부터 다시 관계정상화되는 추세이었으나, 걸프전과 소련 공산당의 붕괴로 중국은 미·일을 견제하면서

---

1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1. 6. 27. pp. 23~30.

접근을 자제하고 있으며 미·일 또한 중국의 인권문제, 해외 무기판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국의 상호관계는 80년대 중반을 현재와 비교할 때 동북 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하여 상당히 증진되었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소련의 변화, 미·소관계 개선, 중·소관계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 이 지역내에서 가장 큰 불안한 요인은 중국으로서, 국제정치 문제가 커다란 변수로써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소·일의 틈바구니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4~5년간에 일어난 국제정세 변화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첫째로 정치이념에 근거를 두는 국가간의 대결 또는 경쟁 방식은 퇴조하였고 이념의 상호인정과 공존의 시대가 되었다. 둘째로 각 국가마다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정치적 민주화 개념이 지배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의 몰락으로 그 반작용이 있지만 서구와 역사적, 종교적, 종족적 배경이 다른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민주주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로 세계적 강대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급국가들의 세력이 등장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 소련의 몰락, 유일한 초강대국이지만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미국, 반면에 통일된 독일의 부각,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EC의 영향력 증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나토의 군사동맹적 성격 약화 등으로 각국의 독자적 목

소리가 커지고 다양화되었다. 넷째로는 유엔의 역할이 증대되고 유엔 산하의 또는 국가간의 국제기구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걸프전쟁은 국가간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국제적으로 유엔을 통하여 제재한다는 실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관심은 환경오염 방지, 국제적 마약 밀매와 테러 방지, 자연자원 개발, 식량문제에 보다 많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조직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첫째로 국력의 기반으로 군사력보다 경제력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실증된 이후, 소련과 동구국가들이 서구의 시장경제 개념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전세계가 단일경제 체제로 되어가며, 둘째로 각국의 경제체제와 활동단위가 점점 국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역할,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보다 심화되어가고 있다. 셋째로 지역적으로 경제블럭화가 능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념을 중심으로 뭉쳤던 정치·군사블럭이 용이하게 실리중심의 경제블럭화되고 있다. 현재 EC,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멕시코), ASEAN,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경제블럭화 되어가고 있다. 넷째로 경제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려 하고 후진국은 일차상품의 수출을 지양하고 자원을 보호하려 한다. 선진국들은 과학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후진국에게 이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며, 이를 상품화하고 있다.

안보와 군사적 측면에서, 첫째로 군사력중심의 안보개념이 정치와 경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군비축소가 일방적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으며, 그 대신에 각국은 경제발전에 더욱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분위기가 성숙되었으며 미국과 소련은 점차 해외주둔 군사력을 철수시키고 자신의 군사력 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전략 및 재래식 무기의 상호감축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둘째로 중·소(中·小)국가들간의 분쟁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신무기 구입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군사력 증강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핵을 보유하려 하고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개발시키고 있으며 차선택으로 화학 및 생물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로 국제적 환경이 긴장완화 추세로 변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서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 종족 및 종교분쟁, 정치적 독재, 정치적 부조리 및 부패가 국가안보위협외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북한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이 변화들의 성격은 북한의 체제목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이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을 손쉽게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하

여 항상 위협을 강조해왔음으로 실제로 북한의 위협인식 정도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소련·동구 국가들의 변화 이후 북한이 ‘먹고 먹히는’ 또는 ‘흡수통합’이라는 용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경계심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991년도 김일성의 신년사를 보면 그는 소련·동구 국가들의 변화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곧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연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인민 앞에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라고 말하였고 4차 남북 고위급회담(’91.10.23~25)에서도 북한의 체제붕괴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한국측은 실감할 수 있었다.

북한체제는 첫째 목표로서 체제유지와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이 체제의 이념과 제도를 전한반도에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목표 아래 대내적으로 항상 북침위협과 남조선해방 사명의식을 교육시키면서,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대미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교차승인반대, 하나의 조선, 불가침선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가 이 목표에 주는 영향으로서 첫째 과거와 비

교하여 볼 때 한국을 공산화시킨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을 공산화시킨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시대적 착오이며, 현실적으로도 소련 연방체제의 붕괴, 남북한의 국력 격차와 주변4국과 한반도 관계를 볼 때 북한의 목표는 더욱 퇴색되었다. 둘째로 변화된 국제환경은 남북한의 통일이 대화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고무할 뿐 무력사용을 원치 않고 있다. 국가간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공동안보 개념에 두려고 한다. 셋째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대외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미·일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미관련 이슈들의 주장을 약화하고 있다. 넷째로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의도와 핵심이 변하지 않았지만 ‘한 국가, 한 민족, 두 제도, 두 정부’ 주장이라든가 나아가 유엔가입 등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어떤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로 북한이 경제적 번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립 경제정책을 기조로 하여 북한식 경제체제와 경영관리, 대외 경제협력 관계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첫째로는 북한은 경제정책 기조, 경제체제, 경영관리 방식에서 최소한 부분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① 현 북한의 경제제도와 법으로는 대외 경제협력을 확대시키기 곤란하며 ②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③ 생산성을 증가시키

기 위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동기를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하고 대한국 경제적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대내적으로 자본, 기술, 원자재가 부족하고, 대외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시켜야한다. 셋째로는 북한의 중요 경제협력 상대국인 소련, 동구국가들의 경제체제가 변했다. 이 국가들은 협력 방향을 서구쪽으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구식 경제원리와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즉 북한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립경제 정책은 국내적 요구와 새로운 세계질서와 갈등적이다. 새로 전개되고 있는 신세계질서 속에서 경제발전은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경제개념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정립을 강요하고 있다.

세번째로 체제환경의 국제적인 변화는 북한의 정통성에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항일운동 행적, 해방 이후 북한에 들어와서 전개한 권력투쟁, 독재체제 수립 이후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 등에 대해 증언과 증인이 나타나 지나간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존경하는 김일성의 '위대성'은 점점 그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로는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의 붕괴로 북한이 아무리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해도 동조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더욱이 부자간의 권력세습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셋째로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북한의

대한민국 열세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커다랗게 부각되어 북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주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가들인 중국·소련·동구 국가들의 변화가 갖고있는 의미를 요약하면 첫째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당 지배체제 포기(중국 제외), 둘째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들과 적대적 대결포기와 화해와 협력추구, 셋째로 서구식 시장경제 개념과 제도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중국 제외).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 충격을 준 기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세워놓은 3대혁명 역량강화전략, 그 중에서 국제혁명역량 강화전략은 현실에서 그 기반을 잃어버렸다.

#### 4. 環境變化에 대한 體制의 適應

오늘날 북한이 처한 상황은 1960년대에 있었던 중·소와의 관계 악화 정도가 아니라 체제의 생존이 문제시되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두가지 방향에서 체제를 적응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를 소리높이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변화를 하고있다.

먼저 지속적인 면에서 북한의 체제유지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이슈들을 볼 때 북한은 변화에 거센 반발을 보이면서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첫째로 북한은 소련·동구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길을 택했고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어도 그들과 동맹관계 및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1988년 9월 헝가리는 한국과 통상대표부 개설을 합의하였고, 1989년 2월 1일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을 때 북한은 “2개 조선 조작음모 가담행위,”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헝가리를 비난하는 「외교각서」를 발표하였고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 관계로 격하시켰다.<sup>20)</sup> 이렇게 격렬한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북한은 이 각서에서 “헝가리와 친선협조 관계발전을 위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 이후에 헝가리와 ‘상품유통 및 지불의정서’, ‘과학 협조계획서’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1990년 9월 초에 소련 외상 세바르드나제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하여 한·소관계를 설명하였다. 이 때 잘 알려진 것 처럼, 소련 외상은 김일성을 만나지 못했고, 외교관례를 깨고 북한은 소련에 전달한 외교 비망록을 공개했으며, 소련으로부터 무기수입 중단도 경고하였다. 한·소 외교관계가 발표(1990. 9. 30)

---

20) 「내외통신」 (종합판), No.39, 1989.1.1-6.30. pp. 105-108.

된 후에 북한은 10월 5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달리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라는 제목 아래 “이를 배신이란 말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력하게 분노를 표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당창건 45주년 기념행사(1990. 10. 10)에 소련인사를 초청하지 않았으며, 대소 수교 42주년(1990. 10. 12) 기념행사도 갖지 않았고 1986년 이래 매년 10월에 실시하여 오던 합동 군사훈련도 1990년에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에 대하여 어떠한 외교적 격하 조치나 공식적인 항의 성명서도 없었다. 1991년도 상반기에 북한은 정상적으로 소련으로부터 4개의 대표단(제1국방차관 콘스탄틴 코제토프를 단장으로한 군사대표단, 1.10~15, 수산성차관 보리소 모나코브, 2.23, 소·북한 친선협회 대표단, 3.18~26, 정부 과학기술협조 대표단, 3.18 ~ 26)을 초청하여 군사, 경제, 과학·기술 협력을 토의하였다.<sup>21)</sup> 북한은 우방국가들의 변화에 불만과 항의는 표시할 수 있어도 그들과의 관계를 격하 또는 단절시키기에는 커다란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건설과 군사력 증강의 협력대상으로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이 유엔가입을 신청했지만 한국 적화전략, 즉 한반도 통일전략이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외교부 성명에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기로 한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

---

21) 「내외통신」(주간판), 제751호, 1991.7.5.

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조치”라고 말한 것 처럼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한국과 평화공존하겠다는 의사가 없다. 어디까지나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것 처럼 고려연방제 방안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주장하는 ‘대화창구 일원화’를 반대하고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반정부단체 및 인사들과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한다.

셋째로 미국에 대한 시각과 인식, 나아가 정책에 변화가 없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며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에 최대 위협이며, 한반도 통일에 첫째가는 장애요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보다는 미국과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한다. 나아가 북한은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변화를 마치 미국이 사주하여 일어난 결과인 것 처럼 비난하고 반미·반제투쟁을 고취시키고 있다.

경제적 번영 목표와 관련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북한은 무역, 투자 유치, 자원개발 협력, 기술협력 등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세운 것도 없고(합영법 제외), 경제협력 대상국이 변하지도 않았으며, 상호교류의 패턴이나 규모가 변한 것도 없다. 북한의 경우 경제구조 및 국내법이 국제경제 구조와 어울리지 않

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단시일내에 확대시키지 못한다.

김일성은 1991년도 신년사에서 ‘우리식’의 경영방식이 제일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련과 동구에서 경제체제를 개혁하여 시장경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경영방법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북한경제 실무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으려는데 의도가 있다고 본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강조한다는 것은 중·소, 동구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개혁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유엔가입 결정을 발표한 직후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김정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sup>22)</sup> 경제와 관련하여 담화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보면 자립경제와 대안의 사업체계의 관리방식을 고수하여 시장경제를 배격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대외경제협력을 매우 경계시키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서구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길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를 허용하는 것으로써 경제적으로 예속화되어 궁극적으로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

22)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평양방송』, 1991.5.27.

그리고 무역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

체제환경이 변하였다 하여 북한이 자신의 정통성을 방어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역설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통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 변한 것은 없다. 현재도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창설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덕분에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김일성은 노동당을 창건하고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오늘의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세습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의 미래를 확고하게 보장하였으며, 김일성은 한국 5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오늘날 반미·반제투쟁을 하는 북한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한다.

그러나 중·소·동구국가들의 변화가 북한의 정통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북한은 보다 빈번하게, 그리고 보다 강하게 자신의 체제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북한의 노동신문과 방송들은 ‘체제 우월성’의 선전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고 있다. 1991년 5.26~6.1 북한의 방송들은 총 3백61건의 대내방송 프로중 67건을 북한사회주의 우월성에 할애하였으며 27일부터는 거의 90분에 달하는 김정일의 담화를 매일 수차례씩 방송하였다.<sup>23)</sup> 김정일의 담화문에

---

23) 「내외통신」(주간판), 제747호, 1991.6.7.

서 북한은 정치, 사상,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승계문제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역설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이 이처럼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변화된 측면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북한은 4차례에 걸친 변화의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충격은 1984년 5월~6월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국가 방문에서 왔다. 우선 김일성의 복장이 서구식으로 바뀌었고, 1984년 9월에 합영법이 발표되었으며, 1984년 후반기에 경공업 혁명, 서비스 혁명이란 용어가 북한의 매스컴에 종종 등장했었다. 두번째 충격은 1986년 10월 김일성의 소련방문이었다. 이때는 대내적 문제보다 대외문제에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김일성은 소련의 대외정책이 아·태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인지하여 소련과 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그해 10월부터 동해에서 소련·북한의 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고, 이미 소련 정찰기가 북한영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MIG-29의 대북한 제공이 당시에 약속된 것 같다. 세번째로 북한에 준 충격은 한국에서 개최된 '88 서울올림픽 이었다. 스포츠행사가 스포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남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한국의 모습은 북한 국내에도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정치적, 외교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북한은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에 과도하게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국내적으로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합영공업부를 신설하였다. 네번째로 북한에 충격을 준 사건은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변화이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미·일 접근을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가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제 목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체제유지와 통일목표에서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다. 북한이 유엔가입을 신청하면서도 이것이 한반도에 2개의 조선과 교차승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나면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전혀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므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로는 대미·일 접근태도가 과거보다 적극적이다. 미국과 북경에서 참사관급의 접촉을 17회(1991. 8. 10까지)나 지속한 그들의 인내심을 높이 평가할만 하고,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미국인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과거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스틸웰 장군을 단장으로 한미국제안보연구소 대표단을 받아들였다. 북한이 볼 때 대일 수교회담이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은 매우 저자세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일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한다. 북한은 네번의 대일 수교회담과정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두개의 조선을 3차회담(5.

20~22)때에는 ‘선수교 후배상’을 제기하여 조기수교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세번째로는 북한의 외교활동이 아시아에도 중요성을 두기 시작했다. 1991년도 김일성의 신년사에 의하면 북한은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시아 여러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1990년에 이어 '91년에도 아시아와 접촉을 증가시켰다. 금년도 1~2/4분기에 북한은 48개국에 58개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방문이 57%를 차지하였고 초청외교에 있어서도 1/4분기에는 24개 대표단중 11개 대표단이 아시아 국가로 갔다. 2/4분기에 아시아로부터 중요한 초청인물은 중국의 이붕 총리(5.3~6)와 전기침 외교부장(6.17~20)이었다.<sup>24)</sup> 이러한 변화는 탈이념적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국제적 신질서에 적응하는 조치라고 보여진다.

경제적 번영 목표와 관련하여 변화된 대내외정책으로서는 첫째로 잘 알려진 합영법 제정(1984.9)이다. 그리고 1988년 11월에는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무원 산하에 합영공업부를 설치했었으나 1990년 5월에 폐지하고 대외경제사업부로 통합시켰다. 1984년 9월 이후 합영사업실적은 북한으로 유치된 사업이 100건, 해외진출이 40건, 총 140건이라고 한다.<sup>25)</sup> 두번째로는 북한이 1985년부터 정무원 산하

24) 「내외통신」(주간판), 제738호, 1991.4.5와 제751호, 1991.7.5.

25) 「내외통신」(주간판), 제717호, 1990.11.9.

에 국가관광총국을 설치하고 종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광객만을 받아들이던 것에서부터 서방 관광객도 유치하기 시작했다. 1986년에 처음으로 홍콩과 오스트렐리아 관광객이, 1987년에는 일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아왔으며 북한은 1987년 9월에 세계관광기구에 가입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87년에 북한은 평양상업대학에 관광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요원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셋째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대아시아 외교활동 강화인데 그 주요목적이 경제협력이다. 소련과 동구국가들이 경제체제를 점점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고 있으며 동시에 이 국가들이 경제협력 대상을 서구국가들로 바꾸었으므로 북한도 기존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총리 연행목이 동남아 3국을 순방(91. 1. 29~2. 17)할 때 경제관료인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 김복진과 대외경제사업부장 정송남이 수행하였고, 태국방문 중 향후 2~3년안에 1백만불의 태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부총리 겸 무역부장 김달현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대표단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순방(91. 5. 28~6. 27)하고 상호 무역증진을 협의하였다. 넷째로는 북한도 경제특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두만강 하구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며 유엔 개발계획기구(UNDP)의 주관아래 남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몽골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sup>26)</sup>

26) 「조선일보」, 1991. 8. 10.

정통성과 관련된 북한의 대내외정책은 변화된 것이 없다. 북한이 자신의 정통성문제에 얼마나 예민한가는 제3차 대일 수교회담에서 KAL 858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의 일본인 가정교사 이은혜 문제를 일본이 거론했을 때 북한의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북한은 일본과 제4차 회담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정통성을 주한미군의 문제와 ‘하나의 조선’ 주장과 연결시킨다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자신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에는 융통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엔 가입신청과 핵사찰 수용은 간접적으로 미약하나마 북한이 자신의 정통성 문제에서 변화를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 목표 3가지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을 볼 때 북한이 변화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책은 기존의 방향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어떤 목표가 북한 정책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또는 방해하는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체제유지와 통일 목표가 변화를 추진하고, 정통성 목표가 반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경제적 번영 목표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통성과 관련된 이슈들의 변화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대내외정책 변화동향을 변화추진과 장애요인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촉진요인으로서 소련, 중국, 동구국가들의 변화, 국제적으로 동서간 냉전종식 - 서구에서 상호협력 진행, 아·태지역에서 긴장완화 - 북한과 상

대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권위상승, 북한 자체의 문제로써 경제적 낙후, 권력세습, 외교적 고립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대내외정책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첫번째는 정통성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김일성 개인의 정통성, 부자 세습체제, 북한식의 정치체제와 이념은 북한정책의 대외적 개방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다. 둘째로는 역설적이지만 주변환경의 변화이다.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변화, 냉전종식, 한국위상의 상승 등을 북한은 안보의 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루마니아와 동독사태, 중국의 천안문 사건, 개혁과 개방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소련의 쿠데타,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은 북한의 개혁의지를 감소시켰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북한의 경제적 낙후성과 외교적 고립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체제붕괴 의식은 현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할 것이다.

## 5. 結論: 軍隊의 役割 展望

북한의 이 목표들은 오늘날 대내외 정세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탈출구를 찾고있다. 이 목표들의 특징과 상호관계로써 다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이 목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목표가 정통성이며 동시에 똑같이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아도 가장 취약성이 적은 목표는 체제유지와 통일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전자가 정신적, 심리적, 가치지향적이고, 후자는 현실적, 물리적 성향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 번영 목표도 도전을 받지만 취약성은 그 중간정도이며, 정통성 목표와 안보와 통일 목표 사이에서 가교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체제유지와 통일목표는 대내적 성격보다 대외적 성격이 강하고 대외문제와 관련이 많이 있으며, 정통성문제는 대외적 성격보다 대내적 성격이 강하고 체제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경쟁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성격도 매우 강하다. 경제적 번영 목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내적 대외적 성격이 비슷하며, 상호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 대내적 성격이 더 강하다.

세번째로 만약에 북한이 각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체제유지와 통일 목표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변화시킬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 목표 경우에는 변화를 시키고 싶어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으며, 동시에 변화를 시도해도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분야이며, 정통성 목표의 경우에는 북한이 전혀 변경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야이다.

네째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경제적 번영 목표는 다른 두가지 목표보다 환경적응에 있어 강제적이기 보다 자발적 성향이 더 크며 가장 부작용이 적다. 그러나 북한

의 경우는 경제적 번영 목표가 체제유지와 통일 목표보다 정통성 목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변화의 한계성이 안보와 통일 목표보다 크다.

북한의 정통성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독특한 측면이 있으며, 오늘날 북한의 대내외정책 적용에 있어서 제일 큰 딜레마라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정통성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① 북한이 김일성 일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정통성, 정권의 정통성, 체제의 정통성이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②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서로 자신의 방식에 의하여 통일을 하려고 함으로 정통성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예민하고 과격하다. ③ 오늘날 공산주의체제와 이념이 국제적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우월성 주장은 매우 고립화되어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 목표들의 특징, 상호관계, 정통성의 문제점 등을 볼 때 장차 북한 정책변화의 결정적 변수는 정통성 목표이며 이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자연인 김일성이 결정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목표들이 이러한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현실과 제일 타협이 가능하고 정책결정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용이하게 변화가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분야는 체제유지와 통일 목표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두번째로 타협이 용이한 분야는 경제적 번영 목표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 자체가 변화를

시도해도 시간을 요하는 분야이다. 즉 북한에서 경제정책의 기초를 바꾸어도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여온 개념과 사고방식이 쉽게 변할 수 없으며 경제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이다. 더우기 북한은 경제분야의 변화가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 경제협력을 위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통성 목표와 관련된 이슈들은 제일 타협하기가 어렵고 변화되기도 어렵다.

장차(1991~95) 북한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 정세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북한은 김일성의 정통성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은 고수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유일한 정부라는 정통성 주장은 양보할 것이다. 둘째로는 대외적으로 미·일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내적으로 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현재 이상으로 긴장을 초래하지 않는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로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①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의 분리 ②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분리 ③ 대남정책에서 정부차원의 대화 교류를 실시하면서 통일전선 정책추진 ④ 대외적으로 정경분리원칙, 대내적으로 정경일치원칙 유지.

앞에 3장에서 토의한 것처럼 체제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북한군대가 보다 더 많이 체제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군대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에 참여하여 온 범위는 1980년대에 현저히 확대되었다. 1970년대에 비하여 '80년대에 경제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건설 공사장에 대규모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세습체제 완수를 위하여 군대가 “전군의 주체사상화”, “충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를 외치며 앞장을 섰다.

군대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김일성은 북한군대의 정치적 위상을 상승시켰다.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 회의에서 인민무력부를 국가보위부와 같이 정무원 예하로부터 중앙인민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였다. 북한은 또 1985년 4월 13일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장에서 차사로, 상장인 오극열, 백학림, 김두남, 이을설, 주도일, 김봉율, 김광진, 이두익 등 8명을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은 당과 군의 최고간부들로서 대부분 김일성과 함께 항일 유격활동을 하였고 연령은 60~70대 혁명세대들이다(오극열 제외).

오늘날 북한군대는 김일성이 일인 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권력투쟁을 할 때보다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보다 강화되었다. 더우기 경제가 계속 침체되었으므로 군대의 경제적 역할 또한 북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주변 전략환경도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어 군의 위치는 더욱 중요하게 되면서, 그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앞에서 장차 북한의 대내외정책은 체제유지와 한반도 통일

경제적 번영, 정통성 확보의 순서로 변화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군대는 이와 반대로 북한지도자들이 용이하게 정책변화를 시킬수 없는 분야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정통성 보호문제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에 중요한 대외정치, 경제, 군사협력 구조와 원리가 붕괴되었고 나아가 환경의 변화가 체제의 존재를 위협할 때 대내외정책을 변화시켜 적응해야만 한다. 이 때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지지세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정책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군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다.

북한군대는 김일성이 체제유지와 통일 목표와 관련된 정책들을 서서히 변화시킬 때(1991~1995), 한국에 의한 북침가능성(북한지도자들이 주장하는)을 억제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부자 세습체제를 보호하여, 대규모 건설공장에 계속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군대는 북한 체제수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디까지나 김일성 예하에서 종속적, 수동적이다.

북한군대는 어떤 경우에, 무엇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것인가? 그러한 경우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김정일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든, 또는 집단지도체제(김정일 + 경제, 외교, 기술관료 + 군)가 성립되었든, 다음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군대가 능동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는 주민들이 정치체제 또는 권력

의 정당성에 도전하여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둘째로는 경제침체가 계속되어 주민들의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셋째로는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즉 한마디로 군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체제 위기 의식이 상당히 증가되었을 경우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국가들 중에서 군대의 정치개입을 경험한 국가들은 중국,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등의 4개국 이 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동기 또는 목적을 체제(정치)개혁과 체제유지, 두가지로 나누어 볼 때 공산권국가에서는 체제유지 성향이 강하였다. 이 4개 국가들의 군대도 정치에 개입하여 당시의 공산주의체제를 유지 및 옹호하였지, 개혁이 그 목표가 아니었다. 또한 이 국가들에게서도 정치체제 또는 권력의 정통성의 저하, 지속적인 사회혼란, 경제위기,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 등이 군의 정치개입을 초래하게 된 배경이다.

북한이 반드시 이러한 국가들과 같을 수는 없지만 정치체제의 유지와 통치방식이 비슷하고 오늘날 북한군대의 정치적 위치, 지금까지 보여준 군대의 정치행태를 볼 때 군대가 능동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는 체제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을 경우이며, 이 체제를 개혁하기 보다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토 론

사회자 : 金一平 (미국 코네티컷대 정치학교수)

토론자 : 趙淳昇 (국회의원)

金英鎭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교수)

鄭鎔碩 (단국대 정치학교수)

김일평 : 감사합니다. 세 사람의 토론을 듣고 발표자들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조순승의원께서 먼저 시작하시는데 국회의원으로로서가 아니고 다시 학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박사!

조순승 :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학문보다는 실제 뛰어다닐 일이 많아서 논문을 다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일찌기 밀양에 갔다가 농민운동을 보고 늦게 까지 토론하느라 오늘 아침 상경하는 기차간에서 겨우 고병철 교수의 논문만 자세히 읽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공부 안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부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자세히 읽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세분의 좋은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독일의 백림자유대학에서 온 교수와 비교공산주의 운동이라는 세미나를 공동으

로 주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즉,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 보니까 하나 다르게 있다, 뭐냐하면 자기는 맑시스트가 아니지만 구라파에 있어서 주된 사회주의적 분석방법이라는 것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규정짓는다는 식의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멘트를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막스 베버같은 사람이 제기했었던 문제의식, 다시 말해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이 생산하는 것인가, 경제구조적인 문제가 우선인가 아니면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가 먼저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 약 3개월 전에 이북에 갔다오면서 이 문제를 늘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사회변화라는 것이 과연 김일성체제의 정치사상 또는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과연 유도될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가 들면서, 기본적으로 그곳의 체제를 흔드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현재의 경제사정이 아닐 것인가 하고 느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게 뭐냐하면, 북한에 갈 때 모든 것이 획일적일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적어도 저를 따라 다녔던 사람은(그 사람은 자기를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마 제가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급 인사를 안내원으로 붙였을 겁니다) 언동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양반은 군산중학교 출신

으로 김일성대학을 나온 다음에 일본대학에 가서 그곳 경제학부를 다녔고 브라질에도 가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일본도 일년에 두번 이상 갔다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라는 것이 김일성에 의해 획일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양반이랑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갔다 오는 약 10 시간, 그리고 그곳에 체류한 나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운전수 같더군요. 우리에게 벤츠를 한 대 내줬는데 그 운전수는 아무 말없이 운전을 하는데 그 안내원은 저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 운전수 양반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상당히 자기 사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가 여겨졌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동안 반대편으로 오는 자동차의 수를 하나하나 세어 봤더니 트럭 다섯 대 밖에 안돼요. 평양에서 원산을 거쳐 금강산까지 가는 거리가 300km인데 어떻게 해서 다섯 대의 짐차 밖에 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요 당신 일본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물동량이 없다는 것은 당신네들의 경제가 그만큼 침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소?” 그랬더니 그 사람, 아마 앞에 있는 운전기사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위대한 수령께서는 워낙 천재적이어서 모든 공장을 생산지 본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쿡 찌르면서

“여보시요, 그런 말을 같은 학자 끼리 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니 그 양반도 그냥 허허 웃어버립디다.

그러면서 현재 이북의 경제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 희망적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나 하면 일본과의 배상금 문제가 타결되어 1965년에 한국이 일본에서 돈을 들여왔듯이 북한도 일본의 돈을 끌어낼 수 있게되면 남한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함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9만 6천명의 조총련계통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왔는데 그 중 현재 가용한 노동력이 6만명은 된다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남한) 1965년도부터 공업화를 서둘렀을 때 창원 공업단지부터 시작했는데, 그 때 일본사람들의 공장이 들어왔으나 한동안 언어상의 문제로 기술 이전에 상당히 고전을 했던 반면, 지금 만일 원산이라든가 함흥, 천진에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면 자기네들은 (북한) 기술 이전을 하루 아침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본말을 일본사람과 똑같이 하는 노동력이 6만이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걸 가만히 들어볼 때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당연하지요.

이제 고병철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논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독일에 한 2주일 가 있었는데 브란트 전 수상을 만났어요. 그가 우리 김대중 총재한테 이런 충고를 하십디다. “당신의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점진적인 것은 아주 좋으며 또한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동독

과 같이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은 동독이 그렇게 빨리 붕괴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동독이 붕괴하고 난 후 그곳 사람들이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몰려오는 상황이 발생해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야당 총재로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붕괴했을 때에 대한 대안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아까 고병철 교수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했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까?

카튼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소위 시민사회의 구조적 형성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 또 제가 한달 전에 북경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저는 천안문 사건 이후에 중국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모든 것이 잘만 돌아가더라구요. 첫째로 북경의 경제교육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1990년에 자기네들이 무역에 있어서 61억불의 흑자를 냈는데 1991년에 와서는 100억불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천안문 사건이라는 고통은 겪었지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정경 분리정책에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소련같이 되어 버리면 사회주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데 중국적인 방법을 썼을 때는 둘다 성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북경에 한 일주일 있으면서 봤던 중국경제는 놀랍게도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구요.

이석호 교수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

의 북한 고급장성들이 소련이나 동구권에 가서 훈련을 받았을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북한 군대가 과연 김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충성심을 계속적으로 갖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회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근래에 소련에 약 3주일 있으면서 루스코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 러시아공화국 부통령인데 원래 대령 출신이었어요. 8월의 쿠데타를 방지했기 때문에 대령에서 소장으로 3계급 진급해서 지금 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루스코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탱크 연대장으로 가 있었는데, 공산주의 체제는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엘친이 앞장선 반쿠데타를 지원했고 현재 러시아공화국이 더 자유화되는 것을 도우려 나왔다고 말을 덧붙이더군요. 이러한 군인이 이북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김일평** : 마치 국회에서 하는 대정부 국정감사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김영진 교수께서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고병철 교수의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논문 발표를 듣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고 교수의 논문을 읽고 1975년 뉴욕 외교협회 주최 한국문제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아시아문제 전문가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와서 김정일 비서의 이름이 언급되니까 한 저명한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곧 “다들 김정일씨 운운하는데 그런 인물이 정말 존재하는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문헌들에도 김정일씨 운운하는 대목이 있더라”하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 대답이 “일본 문헌이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지원로서 유지되는 간행물이니 무슨 신빙성이 있겠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개월후 제가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젠 벌써 지금부터 약 16년전 이야기입니다.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당 간부와 의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있어서 제가 “김정일이란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나 실존하는 인물이나?”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 당 간부는 놀란 표정으로 “아니, 김교수가 어찌 그런 질문을 합니까?” 하더군요. 김정일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김정일의 직책을 물었더니 그것은 얘기할 수 없으나 당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병철 교수의 북한 정치권력의 승계문제에 관한 훌륭한 논문을 읽으면서 그 때 그 일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고 교수께서는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하여 네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2 또는 제 3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은 그러한

평가를 하실 때 어떤 국제적인 환경을 상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정세에 대한 여러 가설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성사될 확률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덩소평이 사망하여 공산당 통치가 붕괴과정에 들어간다고든가 혹은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노선에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또는 소련이 예측 못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나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 일본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시작되는 상황일 경우, 고 교수의 시나리오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현재 및 향후 북한정치에 있어서 김정일 비서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제와 오늘의 회의에서 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 않는 것을 저는 약간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튼 교수의 논문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저는 카튼 교수가 시민사회의 개념을 북한사회의 경우에 도입한 것이 매우 신선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카튼 교수는 시민사회의 개념이 북한사회에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동구 사회주의의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덧붙여 그는 시민사회가 약한 북한에서 만약 어떤 체제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헝가리나 체코의 모델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그것에 보다 가까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어떤 종류의 시민사

회의 개념이라도 권력승계나 리더쉽 변화의 문제를 과연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 쿠데타를 생각해 봅시다. 카튼 교수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난 다음 그의 지명된 후계자가 갖고 있는 명백한 무능력을 감안할 경우, 정치체제의 변동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언젠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부자세습을 통하여) 극복하는 경우, 그것은 오히려 체제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의심해봅니다. 논문 중에서 카튼 교수는 공유된 민족주의적 의식이 고립적인 북한체제의 포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제 질문은 어떤 과정이 이러한 포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누가 포기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체제에 대해 우호적인 북한 엘리트들이 그들의 체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정치지도자들입니까, 기술관료와 같은 북한 엘리트 구조의 일부 세력입니까, 군부입니까, 아니면 대항 엘리트들입니까? 카튼 교수가 논문 끝 무렵에서 대중봉기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 어떤 혁명적인 상황이 북한 엘리트로 하여금 북한 정치체제의 포기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카튼 교수께서는 이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1분 동안에 이석호 교수의 논문에 대해 코멘

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의 논문은 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여러 환경과 그 추세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유익한 논문입니다.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한 이 교수의 저서를 읽어 본 사람으로서 좀 더 군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북한이 이런 저런 여러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체제목표가 공산화통일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토릭의 측면과 현실을 규정하는 규범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측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과 이석호 교수가 말씀하신 견해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를 갖는 문제와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냐, 즉 실현을 위해 행동을 할 용의와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첨부하면 북한이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과 체제안보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생활수준의 향상이 결국 체제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북한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84년 2월 15일 발표된 김정일 비서의 논문에는 생활수준을 높여야 목숨으로 조국을 방위할 의욕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개념적으로는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와 경제협력 등이 분리되어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북한 측이 이를 결합하여 경제협력이 체제안보를 위해 공헌한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평 : 다음에는 단국대학교의 정치학교수로 계시는 정용석 박사께서 논평을 하겠습니까. 정 박사!

정용석 : 고맙습니다. 먼저 고병철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고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개념화, 제도화, 전망이라는 세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개념화나 전망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제도화에는 조금 보충설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 교수님께서 일본의 사카이 다카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인용 내용은 김정일의 정권이 김일성 사망 후에도 상당한 권력의 기반을 가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조직적 차원, 또 인사적 차원에서 상당한 개인적 지지자를 임명했고 결국 그 사람들이 앞으로 김정일의 권력을 떠 받드는 권력의 핵으로서, 추종자로서, 그리고 버팀목으로서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정일에 의해 배치된 이 엘리트들은 해바라기성

권력 추구자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으로 봐서도 그렇고 인간의 이기적 속성으로 봐서도 그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실례는 역사를 멀리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8월19일 모스크바에서 강경파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내쫓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두 고르바초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부통령도, 내무부장관도, 그리고 KGB의장도 모두 고르바초프의 심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상기한다면 김정일이 많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은 틀림없지만, 사태가 불안하게 변전될 경우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사카이 다카이 교수의 논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경우는 내무부 장관이나 부통령을 임명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기 사람을 1977년부터 고위직에 심어온 것이지요.

두번째 역시 제도화 문제내에서의 질문입니다. 한가지 첨가하고 싶은 대목은 김정일의 권력유지와 관련해서 볼 때 김정일의 개성 (personal character)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무모성, 폭발성, 그리고 그것에 인한 오늘날 북한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귀순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의 상당한 숫자가 수령님 시대에는 좋았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한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 때에는 별로 안좋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김정일에 대한 불신이 앞으로 과연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카튼 선생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선 카튼 선생님의 논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문화이론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선생의 성함, ‘면’ (cotton)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왕이면 면 보다 ‘비단’ (silk)으로 한 단계 높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카튼 선생이 북한의 정치구조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견지에서 분석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유교적 전통과 연관시켜 정치구조의 분석에 임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한 가지만 첨부하고 싶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과 서구에서 정치문화에 대한 논의가 무척 활발했습니다. 예컨대 가브리엘 알몬드-신생국가의 정치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문화라는 차원이 매우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환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정치문화가 카튼 교수가 말씀하신 시민사회라는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기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가 결여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구에서는 영국에서나 프랑스, 미국에서와 같이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혁명이 몇 백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카튼 교수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호 교수가 말씀하신 북한에서의 군의 역할에 관해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촉박하니 1분내 아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군은 수령의 군대고 당의 군대이며, 따라서 종속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일성 사망 후 북한에도 어떠한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날 때 군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김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북한의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겠는가 또한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질 때 친위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1991년 8월에 있었던 소련의 쿠데타 실패는 많은 것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교수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평 :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점심 식사 스케줄 때문에 세 분의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발표자들이 대답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표자들의 논문이나 다른 저서를 참고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토론이 북한의 현실과 이론간의 갭을 좁히는데 여러가지 공헌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第5會議

# 北韓 對外關係의 變化

빈 면

# 北韓의 政策變化와 北·日 國交交渉

오코노기 마사오(日本 게이오대 政治學教授)

## 1. 머리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북한이 정말 변화했는지, 변화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변화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있지만 1991년 9월의 대일국교수립 제안이나 1991년 9월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수용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외정책은 이미 크게 변화했다. 또한 1990년 10월 이후 김일성 주석을 위시한 북한 측 요인들의 ‘연방제 통일’에 관한 수정발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태도도 변화의 도상에 있다. 북·일간에 국교가 수립되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이 본격화될 것이다. 서울올림픽의 개최, 베를린 장벽의 붕괴, 한·소국교 수립, 소련의 ‘8월 혁명’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가운데 북한은 우선 국제정치의 ‘현상’을 승인하고 이제 다시 남북관계의 ‘현상’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진전에서 볼 때 가령 평양에 다이내믹한 정책 결정능력과 그 의사가 존재한다면, 현안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을 단행하고 유엔 동시가입의 실현과

남북총리회담의 진전을 배경으로 북·일 국교교섭을 급속히 진전시켜 그것을 북·미관계 개선에까지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부시대통령의 대규모 핵삭감계획은 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핵사찰 수용을 일방적 조치로 추진시켜 부시연설을 북한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껏 사태는 그렇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연형묵 총리는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의사를 부정하고 “미국이 실제로 남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핵보장조치 협정체결의 길도 열릴 것이다”라고 언명하고 있을 뿐이다.

## 2. 南北 共存體制의 摸索

돌이켜보면 서울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나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이나 동구제국의 정치변동 직전에 공표된 1989년 9월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의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발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들은 북한 지도부에게 북방외교와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을 적절한 시기에 표명하여 마치 새로운 정세에 주의깊게 대응하려는 자세를 예고한 듯 하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특히 노태우 정권의 통일구상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로동

당 제6차 대회에서 제안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대비시키면서 신중히 검토했음에 틀림없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의 새로운 통일제안의 최대 특징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향한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국가연합’(주권국가연합:Commonwealth)을 상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헌장(민족공동체 헌장)에 기초하여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함’을 주장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북한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과도적 단계 없이 ‘한 국가 두 제도’의 연방제 국가를 형성시켜 연방통일 주권정부(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의 지도하에 두개의 지역 자치정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새로운 통일제안은 최종적으로 총선거를 통한 ‘한 국가 한 체제’의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개의 통일제안 사이의 대립은 남북한 국가의 두개 주권을 인정하는 느슨한 국가연합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애초부터 연방통일 정부에 주권을 이양하는가라고 하는, 분권주의와 연방주의의 대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외관상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새롭게 제안한 ‘남북연합’과 김일성 주석이 주장하는 ‘연방제’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정도의 도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개의 구상에는 적어도 당분간 두체제의 공존을 용인한다는 커다란 공통항목 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측이 한국정부를 대등한 교섭상대로 승인하

고 남북정상회담의 마당에서 정치적 타협에 응한다면 ‘남북연합’을 ‘연방제’로 바꾸어 읽거나, 사실상의 주권인정을 토대로 양자간에 절충적인 형태를 고안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간에 ‘장기적 공존’의 토대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제안이 발표된 후 1989년 가을 동구제국에서 나타난 정치변동의 충격하에 북한측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재검토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정을 반년 앞당겨 개최된 1990년 5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일성 주석의 시정방침 연설은 여전히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는” 공정한 통일을 실현한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끝나 있다. 그러나 한·소국교 수립후 10월에 남북총리회담차 평양을 방문했던 강영훈 총리에게 김일성은 처음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정부, 두개의 제도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시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남북한의 통일제안은 결국 상호접근적 과정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다.

물론 김일성이 말하는 ‘두개의 정부’는 ‘두개의 지역자치정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연방제 방식’은 반드시 두개의 주권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국가연합’(노태우 대통령 제안의 ‘남북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북한의 통일논의가 ‘두개의 제도와 두개의 정부’의 공존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장래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포석으로서 주목해야 할지도 모른다. 1990년 11월 29일에 네팔 기자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도 김일성은 “조선의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개의 제도와 두개의 정부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조국을 통일한다”고 회답하였다. 한국이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북한 자체도 일본에 국교수립을 제안하는 상황하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도 이에 대응하도록 어쩔 수 없이 수정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1991년 1월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은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 정부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두개의 정부’의 공존만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이 단계적으로 완성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에 더하여 5월 초에는 윤기복 최고인민회의 조국통일정책 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총회를 취재하는 각국 기자단과 회견하고 “두개의 지역정부에 내정권과 일정한 외교권 및 군통수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하고 제2단계에서 권한을 연방정부에 집중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 모두는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의 권력관계라는 ‘연방제 통일’의 본질에 관계된 문제의 언급이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의 상당

한 접근이다.

가령 북한이 액면 그대로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 국가 한 체제’ 즉 북한측이 말하는 ‘단일제도에 의한 통일의 길’을 염려하여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반대하고 있다면, 한국에 의한 ‘흡수통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보아 오히려 ‘두개의 지역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든지 연방정부 주권을 ‘두개의 정부’에 위양하든지 하여 ‘장기적 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좋다”는 김일성의 언명에서 그러한 의욕이 간취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유엔 동시가입’이나 ‘교차승인’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을 방문했던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엔 동시가입에는 비정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통일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언명하였다.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북한 최고위급회담에서 ‘장기적 공존체제’ 수립을 위한 획기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연형묵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북남 고위급 회담이 좋은 성과를 올리면 최고위급 회담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연설했고 노태우 대통령도 귀국전 기자회견에서 “우리측의 한민족 공동체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하나로 묶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명했던 것이다.

### 3. 核査察 問題의 새로운 展開

1991년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서울올림픽 이후 1988년 10월에 있었던 그의 유엔연설과 달리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동북아시아 평화 협의회의(6개국 회의)에 관하여 아무 언급없이 오로지 북한의 핵사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를 남북한간 신뢰구축기구(CBM) 및 군비축소와 연관시켜 “북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우 통상병력의 삭감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 협의를 추진시킬 용의가 있다”고 언명했던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주한미군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포함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것은 일견 기묘한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었고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미국의 NCND정책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형식으로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정부가 핵무기의 존재나 개발을 부정하는 비핵원칙을 표명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분명히 두개의 ‘분쟁당사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현행 휴전협정의 부자연스러움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도 결국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과 한국

판 비핵원칙을 합친 ‘일본방식’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비핵 하이테크 무기의 도입 및 한국군 현대화에 의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와 북한의 핵사찰을 연계시켜 비밀리에 흥정하는 일도 바람직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남북대화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세속에서 1991년 9월 27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대규모 핵무기 삭감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전략 핵무기에 관해서 수많은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특히 비전략 전술핵무기에 관하여 미국이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지상발사식 단거리 핵전력을 폐기하며 해양배치 전술핵무기도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적어도 평시에는 ‘NATO에게 불가결한 항공기 탑재 핵전력’을 제외하고 미국이 해외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핵무기가 완전히 모습을 감출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비전략 핵무기 분야에서 미국이 취한 이니셔티브는 한반도를 포함한 중요한 분쟁지역에서의 전방전개 전략이나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비핵 반격능력을 유지해 왔던 점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3세계에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지구적 규모에서 ‘지역분쟁의 비핵화’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강한 결의의 표명

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걸프전쟁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 부시 대통령은 미·소가 협력하여 핵과 미사일의 확산방지에 온 힘을 집중시킨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분쟁의 비핵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정부는 종래부터 ‘한반도 핵확산’을 ‘동아시아 안정에 대한 제1의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맹했으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이 진전되어 한국이나 일본에게 핵개발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비전략핵무기 분야에서의 이니셔티브가 북한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은 자명하다. 월포빗츠 국방차관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핵확산 방지조약의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야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분명히 부시의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의 핵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이 신중히 배려했던 미국의 NCND정책 그 자체가 크게 수정되어 버렸고 한국으로부터 전술핵무기가 철거되면 이제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해 온 최대의 근거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태평양을 포함하는 규모로 실현될지도 모른다. 남아있는 미국본토의 전략핵무기는 본래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9월 28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실제로 남한으로 부터 핵무기를 철수하게 된다

면 우리나라의 IAEA와의 보장조치 협정체결에도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반응하였다.

북한이 실제로 핵사찰에 응한다면 이에 따라서 북·일 국교 교섭이 크게 진전될 것은 확실하다. 이미 북경에서의 제3차 교섭에 있어서 일본측은 ①IAEA에 의한 핵사찰 실시 ②남북 총리회담의 조기재개 ③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핵사찰이야말로 최대의 난관이었기 때문이다. 외부의 관심이 핵사찰에 집중된 결과 북한이 국제조약을 이행만 한다면 북·일교섭이 진전된다고 하는 기묘한 상태가 생겼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에 그 의사만 존재한다면 그 이상의 호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대담한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곧바로 핵사찰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로 남한으로 부터 핵무기를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핵보장 조치 협정체결의 길도 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북한측은 여전히 “미국은 남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 문제와 우리나라에의 핵무기 불사용 보장 문제에서 우리들과 회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남한이 우리의 비핵지대화 제안에 응한다면 북한의 ‘핵사찰’도 자연히 해결된다”고 지적하여 종래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후 또 다시 IAEA에 의한 북한 원자력 시설의 사찰과 북한 자신에

의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검증의 동시실시를 요구하게 될 것도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핵개발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문제를 한층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 듯하다. 다만 북한 지도자의 핵무기 개발동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독한 독재자의 특수한 심리상태와 떼어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의 핵무기 소유를 자신의 정치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담보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그러한 추측이 옳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핵무기 개발은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라는 것이 된다. 또한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단념시키는 일은 쉽지 않고 이를 대신할 보장조치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 4. 南北 共存과 北·日 國交交渉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을 목전에 둔 1990년 9월 평양을 방문한 가네마루(金丸)·타나베(田邊) 대표단에 대하여 김용순 비서는 약간 당돌하게 ‘조기 국교수립’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솔직하게,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일본정부 내부에 ‘국교수립 이전에는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요컨대 소련이 냉

전이라는 체제간의 장기소모전에 패배한 것과 같이 북한도 전후 40년 이상 계속된 한국과의 체제경쟁 특히 외교 및 경제분야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그외에는 자존심 강한 북한의 지도자가 일본대표단에게 국교수립을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북한이 대일 ‘국교수립’과 대한 ‘장기공존’을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그 기원을 거의 공유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서로 목적과 수단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한국과의 사이에 장기적 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일 ‘국교수립’은 대한 ‘장기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남북대화의 구체적인 진전없이 북·일교섭의 진전도 곤란하다. 물론 한국내에서는 북한이 대일 ‘국교수립’만을 실현시키고 대한 ‘장기공존’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설사 북한이 그것을 기도한다고 하여도 북·일 국교수립이 실현되면 한·중 국교정상화가 진전되어 교차승인은 완성될 것이다. 그러한 국제정세하에서는 북한도 대한 ‘장기공존’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이미 김일성의 신년사나 그외의 언명에서도 보이듯이 북한지도자들은 그러한 어중간한 방법을 실제로 부정하고 나섰다. 김일성 주석에 남겨진 ‘시간’은 얼마되지 않고 대일 ‘국교수립’은 오히려 대한 ‘장기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기회’로 생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북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그것을 다음 대에 계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5년 이상에 이르는 두 체제간의 승인 교류 협력의 토대위에 독일통일이 실현될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의 ‘국가연합’이란 형태의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간의 ‘장기공존’체제 위에서의 ‘통일’이라는 명분하에 얇은 베일을 감싼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형식적 통일’ 후에 두 체제간의 교류나 협력이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알갭게도 ‘실질적 통일’의 조기실현 기대에 거슬러 민중수준에서의 ‘통일바람’(통일 내셔널리즘)이 장기에 걸쳐 억제되면 될수록 통일은 평화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또한 김일성으로서도 북한체제가 장기에 걸쳐 존속되도록 정치·경제·군사적 보장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가령 북한이 그러한 ‘장기적인 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고 가까운 장래에 내부적으로 붕괴되도록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합’의 호기이기 이전에 한반도 안전에 있어 중대한 위협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정치적 위기는 루마니아형의 내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한 독재자의 심리상태를 상상하면 그것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흡수통합’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해도 통일후 독일의 예로 보아 현재의 한국이 그 정치적 및 경제적 ‘통일비용’

을 부담해낼 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장기적인 공존'은 북한에게만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불가결한 과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가령 '장기공존'을 위한 최고위급의 정치적 타결이 성립되면 그후 남북한관계는 단순한 '공존과 조정'관계에 머물지 않고 '경쟁적 공존'이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개방과 개혁없이 북한이 한국과 장기적으로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에 접어들면 남북한간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류의 '체제개혁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선의의 경쟁'이라 정의했던 바로 그것이다. 가령 북한이 일본에서 도입될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방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민생활의 향상에 성공하게 되면 남북한간의 '경쟁적 공존'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속성이 생길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과의 경쟁을 계속하려면 과거의 한국과 같이 북한도 수출지향성이 높은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 없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항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의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경제 개방이나 이념 및 정치적 통제의 완화는 국내정치를 불안정하게 하여 김정일 시대의 북한에서는 박정희 정권하의 유신체제와 유사한 '개발독재'형의 권위주의 체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권위주의체제의 단계없

이 북한의 정치발전이 직선적으로 진전될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북·일국교수립이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개방 개혁이나 정치발전(민주화)이 아니라 이를 위한 ‘기회’와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일 국교수립을 통하여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북한간의 ‘장기적 공존’체제를 토대로 한 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즉 한반도판의 ‘느슨한 2+4’이다. 그러한 목표가 명확히 인식되어 한국에 의한 ‘흡수 통합’이나 북한의 급격한 내부붕괴가 한일양국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되면, 북한과의 교섭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도 그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저절로 정해질 것이다. 북·일간에 존재하는 ‘불행한 과거’를 생각한다면, 과거의 청산이나 새로운 양국간 관계의 설정을 위한 교섭을 일본측이 거절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측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장기에 걸친 교섭을 각오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방은 접어두고 북한의 정치체제 개혁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것은 단지 점진적인 통제완화만이 아니라 주체사상 자체를 위시하여 혁명전통,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 생명체론 등의 이데올로기의 수정을 필요로 하고, 당정분리 즉 당과 수령에 의한 유일지도 체제의 시정과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화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7차 당대회 이후 권력승계가 명실공히 완료되어 경제재건이 궤도에 오르고 한국과의 ‘장기적 공존’체제가 견고하게 성장할 때까

지 북한지도부가 이들 과제에 착수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들 곤란한 과제의 수행이 지도부내에 정책논쟁을 초래하여 정책논쟁이 권력투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폭력적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 5. 日本의 役割과 韓·日關係의 將來

대일 국교교섭의 개시와 유엔동시가입의 허용에 따라 부분적이긴 하지만 북한은 국제정치의 '현상'승인을 결단하였다. 사태가 여기까지 진전된 이상 북한으로서도 남북대화만을 정체시켜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정책변경이 종래의 남북대화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 바꾸어 말하면 북한에 의한 국제정치의 '현상'승인이 필연적으로 남북관계의 '현상'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껏 '한반도의 분단을 고정화 한다'는 이유로 교차승인이나 유엔동시가입에 강력히 반대해 왔던 것이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현상'승인이 진전되면 다음으로 그것이 재차 국제정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듯 냉전종결은 남북한 자신에 의한 통일문제 해결의 기회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싫든 좋든간에 일본이 취해야 할 역할은 적지않다. 그 첫째는 대일 '국교수립'과 대한 '장기공존'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북·일 국교교섭과 남

북대화의 진전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이다. 그러한 방침하에 일본정부는 이미 ①북한측에게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 의한 북한 원자력 시설의 사찰 ②남북총리회담의 조기재개 ③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들을 북·일 교섭진전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너무 부각되었기 때문에 북·일교섭과 남북대화간의 연계가 경시되는 경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일간의 외교마찰을 회피하면서 전술한 공통목표를 달성시키려 한다면 북·일교섭과 남북대화 사이의 연계야말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취해야할 두번째 역할은 ‘배상’이든 ‘경제협력’이든 일본으로 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이전에 의하여 일시적일지라도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도와 남북한간의 ‘장기적 공존’의 토대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 경직된 정치·경제체제에 비추어 보아 북한지도자가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어느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런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기간시설이 정비되면 비교적 싼 값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집약형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곤란한 것은 오히려 경제의 대외개방을 철저화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협력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번째 역할은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과 인민생활

향상에의 협력을 통하여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후에 예상되는 정치체제 개혁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중국이나 소련의 전례에 보이듯이 대외경제 개방과 인민생활 향상은 마침내 경제체제 개혁을 필요로 하며, 경제체제 개혁은 다음으로 정치체제 개혁에 파급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두개의 체제’간의 거리를 조금씩 줄이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외경제 개방과 인민생활 향상의 결과로서 자연히 얻어질 일이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추진시키면 북한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는 일이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정치적 혼란은 점진적인 정치개혁의 시도를 종식시킬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역할은 일본이 결코 안보장치의 분야에서 기존의 역할을 종언시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북한에서 시도되는 실험이 불확실한 것이며 주한미군의 삭감이 대규모적인 것일수록, 미·일 안보체제와 한·미 안보체제가 미국의 중추적 역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한·일 방위협력’을 확고하게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장치하에 확실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눈에 띄게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하여 출현될 지역분쟁의 ‘불확실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걸프전쟁에서 실증된 미군의 긴급전개 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대한 군사개입의 신빙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또한 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현행 휴전협정이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게됨에 따라 그러한 사실상의 지역적 안보체제의 존재가 별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전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국제연합의 틀에서 이탈하여 먼저 직접당사자와 그 동맹국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유엔군이라는 허구로 부터 해방됨에 따라 남북한 직접당사자간의 군사적 교섭이 촉진되어 통일문제 해결에 바람직스러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아무튼 간접적인 ‘한·일 방위협력’의 의의는 증대할 수는 있어도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은 일본의 역할은 냉전종식 후의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추이로부터 추측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에게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자 그 자체가 곤란한 길이기도 하다. 예컨대 그것이 아무리 이성적인 선택일지라도 북한과의 국교수립과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의 이전이 한국 국민의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리가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자세 자체가 의심되는 듯한 상황하에서는 ‘장기적 공존’ 체제구축을 위한 노력도 한국 국민에게는 ‘분단 고착화를 위한 책동’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북·일 국교수립과 함께 북한에 확대될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관한 염려를 재연시킬 것이

다. 공존하는 남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그 자체가 오해를 사기 쉬운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한·일양국의 노력과 협력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실패의 댓가는 쌍방이 함께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은 너무나 커다란 희생을 수반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정책협의 뿐만 아니라 일본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적인 역할에 관하여 한국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얻는 일이다. 그것이 아무리 곤란한 일일지라도 그것 없이는 공존하는 남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이 이에 성공하여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어떤 형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 형성된 대일불신도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의해 해소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일본 외교의 호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北韓 對外關係의 政治經濟: 本質的 變化인가 戰術的 順應인가?

朴 英 鎬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1. 머리말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필자는 최근 북한의 방송매체에  
서 가장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는 김정일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담화, 김일성  
의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담화, 그리  
고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결정한 제46차 UN총회의 결의에  
즈음한 북한 외교부의 성명 중에서 각각 몇 구절씩을 소개하  
고자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  
양 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  
다.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능  
을 수행하는 정권기관과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으로부터 노동계급의 당을 대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영도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  
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결국 당의 영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 영도의 계승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김정일 담화내용, 「조선중앙방송」, 1991.5.27 06:00).

우리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조국통일 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참다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것 만큼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김일성 담화내용, 「조선중앙방송」, 1991.8.5 06:00).

유엔총회 제46차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유엔성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존중시하며 인류공동위업 수행을 위하여 우리공화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데 대한 진지한 염원을 뚜렷히 표시한 것으로 된다.

최근 시기 유엔가입이 국제적 공간을 이용하여 나라와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이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를 막기 위하여 유엔에 가입하는 결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북한 외교부 성명, 「조선중앙방송」, 1991.9.18 07:03).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북한방송중의 여러 구절을 소개한

까닭은 바로 그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명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지도 모르는 북한체제의 변혁압력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변화는 남북한 UN동시가입의 수용, 일본과의 국교수립 교섭, 미국과의 관계개선 시도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대외관계의 변화로서 북한정권은 대외적 차원의 변화로써 체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단의 정책변화로 유도한 대내외적 환경을 정치경제적 시각으로 살펴본 후, 과연 북한이 대외관계를 근원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와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검토해볼 것이다.

## 2. 北韓의 딜레마: 政治經濟的 視角

사실상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스탈린식 국가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가의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sup>1)</sup> 평양 당국을 이렇게 만든 요인들은 네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

1) EIU *Country Report No. 1*, (1991), p.9.

우선 세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본질적 변화를 들 수 있다. 냉전은 끝났다. 세계의 정치적 추세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소련은 이미 다양한 민주적 제도의 실험의 장이 되었다. 세계는 사기업 정신, 자유시장 체제, 신정보와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이룩되는 생산성과 번영을 재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 및 경제적인 세계적 추세는 오늘날의 데탕트가 미·소는 물론 전세계국가들의 국내외적 변화를 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sup>2)</sup> 국가간의 주요 문제는 과거와 같이 군사적이기보다는 경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제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신을 부여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인구폭발, 자원부족, 외채 등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국가간의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정책갈등 또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은 그 유효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경제 조차도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지 않고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게 되

---

2) 줄고, "신데탕트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전략과 한반도,"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1991. 봄), p. 287.

었다.

둘째로 동북아 지역적 차원에서의 변화이다. 우선 소련은 더 이상 북한의 맹방이 아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소련과 북한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끊어졌으며 외교·군사적 측면에서의 양국관계도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3)</sup> 한·소 국교수립과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강화가 증명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소련의 파트너는 한국이며 소련과 북한간에 유지되고 있는 군사조약은 사실상 한장의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편 중국도 이미 1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진행으로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권과의 단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며 화평연변(和平演變)의 위협을 경계하고는 있으나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고려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소련과의 화해된 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sup>4)</sup> 이러한 점은 금번 김일성의 중국방문 성과가

---

3) 소련의 기술과 원조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북한의 핵사찰을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태도라고 하여 확실한 반대입장이 보이고 있다 *Daily Report, Soviet Union, FBIS-SOV-91-179*(Monday 16, September 1991), p.13.

4)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련과도 이념적 연계고리가 단절되었으며 자국의 정치체제 변혁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선린 우호관계의 유지가 소련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1.9.18.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외무차관회담 내용; *Daily Report, Soviet Union, FBIS-SOV-91-182*(Thursday 19, September 1991), p.8.

불확실하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더욱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관계의 유지·강화보다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확대에 있는 것이다.

셋째로 한반도 차원에서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정부가 이룩한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에서의 성과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제 남북한 관계는 앞서 인용한 김일성의 담화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의 압도적인 우세에 대한 북한의 불안으로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한반도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이 옳지 않다’는 평양당국의 한반도 현실 인식은 근본적으로 남북한간에 확대되고 있는 국력의 차이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현재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230억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210억달러에 불과하며, 1인당 GDP는 남한이 5,140달러인데 반하여 북한은 930달러에 머무르고 있다.<sup>5)</sup> 이러한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와 더불어 그동안 열세에 있던 한국의 국방력도 90년대 중반까지는 누적투자비의 측면에서 북한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sup>6)</sup> 북한의 남북한 UN동시가입 수용에는 한국의 높아진 대외적 위신도 하

---

5) 헤리티지재단, 『미-아시아통계편람』 (1991), 「조선일보」 1991.10.6.

6)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White Paper 1990* (1991), p. 101.

나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한반도의 전략환경변화, 즉 미·일·중·소 4강 모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제도적 안정화의 추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내부적 요인이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보편적인 사실로서 지적되고 있다. 통일원의 북한 경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마이너스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자금부족, 기술낙후, 설비노후 및 생산의욕 저하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경제침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난과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7)</sup>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중국의 경제개방화가 증명하는 것처럼 중앙집권적 명령경제로서는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우 자력갱생의 경제발전전략은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화 및 제한된 해외시장을 가져다 주었으며, 특히 GNP의 1/4에 달하는 엄청난 국방비 부담은<sup>8)</sup> '우리식 사회주의'를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병목현상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은 북한 지도층에게 당연히 중요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7)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8).

8) 북한의 1989년도 국방예산은 41억 5천만달러로 GNP의 24%, 정부예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선일보』 1991.10.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영토, 자원, 인구의 모든 측면에서 제한된 자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그러한 변화의 압력을 극복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오늘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몰락이 정치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일지 모른다.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의 대안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체제만은 아니며 그러한 독재체제의 몰락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으로 남겨두는 것도 아니다.<sup>9)</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현 지도층이 단기적으로 현재의 정권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체제의 존속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상정한다면 대외정책의 조정은 그러한 목표달성을 이룩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상 어떠한 정권도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며, 정치지도자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외교정책상의 이니셔티브를 권력의 유지, 자신들의 위신 제고, 국민들의 지지확보 등을 위해 사용한다. 특히 장기적인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국내적인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예를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북한도 그러한 점에서 결코

---

9) Brian Beedham,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17, 1991.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 3. 外交政策 遂行의 影響要因

북한의 외교정책 또는 대외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북한정권의 외교정책 목표를 상정하고 그것을 준거틀로 하여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대외관계의 실상을 서술·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병철 교수는 북한 대외정책의 목시적 목표가 정통성·안보·경제발전이며, 이러한 기본목표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그 우선순위와 내용에서 3단계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10)</sup> 즉, 첫째로 북한정권 수립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북한은 위의 세가지 목표를 최대한도로 추구하였으며 따라서 최대화 시기(maximization period)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1970년대 초기에서 1980년대 말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절대적 정통성의 추구를 상대적 정통성 추구로 바꾸었다. 또한 안보 목표는 공세적에서 수세적으로 변화하여 이 시기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제시되었으며,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남한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활성화가

---

10) 고병철, “전환기의 북한 대외정책 - 국내정치 상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외국전문가 초청세미나 보고서(II)』 (서울:외교안보연구원, 1991.9), pp. 103~107.

주된 목표였다. 이 시기는 최적화 시기(optimization period)라고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는 최소화 시기(minimum optimization period)로 성격지을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전반적인 특징은 북한 외교정책의 모든 목표가 한층 격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통성은 체제유지가 목표이며 안보는 더욱 수세적이 되어 남한의 흡수통일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고 경제발전은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수립 이후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정통성·안보·경제발전의 측면에서 검토한 고 교수의 분석은 북한의 대외관계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내외적인 압박요인들을 북한이 대외적인 차원에서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 정권에 효율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한 나라의 외교정책의 주요 결정은 국내정치적 구조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up>11)</sup> 특히 이제까지 제한적인 대외관계만을 유지해온 북한으로서는 질적·양적으로 전례없이 중요한

---

11) Barbara G. Salmore and Stephen A. Salmore, "Political Regimes and Foreign Policy," in Maurice A. East, Stephen A. Salmore and Charles F. Herman (eds.), *Why Nations Act: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Comparative Foreign Policy Studies* (Beverly Hills: Sage, 1978), p. 103.

변모를 보이고 있는 국제환경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경우, 정권변동의 차원을 넘어서 체제존속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 북한정권의 외교정책 수행능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의 외교정책 결정은 정치국내의 핵심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되며 외교부나 당대회는 최고위 수준의 당 독재자에 완전히 부속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제도적인 정책결정과정은 한낱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극히 ‘예외적인’ 성격의 일당독재 동원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의 대외관계 흐름은 상당한 정도의 지속성 속에서도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적인 적응을 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점에서 북한정권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구조적 제약요건을 살핌으로써 문제를 보다 적실성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정권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건들은 적어도 세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즉 가용자원의 측면,

---

12) 이러한 분석에는 In Young Chu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955-1972: A Study of North Korea's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1977; 안병준, "북한 외교정책: 지속성과 변화," 박재규(편), 『북한의 대외정책』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줄고, "북방정책과 북한의 대외관계 - 대소련 중국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29집 2호(1989) 등이 있다.

자원 이용에 있어서의 정치적 제약측면, 그리고 자원이용의 성향측면이다.<sup>13)</sup>

우선 가용자원의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가용 자원이란 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사회활동의 범위, 정치제도화의 수준, 그리고 정권에 대한 지지 내지는 수용의 수준을 말한다.<sup>14)</sup> 사회활동의 범위란 구체적으로 외교정책수행과 관련되는 사회적 자원 - 천연자원, 여론, 인력, 산업생산의 규모와 방향 및 기타의 경제적 측면 - 에 대한 정권의 통제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부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한 정권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북한정권의 통제는 대체로 당·군부·정무원의 세 집단에 의해 분리·통제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sup>15)</sup>

즉, 금광, 석탄광, 대리석광 등의 천연자원과 대외무역은 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군사기업은 군부에 의해, 그리고 방직공장 등 민수용 기업은 정무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부분은 각기 생산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조절 메카니즘이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이 사실이라면,

---

13) 이러한 분석시각은 정권과 외교정책간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Salmore and Salmore, *op. cit.*를 따른 것임.

14) *Ibid.*, p. 111.

15) 이는 북한과 경제적 차원에서 접촉이 빈번한 중국의 한 고위경제인사의 증언에서 나온 것임.

비록 논리적인 비약의 결점은 있으나, 북한정권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의 극복을 위한 대외정책 결정 및 그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정권이 최종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자원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부족한 자본 및 기술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인 대외관계의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북한은 2차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현재 2차산업의 비중은 56.0%로 1차산업(26.8%)과 3차산업(1.2%)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다.<sup>16)</sup> 이는 북한정권이 체제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주의적 경제운용 방식의 전형인 계획과 동원 방식에 가장 적합한 형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친 중공업 일변도의 경제운용은 결국 소비재산업 등과 같은 여타 부문과의 지나친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경제발전을 보다 향상시키고 고도화시키는데도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통제적 계획화와 연관된 공업화 일변도의 경제구조는 점차 그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국제경쟁력의 신장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개방화와 개혁정치의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

16)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8), p. 4.

17) 조정남, 『사회주의체제론』 (서울:교양사, 1991), p. 198.

북한은 정치제도화의 측면에서 매우 고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사회 각 세력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잘 반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당과 정부의 각급 수준에서 관료제도가 철저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이다. 그러한 관료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관료제도는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급노선이라든가 대중노선에 입각한 체제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당관료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관료계급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전체사회를 장악한 왜곡된 관료지배 체제가 구축되었다.

소련의 예가 실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관료화 현상은 결국 체제의 역동성을 마비시키고 또 계층간의 불평등과 참여의 자발성을 무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또 다른 소의를 제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sup>18)</sup>

실제로 북한외교정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sup>19)</sup> 그러한 현상은 지난 5월 5일 행한 김정일의 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김정

---

18) Ota Sik, Marianne Grund Friedberg (trans.), *The Communist Power System* (Praeger, 1981), pp. 45~88; 조정남, 앞의 책, p. 196에서 재인용.

19) 최근 귀순한 전 북한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 일은

일꾼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건전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일꾼들은 사리를 추구하거나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해야 한다<sup>20)</sup>

고 언급하였다.

북한에서의 정책결정이 극소수의 핵심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북한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수용 또는 침묵은 고도수준의 억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정권의 대외정책 결정행위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무관하다는 점에서 높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침체에 따른 소비재부족이나 식량난, 에너지난 등은 주민의 생활개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내부적 불만을 누적시키고,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다시 북한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수준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자율적인 대외정책 결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사정에 관한 정보분석에 따르면 북한주민들 사이에 외국문물에 대한 선호가 증대하고 있으며 해외근무가 가능하거나 물품 및 달러 취득이 용이한 직업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1)</sup> 이러한 경향은 대외적 개방을 원하는 북

20) 「내외통신」, 1991.5.28.

21) 「통일속보」 91-21호(통일원 교육홍보국, 1991.7.23).

한주민들의 간접적인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교정책행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요인을 살펴 보기로 한다. 비록 정권의 외교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제약요인들은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제약요인들은 정권내부의 응집력 수준, 정치적 게임법칙, 그리고 정권의 대표성 수준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sup>22)</sup>

정권내부의 응집력 수준은 리더쉽 내부의 단결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이라는 교조주의 아래에서 리더쉽내부의 응집력 수준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45년 동안의 북한노동당 집권사에서 권력의 핵을 구성한 사람들은 단지 25명에서 50명 정도이며, 1차 당 대회에서 6차 당대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권력의 핵의 지위를 지킨 사람은 오직 김일성뿐이라는 사실은<sup>23)</sup> 리더쉽내부의 갈등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외교정책수행에 가용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능력에 미치는 정치적 제약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인지배체제의 북한에서도 최고위수준 이하의 엘리트구성에 있어서 일단의 변화징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재 혁명 제2세대는 대부분이 소련 및 동구 유학생으로서 전

---

22) Salmore and Salmore, *op. cit.*, pp. 112~13.

23) 양성철, “북한권력지배층 연구, 1946~90—조선 노동당 중앙위원 성분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1990), pp. 375~76.

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엘리트로 볼 수 있으며, 김정일의 세력기반인 혁명 제3세대는 이데올로기적 논리에 충실한 정치엘리트로 분류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체제가 ‘붉은 전문가’(red experts)를 양성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권력엘리트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으나, 기술엘리트들의 실용주의와 탈이데올로기적 성향은 권력 하부구조에서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게임법칙의 변화, 즉 정치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혁명 제4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젊은 계층 사이에 대두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은 하위수준의 관료계층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그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권의 대표성 수준, 즉 현정권이 얼마만큼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느냐의 척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우 사실상 외교정책 결정이나 수행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체주의 독재체제로서, 정책결정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층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 경제체제의 문제점, 남북한간의 생활격차 등을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의 외교정책 행위와 관련된 변수는 지도자들의 자원이용 성향이다. 이는 지도자들의 정책입장 또는 리더쉽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게임법칙의 변화정향과 사회의 자원기반 변화정향의 두 차원에서 살필 수 있다.<sup>24)</sup> 일반적으로 한 정권은 권력기반의 유지·강화 및 정책수행을 위하여 정치적 게임법칙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변화의 정도는 기존규범의 유지가 권력유지 및 정책수행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현상유지 정권으로부터, 기존규범이 권력강화 및 정책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려는 최대 변화정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현 김일성정권은 정치적 현상유지를 원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의 행태와 유사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기술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정권도 권력유지나 체제유지를 위하여 기존규범의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25)</sup>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규범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24) Salmore and Salmore, *op. cit.* pp. 113~114.

25) 전 북한외교관이었던 고영환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외교정책은 외교부의 김영남, 강석주, 고성순 3인의 트로이카에 의해 입안되어 김정일에 의해 거의 그대로 수용된다고 한다. 이들 3인은 외교분야의 기술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축적인 성격의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서울신문」, (1991.9.28.)

보인다. 즉, 중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중앙관리자에서 지방관리자에게 이양될 수 있으며, 주요한 생산수단은 여전히 국가소유이나 공장기업에 차용될 수 있고, 기업내에서도 노동자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경제자구의 노력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부업경리의 허용, 작업반 우대제 등은 이러한 규범변화의 시초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회적 자원기반의 변화정향 차원에서 보면 북한정권은 확실히 변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정권은 산업생산이나 자원의 이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자기업 설립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1~13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회의에서는 북한 최초의 민법을 채택·승인하였다. 물론 모든 민사 법률행위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아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컨대 소유권문제를 국가소유권과 더불어 협동농장소유 및 개인소유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은<sup>26)</sup> 북한사회의 자원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는 나진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유역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은

---

26) 「민주조선」(1991.4.19.)

산업화 및 천연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북한의 리더쉽 스타일과 자원기반 변화정향은 외교정책의 수행에 반영될 것이며, 이 두 차원을 결부시켜 볼 때 현재 북한은 현상유지적 정향(리더쉽 스타일)과 개혁적 정향(자원기반 변화)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만약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서 리더쉽 스타일이 체제유지의 목적을 위해 개혁적인 방향으로 흐를 경우 북한정권의 대외정책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더욱 잘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 4. 北韓 外交政策의 代案

김일성 정권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새롭고도 복잡한 국제정치의 게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과거 어느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어떤 한 이슈 -예컨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수용-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대처로서는<sup>27)</sup> 해결이 곤란한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을 포함하는 모든 당

---

27) 전 북한외교관 고영환의 증언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북한의 대UN정책은 남한의 UN단독가입을 저지하는 것이었으며, 증언자도 그러한 활동에 주력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소수교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친북한 국가로는 중국만이 남게 되었는데 걸프전쟁시 대이라크 제재에 중국이

면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북한정권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사실상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양성철 교수의 다음과 같은 두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김일성이 고르바초프처럼 될 수 있을까?” “절대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등소평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sup>28)</sup>

이러한 분석시각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체제의 파국을 앞당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당면 목표는 물론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를 국제적 쇼크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다면 어떠한 차원에서건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것임에 틀림없다. 소련이나 동구의 경우에서 우리는 때늦은 적응이나 부적절한

---

기권함에 따라 북한외교부에서는 1991년에는 남한의 가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은 다음 해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동년 5월 중국 이봉총리가 평양방문시에 김일성에게 동시가입을 권유함으로써 남북한 UN동시가입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김영환 초청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의 증언(1991.10.10).

28) 양성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 『신데탕트와 한반도안보』, 한국국방연구원 제2회 국제국방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대영사, 1990), p. 230.

정책의 강화가 궁극적으로 극적인 변화의 초래가능성만을 증대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 더욱이 북한정권의 변화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어떤 정치·경제적 개혁에도 반대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주체사상) 및 기존의 이해관계(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저평가하는 만큼이나 근시안적인 분석태도인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약소국가로서 북한은 한정된 정책자원 및 능력으로 합리적인 의미에서 다른 국가 — 특히 한반도 주변열강 — 에 대해 공세적으로 행동하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구조 역학관계상의 한계적 여분(niche)을 활용한다거나, 정치군사적으로 다른 유효한 정책적 선택(option)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자국에게 기대되는 능력이상의 색다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난 60년대의 중·소 갈등을 이용한 외교정책은 전자의 예로서 그리고 최근의 핵무기 개발노력은 후자의 예로서 간주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한 구성단위 및 행위자로서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 정책을 채택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 절에서 논의한 북한 외교정책수행의 구조적 영향요인들을 염두에 둘 때 북한정권이 금후의 대외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알버트

허쉬만은 이를 위한 분석에 있어 유용한 개념을 제공해주고 있다.<sup>29)</sup> 그에 따르면 자기가 속해있는 제도나 기구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반응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한가지 유형은 그 기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며(exit), 다른 유형은 그 기구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 불승인을 표출함으로써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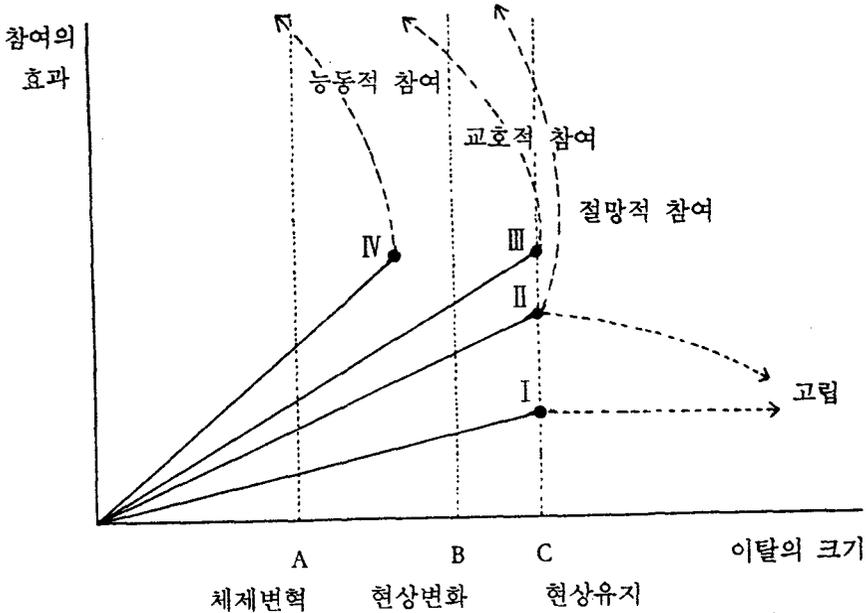
이 두가지 선택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있어서의 대안의 가능성과 효능에 따라 그 상대적인 효율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허쉬만의 모델은 분석단위가 개인에 한정되어 있으나 국제관계구조의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국가의 대응을 분석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북한정권을 엄청나게 좌절시키고 있는 현 국제 정치경제의 구조변화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적 대안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

29)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그 림>

참여의 효과 : 능동적 참여, 교호적 참여, 절망적 참여, 고립  
 A B C 이탈의 크기 : 체제변혁, 현상변화, 현상유지



주) Kuniko Y. Inoguchi, "Exit and Voice: The Third World Response To Dependency Since OPECs Initiative," Charles W. Kegley, Jr. and Pat McGowan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Policy Behavior* (Beverly Hills: Sage, 1981), p.269의 표를 북한 대외정책의 분석에 맞게 수정한 것임.

북한정권이 변화하는 국제 정치경제구조에 대응하는 정책적 선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voice)의 효과와 이탈(exit)의 크기 두 차원을 대비하여 볼 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국제사회의 변화에

마지 못해서 반응하는 절망적 참여, 국제사회의 변화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교호(交互)적 참여, 그리고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참여이다.

우선 고립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 보자. 이론적으로 이러한 정책선택은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또한 그러한 정책수행의 자원과 능력이 고도의 제약을 받을 때 가능하다. 이럴 경우 북한의 대외정책은 반제국주의 노선의 강화, 쿠바·베트남·중국과 같은 극소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이념적 연대강화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제환경의 변화과정과는 무관하게 최소한도 수준의 대외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제 정치경제적 현실은 물론 북한의 내적 환경의 변화도 이러한 대안의 선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로, 만약 부분적인 이탈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것의 효과가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매우 제한을 받게 되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변화요인에 수동적인 적응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국제관계구조의 변화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절망적인 참여로서 국제관계구조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대외관계의 변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특정한 이슈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전술적인 변화(순응)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 대안

속에서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적 입장을 변경시키지는 않을 것이나 정책적인 유연성의 일단을 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남북한 UN가입 수용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 협정 문안합의(서명은 지연시키고 있음), UNDP를 통한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구 등을 그 사례로서 지적할 수 있다. 정책적인 특징으로서 한편으로는 중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강화를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강화(특히 남남협조 강조)와 미국·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UN가입은 그러한 정책의 좋은 장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술적 순응의 효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북한은 이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현재의 국제 정치경제적 추세 및 북한외교정책 수행의 구조적 제약요건상, 고립을 택하는 것이 절망적인 참여를 택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북한은 다시 고립정책으로 돌아가거나 보다 더 유연한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립정책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타국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수동적 참여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북한정권의 대외정책 수행기반을 포함하는 권력기반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는 오히려 강화시킬 경우에 조심스러운 국제관계의

발전의 대안으로서도 가능하다.

셋째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긍정적인 접근태도를 보이는 교호적 참여의 정책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절망적 참여로 혜택을 보는 경우 이외에도 북한정권이 정권의 유지나 체제의 존속을 위해 동원가능한 정치·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절망적 참여를 통한 혜택확보의 가능성 조차 매우 낮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이다. 특히 세계정치의 경제적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국제관계에서 경제력 중심의 국가발전 조류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낮은 선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배제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대외정책은 과감한 수정을 보일 것이며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다무적인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강화는 물론 미·일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념적 차원에서부터 국가실리적 차원에서의 관계로 전환시킬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대외관계는 본질적 변화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체제나 대외정책 수행능력의 구조적 제약요건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책으로의 전환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의 정책적 대안은 국제사회의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소련의 경우는 이러

한 정책대안을 선택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은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의 극복은 단순히 새로운 경제정책의 도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는 물론 정치 및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재편운동(페레스트로이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소련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고르바초프 개인의 정치적 리더십 스타일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외교정책도 과거와 같이 군사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해결로써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절박한 국내적 필요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신사고 외교정책은 일단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수행으로서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세계적 조류가 상호의존과 다원주의적 정치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국내 경제도약의 절박성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본질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북한식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며, 외교정책은 이념적 차원에서 이탈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방위적 실리외교로 변모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사하였지만 북한정권이 이러한 정책대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현 시점에 있어서 사실상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상 현재 북한정권의 외교정책 행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조건은 김일성 개인의 리더쉽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도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철저한 통제체제의 비탄력성이 압도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정권이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대안은 절망적 참여로 보인다. 즉, 북한정권은 기본적으로 기존체제의 유지와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북한정권은 이슈에 따라 대응하는 전술적 차원의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대외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는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가능성으로 남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음말 : 對外關係와 政治變動의 딜레마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몰락이 세계 정치경제구조상의 본질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인 바 있다. 사실상 과거의 군사적 힘이 기능하였던 만큼이나 오늘날은 경제력이 일국의 안보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북한의 대외관계의 변화(변화가 있음을 전제)를 탐구하는 학자나 실무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정책당국자들 모두 북한의 경제적 실상으로부터 북한의 대외관계, 특히 대서방(미·일 중심)관계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는 그러한 관계의 발전

이 북한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북한동향은 분명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대외관계와 정치적 차원에서의 대내문제가 엄격하게 분리·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소련을 비롯한 구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적인 탈바꿈을 보면서 북한의 경우를 완전히 예외적인 경우로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하겠다.

앞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정권이 절망적 참여의 차원을 넘어서 교호적 참여나 능동적 참여로의 정책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 그들은 국제사회 참여에 따른 패러독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적 난관에 따른 체제불안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성공의 결과는 북한을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킬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다시 정치적으로 북한에게 극히 불리한 요인들의 유입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절망적 참여의 장기화를 불만스럽지만 선호할 것이나, 이는 북한의 경제를 다시 침체로 역전시키는 기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체제불안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자의에 의해 능동적 참여를 선택하건 타의에 의해 절망적 참여를 선택하건간에 장기적으로 정치변동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북한에서 귀순한 한 전직 외교관에 의한 현 북한관

료들의 자국체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는 극히 시사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관료들은 북한체제가 파멸을 향한  
낭떠러지를 향해서 일렬종대의 행진을 벌이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피해의식 때문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sup>30)</sup>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 독재체제가 덜 권위주의적이  
고 사회의 다원화를 인정하게 되는 체제로 이행하는 정치변동  
을 조만간 목격하게 될 지도 모른다.

---

30) 전북한 외교관 고영환의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의 증언(1991.10.10).

# 北韓의 政治體制 變化와 對外政策

Oleg Davydov (蘇聯 外務省 參事官)

##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국제관계에 있어 심각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국가간의 대결이 약화되고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변천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류는 국가간의 자유롭고 친밀한 교류에 의한 세계공동체의 출현으로 특징지워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공동체 안에서 각 국가들은 주권의 보장과 협력 그리고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값진 평화를 누릴 것이고 자율적인 발전과 생존을 위한 개별 국가들의 권리는 완전히 보장받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발전은 많은 국가들의 중대한 국내적 변화에 의해 규정된다. 현재 유럽과 북미대륙 나라들만이 민주주의의 요람인 것은 아니다. 진보적인 정치적·경제적 개혁과 개방에 대한 열망은 세계 여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소련영토에서도 성취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인류의 공통관심과 이상이 형성되는 한편 국가들 사이에 발전의 주요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좁혀지

고 있다. 즉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간의 존엄성, 정치·경제적 자유, 이념적·정치적 다원주의 원칙 등과 같은 가치들이 일반적 승인을 얻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가들은 전체주의와 억압과 인권침해를 거부하는데 연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 나라들은 발전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자신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모델들이 각국의 고유한 측면에 의해 검증받고 있다.

모든 인류에 공통된 가치를 지지하는 것은 세계를 두 진영으로 분리시키며 이념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대결의 장으로 만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투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사실상 이념과 이념분쟁은 더 이상 국가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개인과 정당활동의 영역으로 국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인류의 이념적 진화의 종말을 주창한 미국의 후쿠야마 교수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우선순위와 도전이 표출되는 역사의 새 국면으로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붕괴와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 냉전의 종식과 보다 평화롭고 협조적인 세계질서의 형성이라는 의미심장한 세계구조적 변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는 몇몇 아직 ‘굴복하지 않은 공산주의 요새’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북한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세계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새로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개방과 개혁의 바람을 거역할 수 없기에 평양이라는 요새의 ‘퇴색’도 시간문제라고 주장한다. 1991년 초 한미 국방관계 세미나에서 랜드연구소(Rand Corp.)의 오공단박사는 북한이 경제적 곤궁과 정치적 취약성 그리고 외교적 고립을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북한은 오랫동안 견지해 온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재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한국인 연구자는 북한은 1년 안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장래의 사회구조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확정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1)</sup>

사실 검증하는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 고수’에의 헌신에서 오는 손실은 개혁하거나 비능률적인 경제·정치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에 사회적 긴장압력이 증대되고 주민들마저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 등에 대한 추측이 퍼져 있다. 한편, 다른 분석가들은 북한의 행태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지적한다. 즉 일본과 몇몇 서방국들과 화해하려는 북한지도층의 배가된 노력이나 최근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결단은 북한이 보다 융통성을 보이며 해묵은 접근방식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적 지도부의 진실된 목표와 의도는 ‘물

---

1) *Korea Herald*, September 11, 1991, p. 2, "North Korea: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by Heung-Soo Park.

자체(the thing in itself)'처럼 알 수 없는 상태로 여전히 불확실한 문제이다.

## 2. 挑戰에 대한 漸增하는 負擔

북한의 사회주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고갈시킨 한편 새로운 발전요소들을 받아들여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대 말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시작하였다. 경제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화, 식량과 기본필수품에 대한 엄격한 배급, 심화되는 침체 그리고 소비수준의 저하 등은 경제·사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태는 지난 1-2년 사이에 더욱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소련이 북한에 대한 특혜원조를 줄이고 대신 균형 잡힌 상호교환과 세계시장 가격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는 상업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공산품과 농산품의 생산량 감소로서 표현되었고, 이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쌀 수확량은 80년대 600-650만톤으로 부터 1990년에는 500만톤으로 줄었다고 보고되었다. 매일 일인당 곡식배급량도 450-500g으로 감소되었다.

북한당국은 경제의 마이너스성장을 저지할 시기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상태를 호전시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방당국이 “중앙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지방자원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지방은 중앙정부로부터 더 이상 원조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자체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로동신문」의 사설은 열성을 보이고 재능을 나타내 줄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인민대중’ 사이에 정치적 설득작업을 확산시킬 것을 강조하였다.<sup>2)</sup>

1980년대는 북한당국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며 경제와 행정지도체제에 대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적 재조정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북한지도층은 중국의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주시하고 거기서 고무받았다. 중국식 개방모델이 북한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외국자본이 정치관료와 사회주의 이념을 배척하지 않고 도입되어 자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식 모델을 본 따 합영법을 만들었는데 첫번째 합영회사는 재일조선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경제특구설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경제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지도적 방식과 대비되는 자체자금조달과 자체운영체제 같은 경영수단의 확충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을

---

2) 「로동신문」, 1991.4.4.

시작한 이래 모순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면서 90년대에 들어섰다. 북한지도층이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9년 북경 천안문 사태 또한 공산주의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당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속의 작은 변화가 초래한 사태전 전이 함축하는 뜻은 마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요소들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작은 변화에도 전체 시스템의 궁극적인 붕괴나 지배계급의 제거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이었다. 즉, 공산주의 체제의 구조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의존되어 있으므로 급격하게 개선되거나 재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경제의 모든 구성요인들이 경직된 연계속에서 얽혀있는 북한과 같이 과도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과 같은 체제는 모든 요소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만 제대로 운영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 요소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 새로운 요소는 체제내의 다른 요소들과 모순을 일으켜 그 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을 회피하여 전체제를 위협하게 만들지 않

는 것이다. 사실 절대정권이란 그 통치를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에 저당 잡혀 있는 것이다.

개혁에 의한 발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 때문에 북한지도층은 동구의 이러한 선례를 따르지 않기로 하였다. 그들은 소련의 경험도 북한에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은 당국이 범한 실수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북한지도자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되거나 정정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선전은 ‘동유럽 현실과 비교될 수 없는’ 북한의 독자적인 발전양식을 지적한다. 그리고 동유럽국가들의 변형은 국내적 요인 때문에 요구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에 강화된 세계적인 투쟁의 결과로 간주한다. 「로동신문」은 “동유럽과 소련에서 나타난 위기상황은 인민대중 사이에 이념적 혁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당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잃은데서 기인되었다”고 보도했다.<sup>3)</sup> 「로동신문」은 또한 북한의 체제는 강하고 단일화된 당에 의해 지지되고 인민들은 독창적이고 가장 발달된 이념체계를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공식견해에 의하면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은 외국의 사조와 정치에 쉽게 감염된 데 반해 북한은 정치

---

3) 「로동신문」 1991.3.19.

철학의 주축으로서 주체사상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면역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혁을 요구하는 저항이 증대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새로운 현실은 북한지도층에게 인민정신의 함양과 사회통제 유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찾도록 만든다. 따라서 북한지도층은 주민들의 ‘한마음’을 확립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이념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다원주의적 정치이념, 경제자유화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념적 문화적 팽창’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켰다.

### 3. 變化潛在力의 蓄積

북한 정치체제의 기본적 특색은 행정지도력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분화되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에 대해 최대한의 통제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공산당은 정치체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와 사회 모두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한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조들은 당 조직들에 의해 침투되고 연계되며 지도를 받는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당은 사회전체와 제도를 통합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엄격한 통제는 개인들에게도 행해지며 개인들은 국가가 규정해 놓은 사회관계망 속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이

러한 체제하에서 사회관리를 담당하는 특권층에 중요한 역할이 할당된다. 그 위에 북한체제의 통합요소인 ‘주체사상’이 가치유형과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를 전체 속에 얽어놓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 사회는 ‘수직적’, ‘수평적’ 행정통제의 교차된 체계속에 둘러싸여 있다. ‘수직적’ 통제는 당과 안보기관들에 의해 행사되고, ‘수평적’ 통제는 노동조합이나 모든 성인들에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양식’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 청년, 농민조직 등과 같은 대중조직체들을 통하여 행사된다. 대중조직체들의 활동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되는데 사실상 이들 대중조직체들은 정권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산당의 부분들이다.

1950년대 중반에 형성된 이러한 체제는 현재에도 완전히 남아있다. 이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역동성의 결핍이다. 이러한 체제는 명백하게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체제가 외부의 변화나 국내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것에 실패하면 많은 모순이 축적된다. 즉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대신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내부에 숨겨지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들의 증대에 대응하여 이러한 체제는 보수적 반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념적,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실질적 방법들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변혁의 주요 동력은 주민들의 현

실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울러 의식과 태도의 발전에 있다.<sup>4)</sup>

이념교화에 기초를 둔 정권들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두가지 주요 단계를 거친다. 첫번째는 정권이 통합되었을 때인데 이 시기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교리와 선전구호가 주민들의 기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교리와 주민의 기대가 제대로 연결되면 이념은 주민의 체계화된 행동의 확고한 기초가 된다. 이 경우 이념적 열성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도층과 주민 사이에 연계고리 역할을 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남한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보여 주었던 듯이 이념은 물질적 보상이 충분하지 못할 때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 도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존속가능한 경제구조가 탄생하고 복지가 증진됨에 따라 공식선언된 이념의 역할은 줄어든다. 대신 성숙된 사회에 적합한 실용주의적 사고와 다원주의적 가치가 성행하게 된다. 어쨌든 첫번째 이념적 단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정권이 이념을 사회경제발전의 지침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정치적 이념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격은 넓어진다. 이 단계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특색은 ‘분열된 사고’이다.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공식적 선전에 무관심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 충성심을 표시해야 되는 이중성향을 갖게된

---

4)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채택되고 널리 이용된 자주이론은 김일성이 내건 주체 사상과 많은 유사성이 있다.

다. 개인 생각은 두개의 수준으로 분열되는데 첫번째는 정부에서 선언한 목표와 구호를 충실히 지지하는 수준이고 두번째는 상식이 통하는 수준인데 실제적 경험이 정부의 선전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게 하는 수준이다.

북한에서 ‘심리적 이반’이 확산된 전환점은 1989년에 개최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제였다. 북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관심을 쏟지 않았으나, 이 행사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심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이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에게 과시하려고 계획되었던 이 행사는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물자를 절약하고 노력동원을 하고 식량배급을 줄이는 등 주민이 장기간 극도로 긴장하여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일반 주민들은 그들이 초대받지 않은 향연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속았다고 느꼈다. 더우기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이 행사가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강요적 선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가게 진열장은 평소에 북한주민이 볼 수 없었던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창구였다. 그것을 통하여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였

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말하는 북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  
북한 나라라는 선전이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형식적인 충성심은 남아 있지만 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  
태이고 안으로 실제로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재산  
소유관계의 격차가 명백히 증가하였다. 당과 행정관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누렸고 평양과 대도시들의 특별 상품  
점에서 물건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사  
람들은 실망하고 무관심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쌀과 고기가  
충분했던 70년대를 향수에 젖어 회고한다.

불만의 축적은 때때로 폭발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증대는  
위험한 정치적 분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  
리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면 정치변혁에 대한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권력의 상층부의 개편이나 통제  
력의 약화는 사회적 동요를 수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예측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사회적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북한의 정치적 장래는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는다. 어떤 세  
력이 정권을 장악할 것이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권력  
승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권력투  
쟁이 발작적으로 일어나고 불안정이 증대할 것인가? 새로운  
정권은 어떠한 정치노선을 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북한을 개혁으로 이끄는데 중대한 역할을 담  
당할 세력이 있는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놓여 있으므로

앞으로 정치 엘리트의 역할이 중대하다. 앞으로 정치과정의 흐름은 정치와 군부 고위 지도층의 배치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문제는 지식층의 폭이 얇아 지식인들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잘 훈련된 경제학자들의 숫자는 적고 분산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들의 견해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더우기 실용주의적인 개혁집단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에 따른 영향력 상실을 두려워하는 군과 보안기관 같은 보수세력의 막강한 힘이 그들의 노력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래는 이들 영향력 있는 보수세력이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군이 단합된 세력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파벌관계로 분열될 것인가, 그리고 군간부와 당이나 행정관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중간층 관료가 상부집권층에 영입되는 문제와 더불어 노령층과 청년층 관료들과의 상호관계이다. 북한에서 세대교체의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 지도자들은 권력을 순탄하게 이전시키고 재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약 권력이전이 성급히 진행된다면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북한의 지도체제는 공식적으로 ‘노-장-청’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은 노년, 장년, 청년의 삼세대가 관료층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

를 통치하는 실질적 권한은 김일성과 그의 노년층 동료들 손에 있다. 이 노년층은 숫자는 적지만 강하고 상황을 통제할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젊은 중간층 관료들이 권력의 상층부에 대거 진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치적 분규를 잠재적으로 배태하고 있다. 젊은 관료와 지식층의 행정이나 지식수준은 노년 지도층에 비하여 열등하다. 노년 지도층 인사들과는 달리 (특히 지방에 있는) 하급관료층 또는 일부 고급관료들까지도 외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거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며 국내문제 조차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의 훈련은 부족하며 지시된 기초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이념적 교리들을 암기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그들은 또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젊은 세대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권력의 단절이 심화될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관료들간의 권력투쟁이 악화될 것이다. 파벌주의는 최근 남한정치에서도 보여주듯이 한국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이런 파벌 현상이 눈에 띄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집중화된 권력과 사회평준화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 속

에서 전통적인 정치유형과 방식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개인 조직기반에 기초를 둔 강력한 지도자들간의 정치적 야망이 서로 충돌하거나 지역간의 경합이 일어나 사회의 원심분리 작용을 자초하여 사회 전체를 혼란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대립되는 세력의 지도자들이 외국의 지지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공고화시키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북한의 정치 전개는 중대한 국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북한에서 정치상황의 전개는 공식적인 권력 계승자로 선언된 김정일이 불안정의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를 단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김정일은 최근에 그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추종자들을 단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시킨 것 같이 보인다. 그는 적극적으로 청년층의 인기를 끌려고 노력하고 군부내에서도 그의 활동영역을 넓혔다. 김정일의 주도하에 1991년 초에 열린 '조선인민군 영웅칭호 획득운동'이라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를 목숨을 바쳐 보호하겠다는 정신교육을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의 정치적 견해와 방침은 명백하지가 않다. 그가 그의 아버지 김일성과는 다른 과정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더욱이 그가 최근 사회주의 청년동맹 간부와 청년들에게 행한 연설문을 보면 그가 전통적 방법

을 고수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김정일은 “젊은이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 더욱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며, 씩어빠진 부르조아 이념과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한 총력전을 강화하자. 그리하여 조선 땅에서 이들의 흔적을 말살시키자”라고 주장하였다.<sup>5)</sup>

#### 4. 맺음말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은 국제적인 사건들과 무관하게 전개될 수 없다. 국내문제는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환경과 명백하게 연관하여 진보한다. 이념에 입각하여 세계가 양분되어 대립하던 냉전체제는 끝이 났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정치의 외적 틀을 형성했던 실체들의 붕괴를 뜻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장차 북한지도층은 시대조류를 거슬러 가면서 지난간 시대의 상징들을 고수하여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택하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날 북한의 외교정책은 다음 두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의 기술과 원조를 도입하여 국내의 사회·경제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외부세력을 이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충성을 유지하며

---

5) 「로동신문」 1991.8.27.

단합되어 있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같이 불일치된 목표들은 모순된 형태와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나 유엔 개발계획(UNDP)와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접촉을 넓혔다. 그리고 외국 합작공장은 세계경제체제와 강화된 교류의 필요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다. 무엇보다도 외교정책 전반이 더욱 실용주의화되었다. 북한은 비동맹국가들의 운동에 지도력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남한과 경쟁한다거나, 세계적인 반제국주의 투쟁을 유도하는 것 따위의 비효율적이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들을 줄였다. 오늘날 북한 지도층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북한은 아마 이들 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내 선전에서 미국과 일본을 여전히 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 부과하고 있는 국제적 고립상태를 포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화되었고 서구와 동구에서 불어오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극복해 나가자는 호소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남한에 대한 깊은 불신감 때문에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안전협정 체결을 회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제한되어 있다. 과도기에 정통성을 확립하는 문제는 새로운 지도력이 건전한 전략을 세우고 수행하여 축적된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경제의 긴박함이 외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 근대화를 이룰 필요성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과한 고립 상태를 타파하고 외교정책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 인접국가들도 단지 무관심한 방관자로서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남한이 북한의 문제 해결과 장래 발전에 깊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해 주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만약 휴전선이 개방된다면 많은 북한주민이 경제적인 이유나 친척을 찾아 남하할 것이므로 피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액수의 재정원조와 더불어 대규모의 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북한경제의 근대화 계획을 정립해야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남한측에서의 통일 준비는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남한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했던 것처럼 북한을 흡수하

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적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장차 조화로운 국제적 협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세계공동체와 중요한 국제기구들에 가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며 또한 다가올 과도기에 북한주민이 불가피하게 당할 어려움들을 경감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다.

## 토 론

사회자 : 柳世熙 (한양대 정치학교수)

토론자 : 具本泰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宋道均 (MBC 북한부장)

全寅永 (서울대 국민윤리학교수)

유세희 : 지명토론자들께서는 약 8분 이내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나다 순서로 해서 구본태 통일원 통일정책실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구본태 :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각기 접근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북한의 대외관계의 변화에 대한 아주 좋은 접근을 하셨고 또 좋은 결론을 내리셨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오꼬노기 마사오 교수께서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 몇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오꼬노기 교수께서 우리의 통일방안하고 북한의 그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당초 입안 취지에 있어서부터 폐쇄적인 방안이 아니고 개방적인 방안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남북간의 통일방안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일본간의 국교수립이 실현되면 한·중 국교정상화가 진전되어 교차승인은

완성될 것이라고 하시어 북·일간의 국교수립을 전제로 한 한·중 국교정상화를 이야기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세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변화의 특성에 대하여, 북한이 과연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또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인가 단순히 전술적인 순응인가 하는 여러가지 의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느낀 것으로 북한의 변화는 초기 단계하고 약간 발전된 단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하는 요인과 변화를 막는 제약 요인이 불가피하게 공존해야되는 어떤 모순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체제를 지키는 튼튼한 장치가 있어야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변화에 맞는 체제나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변화가 초래할 악영향을 견제하는 기능이 초기 단계에서는 의외로 중요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선전의 면에서는 변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측의 4차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러 갔을 때 안내원들의 (그들은 대체로 북한의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이 ‘북한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평양까지 왕복하는 7시간 가량의 논쟁중에서, 소련이나 동구도 변화하고 있는

데 북한도 변해야될 것 아니냐 하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떡살을 잡고 발로 한번 차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까지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거부하고 있다는 얘가지요.

이건 뭐냐하면 결국 북한 스스로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제약 요인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저의 해석입니다만) 변화하는 요소와 제약하는 요소가 일순간에서는 공존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실무 접촉때에 내놓았던 “법률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라는 조항을 북한이 철회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변화하려면 변화에 맞도록 법과 제도가 따라가야 하는데, 현실은 변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역작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모순적 상황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발전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 변화를 수반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북한변화의 수순에 관한 것인데, 역시 대외관계에서 출발하여 남북관계 그리고 대내문제로 갈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따라서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역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변화하는 전략을 제 나름대로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만, 북한의 김일성은 카드 5장을 손에 쥐고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중 3개는 자기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개는 꼭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핵사찰 수락문제, 중국과 한국의 수교문제, 그리고 남북대화의 진전 문제 이 세가지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협상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북한이 현재 가진 것은 이것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최소한으로 꼭 지켜야 할 카드는 대일 수교와 북한내에 있어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유지입니다. 현재 북한의 고민은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카드를 놓고 북한이 협상을 벌일 때 가장 설득력있게 중재할 수 있는 복덕방 문제입니다. 중국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북한이 핵사찰도 수락하고 남북관계도 개선시키며, 한·중 수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북한이 대일 수교나 대미 수교 또는 북한 내부의 정치체제를 주변국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카드를 실지로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색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남북 대화를 일단 틀 위에만 올려놓고 밀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제5차 일본·북한간 수교협상에 직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카드를 보여준 만큼 일본도 보여주고 미국도 좀 보여달라 하는 식의 협상기간이 적어도 몇달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요. 이와 관련을 해서 제가 보건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북수교에 대한 일본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문제에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꼬노기 교수의 표현에서 보면 일본이 그간 북한에게 북·일간의 교섭 진전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로 남북 총리회담의 조기재개를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 북한과 일본의 수교 교섭과 남북대화의 진전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킨다는 것하고, 실제로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수교 회담의 조건으로서 남북 총리회담의 재개를 들고 나온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희 :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MBC의 송도균 북한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송도균 : 저도 오꼬노기 교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전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장기적 공존체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일종의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 공존체제라고 하는 것에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기존체제를 고수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기적 평화공존 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북한체제가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고

느끼시는 같습니다. 구본태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엔 북한에 갔을 때 이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연방제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한쪽에선 강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방 추구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이라는 개념에 대해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기들이 볼 때 개방하고 반공하고는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남쪽이 과거에는 반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일성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니까 개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남쪽에서 개방을 자꾸 요구하면 그들로서는 전쟁 밖에 할게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장기적 공존체제에 동감을 하면서도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추세라고 한다면, 오꼬노기 교수가 말씀하신 10년 정도의 장기 공존체제라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가설을 놓고 내놓은 의견이 아니겠느냐 하고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공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이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일본의 국가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일본이 설사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령 30억 달러나 5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이 현재의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돈이 과연 북한을 경제적 난관에서 구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점도 알고 싶습니다.

박영호 박사께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령 UN가입이라든가 UNDP 개발계획 수용, 또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수용한 최근의 자세 등을 판단할 때 북한쪽이 표면적으로 내놓은 레토릭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UN가입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쪽에 있는 학자라든지 언론의 대부분이 하나의 조선을 강조했다는 북한 외교부 성명에 집착한 나머지 UN가입이라는 대단히 큰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이번 UNDP 개발계획에도 역시 그런 측면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쪽에 귀순한 고영환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북한의외교부 제6국 중부아프리카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외교부 전체 직원의 대략 80% 정도는 대외협력과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정열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김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대외개방과 변화에 관한 여러가지 문건들을 보면 지도자를 납득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레토릭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레토릭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책 선택의 내용 그 자체를 더 객관적으로 봐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희 : 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인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영 :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를 통해서 여러 입장을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주로 제 느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비도프 선생의 글 중에서 북한체제가 변화되어야 대외정책이 변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국의 대외정책이 사실은 합리적인 모델에 의한 국익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북한의 체제변동과 반드시 맞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북한이 어떤 최대의 이익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두번째로 북한체제 변화의 주요 동력은 주민들이 될 것이고, 북한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이내믹스의 결핍이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의 실패는 모순을 축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의 경우를 보게 되면 현실의 변화를 공산당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 것은 뒤늦게 적응을 하다가 몰락한 경우였습니다. 동구와 북한이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그러한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 똑같은 사태를 겪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꼬노기 선생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일교섭이 북·미 관계개선으로 나아간다고 순서를 매겼는데, 일본의

정책이 이미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북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본의 일반적인 견해가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결정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호 박사님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북한의 변화를 근본적인 것이냐 또는 전술적인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회의가 들면서, 변화라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고 연속적인 변화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점에서 오꼬노기 선생님과 대조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박 박사는 전술적인 차원의 외교정책을 우선 추구할 것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꼬노기 선생은 UN가입 등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관련이 됩니다만 북한의 적응능력과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반드시 변화를 거부해 온 것만은 아니고 상당히 몰렸을 때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할 때는 적응을 해 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적응을 해 왔고 또 미·일과의 관계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거부해 왔지 북한측으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단순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변화능력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위기관리 전략 또는 능력의 면에서 볼 때 북한이 지금 수세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수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악화된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활력(vitality)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점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희 :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박 박사하고 다비도프 선생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적고 오꼬노기 교수께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비도프 선생하고 박 박사께서는 약 2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 오꼬노기 선생께 한 8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꼬노기 선생 부터 하시겠습니까?

오꼬노기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중 수교나 북·미 수교, 북·일 수교의 문제를 합쳐서 이야기 한다면 저는 북·미 수교가 북·일 수교 이전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베트남 신드롬 또는 넉슨 신드롬으로 이해하면 되

지 않을까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는 일본 빼놓고 먼저 할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월남전쟁을 지역화할 필요도 있었고 대소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이용할 필요성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일본보다 먼저 북한과 수교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가 하는 점이지요.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미·일동맹에 대해 아주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구분태 실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북·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총리 회담의 재개를 들고 나온 것이 제3차 회의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만일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면 일·조 관계가 움직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분명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가 일본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북한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확실하더라도 언제냐고 하면 다 맞질 않아요. 다만 그쪽이 무너질 때는 독일의 교훈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측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통일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찾아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늦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아마 북한경제 재건에 기여하지만 나중에는 개방을 촉진시켜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불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세희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다비도프 참사관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비도프 : 답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꼬노기 선생과 박 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소련간의 군사 우호협정은 의미가 큰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균형이 유지되어 왔었고 이 균형을 깨게 되면 한국이나 소련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떠한 국가에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소련과 북한간의 군사협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이 감소할 경우 자신의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소련의 입장은 북한의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건 이미 공개된 비밀이지만 소련과 미국은 서로 남북한에 군사적 증강을 지원하지 말자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어요.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군사우호협정을 단순히 서류상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가 최근 커다란 변화를 겪었지만 그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협정은 조약에 명기되어 있는데로 5년간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소련간의 군사우호협력을 비난해서 득을 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고 핵무기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결국 북한을 코너로 몰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소련과 북한간의 군사관계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은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의 기반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북한의 외교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정책이 이념적 원칙에 입각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 이익에 기초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물론 국가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가지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 또는 국가의 이익과 지배 엘리트의 이익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외교정책은 지배 엘리트의 이익에 분명히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카테고리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지요. 현재 국내정책이나 대외정책을 가릴 것 없이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존의 정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지배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나는 질문은 과연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오. 서독은 훨씬 크고 부유한 국가였는데 동독을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흡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고 중진국이며 따라서 경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은 구동독 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입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동독 사람들 보다 더욱 굶주려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보다는 직장과 식량을 바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에게는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는데는 일본과 같은 지역내 다른 나라들의 참가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유세희 : 박 실장님, 짚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박영호 :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의 발표가 한가지 점에서 실패를 하고 한가지 점에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점은 많은 질문을 유발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공한 점은 세 분의 논평이나 질문 모두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의 정도와 속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만 저희 민족통일연구원이 예정하고 있는 올해의 세미나의 주제도 그렇고 또 북한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정치, 경제, 이념, 외교, 군사 등 북한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연히 말로써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정도의 차이를 구분해 보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북한의 변화를 몇가지 기준을 두고 한번 설명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기단계, 발전단계에서의 변화,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즉 조그만 변화라도 누적되면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신 점, 아니면 송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결과의 입장에서 보는 변화, 이 세가지 점은 앞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세희 :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토론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선생님 그리고 좋은 토론을 해주신 세 분 지명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빈 면

## 第6會議

### 北韓社會의 變化

빈 면

## 變化하는 哲學的 概念으로서의 主體와 主體性에 대하여

Helga Picht (獨逸 洪볼트大 韓國問題研究所長)

본인은 위에서 제기한 제목을 언급하기 전에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북한의 주체사상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사회제도로부터 발생한 새로운 사상조류를 임의의 시각과 임의의 장소에서 평가하려는 학자가 응당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그전까지 알지 못한 사상내용을 찬성, 지지하거나 반대, 비판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진지한 과학적 자료들을 먼저 읽고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진지한 학자라면 이것을 의심할 바 없이 학자다운 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30여년 전부터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사상사를 조사하여 온 본인은 주체사상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저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의 예를 들면 80년대 하반기에 평양에서 동독대사로 있었던 한스 마레츠키(Hans Maretzki)씨는 1991년에 독일에 서 『북한에서의 김일성주의』(Kimismus in Nordkorea)라는 책

을 발표하였다.<sup>1)</sup>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은 다음의 두가지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 ①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완전히 참패하였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2년 전까지 북한처럼 비민주주의적인 당독재가 실시된 동독의 고위관리로 있었던 저자가 자기비판을 조금도 하지 않고 북한발전을 너무나 교만하게 판단했다는 점.
- ② 저자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사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학사상의 본성이 무엇인지, 맑스주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체사상을 북한신문, 선전물의 몇 토막만을 가지고 정치적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판단했다는 사실.

이것은 마치 전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독일 사회통일당의 중앙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쉴란드」(Neues Deutschland)신문에서 80년대에 발표한 선전자료를 가지고 맑스의 학설을 평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본다.

---

1) Hans Maretzki *Kim-ismus in Nordkorea*, (Anita-Tykve-Verlag, Boeblingen, 1991).

본인은 이외에도 이번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발표한 여러 책도 읽어 보았다. 이 중에는 심리학자 백상창씨가 쓴 책도 있었다. 본인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지만 독일의 재통일을 체험한 동독출신 사람으로서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백씨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된다고 결론지은 후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즉, 병든 김일성과 병리화되고 이질화된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최선의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그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의 입장’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다.<sup>2)</sup>

본인의 경험과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결론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서독정치가들이 동독사람들에 대하여 위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을 유린하며 통일 직후에 가지게 되었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북한사람들도 동독사람들처럼 최근에 사회주의적 목적이 비사회주의적으로 왜곡되어서 복잡한 문제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부터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로 공업 국가를 건설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른다.

---

2) 白尙昌, 『맑스, 모택동, 김일성-그리고 한국사회』, (서울, 1989), p.100.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본인은 주체사상의 발생, 발전과 변화과정을 신중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여러 의견을 제기하는 바이다.

본인이 처음으로 주체라는 말을 들은 것은 1960년대 초였다. 나는 그때 통역사업을 하였는데, 독일민주주의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치가들은 만날 때마다 이 말을 사용하곤 하였다. 어느 회담에서 북한정치가들 가운데 한 명이 ‘주체’라는 말을 써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후에 그분에게 물어 보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조선민족은 오랫동안 여러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객체의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강대국들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나라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조선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을 촉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조선인민에게 민족의 분열, 동족상잔과 인간적 불행밖에는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은 앞으로는 그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 자력갱생하여 자기의 힘,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열성적 노력을 믿고 발휘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귀중한 경험, 특히 최신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그것은 조선의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인은 이 해설을 듣고 주체라는 개념을 독일말로

‘Nationale Selbstbesinnung’(민족적 자신)이라고 통역하였다. 그때 유럽의 정치용어를 아는 북한 사람이 통역을 잘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주체라는 개념에 national이라는 말을 강조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주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반대로 각각의 나라는 주체를 세우면서 자기민족의 경제력과 정치권위를 일신시킬 때에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충실할 수 있고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1960년대초의 체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비롯한 진보적 역량들 속에서 중국사태 발전과 관련하여 민족적 특성과 세계사적 일반성에 대한 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소련공산당은 독일사회통일당과 기타 다수 공산당들의 지지하에, 특히 정치사상분야에서 다른 공산당 및 노동당들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1960년대에 본인도 다른 사회주의나라 학자들과 함께 주체의 개념을 부르조아 민족주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그의 철학적 의의를 과소평가하였으며 심지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1970년후부터는 주체사상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 개념의 의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체의 내용과 본질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본인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게 되었는가를 찾아내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지금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주체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 것이 사상사업의 가장 주요한 결함입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옹기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사상사업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되며 우리 혁명사업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sup>3)</sup>

북한 노동당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주체개념과 주체사상이 더욱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북한노동당계 정치가, 학자들은 오늘날에 와서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실현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결과라고 말한다.<sup>4)</sup> 워낙 이것이 사실인지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이

---

3) 김일성, 『우리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1970), pp. 29~30.

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1982).

지만, 최근의 사회주의 제도의 국제적 위기를 보면서 이에 대해 답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체개념이 특히 1970년대부터 철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풍부해졌는가에 대해서만 몇가지 고찰을 하겠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은 첫 시기, 즉 5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주체를 정치적인 개념으로서만 이해하고 주민들의 민족적 의식을 높이며 옛날부터 내려온 사대주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크게 선전하였다. 북한 철학자들은 대략 1975년부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대한 과학적인 토론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 결과에 다음과 같은 테제들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학설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로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사회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참답게

체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의 사회적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인민대중은 사회적 운동의 담당자이며 역사의 주체라는 것이다.<sup>5)</sup>

최근에, 즉 1980년 이후부터 철학자들의 발언과 논문에는 사람과 외부세계와의 상호관계를 더욱 더 변증법적으로 해설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후에 “외부세계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아나갈 수 없으며 발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면서 살아나가는 가장 발전된 존재이다”<sup>6)</sup> 라는 설명을 보충한다. 이외에도 “근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대에 있어서처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가 강하며 역사적 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이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고 주장한다.<sup>7)</sup> 동시에 학자들은 “자주성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나가려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다”<sup>8)</sup>고 말하면서 사람

---

5) 박승덕, “주체철학은 철학사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위대한 철학”, 『철학연구』 1987. 3. 4, 1988. 1.

6) 김창원,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 『근로자』 1980. 3, p. 23.

7) 김창원,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 『근로자』 1980. 5, p. 13.

8) 위의 잡지, 1980.3. p. 26.

은 그 어떤 구속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여기서 오늘날 북한의 주체사상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했는데, 사람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한 테제에서 주체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본인은 여러 테제의 내용에 대한 의견, 특히 사람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 그 어느 시기에든, 또 모든 객관적 조건하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나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네개의 테제 내용이 오직 북한에서만 발명되었거나 토론되고 있는가, 아니면 현대 일반 철학사상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여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고 싶다.

본인은 1970~80년대에 국제적 사상논쟁 과정을 주시하는 동시에 한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사와 특히 맑스-레닌주의 전파 및 보급실행문제를 연구하여 왔다. 한국 민족해방운동 및 사회발전운동을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발전 및 삶과 비교해 볼 때 이 모든 나라들에서 민족적 문제가 계급투쟁문제를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sup>9)</sup> 최근에 소련사태의 발전, 즉 연방공화국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것을 주시할 때, 소련공산당이 이 사실을 수십년 동안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

9) Helga Picht, *Asien-Wege zu Marx und Lenin*, (Berlin, 1984) 참조.

북한식 주체개념의 근원을 해명하기 위하여 본인은 국제공산당 역사 그리고 일본공산당 역사와 20세기 일본사상사에도 주의를 돌렸다. 간단하게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두 가지를 발견하였다.

① 20세기 초에 일본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는 일본 국민의 주체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것은 주로 서방나라들에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려고 하는 경향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② 일제 패망 직후에 일본공산당에서도 주체성 문제를 토론하였으며 일본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려면 소련방식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반드시 일본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자적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sup>10)</sup>

나는 물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사람들이 주체의 개념을 일본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한편 일본에서 주체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난 후부터 지금의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해방전의 조선과 한국에서도 주체 혹은 주체성의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다음의 세가지를 정리할 수 있

---

10) 『전위』(前衛), (일본공산당 기관지), 1946 참조.

다.

- ① 늦어도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역사학과 정치학계에 서 한민족이 역사의 주체로 되는 것과 ‘역사 앞에서 민족을 정확히 연결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주체의식’의 문제와 민족사의 정통성이 민족의 주체성을 규정하는 문제가<sup>11)</sup> 토의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② 단재 신채호(1880~1936)를 비롯한 반일 민족주의 독립운동 사상가들의 사고방식 및 내용을 살펴볼 때도 반사대주의와 주체(성)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를 비롯한 여러 저작들에서 조선 지배세력의 사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조선인민의 ‘주체정신’과 ‘자아의식’을 주장하고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는 투지로 특징지어진 조선인민의 역사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지켰다. 동시에 신채호가 개인영웅주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sup>12)</sup>
- ③ 한국 문학사상사<sup>13)</sup>나 한국철학사<sup>14)</sup>를 연구하는 남한

---

11) 崔昌圭, 『韓民族近代化政治論』, (서울, 1975), p.13, p.19.

12) Michael Robinson, "National Identity and the Thought of Sin Ch'aeho; Sadaejuui and Chuch'e in History and Politic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84. 5, pp. 121~142.

13)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상사』, (서울, 1989).

14) 劉明鍾, 『韓國哲學史』, (서울, 1984).

Ch'oe Min-hong, *A Modern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Seoul, 1989).

학자들이 조선민족 역사의 자립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도 내 의견에 의하면 주체성과 ‘Self Identity’를 지향하는 현대 국제철학사상 발전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과학적 방법에서 차이가 적지 않지만 북한 학계의 과학연구사업과 동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양에서 1980년 후부터 출판된 『조선전사』 혹은 『조선철학사』<sup>15)</sup> 와 『철학사전』<sup>16)</sup> 을 읽었을 때 필자들은 주체성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인민의 역사도 세계사의 구성부분이며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발전이 조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지만 과소평가하는 약점이 있다고 느꼈다.

과학연구 사업과정에서 본인이 일반철학사, 특히 중국과 일본의 철학사상사를 초보적으로나마 요해하면서 주체의 개념이 일반 철학사상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송이천식 삼균주의와 모택동의 자력갱생정신, 인도의 힌두교 및 불교식 인도주의, 아랍국가들의 회교식 사상자주성과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의 ‘Self Identity’이 모든 것들이 주체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5) 최봉익, 『조선철학사(1)』, (평양, 1981).

최봉익, 『조선철학사개요』, (평양, 1986).

16) 『철학사전』, (평양, 1985).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밝혀져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① 봉건제도의 붕괴와 자본주의 제도의 발생·발전과 함께 세계 철학사상사에서 개인과 민중의 주체적 역사 지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주체성과 자주성 문제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유럽철학의 발전, 즉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오르,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그리고 불란서 철학자이며 문학가인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20세기에 일본 철학자 西田幾多郎와 三木清의 생각과 30년대 ‘주체적 유물론 토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남한 철학자 최민홍은 최제우의 동학사상을 유럽의 실존철학과 실존주의에 연결시키고 있다.<sup>17)</sup>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본인은 세계사적으로 봉건제도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인민들을 볼 때, 개인과 민중의 주체성 개념이 마땅히 제기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② 남한에서 많이 쓰는 한철학<sup>18)</sup>이라는 개념은 한국 철학사상사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향을 변증법적으

---

17) Ch'oe Min-hong, p. 354.

18) 같은 책.

로 분석하면서 한국인민의 주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인가? 20세기 한국사상가들 중 누가 한국에서 주체 혹은 주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가? 민족주의 해방운동인가? 국민주의 해방운동인가? 두 운동을 다 같이 병행하여 이 개념을 습득하였는가? 이 모든 문제는 깊이 연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③ 맑스주의를 수용, 전파·보급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 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맑스를 경제결정론자로서만 이해하고 맑스주의를 원래부터 객관적 조건을 중시하고 주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학설로 오해하였는가? 북한 철학사상가들은 오늘날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19)</sup>
- ④ 김정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영웅주의가 전체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조건하에서 북한학자들이 개인과 민중의 주체적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철학사상사에서 큰 진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남북한 학자들은 이 분야에서 앞으로 합작할 기초가 있지 않은가 한다.

물론 이 내용을 과학적 분위기 속에서 토의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위에서 말한 개인영웅주의와 관련한 너무나 어리석은 선전,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관의 근본문제에

---

19) 1988년 평양 조선관계학자 토론회에서 한 박승덕교수의 보고 참조.

가장 올바른 해답을 준 주체의 철학적 원리를 창시하신 것은 인류의 철학사 발전에서 불멸의 세계사적 공헌으로 된다”<sup>20)</sup>라는 것을 관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의 영도방법에 대한 해설, 즉 “근로인민대중이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sup>21)</sup>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체의 철학적 원리, 특히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한 원리와 실제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온 본인은 북한에서 정치적 제재가 존재하는 한, 학자들이 할 수 없이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

20) 『근로자』, 1980. 3, p. 24.

21) 『근로자』, 1980. 5, p. 13.

# 北韓의 社會統制, 社會問題 그리고 社會變動

都 興 烈(忠北大 社會學教授)

## 1. 問題提起

사회통제와 사회문제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형성하는 전제인 동시에 사회변동의 성격을 결정짓는 두 날개가 된다. 이들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개념도식에서 보면 '사회변동 - 사회문제 - 사회정책 - 사회변동'이란 연결고리속에서 사회문제가 한 사회의 변동과정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북한사회의 성격과 변동과정을 규명하려 할 때, 그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해 온 사회주의 건설의 독자성과 체제유지 방법의 특수성(김일성 우상화 체제) 때문에 북한사회에 적용가능한 또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대상과 접근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1) 北韓體制의 性格과 聯關된 社會統制의 메카니즘과 統制 技術 : 이는 사회변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현재까지는 사회변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를

유지해 왔다.

2) 위로부터의 社會主義的 變革 및 産業化 段階와 그에 副應하는 社會 問題의 表出形態와 類型 : 이는 북한체제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내연적 힘으로 잠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체제변화의 직접적 동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3) 社會問題 解決을 위한 政策的 努力의 成果 : 북한은 사회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해결·극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설사 그것이 기존의 틀을 전제로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보수적 혁명’의 성격을 띤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정책들이 끊임 없이 모색되어 왔다. 즉 전통적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첫 조치였던 ‘반제 반봉건 민주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천리마운동, 3대 기술혁명, 3대혁명, 3대혁명 소조운동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및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선언하기까지 북한사회는 변화하는 현실적 조건에 ‘창조적’, ‘효과적’으로 적응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북한을 낳게 한 것이다.

4) 體制改革의 새로운 變化와 持續 : 그러나 앞으로의 북한사회는 기존질서의 유지·강화를 겨냥하는 각계각층에 대한 조직적인 사회통제에도 불구하고 체제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90년대 북한사회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대변혁속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 또 한번의 ‘창조적’ 적응과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사회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통제 - 사회문제 - 사회정책 - 사회변동’의 연결고리를 상정할 수 있고 사회통제는 사회변화 과정의 핵심적 변인이 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전제하고 사회통제와 사회문제와의 연결고리를 준거로 하여 북한사회 변동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2. 社會主義 體制와 社會統制

사회통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규범에 대한 동조를 증가시키고 일탈을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강제하는 계획적 혹은 비계획적 노력을 말한다. 인간사회는 동조적 행동에 대한 보상과 일탈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 원칙적으로 일탈이 기존 사회질서에 대해 역기능적이라면 사회통제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기능적이다. 만약 일탈을 방지하는 사회통제가 없다면 개인의 삶이 보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생활의 근거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규범의 준수는 행위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한다.

그 반면 사회통제가 사회발전에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 즉

사회통제는 기존체제의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새로운 변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규범'은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행동을 일탈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통제는 사회적 발전에 상응하는 변화까지 억압함으로써 모순을 잠재시키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폭발적 방법에 의한 변화를 초래케 하여 오히려 통제의 기능을 상실케 만드는 양면성을 갖는다. 더욱이 이것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면 인권의 유린과 사회기강의 붕괴를 가져 온다.

특히 전체주의사회의 통제는 민주주의사회의 그것과는 달리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자유, 욕구, 행동, 희망 등을 포함하는 전 생활영역과 가치관, 인생관 등 전 정신영역까지도 전적으로 희생시키는데 근본 목적을 둔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사회는 더욱 가혹한 통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혁명을 끝내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체제를 완전 해체하고 전 인구를 재교육, 재조직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시작한다. 나아가 역사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사회를 인위적으로 창조하려 한다. 이러한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완전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북한에서도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적 통제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와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

는, 다시 말해서 ‘사회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회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의 정치화’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북한 특유의 1인 독재체제를 형성시켰다. 이와 같이 사회부문이 정치부문에 완전히 종속되는 정치화된 사회(politicized society)에 있어서는 사회의 경제, 문예, 교육은 물론 개인의 가족생활, 의식주문제, 행동규범, 가치관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정치적 강제력이 깊숙히 침투된다. 북한은 마치 『멋진 신세계』를 방불케 하고 『1984년』의 전체주의적 통제사회를 연상케 한다.<sup>1)</sup>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정치사는 한마디로 김일성일파의 ‘조건화(강화)’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건화 훈련에 의한 통제정책은 김일성정권의 초석이며 따라서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으로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에 의하면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들로부터 권력을 쟁취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한 후에도 정치적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체제로, 또 그것으로부터 공산사회로의 이행은 과도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기에는 반혁명세력이 창궐하는

---

1) A. Huxley의 상상적 소설 『멋진 신세계』에 있어서는 ‘튜우브’속에서의 태아의 수, 질, 성장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통제를 가상하고 있다. G. Orwell이 예언한 작품 『1984년』에서는 국가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현실대로 인식해야 하고 과거도 현실에 맞추어 개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까닭에 강력한 통제가 요구된다”라고 전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로서 종속상태에 있었던 사회에는 식민시대의 잔재와 봉건적 소유관계의 분쇄, 기업의 국유화 등 1차단체를 거친 후에도 ①생산관계의 공산화, ②농촌의 기술혁명, ③무계급 사회실현, ④공산사회 이행 등 여러 단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sup>2)</sup>

나아가 그는 독재적 통제의 정당화를 국내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현단계에서도 구하고 있다. 과도기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통제와의 상호관계는 “단순히 일국의 국내적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문제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북한은 ‘김일성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정치권력이 전능적인 힘을 가지고 공산당이 지향하는 특정 목적, 즉 ‘남조선 해방’과 공산주의 사회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행동은 물론 모든 집단의 활동을 일원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여 왔다.

### 3. 社會統制의 메카니즘과 統制方法

북한은 체제의 성격과 사회주의 발전의 각 단계가 갖는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통제의 메카니즘과 방법을 구

---

2) 김병식, 『김일성수상의 사상』 (동경:1970), pp. 147~158.

3) 앞의 책, p. 162.

상하고 집행하였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북한식의 혁명과 건설’이 갖는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각 시기에 따라 사회통제의 메카니즘도 계속 바뀌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표-1> 사회주의화 과정과 사회통제

변화 단계	사회통제의 메카니즘	사회정책·통제방법
물질적 토대형성기 (45. 8~54. 7)	소련군의 후원 사회안전부 인민반 제도	민주개혁(반제반봉건) 계급정책 군중재판제도
사회주의 제도개혁기 (53. 7~58. 8)	식량의 국가통제(1957) 실시 정치범수용제(특별독재대 상구역, 정치범 위수구역)	농촌집단화 개인상공업 협동화 계급투쟁 강화 식량 배급제
새로운 계급형성기 (58. 8~70. 11)	5호 담당제(58년~73년 실행)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인텔리 개조사업 주민등록사업 계층분류사업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 (80.10~1990년대)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여기서는 그동안 변화를 거듭해 온 사회통제의 메카니즘과 방법들 중에서 북한체제의 성격을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회통제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통제가 사회변화에 미친 효과를 음미해 본다.

### 1) 組織生活 統制

북한은 공식적 조직이 지배하는 통제된 사회로서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하여 전사회를 일원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모든 사회조직은 노동당을 쟁점으로 하여 계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정치적 목표달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북한의 조직은 당의 방침에 따라 그 참여여부가 결정되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는 정치사회적 지향에 대한 복종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된다.

북한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급 사회단체(근로단체)를 사회통제의 가장 중심적인 매개적 도구로 활용한다. 그 반면 자생적 조직의 생성은 개인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문벌주의, 종파주의로 규정되어 철저히 배척될 뿐만 아니라 혁명적 투쟁의 타도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의미의 자생적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대신 당조직을 정점으로 하여 당의 후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외곽단체들을 의도적으로 육성하고 이의 활동을 권장한다.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서는 ‘직업총동맹’, ‘문학예술동맹’, ‘기자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는 각종 행정적 조직들이 계통적·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5호 담당제와 인민반 그리고 각종 학습반 등을 조직하여 김일성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한다.

<표-2> 북한 사회단체와 활동

단체명	가입대상	구성인원	구성방법·활동	창립일
직업총동맹 (직총)	노동자·사무원 31~65세(여60)	약 150만명 (71.12현재)	○ 노동자·사무원의 직장단위 조직 ○ 10개의 산별직업동맹으로 구성 ○ 사상 교양·기술습득·노력경쟁 지도	45. 11.30
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협동농장원 31~65세(여60)	약 130만명 (82.12현재)	○ 농장단위의 농민단체 ○ 사상 교양·농촌 사업지도	66. 3.25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사로청)	14~30세(여60)	약 400만명 (82.12현재)	○ 학교·직장단위로 조직 ○ 당후비대로서 사상교양·노력동원	46. 1.17
민주여성동맹 (여맹)	여성 31~60세	약 270만명 (추계)	○ 여성위주의 직장단위 조직 ○ 당후비대 역할·사상교양·노력동원	45.11.18
소년단	7~13세	약 300만명	○ 학교단위조직 ○ 사로청의 지도·집단생활 습득	46. 6. 6

\* 방환주, 『조선개관』 (평양:외국출판사, 1987), pp. 90~91; 통일원, 『북한 개요』(통일원, 1990), p. 64.

인민반은 북한주민들을 15-20세대로 묶어놓고 그 단위조직에 따라 그들을 직접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적 제도이다. 각 인민반에는 ①반장 (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성당원이거나 간부부인) ②세대주반장 (공산당이 통제, 선거시나 행사시에 인민반을 통제) ③위생반장 (환경 청소담당) ④선동원 (인민반의 당 분조장 겸임) 그리고 ⑤감시원과 감독원을 두고 있다.

감시·감독원들은 반원의 사상동향, 학습지도, 세뇌교육, 반원의 동원, 주민 및 도로관리, 관혼상제의 주관 및 지원 등 일상생활을 파악·지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 인민반에는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에서 별도로 감시원(정보원)을 배치하여 반내 방문자 조사·보고, 특히 ‘불순계층’의 주민동태와 주민과의 접촉자에 대한 행적을 내사·보고하고 있다. 인민반은 월 2회 생활총화집회를 갖고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 유지, 사회사고, 목욕 및 이발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자아비판도 하고 있다.

‘5호담당제’는 북한의 전세대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충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을 규제토록 하는 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주민 가운데 특히 체제에 반대할 수 있는 성분, 이른바 불순계층에 속하는 주민들을 색출·감시하고 그들의 반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임무를 띤다.

5호담당제는 1957년 5월 30일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전인민적으로 전개함에 대하여'라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58년 7월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다. 5호담당제는 5가구를 담당하는 한 명의 핵심당원(책임지도자)이 5호내외의 세대만을 분담하는 만큼 각 개인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 소질, 취미, 희망, 사상동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하며 '생산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인으로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동원에 있어서 최소단위의 통제조직이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개인을 조직속으로 묶어 당적인 행동지도와 사상적 관리를 형식화하고 사회동원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사회단체와 각종 조직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로서 사회통제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 2) 個人生活 統制

개인생활에 대한 북한의 경제·사회적 통제는 주어진 특정 기준에 따라 기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체제는 '전인민적 소유'를 표방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당·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1958년 이후 일반주민들의 사적 소유는 극히 한정적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은 일반 주민들의 직장에 대해서도 배치, 승진, 이동, 보수,

배급 등 일체의 권한을 장악하고 주민들을 당정책과 김일성 교시에 따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당과 수령은 인간생존의 기본수단 일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계층과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를 주민통제의 도구로 이용한다. 예컨대 ‘핵심계층’에게는 경제적인 특혜를 주고, ‘적대계층’에는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이 체제에 순응하고 충성을 바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식량 및 주요 생필품의 배급제 역시 주민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에 속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조직(직장 및 사회단체)에 속해야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배급제는 노동자와 비노동자(부양가족)간의 지급기준에 차등을 줌으로써 노력동원의 기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도 한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예 식량을 줄 수 없다는 발상이다.

주택은 직위를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고 직장 중심으로 아파트 또는 연립(문화) 주택형으로 집단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원이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상층계층에 올라갈수록 주택환경이 좋아진다.

한편 북한은 천리마운동(1958), 속도전(1974.2),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1975.12.1) 등을 조직하여 노력경쟁을 강화하고 경제과제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한 방향의 사회

심리적 통일을 유도한다.

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sup>4)</sup> 북한의 주민은 누구나 사회·정치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취하고 있는 공식적인 견해에 대해서 거의 똑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고려연방제가 왜 우월한가”, “남조선에서 미군들은 왜 철수해야 하는가”, “무엇이 통일을 막고 있는가”라는 등의 정치적 문제에는 주어진 ‘정해답’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에 누구에게 물어도 거의 거침없이 똑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교육을 통한 사회통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주민생활은 그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각기 직장에서 하는 일에 못지않게 사회·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로청, 직맹, 여맹 등 사회단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제2차적인 집단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이 집단들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조직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선 빈틈이 없고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 이외에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국가의 방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던가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

---

4) 이문용,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 변화실태 연구』(국토통일원, 1989), pp. 13~15.

다. 언제나 국가에서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최선의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기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반응 뿐이다.

그 밖에도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다는 점 등도 폐쇄적인 사회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조직생활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현실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 북한사회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현실수용적 주민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 3) 査察機關의 社會統制

북한은 갖가지 사회적 일탈에 대응하여 행정조직에 의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찰기관은 2중 3중으로 중첩되어 있으며 각 기관들의 역할도 매우 복잡하다.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위원회 등이 그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동태를 직접적으로 감시 통제하는 대표적 기관은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이다.

미 국무성은 의회에 제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사상이 불순하다는 혐의를 받은 북한주민들 다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제로 납치당하거나 제거당한 뒤 가족들이 그 생사

를 모르는 예가 허다하다”라고 고발한 바 있다.<sup>5)</sup>

북한은 이러한 만행을 담당하는 사찰기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1973년 2월 사회안전부내의 정치보위국을 독립·승격시켜 국가정치보위부로 확대·개편하였고 1982년 4월 국가보위부로 개칭하였다. 이는 정치적 범죄자에 대한 감시·구금·체포·처형을 책임지고 있으며 형사재판 제도 밖에서 운영된다. 즉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반당·반체제음모자, 간첩 등 용의자를 구속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김일성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도·시·군의 지역단위와 행정 최말단 조직인 리단위까지 요원을 상주시키고 있고 군대 내부에도 중대단위까지 정치지도부 지도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김일성 호위행위, 정치사상범 심문, 각급 정권기관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의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통신도청, 비밀문서관리, 장병들의 동태 감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김일성 부자세습 체제구축에서 야기되는 제반분야의 저항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

5) 미 국무성, 『인권보고서』(1981. 2).

<표-3>

북한의 사찰기관 실태

구 분	내 용	비 고
사회안전부	○ 일반 치안유지 및 반국가행위자 수색 점검 ○ 주민 이동 통제	1945년 이후
국가보위부	○ 김일성 직속기관(15개국 4개처) ○ 반당반국가음모자 색출, 주민사상 동 향 감시 ○ 방첩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1973.2 신설 1982.4 국가보위부로 개칭
국가 검열 위원회	○ 전행정기관의 재정·물자의 관리 감사 ○ 간부 및 행정요원의 비위 적발	1975.7.22 신설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 관료주의 제거와 엄격한 법적 통제 ○ 전국민에 대한 사상 투쟁 전개	1977.12.15 최고 인민회의 6기 1차회의 신설

사회안전부는 1945년부터 북한정권기구로서 당시 내무성 산하 일개 국의 형태로 존속하다가 1972년 12월 헌법 채택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발전하였다. 사회안전부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북한내 사회안전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비밀경찰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상과 같은 각급 사찰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각종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적어도 공개적 상황하에서는 사찰기관들의 지시와 행동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特別 獨裁對象區域과 集團收容

북한은 체제에 반항하거나 김일성·김정일의 요구에 불성실한 자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집단수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자기교화과정(self-correcting process)인데 북한은 이러한 집단수용의 방법을 통하여 체제의 지속성 및 엘리트집단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집단수용은 어느 공산주의 국가보다 범위가 넓고 방법이 잔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원래 북한의 정치범 집단수용소는 1956~58년 '8월종파 사건'의 연루자와 가족들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한데서 시작되었다. 그후 1958-60년간 실시된 중앙당 집중지도와 1966년~70년간 계속되었던 주민등록사업 과정에서 '위해하다고 지목되는 자'들을 반혁명 적대분자로 규정하여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1973년 김정일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3대혁명 소조활동이 시작되면서 그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다.

<표-4>

특별 독재대상구역 현황

위		치	수 용 인 원
함	북	은성군, 회령군, 경성군	62,000명
함	남	요덕군, 정평군, 덕성군	33,000명
평	남	개천군, 북창군	20,000명
평	북	용천군, 영변군	20,000명
자	강	회천시, 동신군	17,000명

『'91북한개요』 (통일원, 1990), pp. 244~46.

특별 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된 사람은 적대계층 가운데 반김 일성·반당·종파 분자, 지주, 친일파, 종교인들과 그 가족들이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희생된 정치범들이 급증하여 수용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3대혁명소조에 의해서 반당·관료주의자로 지탄을 받아 숙청된 당원들과 그 가족들도 있다. 일본에서 귀국한 북송교포 가운데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세계를 동경하던 자들도 반혁명분자로 몰려 상당수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소 생활은 각 수용소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량을 부여받고, 아침 7시부터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한 하오 8시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작업과 벌목, 개간 등 중노동이며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하오 11시까지 2시간에 걸쳐

자기비판을 위주로 한 사상개조 학습을 마친 후에 취침에 들어간다. 이같은 하루의 일과는 휴일없이 연중 계속된다.

이밖에도 북한은 반혁명 적대분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감시하는 이른바 '149호 대상지역'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또 과거의 종교인이나 지식인 가운데 북한체제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집단수용하는 '49호 보양소', 재판관을 통해 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교화소', 재판에서 교화노동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노동교양소' 일을 태만하거나 불성실한 자들과 기술지도를 잘못된 하부일꾼 등을 단기간 수용하는 '69호 노동교화소', 18세 미만의 학생과 학교생활 불량자 그리고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을 6개월간 수용하는 '소년교양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는 '10호 위반자 집결소' 등을 설치해두고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예방 및 통제하고 있다.

#### 4. 社會問題와 逸脫行動

##### 1) 社會統制와 社會問題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의 사회학적 과정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성체제의 유지·발전을 겨냥한 중첩적인 사회통제 매카니즘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현실적으

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정에서 혁명후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 계급 갈등에서 분출되는 이슈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가 형성된 이후에는 산업화에 의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각종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사회부조리 등 반사회적 일탈행동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문제는 사회통제의 매카니즘이 지닌 기존체제 유지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의 성격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실적 사실로서 존재한다.<sup>6)</sup> 예컨대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과정을 체제형성단계 - 동원단계 - 후기동원단계로 구분하고 사회변동과 사회문제간의 역동적 관계를 모형화하면, <표-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통제가 강화된 조건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욕구불만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가 하면 사회통제가 완화된 조건에서는 도덕 규범적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첫째, 체제 형성단계에서는 계급없는 사회건설이란 목표하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계급적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가 된다. 둘째, 동원단계에서는 산업화가 강조되고 사회통제가 강화되는 경제·사회환경에서 산업화에 따른 욕구불만의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셋째, 후기 동원단계에서는 발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변

---

6) 오정수,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최명(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pp. 362~63.

동 정향의 조정이 일어나고 사회통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지만 공산주의 도덕·규범 체제와의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점차 부각되어 나타난다.

<표-5> 사회주의 사회변동의 단계와 사회문제

변수		시대구분	체제형성 단계	동원단계	후기 동원단계
		사회변동의 정향	이데올로기의 구성 요소	목표문화의 강조	전 이 문 화 (산업화)의 강조
경제사회 환경	경제발전 전략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	산업화를 위한 계획경제, 중공업	균형발전 전략, 소비재 생산증가	
	사회구조의 변화	계급구조의 변화	사회통제의 강화	사회통제의 완화, 체제 개방	
종속변수	사회문제	계급적·경제적 갈등	산업화에 따른 욕구불만	공산주의 도덕·규범 체제와의 갈등	

## 2) 社會問題의 性格變化

북한 사회는 정권수립 이후 '북한식'의 독자적 건설과정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사회문제 역시 사회주의 건설의 각 단계에 따라 북한 특유의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사회문제는 사회통제적 제반정책에 의거한 위로부터의 조작적 변화의 산물이며, 나아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통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바뀌어 왔던 것이다.

① 共産化革命 初期의 社會問題 :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단행했던 1945~1950년대까지는 혁명초기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연관되어 사회문제가 규정되었다. 김일성은 1955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료주의적 행동’을 제시하고 ‘봉건적 부르조아적 사상의식의 잔존, 당 행정기관 간부들의 대중 령도방식의 미숙과 혁명적 경험의 부족, 당의 그릇된 사업작풍에 대한 투쟁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된 이러한 문제들은 농업의 집단화, 상공업의 국유화, 지식인과 전문가의 사회주의적 개조 등의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으며 계급적·경제적 갈등의 성격을 띠었다.

② 1960年代, 1970年代의 社會問題 : 생산관계와 계급구조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1960년대에는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에 이어 7개년 경제계획이 수립되고 사회주의 건설(산업화)이 강조되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앞세워 중공업 우선의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적인 특징은 물질적 유인의 결여와 사회통제의

강화 등 전체주의적 지배유형으로 바뀐다. 60년대 산업화 단계에서는 사회통제력이 최대한 행사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이 극대화 되었다. 1958년 이후의 천리마 운동과 1960년 이후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제는 대중동원의 실천기술로서 개발되었던 것이다.

60~70년대의 사회문제는 동원체제적 산업발전에서 수반되는 사회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산업발전에서 있어서 물질적 유인 보다는 오히려 소비절약과 사상통제의 강화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은 대중의 내핍생활을 강요하고 노동력 부족과 만성적인 소비재 공급부족을 초래하였으며, 각종 경제관계 범죄와 사회부조리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절도, 강도, 횡령, 사기, 암거래, 품귀상품 부정유통, 정량미달 출고, 감량판매, 부정계량기 사용 등 각종 경제범죄와 사회부조리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급속한 진출에 따른 성범죄 등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③ 1980年代의 社會問題 : 60년대 이후 중공업 우선의 산업화 진척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격차 등 사회발전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된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발전의 현 단계를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제5조)

를 위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로동자를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 줄이는… 사상·기술·문화의 이른바 3대 기술혁명을 수행해야 한다”(제25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체제발전 정향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1980년 이후 경공업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sup>7)</sup>

이로 미루어 80년대 이후 북한의 사회문제는 그 동안의 산업화 진척에 따라 물질생활 향상을 기대하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체제개방과 사회통제의 완화를 기대하는 대내외적 압력속에서도 개혁과 개방을 유보한 채 폐쇄적인 통제체제를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반사회적·비윤리적 사회문제와 각종 일탈행동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단계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로는 간부들의 무사안일과 사회적 부조리, 청소년 비행, 성범죄, 매음, 밀출입국, 밀무역 등이 포함된다. 북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 청소년 비행, 밀입국 등 각종 사회문제는 80년대 이후 산업화에 의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개혁과

---

7) 조선로동당 출판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80).

개방의 압력, 그리고 외래문화 유입에 의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5. 結論: 社會統制와 社會問題가 社會變動에 미치는 影響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46년 민주개혁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강제적·강화적인 집행으로 통제효과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바탕한 위로부터의 의도된 변화(보수적 혁명의 연속)는 사회체제의 질적 변화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외부의 개방압력과 내부의 산업화 침체로 말미암아 위로부터의 일방적 사회통제는 그 효과를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의 증대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변동의 직접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고도로 조직화된 주민통제 장치의 철저한 운용, 그리고 김일성 유일사상이 북한주민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주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서 반체제적인 일탈행위가 크게 표면화될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김일성정권이 강요해 온 각종의 교양사업과 사회동원운동은 주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맹목적으로 시인

하는 기계적인 체제동조자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 변동은 사회통제-사회문제-사회정책-사회변화간의 연결고리를 전제로 사회통제와 사회문제간의 관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①북한사회의 사회통제는 북한의 이념적 지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방법과 강도가 규정되었고, 이에 의한 통제효과 또한 긍정적이었다.

②사회통제의 긍정적인 효과속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문제가 제기되었고, 사회문제의 성격은 사회주의적 발전단계에 부응하여 규정되었다.

③산업화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물질생활에 대한 수준이 상승되고 생활조건의 향상욕구가 증대함으로써 기존의 사회통제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는 체제변화의 직접적 동인으로 변동촉진의 작용을 하고 있다.

④이와 동시에 신격화된 정치권력의 폐쇄적 성격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결의, 그리고 이를 뒷바침하고 있는 전사회적인 통제 메카니즘은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작용을 계속하고 있다.

⑤변화촉진적 측면과 변화억제적 측면간의 관계에서 체제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직면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선진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도 중·소의 변화, 나아가 자본주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조건들이 가속적으로 증폭하고 있다고 본다.

# 北韓社會 階級構造의 再編과 社會變動

徐 載 鎭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1. 序論

지난 수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회주의 사회의 변동의 한 측면은 나라에 따라 성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대체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반체제 저항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발전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는 점차 밑으로부터 변혁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독을 위시한 동구 제국이 그랬고<sup>1)</sup> 소

---

1) 헝가리에서 1988년 이후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민주화가 본격 추진되어 1989년 1월에 집회·결사에 관한 법안이 국민의회에서 가결되어 복수정당제의 길이 트인 이래 1990년 5월 총선에서 중도 우파인 헝가리 민주포럼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헝가리는 43년간의 공산당 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가 1980년의 총파업을 통해 정치적인 조직체로 성장하였고 결국 국가는 이에 대해 쿠데타라고 하는 비상수단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그것도 얼마가지 않아 1989년 6월의 총선에서 이 사회세력에게 정권을 인계하게 되었던 것이다. 루마니아에서는 1965년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제1서기에 취임한 이래 동구권 국가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 집권을 기록하였다. 1989년 12월 16일 민중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됨으로써 공산당체제가 붕괴되었다. 체코에서는 1968년 두브체크 서기장이 취임하여 독자적인 사회주의노선을 천명함으로써 '프라하의 봄'이 실현되었으나 동년 8월 바르샤바조약 5개국 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1989년 10월 바츨라프 광장에서 민주화 요구 데모를 시작으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어 동년 11월 시민포럼이 결성되고 헌법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시민포럼의 대표인 하벨을

련과 중국도 그랬다. 소련에서는 후르시초프 이후 사회세력의 성장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낳게 한 사회적 바탕이었고 결국은 군부 쿠데타에 대항한 시민봉기가 공산체제를 완전 붕괴시켰다. 중국에서도 동구 및 소련혁명 이후 체제단속의 일환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1978년 이후의 개방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천안문사태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봉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관료와 당에 의한 고도의 패권적인 전체주의적 체제에서 어떻게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봉기가 가능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설명해 왔던 전통적인 정치결정론적인 전체주의 모델이나 엘리트 갈등 모델은 올바른 답을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나 소련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연구에서도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결정인으로 하는 정치결정론적인 설명이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한편, 이러한 정치결정론을 비판하는 접근법(Johnson 1969, Lowenthal 1969, 고현욱 1987, 고재남 1990, 정은숙 1991, 유

---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동독에서는 1989년 8월 동독국민의 서방세계로의 대탈출을 시작으로 9-10월 라이프치히 등 대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동년 10월 호네커 서기장이 사임하고 11월에는 동베를린에서 백만인의 인파가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호네커의 후임인 에곤 크렌츠는 11월 9일 서독과의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이는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양분해 온 냉전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길재 1990)은 대체로 산업사회론 또는 근대화론으로 불리워지며, 그 기본적 가정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도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혁명 이후의 국면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주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은 사실상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다이내믹스로 인한 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욕구분출에서 기인한 것이다. 엑스타인(Eckstein 1970)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발전의 논리가 공산주의 체제 및 그 정치적 상부구조를 수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전환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론이 가장 적절히 적용된 곳이 바로 그 맑스의 이념에 따라 건설된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업화로 인한 사회분화는 국가와 사회간에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한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부문의 변화와 그 영향을 밝혀내는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현대 산업주의의 확산은 산업조직의 대규모화, 복합화, 전문적 기능분화, 기계화 등을 촉진하며 도시화와 대중적 소비문화를 팽배케 하여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만연하던 비합리성과 강제적 규범이 산업사회의 합리성과 대중문화의 보편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경제발전을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중요한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현욱 1987). 즉, 산업사회론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산업화로부터, 기본적으로 동원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가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회에서 ‘위로부터의 혁명’이란 방식으로 급속도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사회주의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억압적이고 일원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진영 1990:33-34).

이러한 해석들은 정교한 분석들에 의거한 분석의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로 근대화 모델에 입각한 관점에서 산업화의 결과 성장한 신중간계급, 고등교육자, 신세대가 민주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정치에 경도된 전체주의적 모델이나 엘리트 갈등모델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 모델은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고 할 때 그들이 왜 저항하며, 어떻게 그러한 저항이 성공적인 체제붕괴에까지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못하고 있다. 근대화론에서 가정하는 합리화, 도시화 및 높은 교육수준은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근대화론이 막연히 하나의 정치적 추세로 가정하고 있는 사회변동을 계급이론에 기초하여 계급구조의 재편과 계급적 갈등이 북한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업화의 결과 계급구조가 어떻게 재편되었으며, 북한사회내 자율적 사회세력으로서의 신중간계급의 성격

이 무엇이며, 북한사회의 신중단계급은 시민봉기를 유발하거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한다.

## 2. 階級の 概念

한국에서는 계급개념을 정치적으로 은닉하고 회피하고자 하지만 북한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회통제와 사회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즉, 프로레타리아 계급 독재의 역사적 사명이 착취계급(자본가, 지주)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개조하여 노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고 또 노동계급의 보편적 이익 (universality)을 지향하여 사회적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북한사회에서 계급개념이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착취계급인 지주와 자본가계급을 해체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농민을 계급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구성의 원리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노동계급이 주체가 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라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의 이념적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계급이론과 계급투쟁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언어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즉, 노동계급화해 나가는 과정”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369). 이것은 곧 노동계급화 되지 않은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여타 계급을 타도하는데 이것이 북한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사회의 이해를 위해서는 계급이론에 기초한 계급분석이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 되며 계급구조의 재편에 관한 분석이 북한사회 변동에 관한 분석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계급이론은<sup>2)</sup> 자본주의 사회의 분석을 위해 맑스가 발전시킨 이론이다. 맑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 하는 계급의 카테고리는 생산영역에서의 소유관계와 착취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가령,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두 가지 기본계급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생산수단(기계, 공장, 원자재)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는 노동계급이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의 관계는 착취-피착취의 관계인데 그 까닭은 자본가 계급

---

2) 계급이론에 관한 문헌들로는 Nicos Poulantzas,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Verso, 1975); E.P. Thompson,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Albert Szymanski, *Class Structure* (New York: Prager, 1983); Erik O. Wright, *Classes* (London: Verso, 1985);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서울: 나남출판사, 1991) 참조.

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희생하여 극대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다. 노동계급의 몫이 증가할수록 자본가계급의 몫이 감소하고 자본가 계급의 몫이 증가할수록 노동계급의 몫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듯이 계급은 상층계급이나 하층계급과 같이 수입이나 학력의 층위(strata)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생산영역에서의 소유와 착취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중간계급도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중간쯤 되는 수입을 가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행하는 계급관계와 역할에 의해서 규정된다. 가령,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인사관리나 노무관리를 하면서 노동자계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간계급에 속하는 것이다.

벨 브리스(Val Burris, 1980)에 의하면, 신중간계급은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장애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계급이며 따라서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등장한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중간계급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벨 브리스는 자본축적 과정과 관련한 세가지 주요 모순을 지적하는데 그 세가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중간계급이 창출된다고 보았다. 그 첫째의 모순은 자본축적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주도의 정책과 투

자를 강화하며 그 결과 기술자와 같은 직종이 양산되며 이들이 신중간계급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계급갈등의 모순으로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숫적으로 증가한 노동자들을 통제하거나 재생산하는 데에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들이 또 신중간계급의 직종을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과잉생산의 모순인데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과잉 생산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광고회사나 할부제도 등의 신용제도가 발달하게 되어 더욱 많은 수의 신중간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벨 브리스는 이들 직종을 재분류하여 신중간계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능을 하는 그룹으로 세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1)노동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관리직, 작업반장, 기사가 있고 2)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능으로 교사, 사회사업가, 의료전문가, 정부관리, 변호사, 문화업 종사자 등이 있고 3)회계와 판매의 기능으로 광고전문가, 판매, 회계, 은행업, 용자, 보험업자가 있으며 4)기술혁신의 기능으로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가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위의 벨 브리스가 지적한 자본축적과 관련하여 (과잉생산은 제외됨) 신중간계급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료적 요구에 의한 신중간계급의 직업집단이 팽창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북한의 3대혁명소조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 및 작업감독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사회 통제의 기능을 더 많

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중관계급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계급적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계급관계의 구조적 조건이 반드시 계급형성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즉, 한 계급이 구조적으로 착취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계급의식이 생성되어 사회 저항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1985)는 계급형성은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지적하였다. 가령, 한국에서 1960년대에는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 선성장 후분배 또는 조국근대화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적절히 통제되었으나, 80년대 후반의 민주화의 영향과 반공 및 성장 이데올로기의 설득력 감소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고양되어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랄프 다렌돌프(Ralf Dahrendorf, 1957)는 계급형성에 대하여 약간 다른 측면을 지적하였는데 즉 정치적 조건 외에도 계급성원들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급지도자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계급개념과 계급형성에 관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계급분석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 계급구조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이념적 목표로 하는 북한 사회에서 신중관계급의 성장을 야기시키는 계급갈등의 구조는 무엇인가? 계급적 갈등

이 사회적 세력화로 연결되어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논문은 북한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3. 北韓社會 階級構造의 再編과 新中間階級의 成長

계급구조는 어느 사회나 생산양식의 개념과 더불어 사회구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가령, 봉건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관계에 의해서 전체 사회의 질서와 갈등구조가 규정된다. 북한사회의 계급구조의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가지 메카니즘은 사회주의 정권의 창출과 사회주의적 공업화이다. 그것이 북한 사회의 계급구조 재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 가. 社會主義 政權創出 過程의 階級再編

북한의 김일성 정권 창출은 소련정부 후견하의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각행정국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라는 단서 하의 중앙정권기관이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한데서 시작되었다. 이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완수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한다는 목표 하에 일련의 '민주개혁'을 수행하였다. '민주개혁'은 토지개혁법령 (3월 5일),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6월 24일),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6월 27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7월 30일), 중요산업국유화법령 (8월 10일)을 통해 실현되었다.

토지개혁은 북한 김일성 체제의 구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당시 북한에서 지주가 총농가호수의 4%밖에 안되면서도 총경지면적의 58.2%를 점유한 반면 총인구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작인이었다. 토지개혁은 북한 특유의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해방 직후 소작료 3·7제 요구투쟁을 통해 정치적으로 단련 각성된 농민들은 1946년 3.1절을 기해 전국적으로 3백여만명이 낫과 호미 등을 들고 토지요구 시위를 전개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의 토지 무상몰수와 농민에게 무상분배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밑으로부터 대중동원에 성공한 공산당은 3월 5일에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20일만에 토지개혁을 완수해 버렸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 사회의 계급관계는 크게 재편되었다. 전통적인 지배계급이었던 지주계급이 완전히 해체되었고 소작농, 빈농, 고용농민들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은 계층으로 부상하였으며 자기들에게 토지를 준 당과 정권기관을 적극 지지하였다. 실로 전체인구의 74.1% (1949년말 현재)를 차지하는 농민층은 김일성 정권이 초기에 뿌리를 내리는데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토지개혁에 이어서 취해진 중요산업 국유화는 도시지역에서의 계급구조를 혁명적으로 재편하였다. 해방 직후의 북한

의 산업구성을 보면 총산업중 62.4%가 일본인 소유인데다가 불입자본의 91.2%가 일본인의 것이었다. 이들 산업을 1946년 8월 10일에 「주요산업 국유화령」을 발표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지배계급의 경제적 토대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당시의 지주와 자본가는 물론이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물적 기반마저 해체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었고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다.

1946년의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사유의 토지를 분배하여 주었던 것을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부터 농업재건의 방도로 협동화를 시작하여 1958년까지 완수되었다. 이로써 토지사유가 완전히 폐지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하게 되었다. 도시에 잔존하고 있던 상공업분야의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와 소상품 경제형태 역시 사회주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 나. 工業化와 新中間階級의 成長

사회주의 정권창출과정에서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와해된 것이 의도적인 계급구조의 재편이라면, 그 이후의 계급구조 재편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전쟁 이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전략에 따라서 공업화가 비교적 급속히 진행되었다. 급격한 공업화는 동시에 직업구성을 매우 급속히 변화시켰

다. <표-1>에서 보면 1987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 중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의 성인중 약 75%가 비농업인구로 분류되어 있어<sup>3)</sup> 북한이 농업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2>에서 보는 대로 농민이 1946년 당시 74.1%에서 1987년 현재 25.3%로 대폭 감소했고 대신 노동자의 비율이 1946년 말의 12.5%에서 1987년에 57.0%로 대폭 증가했다.

공업화가 야기시킨 계급구조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신중간계급의<sup>4)</sup> 증가이다. 1946년 말의 6.2%에서 1987년에 약 17%까지 증가했는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중간계급 또는 근로인테리는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사회적 상승이동을 하여 파워 엘리트에로 다수 진입하여 전문관료집단이 빨치산세대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원과 노동당의 30-40%, 정치국 정위원 50%, 후보위원 70%가 전문 엘리트 출신이다.

---

3) 북한에서의 도시라는 용어의 정의는 자의적인 면이 있지만 대체로 도시의 행정구역인 동은 3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도시인구는 비농업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시의 전체인구에 포함되지만 도시인구에서는 제외된다. 즉, 행정구역상 '리'는 총도시 인구에서 빠지게 된다.

4) 북한 사회에서 신중간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집단은 주로 근로 인테리로 불리는 사무원이며 사무원 외에 고급 간부의 일부도 포함된다. 고급간부의 어느 선까지가 신중간계급인가는 개인의 주관적 계급 귀속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3>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별 출신성분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사무직과 전문직 출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업화의 결과 사무직, 전문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82년 이후 사무·전문직이 대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혁명 1세대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상과 정치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복합성과 다원화가 증가하면서 사상과 정치중심의 리더쉽 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쉽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 전문관료 집단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김일성 이후 체제는 점점 더 이같은 신중간계급의 기능이 강화되어 북한사회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제한적이나 개혁과 개방을 실현할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4. 北韓社會 階級葛藤의 構造

북한에서 정권창출 초기에 이미 착취계급을 말살하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실현하여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동원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은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양극적 대

립을 가정하여 착취계급인 자본가 계급을 해체하면 노동계급의 독재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은 새로운 계급분화를 창출하여 맑스의 이론적 각본에 없던 중간계급이 비대해졌다. 이것은 전인민의 노동계급화, 무계급사회의 건설 정책과 상충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새로운 계급투쟁의 요인이 된 것이다. 다렌돌프가 1957년에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에서 맑스의 계급이론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맑스의 이론은 계급의 양극화를 가정하여 중간계급은 점차 소멸하여 프롤레타리아화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인데 오히려 더욱 비대해졌다. 중간계급의 성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팽창했다. 맑스 이론의 맹점이 여기에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의 핵심은 맑스의 이론에서 예기하지 못했던 중간계급의 비판적 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계급의 팽창을 체제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산주의에서는 중간계급의 출현이 노동계급독재의 이념과 상충되어 체제의 모순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신중간계급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다루어야 할지가 북한의 새로운 계급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북한에서 임금노동자 일반을 노동계급으로 보지는 않고 노동계급, 농민계급, 병사, 근로인테리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그 계급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근로인테리를 독립적인 계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계층’이라는 다른 개념을

적용시키는 이론적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독재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p.185)에 나타난 계층 개념은 다음과 같다: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집단. 계층은 독자적인 사회정치적 세력으로는 될 수 없다. 계층 가운데는 인테리같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으며 룬펜부르조아지같이 계급으로부터 탈락되어 기생적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다. 착취사회에는 기생적 생활을 하는 사회계층들이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에는 오직 노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만이 계층으로 남아 있다.

북한에서 이러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인테리에 대한 계급적 통합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혁명투쟁에서 중산층을 쟁취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중산층은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농과 도시 소시민들은 협동화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였고 지난날의 인테리를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인테리로 만들었다, (『철학사전』, pp. 686-87).

중산층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서도 인테리의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김정일의 연설(1991. 5. 27)에서도 인테리 문제의 해결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그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문제를 옹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인테리를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중요한 혁명역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의 한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인테리 계급이 체제내에서 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계급 이익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계급정책의 기초로 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요구는 사회적 진보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하며 노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요구에도 맞는 사회입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 뿐 아니라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주체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요구합니다.(김정일 1991. 5. 27)

이것으로 북한에서 계급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근로인테리 계급의 문제가 시사되고 있다.

## 5. 北韓에서 新中間階級の 社會勢力化

산업화의 결과 어느 사회에나 신중간계급이 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잠재적인 계급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적으로 잠재적인 계급(latent class)이 현재적으로 활동적인 계급(manifest class), 또는 사회세력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북한에서도 동구에서처럼 자율적 계급으로 등장하여 사회갈등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의 촉진요

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동구와 소련에서처럼 혁명후기 국면의 징후가 나타나는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넘어서 근대화로 이행할 것인가? 그 역할은 사회 정치적 국면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① 北韓 新中間階級の 二元的 性格

원래 신중간계급은 이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에릭 라이트(Erik Wright, 1985)는 신중간계급을 모순적 계급(contradictory class)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쪽 발은 자본가 계급에 딛고 다른 한쪽 발은 노동계급에 딛고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간계급은 사안에 따라 다른 모순적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신중간계급은 상이한 이념적 집단으로 분열되기도 한다. 즉,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완전히 자본가 계급 편에 서고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편에 서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틴 오펜하이머(Martin Oppenheimer)는 신중간계급의 이념적 편향을 체제안정지향, 개혁지향 등 이원적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신중간계급도 모순적이고 이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보수 지향적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지향적 이다. 체제안정지향 집단으로 핵심당원, 군부엘리트, 3대혁명소조원 등이 포함되고, 개혁지향 집단으로 외교관, 유학생, 해외근로자, 외국군사고문, 기술관료의 일부가 포함된다. 차츰 밝혀지겠지만, 최근 남

한의 신중간계급은 개혁지향에서 안정지향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신중간계급은 안정지향에서 개혁지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 나. 北韓 新中間階級の 批判勢力化의 可能性

사회주의 사회에서 신중간계급은 구조적으로 비판세력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존 로머(Jon Roemer)는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에만 적용되던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을 수정하여 사회주의 사회에도 적용되는 ‘착취의 일반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계급은 신중간계급이라고 주장했다. 기능상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아야할 신중간계급 등 전문가 직종이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의 원칙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수를 받음으로 해서 사회주의적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사회주의에서 임금수준의 상대적 평준화 원칙이 사회주의 신중간계급은 자본주의 신중간계급에 비해 상대적 박탈을 당한다는 논리이다. 1960년대 말 소련의 소득분포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동일시기 미국의 소득편차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렌스키 1986).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신중간계급은 계급정책상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계급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회 비판세력으로 전변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된다. 북한의 노동계급 위주의 계급정책 때문에 노동계급의 세도가 근로인테리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인테리들이 천시되고 위축되는 반면에 일부 노동자들은 매우 득세하게 되었으니 인테리들의 보수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부작용과 결함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는 적지 않는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보수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노동계급의 세도까지 나오게 되었다. 당세도에 또 노동계급의 세도까지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김일성선집 제6권』: 312).

근로인테리의 상대적 박탈감은 노동계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권력엘리트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권력엘리트의 독점과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991년 5월 5일의 김정일 담화에서 관료주의와 세도에 대해서 매우 강도높은 비판을 한 것에서 북한에서의 세도와 관료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만 때문에 인테리들은 실제로 체제비판과 동요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북한 지도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인테리들에게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나쁜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인테리들은 생산실천과 떨어져 있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할 기회가 적으며 낡은 사상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참다운 로동계급 인테리로 만들어야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인테리들이 늘 현실 속에 들어가 실천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강인한 혁명적 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1980. 1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이러한 내용은 한번의 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되풀이해서 인민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의 근로인테리는 매우 지속적으로 반체제의 잠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최근의 예를 든다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의 최근호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도 비교적 많이 받은 오랜 인테리는 물론,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란 새 인테리들도 생산활동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사상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개인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여러가

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990, 8:20).

또 1991년 9월 15일자 로동신문 논설과 조선중앙방송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 지적하고 있다:

인테리들은 직업상 특성으로부터 낮은 사상의 영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여야 한다.

최근의 동구와 소련에서의 개혁이 신중간계급 또는 인테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북한의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양형섭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인테리들을 노동계급의 진정한 인테리로,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일단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 사상공세 앞에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고 변질되어 사회주의의 길을 포기하고 치욕스러운 반혁명적 길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형섭 『근로자』 1990.8.21).

#### 다. 新中間階級の 反體制 徵候들

그러면 북한의 근로 인테리들의 반체제의 잠재성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1989년 북한의 평양축전 이후 귀순한 사람들과 방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관찰해 볼 때 확실히 북한의 간부급을 포함한 인테리들의 체제비판과 반체제

세력화의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 반체제의 징후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첫째, 엘리트들 간의 갈등이다. 북한의 지도층은 일반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실정을 외부와 비교할 수 있는 감각 및 안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 지도층은 북한의 경제적 낙후, 지나친 사회통제, 주체사상의 맹점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체제 및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비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경제체제 개혁 건의 및 기념비적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최근에 귀순한 소련유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다. 가령, 주소 북한 대사관 참사관 등이 북한체제의 모순 및 체제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었고, 김책공대 학장, 평성과학원 설계실장 등이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건의한 후 좌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당 간부, 김책공대 교수가 주체사상탑, 남포갑문 등 기념비적 건설사업을 비판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통일속보」 91-21, 1991.7.23: 2).

둘째, 김정일에 대한 불만 및 비판이다. 대부분의 북한 고위간부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을 인정하여 대단한 충성심을 보이지만, 김정일에 대해서는 측근을 제외하고는 정책노선과 지도자 자질, 그리고 세력다툼으로 인해 불만 및 내부 알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

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강성산이 김정일과 정책마찰로 총리에서 해임되어 함경북도 당위원장으로 좌천되었으며, 국가보위부장 김병하는 김정일과 권력다툼으로 체포되었고, 부주석 박성철의 아들도 김정일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근모는 주식펀드제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정무원 총리직에서 해임되었다.

셋째, 반체제 조직의 징후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 및 김정일에 대한 불만은 체제위기 의식과 겹쳐 차츰 체제불만 세력 형성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반체제 활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 및 당간부를 중심으로 인테리, 학생조직과 연계되어 소그룹을 형성, 지하조직을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북한의 잠재적인 체제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속보』 91-21:4). 귀순 유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1987년에 당간부와 학생이 연계된 반정부조직이 탄로나서 처형된 사례가 있으며, 1988년 6월에는 군부, 당간부, 유학생이 연계된 반체제조직이 적발되어 처형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통일속보』 91-21:5). 90년에 중국을 방문한 재미교포에 따르면, 평북 신의주는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개혁·개방의 바람을 쉽게 감지할 수 있고 전통적인 기독교세 및 저항세력의 지하조직망 구축 등으로 불만이 팽배, 계기만 주어진다면 폭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90년에 중국을 방문한 K대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90년에 소련 동구

에서 소환된 유학생들 중심의 전국적 지하조직이 적발되었으며, 90년에 귀순한 유학생에 따르면 85년에 김일성 종합대학과 동구유학생이 연계된 반정부 그룹이 조직되었다는 것이다(「통일속보」 1991-21:10).

김정일 담화에서도 반체제 징후가 시사되고 있다. 동구사회가 개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1991.5.5 담화가 북한내의 체제도전의 징후를 시사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세한다면 반혁명분자들이 민심을 오도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라고 한 점에서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본 반체제의 징후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여진다.

넷째, 해외유학생들의 체제비판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는 2,0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소련 유학생 수는 약 1,000명쯤 이었다. 동구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은 이들을 1989년 이후 모두 본국으로 송환조치하였다. 최근에 한국으로 망명한 유학생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증언에 의하면, 동구나 소련으로 나간 유학생들은 2년만 지나면 거의 100%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동독에 유학중이던 학생의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관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동독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는데도 북한보다 잘 삽니다. 이게 의문이었읍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못사나 하고 유학 처음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생 중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독일 교수에 물어보면 북한이 발전 못하는 것은 아시아적인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암만 공부를 잘해도 북한이 발전할 수 없구나,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가 개방되어야 하고... 그런데 왜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김일성 우상화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읍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급격히 변했읍니다 (전철우 1991: 157).

88년 8월에 3년만에 방학을 틈타 돌아갔는데 눈뜨고 못볼 정도였읍니다. 3년전 보다 더 못살았읍니다. 우상화는 더 심해졌고 또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한 것이 차이가 났읍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평축맞으면서 사람들을 외국에 많이 내보냈읍니다. 요리사도 보내고 유학생도 갔다와서 많이 말해주니까. 이제는 안전원이고 국가보위부 사람이고 당원이고 간에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평축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산다, 외국인들 웃임고 다니는 것을 보니 정말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더라 말입니다. 평양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산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은철 1991: 159-60).

## 6. 北韓에서 新中間階級の 輿論指導 役割과 市民革命의 可能性 展望

지금까지 북한의 신중간계급인 근로인테리 계급의 반체제적 잠재성과 실제의 반체제의 징후를 살펴보았다. 동구 제국과 소련의 경우 1950년대 중반 이후 서구와의 접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서구와 비교하게 된 국민, 특히 인테리겐차들의 현실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이 대두되었다고 하겠다. 북한사회에서도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고위간부, 해외유학생, 외교관들이 북한 사회의 모순과 그들의 계급적 성향에 기초하여 그들의 현실인식을 전체사회에 점차 확산할 것인가? 그리하여 동구 제국과 소련, 중국에서와 같이 북한사회에서도 시민혁명의 가능성이 있는가? 근대화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사회적 다원화와 자유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절에서는 북한에서 인텔리들의 현실인식이 확산되고 그들의 여론지도 역할이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즉 인민대중의 불만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적 변화로 발전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그러한 변화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促進要因

첫째, 경제적 후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 근로인텔리들은 북한사회가 이러다가는 망한다는 의미에서 체제비판을 하는데 반해, 복잡계층 및 인민대중은 생활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1991년 귀순한 고영환의 증언). 1975년 한 해 동안에 북한 전역의 농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항거의 사건들은 1백여건에 달했다는 것이 간부들에게만 주는 극비1호 통보자료에서 밝혀졌다(신경완, 『월간중앙』 1991.7). 최근의 자료로는, 미확인 보도이지만, 일본의 반복한 교포단체인 재일한국조선인 민주통일연맹 (의장

이광)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북한의 지방 도시 36개소에서 8천여명의 주민과 4천여명의 군인들이 식량 약탈소동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세계일보』 1991.7.31).

귀순 유학생들은 요즘에는 여기서 말하는 중학생 정도만 되는 아이들이 모여도 사회비판하면서 못먹고 못사는 불평을 하는 정도라고 증언하고 있다 (『신동아』 1991.9:382).

둘째,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다. 70년대 초에는 북한이 잘 살았는데 김정일이 등장한 7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며 “철없는 아이가 정치한다”고 비판하고 김정일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다(남명철 1991: 165). 정보통제로 외부 사회와 비교할 수 없어도 자신들의 과거와 비교하여 시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주민들 역시 상층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나 김정일에 대해서는 불만 및 비판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이 1972년에 후계자로 등장하고부터 평양시 건설과 대규모 상징적인 주체사상탑, 혁명전적비 등 비생산적인 건설추진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인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김정일에 대한 비판여론은 경제적 실정에서 비롯되어 점차 그의 지도적 자질, 이상화정책 반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속보』 91-21: 9). 한 귀순유학생의 증언은 이를 더욱 잘 입증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은 그대로 다 남아있고 김정일을 욕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김정일 욕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학생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김정일 그 사람 나쁘다, 그 사람 사치하고, 기쁨조·행복조 거기에 대해서 말 많이 하고, 뭐 밤마다 갈아대고... 젊은 사람 특히 간부집 자식들이 김정일이는 사람이 안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똑똑한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생각에는 10년내 북한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변화할 것 같습니다. 꼭 변화할 거고 변화해야 된답니다. 밑으로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조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행동엔 못나선단 말입니다. 그것이 축적되면 터질 때가 있겠지요 (귀순 유학생 증언 1991. 『북한 그 충격의 실상』, pp. 160-161).

이러한 추세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연결되어 김일성 사후에 불만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민들 사이에 남한 및 외국과의 체제비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과의 교류의 증가로 비교자료(cue)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데, 가령 1985년 고향방문단, 평축, UN가입, 북-일 수교 교섭, 10만명 이상의 북송교포 등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증가하여 자유화 바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바람이 북한 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한 귀순자의 증언이 시사해 주고 있다.

TV에서는 한국에서 데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처음에는 무심코 보았는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거리풍경으로 보아 상당히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1985년 고향방문단이 다녀간 이 후에는 못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자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거리나 사람들의 모습을 TV에 방영할 때는 아주 흐리게 빨리 지나가게 하고 있다. 또 데모를 매일 하면서 매일 잠아가도 자꾸 데모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한번에 몽땅 다 쏟아 버리면 다시는 데모가 안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을 것을 보니 자유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수경양이 북한에 온 것을 본 후에는 점점 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그 먼 나라를 돌아 평양에 올 수 있었으며 북한이 더 살기 좋다면 왜 이곳에 남지 않고 굳이 돌아가려고 하는가?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임수경양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자유스럽게 구속받지 않고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북한 TV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대학생은 늘 싸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임수경양을 보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준비해 온 자료도 없이 말을 굉장히 잘했다. 임수경양이 돌아간 후에도 한국정부가 부모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임수경양의 부모가 당연히 감옥에 갔거나 사형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귀순자 임정희 증언. 조선일보사 1991:149).

넷째, 시민사회의 성장의 한 단면으로서 교육수준의 급증이다. 1972년부터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를 발전시키면서 1977년부터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이후 교육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1987년 한해에 10개 대학, 3개 전문대학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대학은 1987년 말 현재 244개이며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49만 4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990년 현재 146만의 대학졸

업자가 있다(『조선중앙연감』 1988). <표-4>를 보면 북한의 학력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북한 체제가 남한보다 열등하다는 정보가 일단 유입되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독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화의 경향은 높아지는 것이다. 한 귀순유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대학생 정도면 생각은 한다”는 것이다. 또 학력수준의 상승으로 기대수준이 상승하여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해방 직후 토지개혁으로 토지가 분배되었을 때에는 소작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만족했지만 현재의 고학력자에게는 만족의 수준이 다를 것이다.

다섯째, 도시화의 진전과 유비통신의 발달이다. 앞의 <표-1>에서 본대로 1987년 현재 총인구 중 약 60%의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 수위도시 비율(首位都市比率)이 높아 1980-1987년간 평양은 전체도시 인구의 34.4%에서 30.7%로 약간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Eberstadt and Banister 1990). 남한의 1990년 현재 32.8%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이렇게 도시화가 진전되면 상호작용의 패턴이 달라져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퍼지는 ‘유비통신’이 발달할 수 있다. 유비통신은 공식적인 통신에 비해 같은 얘기라도 과장적으로 소문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제에

도 불구하고 비판의식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도시에서 일어난다.

여섯째, 사회분화의 발달로 인한 사회통제의 이완이다. 국가의 통제력 이완은 사회의 독자적인 여론형성구조를 낳게 되고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가 부식되는 것이다. 스타(Starr, 1988)는 소련에서 KGB와 경찰이 현대적 대도시의 수백만 인구들 속에서 감시와 감독의 수준을 예전같이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프카니스탄 사태 발생시 유례없는 징집회피 사례의 증가 등을 실례로 들고 있다. 이같은 국가의 통제력 이완은 사회의 독자적인 여론형성 구조를 낳게 되었다. 북한에서도 도시화와 사회분화의 진전으로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도 부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곱째, 혁명세대의 사멸과 혁명 후기세대의 등장이다. 일제의 지배와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새세대는 사상성과 혁명성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지도부의 표현에 의하면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몰들기 쉽다” (『로동신

문」 91.6.5)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새세대가 민주적 시민의 식과 진보적 성향이 강하듯이 북한의 새세대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언론매체에 매우 자주 지적되고 있는 대로 북한의 새세대도 북한의 강력한 체제유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당성과 혁명성이 약한 것은 북한사회의 기존체제유지에 도전적 요인으로 보여진다.

여덟째, 낮은 계급적 기득권이 지적되어야 한다. 가령,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화된다면 자본가들과 중간계급의 결사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이에 반대할 것이다 (서재진 1991 b). 왜냐하면 사회주의화되면 집 한 채라도 그들의 소중한 사유재산이 박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 체제가 붕괴됨으로 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다수의 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보수적 계급’이 없어 체제 전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동독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버리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는 소유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반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기득권 계급이 없고 극소수의 지배엘리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체제의 응집력(cohesiveness)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신중간계급이나 노동계급은 체제로부터 얻고 있는 기득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 계급 사이에도 계급적 기득권의 차이가 없다. 계급적 기득권이 약해 동구에서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으면 정부의 무력과 극소수의 간부 이외의 대항세

력이 없다. 또한 북한 사회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기적 사회통합이 결여되고 대신에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의한 기계적 사회통합이 기존의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 2) 抑制要因

지금까지 북한사회 변화의 촉진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현체제를 아직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가 김일성의 절대적 카리스마이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 신중간계급, 인민대중 할 것 없이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으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귀순자들이나 방북자들의 증언이다. 이것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주체사상이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권력의 정당성의 기반은 경제가 아니고 이념적 순수성에 입각한 주체사상이다.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 경제적 발전성에 의존함으로써 야기될 남한에 대한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사회의 변화는 억제될 것이다.

셋째는 북한은 외부세계로부터 대중을 철저히 차단한 폐쇄사회라는 점이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해외 경험자나 방송, 노동신문 등을 통해 얻은 단편정보나 왜곡된 정보 이외에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제

국과 소련 공산체제 붕괴의 원인과 의미,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 경제체제의 문제점, 남·북한간의 생활 격차 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폐쇄정책 자체에도 기인하지만 대중매체 기술의 미발달에도 기인한다. 개별 가정에 전화나 팩스,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가 보급되어 있지 않다.

네째, 북한에는 대부분의 동구 사회가 공산화 이전에 가졌던 다원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일성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상대적으로 무디다.

다섯째로, 근대화론자들이 중요한 변수로 보는 공업화의 수준 문제이다. 사회의 상부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하부구조가 발달했느냐의 문제이다. 사회분화가 발달하여 기계적 사회에서 유기적 사회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발전단계로 보아서 동원체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고현욱 1987).

## 7. 結論 및 展望

북한 사회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조 변동의 거시적 흐름을 볼 때, 북한은 변화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동구나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계급정책의 모순에 있음이 지적되었다. 착취계급을 청

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여 그럼으로써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정책목표이었다. 그러나 착취계급은 청산되었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새로운 신중간계급이 등장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 이 모순이 동구 및 소련에서의 공산체제를 붕괴시켰고 중국에서 천안문사태를 일어나게 했으며 북한에서도 변화의 씨앗을 배태시키고 있다.

동시에 북한에서도 정도는 미약하나마 산업화의 진전으로 정치주도적 사회에서 시민사회주도적 사회로 점진적 이행하고 있다.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화, 사회분화 또는 직업분화의 진전 등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구도에 의해서 구성된 북한사회에 점차 시민사회의 공간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구 제국과 소련에서의 밑으로부터의 원인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주도하고 개방을 추진하는 세력은 전문관료출신의 고위 간부들, 젊은 엘리트층, 소환 유학생들, 외교관 그룹, 이주 재일교포 등이다.

북한은 현재 위로부터는 해외근로자 및 체제불만 중견간부 등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는 소환유학생 및 인테리층을 중심으로 체제비판 세력이 심정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대체로 신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간 북한 체제가 망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하층계층은 식량등의 생활고 때문에 불만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사회들이 갖는 변화유형의 공통성이다. 동구와 소련의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사회주의체제가 역사적 변혁의 격랑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와 동독에서의 변혁과정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혁명적일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계급적 기득권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구조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동구에서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으면 정부의 무력 이외의 '보수적 계급'이 없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군림, 주체사상의 체제정당화 기능, 폐쇄적 사회통제, 다원주의적 경험의 부재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77:20)가 'Leapfrog idea of change'라는 말에서 지적하듯이 한때 발전의 장애가 된 것이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기폭제가 장애로 될 수도 있다. 즉, 김일성의 절대적 존재는 김일성의 죽음 그 자체가 체제의 절대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권력의 정당성이 주체사상과 같은 관념체제에 있다면 그 관념체제가 물질적 유인동기에 퇴색당하게 되면 체제붕괴에 치명적 원인으로 될 수 있고, 폐쇄적 사회통제가 UN가입 이후 대외적 교류를 활성화할 때는 이민대중의 이반을 가속화할 수 있다.

굳윈(Goodwin)과 스카치폴(Skocpol, 1989)은 경화된 정권 일수록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체제전복에 취약하다는 것을 여러나라의 정권변화 분석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나 여타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붕괴한 것은 경화된 체제가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북한이 비록 현체제를 유지하고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기든스가 지적한대로 그러한 요인들이 역으로 작용하여 체제에 역기능적 요인으로 전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위의 촉진요인에 의해 돌발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유엔 가입과 일본과의 수교 등 개방화 정책이 시행하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변화의 촉진요인은 강화되고 억제요인은 약화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하나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면, 통일의 비용을 줄이고 통일을 촉진시키는 길은 북한 사회에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개방화를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곧 동구와 소련에서처럼 시민혁명을 가져오고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혁명에 이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표-1> 남북한 도시화 비교, 1935-1985

(단위:%)

년 도	북 한	남 한
1935	4.9	6.0
1944	10.6	12.3
1949		17.1
1953	17.7	
1955	29.0(1956)	24.5
1960	40.6	28.0
1965	47.5	33.5(1966)
1970	54.2	41.1
1975	56.7	48.4
1980	56.9	57.3
1985	59.0	65.4

자료: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0,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1990).

<표-2> 북한 주민의 직업별 구성 변화

(단위:%)

	1946 년말	1949 년말	1953 년	1956 년	1960 년말	1963 년	1965 년말	1986 년	1986 년
노동자	12.5	19.0	21.2	27.2	38.0	40.1	41.0	56.3	56.3
사무원 (근로인테리)	6.2	7.0	8.5	13.6	13.7	15.1	16.5	17.0	17.0
농업협동조합원	-	-	-	40.0	44.4	42.3	40.8	25.9	25.9
개인농민	74.1	69.3	66.4	16.0	-	-	-		
협동기업노동자	-	0.3	0.5	1.1	3.3	1.9	-	0.9	0.9
수공업자	1.5	0.8	0.6	0.3	-	-	-		
기업자	0.2	0.1	0.1	-	-	-	-		
상인	3.3	1.7	1.2	0.6	-	-	-		
기타	2.2	1.8	1.5	0.5	0.3	-	1.7		

자료: 「조선중앙연감 1964」;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0,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1990).

<표-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성분별 구성비

(단위:%)

기 별	노 동 자	농 민	사무·전문직
제4기(1967)	63.89	15.12	20.79
제5기(1972)	64.14	13.13	22.56
제6기(1977)	42.8	11	46.2
제7기(1982)	34.6	10.2	55.2
제8기(1986)	36.4	12	51.6

자료: 國土統一院 편,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1988) 중기 별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보고』 분석.

<표-4> 각국의 교육수준

(단위:%)

국 별	연 도	성인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및 대학생비율	성 비 수 남자여자 100명당
북 한	1987/1988(16세이상)	13.7	184
남 한	1980(15세이상)	9.2	283
일 본	1980(15세이상)	18.5	161
중 국	1982(15세이상)	0.9	297
홍 콩	1981(15세이상)	6.6	175
미 국	1987(16세이상)	36.0	105
동 독	1981(15세이상)	14.9	107
소 련	1979(16세이상)	9.4	101

자료: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0,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1990)

## 참 고 문 헌

- 고현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1987.
- 도홍렬, “엘리트 형성과 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1987.
-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층구조”, 통일원(편),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1988.
- 렌스키, 송복 편저, “탈계층화를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시도”, 『사회불평등 갈등론』, 서울: 전예원, 1986.
-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 나남출판사, 1991a.
- “남한사회의 공업화와 계급구조의 재편,” 계간 『광장』, 1991b.
-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대비계획 연구』, 통일원 90-12-110, 1990.
- 유길재, “김정일 권력승계와 80년대 북한 당·국가체제의 변화 고찰”, 통일원, 『북한·통일 연구논문집』, 1990.
- 정은숙, “Social Roots of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1.
-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살아본 사람과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 조선일보사, 1991.
- Burris, Val. 1980.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Rise of the

- New Middle Class," *Th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2:1.
- Dahrendorf, Ralf. 1957.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Djilas, Milovan. 1957.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New York: Praeger.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1990.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1990).
- Eckstein, Alexander,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22 4:445-495.
- Giddens, Anthony. 1977.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Hutchinson of London.
- Goodwin and Skocpol, 1989. "Explaining Revolutions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Politics and Society* 17 (1).
- Johnson, Chalmer (ed.), 1969.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 Jae-nam. 1990. "Reform Communism: A Comparison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Lowenthal, Richard, 1969.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 Poulantzas, Nicos. 1975.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Verso.
- Przeworski, Adam. 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zymanski, Albert, 1983. *Class Structure*, New York: Prager.
- Starr, S. Frederick, 1988.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70.
- Thompson, E.P. 1978.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Wright, Erik O. 1985. *Classes*, London: Verso.

## 토 론

사회자 : 李相禹 (서강대 정치학교수)

토론자 : 金昌順 (북한연구소장)

朴涌培 (한국일보 통일문제연구소장)

李溫竹 (서울대 사회학교수)

이상우 : 고맙습니다. 우선 사정상 토론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토론자들께서 8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해주실 분으로 김창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연구를 시작하신 선구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충실하게 북한연구를 해오셨으며 특히 북한문제에 관한 유일의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발행해 오신 분입니다.

김창순 : 헬가 피히트 교수의 논문을 읽고 저는 오랜만에 주체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진지한 학구적 정열과 특히 비민주적 공산 독재사회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해박한 지식을 동원한 주체사상 분석은 저에게 깨우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결론 부분에서 피

히트 교수는 주체사상이 이론과 실천에서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분명히 못박고 특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 제도하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학자들이 할 수 없이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선언한 점은 저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씀을 덧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두가지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면 헬가 피히트 교수는 조선노동당의 정치사상사를 30년 전부터 조사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983년도에 북한학회에서 발행하는 학보에 주체사상을 논하는 글에서 “조선노동당과 주체사상을 일원적으로 논한다면 어느 것도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김일성의 일인체제가 실현되는 제 4차 당대회 (1961.9) 부터 조선노동당과 주체사상과의 관계는 일원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방법론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의 일인체제 전개과정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지도이념이 왜 나왔으며, 이에 의해 조선노동당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접근법만이 주체사상의 정치사상적 본질을 가장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선노동당이 걸어 온 길도 가장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가 피히트 교수는 조선노동당이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라는 말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가를 대부분의 학자와 마찬가지로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그 보다 훨씬 이전인 8.15 해방 직후 도착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을 대변자로 내세우는 소련 군정에 항의하여 “조선혁명의 주체는 일제 형무소를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우리들이지 어째서 김일성 같은 못나기가 주체일 수 있느냐”고 항의한데서 비롯됩니다. 그 후 김일성은 도착 공산주의자의 총수격인 박헌영을 거세하고 자기가 조선혁명의 주체이고 중국과 소련에서 온 사람들을 사대주의, 수정주의 분자들이라고 각개격파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이 결코 김일성의 발기나 주도에 의해 창건된 것이 아닙니다. 1949년 남북 노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노동당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때부터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변조시키게 됩니다. 조선노동당의 존재 양식을 밝히는 규약은 1950년 7월에야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었는데, 그것은 전문 없이 당 규율에 중점을 둔 41개조의 비교적 간략한 것이었습니다. 현행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이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스탈린 격하가 본격화된 직후, 1956년 4월에 있었던 제 3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은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학설을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고 또 당의 전통을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해 투쟁한 조선인민의 혁명적 투쟁의 계승자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김일성에 의해 창건되고 주체사상에 의해 영도되는 당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1년 9월 제 4차 당대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당 전통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존의 규약에서 민족조항을 빼고 “조선노동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라고 고쳐버렸습니다. 이 때 부터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이것과 조선노동당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적, 일체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전면화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리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김일성 일인체제가 벌써 절대화 시대에 들어갔고,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보강한 것이 소위 유일사상 체제였습니다. 이 원칙은 1968년 4월 4기 17차 당 중앙위전원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요점은 ‘정치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의 사상무장을 완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정치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당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1974년 4월 ‘유일사상 체제확립 10

대 원칙'이란 것이 중앙으로부터 하급 기관에 하달되었는데, 여기서는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한다는 것이 되풀이 되었고 이에 저촉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를 통하여 주체사상의 당권 후계자를 김정일로 굳혀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당 간부들이 숙청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김정일만이 주체사상의 모범적 체득자이고 천재적 실천자인데 반하여 그 밖의 사람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미온적이고 반동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은 전문 서두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으로 규정했고 또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당규약상의 명문화는 김일성 사당화를 굳히는데 일차 목표가 있다기 보다는, 김정일에게 당권을 이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보장을 선포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헬가 피히트 교수의 논문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주체와 주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의 논평이 다만 앞으로 주체사상과 조선노동당의 진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내다보는데 다소 참고가 될지는 몰라도 헬가 피히트 교수의 논문에 대한 직접적 논평으로 되지는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

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한국의 전통사상으로 부터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부장적 요소가 있다든가 저항민족주의의 전통적 요소가 있다든가 하는 학자들의 지적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사상을 그의 『김일성주의 원리』와 『김일성주의 혁명론』라는 책자를 통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고 이론적 기초를 못박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정치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물 가운데 특히 김일성의 이름으로 발표된 출판물을 보면 “자연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인간의 노동을 거쳐야만 존재가치를 지닌다”고 하여 마르크스의 인간중심적 정복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적 인간을 대전제로 사회는 계급투쟁으로 연면한다는 사관이 확고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명의식은 동양적 풍토와 한국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상우 :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번 토론해 주실 분은 한국일보 통일문제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박용배 선생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용배 : 토론에 나선 저는 학자도 아닙니다. 사회정치 사상가도 아닙니다. 나는 일선에서는 활약하지 않는 신문기자일

뿐이며 따라서 헬가 피히트 박사의 발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저널리스틱한 것입니다. 신문기자적인 것은 사상문제나 철학 문제를 다룸에 상식을 조금 넘는 시각으로 복잡한 이론을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독자의 양식이 된다면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피히트 박사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그 전에 발표 초안을 세차례 이상 읽어 보면서 연구의 깊이가 상당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한국일보 북한면에 「남과 북」이라는 조그마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1991년 9월17일자 난에 저는 한스 마르세스키가 북한을 병영국가로 묘사한 인용을 보도했습니다. 평양 주재 마지막 동독대사였던 그는 3년간의 북한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일보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령과 마르크스주의’ (저는 김일성 주석을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마르세스키를 인용한 것은 북한의 정치구조는 공산주의 시각에서 형성되지 않고 독재정치 형태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세스키는 김일성주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합쳐진 전체주의에 스탈린의 일국 공산독재주의가 가미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는데 저는 이 시각에 동감했습니다. 피히트 박사가 발표한 마지막 부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계관의 근본문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답을 준 주체의 철학적 원리를 창

시하시어 인류의 철학사상 발전에서 불멸의 세계사적 공헌으로 된다”라는 주장을 관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충고를 하셨는데, 저는 박사님의 충고를 관대하게 이해 못하는, 혹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축에 서 있습니다.

신문기자적 상식으로 주체철학의 한 단면을 썼다가 겪은 저의 경험은 이 위대한 사상에 대해 관대해질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6월18일자 「남과 북」란에 ‘주체철학자’라는 제목의 글을 썼었습니다. 내용은 송두열 박사가 지난 5월 25일께 평양에 가서 김일성주석과 함께 사진을 찍고 오찬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초로, 일부 한정된 그룹에만 알려진 송박사를 제 나름대로 판단하여 한국일보 독자에게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5월 25일자 「로동신문」은 문익환목사의 북행때 수령접견시 사진보다는 송박사의 사진을 더 크게 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기자적 상식의 바탕에서 이 사진은 송박사가 북의 주체사상에 편중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실증시켜 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서울에서 발행된 송두열박사의 다른 저서를 읽어보고 송박사가 여러가지 논거를 들어 주체사상을 편들고 있다고 분석했던 겁니다.

그러자 철학연구회장 송상용씨 (한림대 교수)는 제가 송두열 박사를 친북한 학자로 잘못 평가했다고 저의 신문에 투고를 했고, 독일에 있는 구승애 선생은 제가 관념의 척도로 송박사를 북한편으로 서게 했다는 내용의 긴 팩스를 보내 왔습

니다. 그 후 8월에 송 박사는 한민족철학자 서울대회에 참석했고 거기에 발표된 논문이나 평양방문기에서 저의 ‘주체철학자’ 칼럼에 대한 비평같은 것을 듣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체철학 동조자들은 제가 주체철학자를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마귀사냥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칼럼에서 고발장을 쓰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이 그렇게 반박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히트 박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송두열 박사는 주체철학자인가? 피히트 교수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보다 주체사상은 철학인가, 정치술인가 하는 점을 알고 싶고 앞에서 밝힌 마르세스키씨가 지적한 김일성주의의 맹점에는 무엇이 잘못된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신문기자적 발상이 박사의 앞으로의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 : 여러가지로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론의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걱정입니다. 이제 끝으로 서울대학교 이온죽 교수님의 차례입니다.

이온죽 :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사회자가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데 승복을 못하겠습니다. 서재진 박사 논문부터 평을 하겠습니다. 서 박사가 계급개념으로 북한사회의 변동을 보려고 한 것 같은데 계급의 개념으로서 맑스가 정의한 생산영역

에서의 소유나 착취의 관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계급정의 가지고는 북한사회를 분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처럼 공식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 생산영역의 소유와 착취관계라는 계급개념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하고 묻고 싶으며 따라서 개념정의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계급을 경제적인 측면의 계층화 개념으로 쓸 때, 북한사회의 경우는 직업적 기능에 의한 계급 개념이나 아니면 정치적 지위 같은 것이 계층화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신중간계급을 착취받는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근로 인테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 인테리의 경우도 정치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북한에서의 시민혁명의 가능성을 8가지 촉진요인을 나열하면서 전망하셨는데 이것 모두를 계급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체제적응과 사회변동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의 촉진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변화의 억제요인의 경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빠트리신 것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통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양학습이라든가 정치사회화, 기타 조직적인 통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나 변화의 속도는 아마도 그들이 40여년 동안 축적해온 통제능력과 국제역학 사이의 한판 싸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북한의 통제능력은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또 변화의 촉진기능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북한이나 소련 및 동구에 공통되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서, 체제가 인민들에게 거짓말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에게 계속 정치사회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여기가 지상낙원이다라고 하는 허위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김부자의 혁명투쟁사에 대한 역사적인 왜곡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거짓말을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단 한번 탄로가 나게 되면 북한 주민의 당이나 김일성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변화의 촉진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패가 (이것도 소련과 동구가 망한 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북한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가 하는 도덕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으로 캐나다에서 사회학 교수로 계시는 교포가 계신데 그 분으로 부터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2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90년에 재방문하니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여자들의 옷차림 하고 경직된 관료주의와 관료의 부패라고요. 그분은 1982년에 평양에 갔다 오셔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북한을 평가하셨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으로 관료의 부패를 들고 계시더라란 말입니다. 저는 그 분의 말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서 박사께서는 북한에서의 보수적 계급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이나 동구와는 달리 보수적인 계급이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그리고 빨치산 동료의 자식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북한 특유의 연고주의와 인정주의로 확대되어 공고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계급이라는 것이 걸리긴 합니다만 보수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그동안 쪽 해 온 것을 보면 그의 현실 적응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이가 연로하였지만 생존역량이 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경제는 개방, 정치는 독재라는 모델을 김일성이 따를 가능성이 크고, 우리사회 자체가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북한 엘리트로 하여금 자신들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경쟁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자포자기적인 인식이 들지 않는 한, 김일성 사망전에는 돌발적,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피히트 교수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신데 대해서 민족적인 긍지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히트 교수께서 우리의 역사를 공부를 하셨는데 그 바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출판된 역사서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서와 같이 놓고 검토하시는 시간이

비교적 짧지 않았겠는가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대주의도 있었지만 그에 반대하는 사상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학같은 것도 있었고 구한말에 제국주의 침탈에 반대하여 나타난 위정척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邪)한 것은 외국의 침략을 뜻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주체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한에서의 민중사상운동에서도 주체사상적인 색깔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이런 종류의 주체사상은 남한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주체사상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북한에서 처럼 유난스럽게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국민들 마음에 대부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사상의 핵이 무엇이나 하는 점에 있어서도 피히트 교수께서 인간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중심이 되는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을 깎아내리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도 김일성의 창의적인 사상이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상은 서양의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사상에서 꽃핀 인간주의 사상에서도 누누히 강조됩니다. 또 이러한 사상은 한국의 천도교 사상, 인내천 사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사회에서의 주체사상은 철학이론이라기 보다는 혁명이론, 실존철학으로 더 강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 그러니까 학자들간에는 어떻게 연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철학이론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이론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철학사상의 큰 진보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르네상스적인 그런 휴머니즘적인 주체사상이 결국은 김부자 독재를 옹호하기 위한 이론으로 전락한 채, 그 방향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세계중심이라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북한학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을 하나의 철학이론으로 연구개발한다면 저는 존경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우 :**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정확하게 10분 정도 밖에 남았습니다. 가급적 간결하게 3분 이내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역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서재진 :** 저한테 주로 코멘트를 해 주신 분은 이은죽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촉진요인으로 빠트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일부러 빠트린 것도 있었습니다. 장차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벨 브리스가 어떻게 계급 개념을 생산의 영역과 관련해서 정의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노동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관리직, 작업반장, 기사, 그 다음으로는 그런 생산 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능으로서의 교사, 사회사업가, 의사 등을 들면서 신중관계급의 카테고리로서 정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공업화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정치적, 관료적 요구에 의한 신중관계급의 직업집단이 팽배했다는 것도 제가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8가지 축진요인이 계급적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달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급적인 요인하고 신중관계급이 여론지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따로 분류해서 8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 시간을 아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도홍렬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도홍렬 : 전 너무 구름잡는 이야기를 했고, 또 북한의 45년을 짧은 시간에 리뷰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제 결론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우 : 그럼 피히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피히트 : 제가 가장 신랄한 비판을 당했습니다.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도, 둘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도 저는 주체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창순 선생께서 앞으로 참고가 될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발표자들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여자로서 저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화해를 좋아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씨가 개인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주체사상과,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주체성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은죽 교수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실학파의 주장에서도 동학의 인내천 이론에서도 그외 한국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러 사상적 조류들에서도 주체성과 주체는 흔히 발견됩니다. 또한 남북한 철학자들 혹은 사상가들 사이에 주체의 개념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는데 저를 오해하신 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배 선생님이 제가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북한 철학자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가지고 북한 학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저항세력이며 그런 방향으로 북한의 철학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느냐고 물어보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변증법적으로 복잡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치적 저항세력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대답

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 : 감사합니다. 피히트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체사상과 주체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은 아까 질문한 두 분 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아는 얘기니까 안심하십시오. 시간이 없어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틀에 걸친 회의를 전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附 錄:會議概要>

10. 28 (月) 第1日 會議

開會式

09:00—09:30 登 錄

09:30—09:40 開 會 辭:李秉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09:30—09:40 祝 辭:崔浩中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09:50—10:10 基調演說:李庭植 美國 펜실베니아大교수

휴 식

10:10—10:30

第一會議 北韓社會 變化的 理論的 考察

10:30~12:30

- 司會: 安秉俊(延世大 政治學教授)
- 發表: 에이든 포스터-카터(英國 리즈大 社會學教授)
  - 北韓社會 變化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앨빈 소우(美國 하와이大 社會學教授)
  - 世界體制理論에서 본 中國革命과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 北韓研究室 (民族統一研究院)
  - 北韓研究의 現況과 課題
- 討論: 梁性喆(慶熙大 政治學教授)
  - 李洙勳(慶南大 社會學教授)
  - 林玄鎮(서울大 社會學教授)

午 餐 : 朴定洙 國會外務統一委員長 主催

12:30—14:00

## 第二會議 北韓經濟의 實相과 變化

14:00—16:00

- 司會: 金宇澤(翰林大 社會科學大學長)
- 發表: 고평오 후지오(日本 도꾸야마大 經濟學教授)
  - 北韓經濟의 實相과 展望鄭甲泳(延世大 經濟學教授)
  - 實物指標에 의한 北韓의 國內總生產 推定李達熙(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北韓經濟의 選擇과 發展展望
- 討論: 朴熊緒(三星石油化學 社長)
  - 李 浩(統一院 第2分析官)
  - 黃義珏(高麗大 經濟學教授)

휴 식

16:00—16:20

### 第三會議 北韓의 對外經濟關係 變化

16:20—18:20

- 司會：安承哲(前 KDI 院長)
- 發表：延河清(KDI 北韓經濟研究센터 所長)
  -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秦鴻祥(中國 遼寧省 亞細亞·太平洋經濟  
研究센터 副會長)
  - 北韓의 情勢와 經濟發展 推移  
金泳鎬(慶北大 經濟學教授)
  - 北·日 接近과 北韓經濟 開放의 展望
- 討論：徐鎮英(高麗大 政治學教授)  
金基德(KBS 北韓部長)  
李榮善(延世大 經濟學教授)

晚 餐：崔浩中 副總理兼 統一院 長官 主催

18:30—20:00

## 10. 29 (火) 第2日 會議

### 第四會議 北韓政治體制的變化

10:00—12:00

- 司會：金一平(美國 코네티컷大 政治學教授)
- 發表：高秉喆(美國 일리노이大 政治學教授)
  - 北韓의 政權移讓: 問題와 展望
- 제임스 카튼(濠洲 國立大 政治學教授)
  - 轉換期 北韓의 政治文化와 市民社會
- 李錫浩(國防大學院 教授)
  - 北韓體制的 變化展望과 軍의 役割
- 討論：趙淳昇(國會議員)
  - 金英鎭(美國 조지워싱턴大 政治學教授)
  - 鄭鎔碩(檀國大 政治學教授)

午餐：朴寬用 國會統一特委 委員長 主催

12:00—14:00

## 第五會議 北韓 對外關係의 變化

14:00—16:00

- 司會: 柳世熙(漢陽大 政治學教授)
- 發表: 오꼬노기 마사오(日本 게이오大 政治學教授)
  - 北韓의 政策變化와 北·日 國交交涉
- 朴英鎬(民族統一研究院 資料調查室長)
  - 北韓 對外關係의 政治經濟: 本質的 變化인가
  - 戰術的 順應인가?
- 오레그 다비도프(蘇聯 外務部 參事官)
  - 北韓의 政治體制 變化와 對外政策
- 討論: 具本泰(統一院 統一政策室長)
- 宋道均(MBC 北韓部長)
- 全寅永(서울大 國民倫理學教授)

휴 식

16:00—16:20

## 第六會議 北韓社會의 變化

16:20—18:20

- 司會: 李相禹(西江大 政治學教授)
- 發表: 헬가 괴히트(獨逸 훔볼트大 韓國問題研究所長)
  - 變化하는 哲學的 概念으로서의 主體와 主體性에 대하여  
都興烈(忠北大 社會學教授)
  - 北韓의 社會統制, 社會問題 그리고 社會變動  
徐載鎭(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北韓社會 階級構造의 再編과 社會變動
- 討論: 야로슬라프 바린카(駐韓 체코大使)  
金昌順(北韓研究所長)  
朴涌培(韓國日報 統一問題研究所長)  
李溫竹(서울大 社會學教授)

리셉션: 李秉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主催

18:00—20:00